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01-10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목차

제1편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3
제1절 농업구조	3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3
2. 농경지	4
제2절 농가경제	7
1. 소득 동향	7
2. 가계지출 동향	11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12
4. 농가자산 동향	12
5. 농가부채 동향	13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 지표	13
7. 주·부업별 지표	14
8.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15
9.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15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16
11. 지역별 주요 지표	16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17
1. 개황	17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7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21
1. 개황	21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2
3. 농림업 부가가치	23

목차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24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24
1. 식량 수급 동향	24
2. 원예·특용작물	26
3. 축산물과 사료작물	31
제2절 식품 수급 동향	36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36
2. 식품 수요 현황	40
3. 식품산업 동향	45
제3절 농식품 교역 동향	50
1. 농식품 수출입 동향	50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2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53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 동향	53
1. 국제곡물 수급 동향	53
2. 국제곡물 가격 동향	56
제2절 주요 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 협력	59
1. 주요 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59
2. 주요 국가 통상 협력	69

목차

제2편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I. 총론	81
	II.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85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85
	제1절 농식품산업의 지원 기반 강화	85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85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87
	제2절 농가 소득 안정	90
	1. 공익직불제 도입·운영	90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92
	3.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94
	4.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97
	제3절 농가 경영 안정	100
	1. 농지은행 활성화	100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104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105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107
	5. 농업부문 세제 지원	109
	6.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111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113
	8. 농기계 임대 활성화	114
	9. FTA 폐업 지원	116

목차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118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18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	118
2. 생산자, 소비자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121
3.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 거래 활성화	123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125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128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32
1. 공공비축 제도 운영	132
2. 쌀 적정생산	134
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136
4.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	138
5. 도시농업 활성화	140
Ⅲ.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143
제3장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43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43
2. 농업법인 활성화	146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148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150
5. 귀농·귀촌 활성화	153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155
제1절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155
1. ICT 융복합 촉진 및 확산	155
2.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158

목차

3.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163
4. 시설원예 과학화 및 에너지 절감	165
5.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168
6. 종자산업의 육성	170
7. 곤충산업 육성	174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78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178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182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186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190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190
1.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190
2.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192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194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195
5.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및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197
6. 축산물 이력제 추진	199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201
1. 가축질병 방역강화	201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207
3. 식물검역 강화	210
4.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213
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214

목차

제3절 친환경농업육성	217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217
2. 친환경 비료 지원	218
3. 친환경농업 직불제	220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222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225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227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227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227
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229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231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234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37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239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242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244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244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248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252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252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252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252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257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260

목차

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263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266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268
7. 농지연금 활성화	270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272
1. 농촌 종합개발	272
2. 농촌 주거환경 개선	276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279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284
5. 농공단지 조성사업	286
6. 사회적 경제	288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290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90
2. 밭 기반 정비사업	291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92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294
5. 수리시설개보수	295
6. 농촌용수개발사업	297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300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303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303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303
1. WTO/DDA 협상 대응	303
2. FTA 협상 대응	306

목차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310
1.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310
2. 식량원조사업	314
3.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316
4. OECD 활동	319
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325

목차

제3편	2021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동향	
	I. 총론	331
	II. 식량 및 곡물 자급 동향	335
	제1장 쌀, 보리, 밀 자급 동향	335
	제1절 쌀 자급 동향	335
	제2절 보리 자급 동향	337
	제3절 밀 자급 동향	338
	제2장 콩, 옥수수, 서류 자급 동향	340
	제1절 콩 자급 동향	340
	제2절 옥수수 자급 동향	342
	제3절 서류 자급 동향	343
	III. 축산물 및 사료 자급 동향	344
	제3장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급 동향	344
	제1절 쇠고기 자급 동향	344
	제2절 돼지고기 자급 동향	346
	제3절 닭고기 자급 동향	348
	제4장 우유 및 계란 자급 동향	350
	제1절 우유 자급 동향	350
	제2절 계란 자급 동향	352

목차

제5장 사료 자급 동향	354
제1절 배합사료 자급 동향	354
제2절 조사료 자급 동향	355
IV. 원예작물 자급 동향	357
제6장 채소류 및 과실류 자급 동향	357
제1절 채소류 자급 동향	357
제2절 과실류 자급 동향	359

표·그림목차

표목차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4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5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6
〈표 1-1-4〉 휴경면적	6
〈표 1-1-5〉 농가소득	7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8
〈표 1-1-7〉 농업소득	8
〈표 1-1-8〉 농업총수입	9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9
〈표 1-1-10〉 농업경영비	10
〈표 1-1-11〉 농업외소득	10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11
〈표 1-1-13〉 가계비 지출	11
〈표 1-1-14〉 처분가능소득 / 잉여금	12
〈표 1-1-15〉 농가자산	12
〈표 1-1-16〉 농가부채	13
〈표 1-1-17〉 2021년 전업/겸업 농가 주요 지표	14
〈표 1-1-18〉 2021년 주·부업별 지표	14
〈표 1-1-19〉 2021년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15
〈표 1-1-20〉 2021년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15
〈표 1-1-21〉 2021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16
〈표 1-1-22〉 2021년 지역별 주요 지표	16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17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8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21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21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2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23

표·그림목차

〈표 1-2-1〉 양곡연도별 식량 생산량	24
〈표 1-2-2〉 양곡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25
〈표 1-2-3〉 1인당 양곡연도별 양곡소비량 추이	26
〈표 1-2-4〉 채소류 생산 동향	27
〈표 1-2-5〉 주요 품목별 생산 동향	27
〈표 1-2-6〉 과실류 수급 동향	28
〈표 1-2-7〉 화훼산업 현황	29
〈표 1-2-8〉 특용작물 수급 동향	30
〈표 1-2-9〉 버섯류 수급 동향	30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31
〈표 1-2-11〉 쇠고기 수급 동향	32
〈표 1-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32
〈표 1-2-13〉 닭고기 수급 동향	33
〈표 1-2-14〉 계란 수급 동향	33
〈표 1-2-15〉 우유 수급 동향	34
〈표 1-2-16〉 사료 수급 추이	34
〈표 1-2-17〉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35
〈표 1-2-18〉 초지조성 실적	35
〈표 1-2-19〉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	36
〈표 1-2-20〉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37
〈표 1-2-21〉 1인 1일당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38
〈표 1-2-22〉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38
〈표 1-2-23〉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41
〈표 1-2-24〉 연도별 자급률 추이	42
〈표 1-2-25〉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44
〈표 1-2-26〉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45
〈표 1-2-27〉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45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46
〈표 1-2-29〉 규모별 추이	47
〈표 1-2-30〉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47
〈표 1-2-31〉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48

표·그림목차

〈표 1-2-32〉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	49
〈표 1-2-33〉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49
〈표 1-2-34〉 농식품 수출 실적	50
〈표 1-2-35〉 국가별 농식품 수출 실적	51
〈표 1-2-36〉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52
〈표 1-2-37〉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52
〈표 1-3-1〉 국제 주요 곡물 수급 동향	55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58
〈표 1-3-3〉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	60
〈표 1-3-4〉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	60
〈표 1-3-5〉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60
〈표 1-3-6〉 對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61
〈표 1-3-7〉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	63
〈표 1-3-8〉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64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	67
〈표 1-3-10〉 한·미간 농림축산식품 교역 동향	70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70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71
〈표 1-3-1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73
〈표 1-3-14〉 對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	74
〈표 2-1-1〉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86
〈표 2-1-2〉 연도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신규 선정·지원 및 예산현황	88
〈표 2-1-3〉 들녘경영체 직접생산비 절감을 조사결과	89
〈표 2-1-4〉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91
〈표 2-1-5〉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95
〈표 2-1-6〉 前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101
〈표 2-1-7〉 농지매매 지원농지 타작물 재배 추진실적	101
〈표 2-1-8〉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추진실적	102
〈표 2-1-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103
〈표 2-1-1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103
〈표 2-1-11〉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106

표·그림목차

〈표 2-1-12〉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률	108
〈표 2-1-13〉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110
〈표 2-1-14〉 농업용 면세유 현황	110
〈표 2-1-15〉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110
〈표 2-1-16〉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111
〈표 2-1-17〉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113
〈표 2-2-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126
〈표 2-2-2〉 2021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129
〈표 2-2-3〉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132
〈표 2-2-4〉 양곡연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133
〈표 2-2-5〉 국가별 쌀 약정 현황	134
〈표 2-2-6〉 축산비 중 사료비 비중	138
〈표 2-2-7〉 방목생태축산농장 현황	139
〈표 2-2-8〉 방목생태축산 자문단 구성 현황	139
〈표 2-2-9〉 연도별 도시농업 현황	141
〈표 2-3-1〉 2021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44
〈표 2-3-2〉 2021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145
〈표 2-3-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147
〈표 2-3-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147
〈표 2-3-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	151
〈표 2-4-1〉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156
〈표 2-4-2〉 스마트 팜 확산방안	156
〈표 2-4-3〉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157
〈표 2-4-4〉 스마트팜 연도별 보급실적	157
〈표 2-4-5〉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159
〈표 2-4-6〉 2021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160
〈표 2-4-7〉 SNS 활용 기술 컨설팅 추진 건수	162
〈표 2-4-8〉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 추진 현황	162
〈표 2-4-9〉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166
〈표 2-4-10〉 연도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현황	167

표·그림목차

〈표 2-4-1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현황	167
〈표 2-4-1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172
〈표 2-4-13〉 연도별 종자업 등록 현황	173
〈표 2-4-14〉 연도별 육묘업 등록 현황	173
〈표 2-4-15〉 국내 곤충산업 현황	175
〈표 2-4-1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현황	184
〈표 2-4-1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	187
〈표 2-5-1〉 연도별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실적	193
〈표 2-5-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실적	195
〈표 2-5-3〉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	200
〈표 2-5-4〉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201
〈표 2-5-5〉 연도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202
〈표 2-5-6〉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203
〈표 2-5-7〉 국내 야생멧돼지 및 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204
〈표 2-5-8〉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205
〈표 2-5-9〉 연도별 소 결핵병 발생현황	205
〈표 2-5-10〉 OIE 위험무시국 지위요건(예찰점수 산정기준)	206
〈표 2-5-11〉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 추진현황	208
〈표 2-5-12〉 수출입 식물검역 실적(화물+휴대+우편식물)	211
〈표 2-5-13〉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211
〈표 2-5-1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218
〈표 2-5-1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219
〈표 2-5-1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	219
〈표 2-5-1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221
〈표 2-5-1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	225
〈표 2-5-19〉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226
〈표 2-5-20〉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현황	226
〈표 2-6-1〉 식품 연구개발 투자 분야	228
〈표 2-6-2〉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245
〈표 2-6-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245

표·그림목차

〈표 2-7-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252
〈표 2-7-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253
〈표 2-7-3〉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 지침에 따른 수행 절차	259
〈표 2-7-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261
〈표 2-7-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262
〈표 2-7-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262
〈표 2-7-7〉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응자 현황	264
〈표 2-7-8〉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266
〈표 2-7-9〉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예산현황	267
〈표 2-7-10〉 농업인안전보험 추진실적	269
〈표 2-7-11〉 농지연금 사업 추진실적	271
〈표 2-7-12〉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273
〈표 2-7-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273
〈표 2-7-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274
〈표 2-7-15〉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275
〈표 2-7-16〉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277
〈표 2-7-1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277
〈표 2-7-18〉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현황	278
〈표 2-7-19〉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현황	287
〈표 2-7-20〉 대구·경북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290
〈표 2-7-21〉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291
〈표 2-7-2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293
〈표 2-7-2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294
〈표 2-7-24〉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295
〈표 2-7-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296
〈표 2-7-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296
〈표 2-7-27〉 연도별 논 및 수리담 현황	297
〈표 2-7-2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현황	298
〈표 2-7-29〉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추진현황	298
〈표 2-7-30〉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현황	299
〈표 2-7-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현황	299

표·그림목차

〈표 2-7-3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개발유형	300
〈표 2-7-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301
〈표 2-7-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302
〈표 2-8-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312
〈표 2-8-2〉 2021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318
〈표 3-1-1〉 연도별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	331
〈표 3-1-2〉 연도별 열량 자급률 및 주요식품 자급률 현황	332
〈표 3-1-3〉 연도별 축산물 자급률 현황	333
〈표 3-1-4〉 연도별 사료 자급률 현황	333
〈표 3-1-5〉 연도별 원예작물 자급률 현황	334
〈표 3-2-1〉 연도별 쌀 식량자급률 및 전체 쌀 수급 상황	335
〈표 3-2-2〉 연도별 보리 식량자급률 현황	337
〈표 3-2-3〉 연도별 전체 보리 수급 상황(사료 제외)	337
〈표 3-2-4〉 연도별 밀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338
〈표 3-2-5〉 연도별 콩 식량자급률 및 전체 콩 수급 상황(사료 제외)	340
〈표 3-2-6〉 연도별 옥수수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342
〈표 3-2-7〉 연도별 서류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343
〈표 3-3-1〉 연도별 쇠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344
〈표 3-3-2〉 연도별 한육우 규모화 및 고급화 진전	345
〈표 3-3-3〉 연도별 돼지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346
〈표 3-3-4〉 연도별 닭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348
〈표 3-3-5〉 연도별 육계 사육현황 및 축산계열화율 변화	349
〈표 3-3-6〉 연도별 우유 식량자급률 및 수급현황	350
〈표 3-3-7〉 연도별 계란 자급률 및 수급 상황	352
〈표 3-3-8〉 연도별 산란계 사육현황 및 생산액	353
〈표 3-3-9〉 2021년 양축용 배합사료 원료별 사용량 및 자급률	354
〈표 3-3-10〉 2021년 조사료 자급률 세부 산출내역	355
〈표 3-4-1〉 연도별 채소류 자급률 및 전체 수급 상황	357
〈표 3-4-2〉 연도별 과실류 자급률	359

표·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 추이	5
〈그림 1-2-1〉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변화 추이	39
〈그림 1-3-1〉 식량가격지수 변동 주기	56
〈그림 1-3-2〉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68
〈그림 2-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조회서비스	86
〈그림 2-2-1〉 양곡관리 시스템	132
〈그림 2-5-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200
〈그림 2-6-1〉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245
〈그림 2-7-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280
〈그림 2-7-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281
〈그림 2-7-3〉 GAP 인증정보 연계 화면	282
〈그림 2-7-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성도	283
〈그림 2-8-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의사결정기구 개요	325

제1편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권지현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2021년 12월 1일 현재 전국 농가 수는 1,031천 가구로 전년의 1,035천가구보다 0.4%(4천 가구)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2,215천 명으로 전년의 2,314천 명보다 4.3%(99천 명)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603천 가구로 전년의 619천 가구보다 2.7%(17천 가구) 감소하였다. 전업농가의 전체 농가 대비 비중은 58.4%로 전년(59.8%) 대비 1.4%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 이외의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429천 가구로 전년 416천 가구보다 3.1%(13천 가구) 증가하였다.

총인구(51,745천명) 중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다. 2021년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은 59.9%로 전년(56.0%)보다 4.0%p 증가하였고,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은 46.8%로 전년(42.3%) 보다 4.5%p 증가하였다.

* 국가 전체 65세 이상 비율(%) : ('18)14.3 → ('19)14.9 → ('20)15.7 → ('21)16.6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1,100천 명(49.7%), 여성이 1,115천 명(50.3%)으로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호	1,068	1,042	1,021	1,007	1,035	1,031	△4	△0.4	
전 업 농가 (비 중)	천호 (%)	597 (55.9)	585 (56.2)	580 (56.8)	583 (57.9)	619 (59.8)	603 (58.4)	△17 △1.4p	△2.7 -	
겸 업 농 가 (비 중)	천호 (%)	471 (44.1)	457 (43.8)	441 (43.2)	424 (42.1)	416 (40.2)	429 (41.6)	13 1.4p	3.1 -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2,496 (4.9)	2,422 (4.7)	2,315 (4.5)	2,245 (4.3)	2,314 (4.5)	2,215 (4.3)	△99 △0.2p	△4.3 -	
호당농가인구	명	2.34	2.32	2.27	2.23	2.24	2.15	△0.09	△3.9	
경영주 65세 이상 비율	%	55.5	58.2	60.3	62.0	56.0	59.9	4.0p	-	
농가인구 65세 이상 비율	%	40.3	42.5	44.7	46.6	42.3	46.8	4.5p	-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성 (구성비)	천명 (%)	1,222 (48.9)	1,184 (48.9)	1,130 (48.8)	1,100 (49.0)	1,153 (49.8)	1,100 (49.7)	△53 (△0.2p)	△4.6 -
	여 성 (구성비)	천명 (%)	1,275 (51.1)	1,238 (51.1)	1,185 (51.2)	1,145 (51.0)	1,161 (50.2)	1,115 (50.3)	△45 (△0.2p)	△3.9 -

출처: 통계청 '20년은 농림어업총조사, '16~'19년, '21년은 농림어업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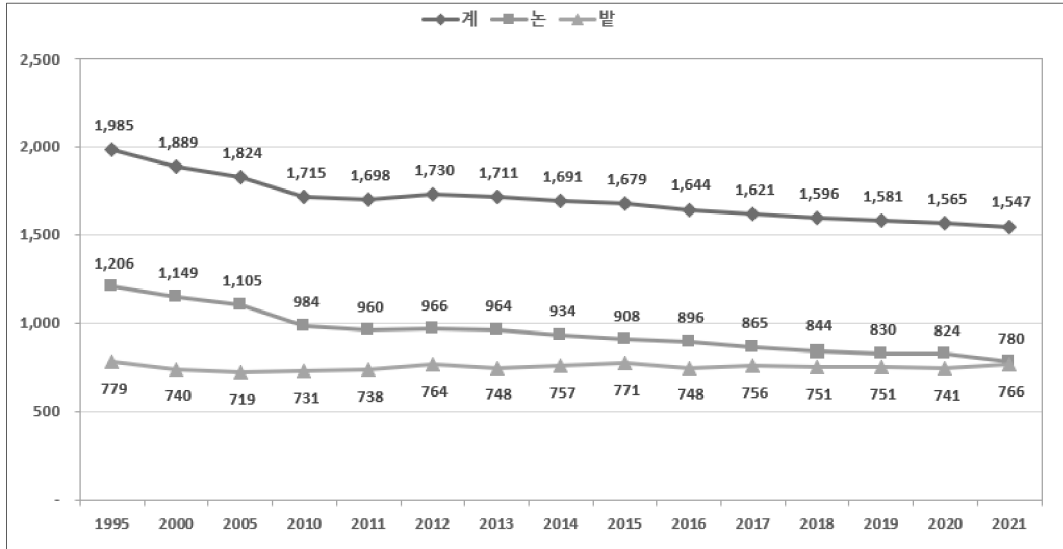
2.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물 건립 등 타 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2021년 말 경지면적은 1,547천ha로 전년보다 18천ha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논 면적은 780천ha로 전년에 비하여 43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66천ha로 전년 대비 25천ha가 증가하였다.

2021년 작물 재배면적은 1,614천ha로 전년보다 10천ha가 감소하였고, 경지이용률은 107.3%로 전년보다 0.3%p 증가하였다. 논 경지이용률은 112.1%이며, 밭 경지이용률은 102.0% 이다.

경지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905천ha로 전년보다 1천ha 감소, 채소는 260천ha로 0.5천ha 감소, 과수는 153천ha로 3천ha 감소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68.8천ha로 전년보다 5.8천ha 증가하였고, 휴경율(전년경지면적에 대한 당년 휴경면적 비율)은 전년보다 0.4%p 증가한 4.4%로 나타났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 추이(천ha)



출처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적
	계	논밭 전환	개간	간척	기타	계	논밭 전환	건물 건축	공공 시설	유휴지	기타	
2005	10,426	8,695	1,008	411	312	22,021	8,695	5,209	3,517	3,068	1,532	△11,595
2006	30,691	26,144	4,159	16	372	54,260	26,144	9,819	6,315	4,462	7,520	△23,569
2007	22,420	18,125	3,392	550	353	41,311	18,125	10,167	4,067	6,127	2,825	△18,891
2008	32,734	27,122	4,643	443	526	55,518	27,122	9,834	5,157	10,037	3,368	△22,784
2009	61,785	35,094	23,013	2,685	993	83,782	35,094	15,156	13,939	14,984	4,609	△21,997
2010	36,122	26,621	7,875	354	1,272	57,619	26,621	8,356	9,318	10,138	3,186	△21,497
2011	30,609	24,297	5,175	412	725	47,870	24,297	7,940	5,627	7,410	2,596	△17,261
2012	-	-	-	-	-	-	-	-	-	-	-	-
2013	64,125	29,641	23,802	367	10,316	82,671	29,641	5,336	1,163	-	46,531	△18,546
2014	39,646	28,413	11,232	1	-	59,969	28,413	2,855	1,197	833	26,672	△20,323
2015	23,788	22,704	1,083	-	-	35,878	22,704	5,421	1,449	271	6,033	△12,090
2016	50,312	40,716	1,590	1	8,005	85,734	40,716	9,972	5,410	16,066	13,570	△35,422
2017	43,120	41,324	1,383	-	414	65,923	41,324	8,269	3,418	8,672	4,241	△22,803
2018	24,045	22,423	1,413	-	210	49,227	22,423	7,895	3,257	9,893	5,759	△25,182
2019	29,524	28,513	994	-	17	44,181	28,513	6,627	2,680	3,377	2,983	△14,657
2020	14,644	13,946	697	-	1	30,803	13,946	10,949	1,763	2,796	1,349	△16,159
2021	-	-	-	-	-	-	-	-	-	-	-	-

출처 : 2020년 농업면적통계 보고서(통계청발간), 2012년은 표본조사에서 원격탐사로 조사방법 변경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2021년 표본 개편으로 증감내역 미공표,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작물재배면적	2,098	1,921	1,825	1,641	1,660	1,643	1,624	1,614	△10	△0.6
식량작물	1,318	1,234	1,095	920	924	924	906	905	△1	△0.1
(미곡)	(1,072)	(980)	(892)	(755)	(738)	(730)	(726)	(732)	6	0.8
(맥류)	(68)	(61)	(51)	(38)	(54)	(47)	(40)	(35)	△5	△12.8
(두류 등)	(177)	(193)	(152)	(127)	(133)	(147)	(139)	(138)	△2	△1.4
경제작물	780	687	730	722	736	719	718	709	△9	△1.2
(채소)	(296)	(240)	(284)	(272)	(282)	(266)	(260)	(260)	△0.5	△0.2
(과수)	(169)	(150)	(162)	(167)	(165)	(161)	(157)	(153)	△3	△2.1
(기타) ¹⁾	(315)	(298)	(283)	(282)	(289)	(293)	(301)	(296)	△5	△1.7
경지면적	1,889	1,824	1,715	1,621	1,596	1,581	1,565	1,547	△18	△1.2
경지이용률(%) ²⁾	110.5	104.7	109.3	103.9	106.7	107.2	107.0	107.3	0.3p	-
(논)	(106.3)	(102.9)	(109.9)	(102.2)	(109.2)	(109.6)	(111.0)	(112.1)	(1.1p)	-
(밭)	(116.9)	(107.3)	(108.5)	(105.9)	(103.8)	(104.6)	(102.6)	(102.0)	(△0.6p)	-

주 1) 특용약용작물, 기타작물, 기타수원지의 합계임

2) 경지이용률(%) = 경지이용(작물재배)면적/경작가능경지면적 × 100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16.8	44.2	50.5	61.2	61.0	60.5	63.0	68.8	5.8	9.2
논	4.3	24.1	20.1	17.1	14.2	15.7	15.8	17.5	1.7	10.5
밭	12.5	20.1	30.4	44.1	46.9	44.8	47.2	51.3	4.1	8.7
휴경률 ¹⁾ (%)	0.9	2.4	2.9	3.7	3.8	3.8	4.0	4.4	0.4p	-

주 1) 휴경률은 전년경지면적에 대한当年 휴경면적 비율임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제2절 농가경제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권지현

1. 소득 동향

◆ 농가소득

2021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47,759천원으로 전년(45,029천원)에 비해 6.1%(2,730천원) 증가하였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농업소득은 12,961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7%, 농업외소득은 17,884천원으로 7.7%, 이전소득은 14,809천원으로 3.8% 증가하였다. 반면, 비경상소득은 2,105천원으로 9.9% 감소하였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은 27.1%이며, 농업외소득은 37.4% 수준이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채소, 미곡, 과수, 축산 수입이 각각 6.0%, 5.1%, 4.5%, 3.6% 증가함에 따라 농업총수입이 3.2%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업외소득의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겸업소득이 전년에 비해 11.7%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전소득의 증가는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확대에 따라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¹⁾	23,072	30,503	32,121	38,239	42,066	41,182	45,029	47,759	2,730	6.1
□ 경 상 소 득	23,072	25,778	28,654	35,217	39,764	38,818	42,691	45,654	2,963	6.9
○ 농 업 소 득	10,897	11,815	10,098	10,047	12,920	10,261	11,820	12,961	1,141	9.7
○ 농업외소득	7,432	9,884	12,946	16,269	16,952	17,327	16,608	17,884	1,276	7.7
○ 이 전 소 득	4,743	4,078	5,610	8,902	9,891	11,230	14,263	14,809	546	3.8
□ 비경상소득 ²⁾	-	4,725	3,467	3,022	2,302	2,364	2,337	2,105	△232	△9.9

주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경조사금, 사고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또는 타기구로부터 얻은 수입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 상 소 득	100.0	84.5	89.2	92.1	94.5	94.3	94.8	95.6
○ 농 업 소 득	47.2	38.7	31.4	26.3	30.7	24.9	26.2	27.1
○ 농 외 소 득	32.2	32.4	40.3	42.5	40.3	42.1	36.9	37.4
○ 이 전 소 득	20.6	13.4	17.5	23.3	23.5	27.3	31.7	31.0
□ 비 경 상 소 득	-	15.5	10.8	7.9	5.5	5.7	5.2	4.4
〈 일 본 〉								
○ 농 업 소 득	12.8	24.6	26.2	36.3	34.1	-	-	-

주 1)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 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2) 일본은 농가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구성비임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주요통계,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2021년 농업소득은 전년(11,820천원)에 비해 9.7% 증가하였고, 농업소득률도 34.9%로 전년에 비해 2.1%p 증가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10,897	11,815	10,098	10,047	12,920	10,261	11,820	12,961	1,141	9.7
(농업소득률)	(55.8)	(44.6)	(37.1)	(32.9)	(36.1)	(29.8)	(32.8)	(34.9)	(2.1p)	-
○ 농업총수입	19,514	26,496	27,221	30,580	35,757	34,436	36,033	37,190	1,157	3.2
○ 농업경영비	8,617	14,681	17,123	20,533	22,837	24,175	24,212	24,229	17	0.1

주 :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농업총수입은 37,190천원으로 전년(36,033천원)에 비하여 3.2%(1,157천원) 증가하였다. 미곡수입, 축산수입, 채소수입, 과수수입은 각각 5.1%, 3.6%, 6.0%, 4.5%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6.6% 감소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9,514	26,496	27,221	30,580	35,757	34,436	36,033	37,190	1,157	3.2
○ 미곡수입	7,758	7,264	5,368	5,426	6,756	6,630	6,673	7,015	342	5.1
○ 축산수입	2,571	6,386	5,892	8,029	10,027	10,478	10,434	10,806	372	3.6
○ 채소수입	4,765	6,388	7,251	7,994	9,174	8,426	9,263	9,818	555	6.0
○ 과수수입	2,443	2,945	4,147	4,141	4,626	4,052	4,735	4,947	212	4.5
○ 기타수입 ¹⁾	1,977	3,513	4,564	4,990	5,174	4,850	4,927	4,603	△324	△6.6

주1) : 맥류, 잡곡, 두류, 서류, 화훼, 기타 포함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농업총수입의 구성비는 축산수입(29.1%), 채소수입(26.4%), 미곡수입(18.9%), 과수수입(13.3%), 기타수입(12.4%) 순이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곡수입	39.8	27.4	19.7	17.7	18.9	19.3	18.5	18.9
○ 축산수입	13.2	24.1	21.6	26.3	28.0	30.4	29.0	29.1
○ 채소수입	24.4	24.1	26.6	26.2	25.7	24.5	25.7	26.4
○ 과수수입	12.5	11.1	15.2	13.5	12.9	11.8	13.1	13.3
○ 기타수입	10.1	13.3	16.8	16.3	14.5	14.1	13.7	12.4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021년 농업경영비는 24,229천원으로 전년(24,212천원)에 비하여 0.1%(17천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년에 비해 노무비(8.8%), 양축비(3.4%)는 증가한 반면 임차료, 수선 및 농구비, 비료농약비, 기타비용은 각각 11.2%, 8.9%, 1.4%, 0.5% 감소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8,617	14,681	17,123	20,533	22,837	24,175	24,212	24,229	17	0.1
○수선및농구비	1,414	318	372	513	605	651	728	663	△65	△8.9
○노무비	600	913	897	1,385	1,908	1,983	1,886	2,052	166	8.8
○양축비 ¹⁾	1,175	2,748	3,126	4,074	5,077	5,528	5,477	5,665	188	3.4
○비료·농약비	1,245	1,625	2,117	2,089	2,433	2,615	2,625	2,589	△36	△1.4
○임차료	1,613	1,096	912	1,249	1,343	1,528	1,560	1,385	△175	△11.2
○기타비용 ²⁾	2,569	7,981	9,699	11,223	11,471	11,873	11,935	11,878	△57	△0.5

주 1) 동물관리비, 사료비의 합계

2) 감가상각비, 종묘비,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농업부문보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기타재료비 등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업외소득

2021년 농업외소득은 17,884천원으로 전년(16,608천원)에 비하여 7.7%(1,276천원)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겸업소득이 5,507천원으로 11.7%, 사업외소득이 12,376천원으로 6.0% 증가한 영향이다.

* 겸업소득 :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 외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 사업외소득 :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 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표 1-1-11〉 농업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외소득	7,432	9,884	12,946	16,269	16,952	17,327	16,608	17,884	1,276	7.7
○겸업소득	1,435	2,531	3,467	4,406	5,398	5,828	4,930	5,507	577	11.7
(구성비)	(19.3)	(25.6)	(26.8)	(27.1)	(31.8)	(33.6)	(29.7)	(30.8)	1.1p	-
○사업외소득	5,997	7,353	9,480	11,863	11,554	11,499	11,679	12,376	697	6.0
(구성비)	(80.7)	(74.4)	(73.2)	(72.9)	(68.2)	(66.4)	(70.3)	(69.2)	△1.1p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2021년 이전소득은 14,80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8%(546천원)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은 2,105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9%(232천원) 감소하였다.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소득은 전년에 비해 1.9%(314천원) 증가한 16,914천원이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743	8,803	9,077	11,924	12,193	13,594	16,600	16,914	314	1.9
○이 전 소 득	4,743	4,078	5,610	8,902	9,891	11,230	14,263	14,809	546	3.8
○비 경 상 소 득	-	4,725	3,467	3,022	2,302	2,364	2,337	2,105	△232	△9.9

주)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계지출 동향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2021년 가계비는 35,50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비지출은 27,520천원으로 전년(26,915천원)에 비하여 2.2%(605천원)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은 7,980천원으로 전년(7,580천원)에 비하여 5.3%(400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8,003	26,649	27,672	30,640	33,828	35,339	34,494	35,500	1,006	2.9
○소 비 지 출	18,003	19,378	21,264	24,738	26,033	27,221	26,915	27,520	605	2.2
○비 소 비 지 출 ¹⁾	-	7,271	6,408	5,902	7,794	8,118	7,580	7,980	400	5.3
농업소득의 가계비 총족도 (농업소득/가계비)	-	44.3	36.5	32.8	38.2	29.0	34.3	36.5	2.2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	83.4	82.7	76.5	76.0	82.3	71.9	69.2	△2.7	-

주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조세부담금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21년 39,779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2%(2,330천원)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12,259천원으로 전년(10,534천원)에 비하여 16.4%(1,725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4〉 처분가능소득 / 잉여금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¹⁾	22,838	23,232	31,147	32,337	34,271	33,063	37,449	39,779	2,330	6.2
○ 소비지출	18,003	19,378	24,999	24,738	26,033	27,221	26,915	27,520	605	2.2
○ 잉여금 ²⁾	4,361	3,854	6,149	7,599	8,238	5,843	10,534	12,259	1,725	16.4

주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농가자산 동향

2021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585,676천원으로 전년(565,622천원)에 비하여 3.5% (20,054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정자산은 498,298천원으로 토지, 대동물 등의 영향으로 전년(484,985천원)에 비해 2.7%(13,313천원)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87,377천원으로 예·적금(정기) 등 금융자산이 늘어 전년(80,638천원)에 비해 8.4%(6,739천원) 증가하였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9,975	298,178	372,476	505,881	495,687	529,455	565,622	585,676	20,054	3.5
고 정 자 산 ¹⁾	125,918 (78.7)	238,399 (80.0)	289,435 (77.7)	386,714 (76.4)	425,721 (85.9)	451,987 (85.4)	484,985 (85.7)	498,298 (85.1)	13,313 (△0.7p)	2.7 -
유 동 자 산 ²⁾	34,057 (21.3)	59,779 (20.0)	83,041 (22.3)	119,166 (23.6)	69,966 (14.1)	77,469 (14.6)	80,638 (14.3)	87,377 (14.9)	6,739 (0.7p)	8.4 -

주 1) 고정자산 :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유동자산 :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재고자산(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재, 소동물 등)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농가부채 동향

농가부채는 2021년말 현재 가구당 36,592천원으로 전년(37,589천원)에 비해 2.7%(997천원) 감소하였다.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646천원으로 전년(14,510천원)에 비해 6.0%(864천원) 감소하였으며,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계용, 겸업용, 기타용 부채 등 농업용 이외의 부채는 22,947천원으로 전년(23,080천원)에 비해 0.6%(133천원) 감소하였다.

농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 비율(농가부채/당좌자산)은 43.9%로 전년(48.9%)에 비해 5.0%p 낮아졌다.

〈표 1-1-16〉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부 채 (A)	20,207	27,210	27,210	26,375	33,269	35,718	37,589	36,592	△997	△2.7
○농업용부채 (구성비)	-	16,315 (60.0)	12,930 (47.5)	10,618 (40.3)	13,687 (41.1)	14,506 (40.6)	14,510 (38.6)	13,646 (37.3)	△864 (△1.3p)	△6.0 -
○농업용이외부채 ¹⁾ (구성비)	-	10,894 (40.0)	14,280 (52.5)	15,758 (59.7)	19,582 (58.9)	21,212 (59.4)	23,080 (61.4)	22,947 (62.7)	△133 (1.3p)	△0.6 -
당 좌 자 산 (B)	-	54,354	77,668	113,931	65,765	73,084	76,893	83,311	6,418	8.3
단기상환능력 ²⁾ [(A/B)×100]	-	50.1	35.0	23.2	50.6	48.9	48.9	43.9	△5.0p	-

주 1) 농업용이외 부채는 가계용 + 겸업용 + 기타용 부채임

2) 당좌자산 대비 농가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 지표

2021년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고, 제1종 겸업농가보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57,056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농가소득 평균의 83.7% 수준이었다.

자산 및 부채, 가계지출 역시 제2종 겸업농가가 각각 596,826천원, 47,964천원, 44,144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1-1-17〉 2021년 전업/겸업 농가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소 득	47,759	39,967	55,853	57,056	83.7	116.9	119.5
가 계 지 출	35,500	29,626	36,036	44,144	83.5	101.5	124.3
자 산	585,676	580,537	573,912	596,826	99.1	98.0	101.9
부 채 (부채 / 자산)	36,592 (6.2)	27,344 (4.7)	45,054 (7.9)	47,964 (8.0)	74.7	123.1	131.1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7. 주·부업별 지표

2021년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농가소득이 62,88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급농가 소득(39,331천원)의 1.6배 수준이었다. 전문농가의 자산은 711,20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농가의 자산(453,289천원)은 전문농가의 63.7% 수준이었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부업농가가 7.8%로 가장 높았다.

※ 주·부업농가 기준

- 전문농가 : 경지규모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0만원 이상 농가
- 일반농가 : 경지규모 3ha 미만인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 부업농가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표 1-1-18〉 2021년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소 득	47,759	62,884	26,851	55,526	39,331
가 계 지 출	35,500	36,899	25,198	43,960	32,106
자 산	585,676	711,201	453,289	652,715	400,209
부 채 (부채 / 자산)	36,592 (6.2)	48,282 (6.8)	12,358 (2.7)	50,951 (7.8)	24,757 (6.2)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8.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2021년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91,83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훼농가가 53,708천원으로 나타났다. 논벼 재배농가의 소득은 36,532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47,759천원)의 76.5% 수준이었다.

자산의 경우 축산농가가 976,83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수농가(676,350천원), 논벼농가(575,358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자산 비율은 화훼농가 13.4%, 축산농가 9.5%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논벼 농가는 2.1%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21년 영농형태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직 ¹⁾	축산
농 가 소 득	47,759	36,532	43,946	36,927	30,317	53,708	29,626	91,838
가 계 지 출	35,500	27,736	32,217	30,319	29,092	36,433	29,719	40,253
자 산	585,676	575,358	676,350	469,774	488,758	499,830	488,239	976,837
부 채	36,592	12,261	27,529	31,441	19,382	67,074	20,697	93,123
(부채 / 자산)	(6.2)	(2.1)	(4.1)	(6.7)	(4.0)	(13.4)	(4.2)	(9.5)

주 : 1) 농업총수입 중 맥류, 잡곡, 두류, 서류수입의 합이 최대인 농가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9.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2021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10ha 이상일 때 90,99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0.5ha 미만인 경우는 40,564천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10ha 이상 농가소득의 44.6%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별 농가자산은 역시 경지규모가 10ha 이상일 때 1,048,720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자산 비율도 경지규모가 10ha 이상일 때 15.6%로 가장 높았다.

〈표 1-1-20〉 2021년 경지규모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	5.0~7.0ha	7.0~10.0ha	10.0ha 이상
농 가 소 득	47,759	40,564	42,698	47,316	49,493	53,170	66,524	77,479	87,824	90,996
가 계 지 출	35,500	33,449	35,694	34,263	34,016	35,863	42,303	43,167	42,641	50,605
자 산	585,676	455,686	531,809	688,883	556,464	703,914	832,526	951,052	925,717	1,048,720
부 채	36,592	26,756	38,532	36,136	38,061	31,038	47,204	67,847	70,224	164,098
(부채/ 자산)	(6.2)	(5.9)	(7.2)	(5.2)	(6.8)	(4.4)	(5.7)	(7.1)	(7.6)	(15.6)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2021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은 50대가 72,05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36,36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40대가 822,70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700,713천원), 60대(626,553천원)의 순이었다. 농가부채 역시 40대가 163,07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87,715천원)와 60대(42,999천원)의 순이었다.

〈표 1-1-21〉 2021년 경영주 연령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 가 소 득	47,759	70,233	72,057	55,838	36,365
가 계 지 출	35,500	60,199	53,489	39,838	28,004
자 산	585,676	822,705	700,713	626,553	525,119
부 채	36,592	163,077	87,715	42,999	17,124
(부채 / 자산)	(6.2)	(19.8)	(12.5)	(6.9)	(3.3)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1. 지역별 주요 지표

2021년 지역별 농가소득을 살펴보면 경기지역 농가가 가구당 53,78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제주(52,586천원), 강원(48,525천원), 경북(47,962천원), 충남(47,642천원) 지역 순이었다. 자산의 경우 제주지역이 1,005,740천원으로 월등히 많았고, 부채는 제주(99,996천원), 경기(57,313천원)지역 순서로 많았다.

〈표 1-1-22〉 2021년 지역별 주요 지표

(단위 : 천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 가 소 득	47,759	53,784	48,525	45,588	47,642	47,459	47,228	47,962	44,208	52,586
가 계 지 출	35,500	42,115	36,259	34,049	32,693	32,689	33,161	31,739	34,028	44,101
자 산	585,676	917,769	533,016	510,782	557,128	400,019	407,209	457,359	529,937	1,005,740
부 채	36,592	57,313	32,893	17,257	23,801	35,942	26,885	30,584	27,064	99,996
(부채 / 자산)	(6.2)	(6.2)	(6.2)	(3.4)	(4.3)	(9.0)	(6.6)	(6.7)	(5.1)	(9.9)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권지현

1. 개황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8.7로 전년에 비해 10.1%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1로 전년에 비해 4.7% 상승하였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5.9으로 전년에 비해 5.2% 상승하였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상이면 채산성이 호전된 것으로, 100 이하이면 채산성이 악화된 것을 나타낸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2015=100)

구 분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가판매가격지수(①)	81.3	87.9	100.0	107.6	108.5	109.1	117.0	128.7
농가구입가격지수(②)	75.0	91.7	100.0	100.9	102.5	104.1	106.1	111.1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08.4	95.9	100.0	106.6	105.8	104.7	110.2	115.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8.7로 전년에 비해 10.1% 상승하였고, 곡물은 138.1로 전년에 비해 8.4% 상승하였으며, 청과물은 141.0으로 전년에 비해 5.6% 상승하였다. 축산물은 116.8로 전년에 비해 14.7% 상승하였다.

◆ 곡 물

2021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38.1로 전년에 비해 8.4%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미곡, 두류/잡곡, 서류는 각각 전년보다 7.7%, 19.6%, 4.4% 상승한 반면 맥류는 16.1% 하락하였다.

◆ 청과물

2021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41.0으로 전년에 비해 5.6% 상승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채소류는 122.5으로 전년에 비해 3.3% 상승하였고, 과실류는 171.9로 전년에 비해

8.4% 상승하였다. 채소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조미채소류, 과채류가 전년에 비해 각각 17.2%, 0.7% 상승하였고, 엽채류, 근채류는 각각 7.7%, 26.9% 하락하였다.

◆ 축산물

2021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8로 전년에 비해 14.7% 상승하였다. 가축이 116.3로 전년에 비해 10.2% 상승하였고, 기타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도 117.6으로 23.3% 상승하였다.

◆ 기타 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21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5로 전년에 비해 14.9%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부산물이 102.0로 전년에 비해 3.8% 하락하였으나, 특용작물과 화훼는 각각 18.3%, 11.6% 상승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구 분	가중치	지 수						증감률(%)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총 지 수	1,000	100.0	107.6	108.5	109.1	117.0	128.7	10.1
곡 물	200.1	100.0	94.5	118.2	122.4	127.5	138.1	8.4
미 곡	146.0	100.0	86.5	112.2	122.8	129.0	139.0	7.7
맥 류	8.7	100.0	95.0	93.4	96.4	104.7	87.8	△16.1
두류/잡곡	27.5	100.0	129.7	138.0	147.3	137.1	164.0	19.6
서 류	17.9	100.0	105.3	148.3	93.4	110.9	115.8	4.4
청 과 물	314.0	100.0	121.8	118.2	117.0	133.6	141.0	5.6
채 소	196.1	100.0	107.6	110.9	101.6	118.6	122.5	3.3
(엽 채 류)	-	100.0	105.3	110.9	99.8	133.8	123.5	△7.7
(근 채 류)	-	100.0	144.6	132.8	108.6	147.7	108.0	△26.9
(조 미 채)	-	100.0	113.5	112.0	101.7	109.6	128.4	17.2
(과 채 류)	-	100.0	97.2	106.5	101.2	117.4	118.2	0.7
과 실	117.9	100.0	145.4	130.3	142.5	158.5	171.9	8.4
축 산 물	378.3	100.0	105.8	97.1	97.4	101.8	116.8	14.7
가 축	240.7	100.0	101.2	101.6	101.0	105.5	116.3	10.2
기타축산물	137.6	100.0	113.7	89.4	91.0	95.3	117.6	23.3
기타농산물	107.6	100.0	96.7	101.9	102.3	102.2	117.5	14.9
특용작물	64.7	100.0	92.9	94.3	98.3	97.5	115.4	18.3
화 훼	39.3	100.0	101.8	115.3	108.7	109.6	122.4	11.6
부 산 물	3.6	100.0	109.2	93.1	103.5	106.0	102.0	△3.8

출처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21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1.1로, 가계용품(2.7%), 재료비(8.0%), 노무비(8.9%), 자산구입비(4.8%)가 올라 전년에 비하여 4.7% 상승하였다.

◆ 가계용품

2021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8.9로 전년대비 2.7% 상승하였다.

◆ 재료비

2021년 재료비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0.0으로 전년대비 8.0%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종자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모두 전년에 비해 각각 0.2%, 7.5%, 1.6%, 11.2%, 10.0% 상승하였다.

◆ 노무비

2021년 노무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35.3으로 전년보다 8.9% 상승하였다.

◆ 경비

2021년 경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07.5로 전년보다 4.1%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농업위탁비, 판매자재비는 각각 4.7%, 1.6% 하락하였으나, 영농광열비와 임차료가 각각 24.7%, 1.9% 상승하였다.

◆ 자산구입비

2021년 자산구입비의 구입가격지수는 118.6으로 전년보다 4.8%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기계구입비와 가축구입비가 각각 0.2%, 11.8% 상승하였다.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1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증감률(%)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년 대비
총 지 수	1,000	100.0	100.9	102.5	104.1	106.1	111.1	4.7
가 계 용 품	484.8	100.0	103.3	104.6	104.9	106.1	108.9	2.7
재 료 비	250.6	100.0	93.2	92.7	95.6	101.8	110.0	8.0
중 자	27.5	100.0	100.6	107.7	112.6	115.9	116.1	0.2
비 료	39.0	100.0	75.2	72.6	72.6	77.9	83.7	7.5
농 약	29.3	100.0	96.9	95.3	96.8	118.9	120.8	1.6
사 료	136.0	100.0	95.4	94.4	98.2	102.1	113.6	11.2
영 농 자 재	18.7	100.0	98.3	95.9	97.7	102.6	112.8	10.0
노 무 비	45.0	100.0	108.8	114.8	119.6	124.2	135.3	8.9
경 비	129.0	100.0	98.0	102.7	106.6	103.3	107.5	4.1
영농광열비	32.6	100.0	94.1	108.4	107.7	87.1	108.6	24.7
임 차 료	40.5	100.0	97.5	101.3	109.8	112.4	114.5	1.9
농작업위탁비	42.5	100.0	102.0	101.7	105.5	108.5	103.4	△4.7
판매자재비	13.3	100.0	96.5	96.5	97.6	98.0	96.5	△1.6
자 산 구 입 비	90.6	100.0	109.4	111.6	112.4	113.2	118.6	4.8
기 계 구 입	58.9	100.0	101.3	104.2	104.6	104.3	104.5	0.2
가 축 구 입 비	31.7	100.0	124.4	125.2	126.9	129.6	144.9	11.8

출처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권지현

1. 개황

2021년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 중 호당 자영농의 노동시간은 1,133시간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농업자본투입액의 경우는 75,850천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당 경지면적은 1.50ha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원, ha)

구 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자영농업노동시간	1,253	1,469	1,103	881	1,172	1,101	1,108	1,133	26	2.3
농업자본투입액	31,425	49,721	53,323	59,649	75,994	78,068	77,500	75,850	△1,650	△2.1
호당 경지면적	1.37	1.43	1.46	1.56	1.56	1.57	1.51	1.50	△0.01	-

*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통계(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2021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8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95시간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6,387천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하였다.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천원/시간	12	12	16	21	18	17	18	18	0	-
토지생산성 ²⁾	천원/10a	1,051	1,141	1,273	1,506	1,756	1,471	1,576	1,761	185	11.7
자본생산성 ³⁾	천원	470	364	325	317	278	239	257	276	19	7.4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89	93	81	70	98	87	88	95	7	8.0
자본집약도 ⁵⁾	천원/10a	2,237	3,138	3,920	4,754	6,324	6,167	6,127	6,387	260	4.2

주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영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서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투입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영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수익성·생산성·안정성지표)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2021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792천원으로 전년 774천원보다 2.4% 증가하였고, 마늘은 3,515천원으로 전년 3,274천원보다 7.4% 증가하였다. 양파는 2,863천원으로 전년 2,709천원보다 5.7%, 고추는 3,889천원으로 전년 3,708천원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천원)

구분	연도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0년 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총수입(A)	1,041	879	822	975	1,178	1,153	1,216	1,294	78	6.4
	생산비(B)	538	588	614	691	796	773	774	792	19	2.4
	경영비(C)	280	334	388	433	495	485	485	508	24	4.9
	순수익(A-B)	503	292	208	283	382	379	443	502	59	13.4
	소 득(A-C)	761	546	434	541	683	667	732	786	54	7.4
마 늘	총수입(A)	1,427	2,007	4,268	4,842	3,613	3,288	3,749	6,113	2,364	63.1
	생산비(B)	1,226	1,423	1,811	3,376	3,461	3,348	3,274	3,515	241	7.4
	경영비(C)	683	798	1,091	1,911	2,073	1,997	1,796	2,017	221	12.3
	순수익(A-B)	201	584	2,457	1,466	151	-60	475	2,598	2,123	446.8
	소 득(A-C)	744	1,209	3,177	2,931	1,539	1,291	1,953	4,096	2,144	109.8
양 파	총수입(A)	1,519	1,908	3,244	4,525	2,706	2,782	4,285	4,678	393	9.2
	생산비(B)	921	1,048	1,422	2,494	2,537	2,533	2,709	2,863	154	5.7
	경영비(C)	485	610	936	1,755	1,631	1,674	1,806	1,992	186	10.3
	순수익(A-B)	598	860	1,822	2,032	168	249	1,576	1,815	239	15.2
	소 득(A-C)	1,034	1,298	2,308	2,771	1,074	1,108	2,479	2,686	207	8.3
고 추	총수입(A)	1,837	2,209	2,452	3,420	5,344	3,626	4,569	5,079	510	11.2
	생산비(B)	1,127	1,497	1,908	3,295	3,665	3,491	3,708	3,889	181	4.9
	경영비(C)	428	638	929	1,049	1,281	1,222	1,480	1,506	26	1.8
	순수익(A-B)	711	712	544	125	1,678	136	861	1,190	329	38.2
	소 득(A-C)	1,410	1,572	1,523	2,371	4,062	2,404	3,089	3,573	484	15.7

출처: 통계청 농산물생산비조사(논벼, 마늘, 양파, 고추 소득분석), 통계수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여 총계와 내역별 수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농림업 부가가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서동주

2021년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1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조 6,340억원 수준이다. 명목가격 기준으로는 축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총부가가치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37조 75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비료비와 영농광열비를 중심으로 중간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명목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축산업 부가가치는 AI로 인한 가금류 공급 감소, 한우와 돼지의 가정 내 수요 증가, 요인과 수입단가의 상승 요인에 의해 판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명목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28.7% 증가하였다.

임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어업 부가가치는 중간재 비용의 증가로 인해 명목가격 기준으로 12.5% 감소하였다.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가율

(단위 : 10억 원, 명목, (2015년 연쇄가격 기준))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p)
농 립 어 업		33,225 (33,225)	32,362 (31,353)	33,974 (32,060)	33,150 (32,109)	32,099 (33,373)	34,268 (31,442)	37,075 (32,634)
실 증 감 륜	농 립 어 업	3.4 (-0.2)	-2.6 (-5.6)	5.0 (2.3)	-2.4 (0.2)	-3.2 (3.9)	6.8 (-5.8)	8.2 (3.8)
	재 배 업	1.1 (0.0)	-5.7 (-5.0)	2.6 (4.5)	5.9 (-4.1)	-0.6 (3.3)	3.8 (-8.6)	5.9 (4.7)
	축 산 업	13.4 (0.9)	3.6 (-0.7)	8.5 (-6.2)	-23.4 (10.0)	-6.2 (8.2)	17.8 (1.1)	28.7 (-0.3)
	임 업	-2.0 (-3.6)	-3.9 (-8.8)	-0.5 (3.7)	2.2 (2.0)	-10.3 (0.3)	-5.2 (-2.8)	3.3 (-0.1)
	어 업	3.1 (-1.6)	6.3 (-19.5)	16.8 (6.0)	-7.9 (1.9)	-9.3 (3.3)	16.4 (-0.8)	-12.5 (7.6)

자료 : 한국은행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 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

1. 식량 수급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정성수

◆ 식량 공급

2021 양곡연도 전체 식량작물의 생산량은 4,721천톤(정곡)으로 2020 양곡연도 4,915천톤보다 194천톤 감소하였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집중호우와 연속된 태풍 등 기상 영향으로 생산 단수가 감소하여 쌀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쌀이 전년 3,744천톤에 비해 237천톤 감소한 3,507천톤이 생산되었으며, 밀, 옥수수, 서류의 경우는 전년보다 증가한 26천톤, 92톤, 887천톤이 생산되었다. 반면, 보리, 콩은 전년보다 감소한 89천톤, 81천톤이 생산되었다.

〈표 1-2-1〉 양곡연도별 식량 생산량

(단위 : 천톤)

양곡연도	합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2012	5,415	4,224	57	37	74	129	869	25
2013	5,411	4,006	61	19	83	123	1,089	31
2014	5,524	4,230	88	23	80	154	916	33
2015	5,472	4,241	76	27	82	139	871	36
2016	5,506	4,327	74	38	78	104	849	36
2017	5,291	4,197	75	37	74	75	802	31
2018	5,137	3,972	103	26	74	86	848	29
2019	5,059	3,868	137	15	78	89	842	30
2020	4,915	3,744	99	17	76	105	829	45
2021(잠정)	4,721	3,507	89	26	92	81	887	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11년 양곡연도부터 서류는 생체중(수분 포함) 기준, 그 이전 연도는 서류 건체중 기준

◆ 식량 수요

전체 식량작물의 소비량은 22,657천톤으로 전년 21,977천톤 대비 680천톤이 증가하였다. 식량용은 전년 대비 666천톤이 증가한 10,696천톤이 소비되었고, 사료용은 전년대비 14천톤이 증가한 11,961천톤이 소비되었다. 식량의 연말재고는 2,511천톤으로 전년 2,514천톤에 비해 3천톤이 감소하였다.

2021 양곡연도 전체 곡물자급률은 20.9%로 2020년 22.4% 비해 하락하였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44.4%로 2020년 49.3%에 비해 하락하였다. 이는 곡물생산량 중 비중이 높은 쌀의 생산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한편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20년 118.1kg보다 5.8kg 증가한 123.9kg으로 나타났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57.7kg에서 56.9kg, 보리는 1.4kg에서 0.6kg, 콩은 6.5kg에서 6.4kg으로 감소하였으나, 밀은 31.2kg에서 36.9kg, 옥수수는 3.1kg에서 3.6kg, 서류는 12.7kg에서 13.7kg, 기타작물은 5.5kg에서 5.8kg으로 증가하였다.

〈표 1-2-2〉 양곡연도별 전체 양곡 수급 상황

(단위 : 천톤)

양곡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 월	2,509	2,904	3,019	2,031	2,706	2,463	1,853	2,456	2,726	3,166	3,098	2,878	2,368	2,585
생 산	7,102	7,013	5,816	5,931	5,720	5,511	5,524	5,472	5,506	5,291	5,137	5,059	4,915	4,721
수 입	7,336	10,022	14,258	14,624	13,860	14,806	15,912	15,626	16,090	15,333	16,031	16,153	17,207	17,862
소 비	14,667	16,282	19,974	19,961	19,858	19,939	20,833	20,817	21,154	20,693	21,388	21,723	21,977	22,657
- 식량용	9,921	9,981	10,601	10,014	9,591	9,553	10,383	10,230	10,186	10,208	10,275	10,321	10,030	10,696
- 사료용	4,746	6,301	9,373	9,285	8,887	9,743	10,450	10,587	10,968	10,485	11,113	11,402	11,947	11,961
연말재고	2,280	3,657	3,119	2,625	2,428	2,841	2,456	2,726	3,167	3,099	2,878	2,368	2,514	2,511
자급률(%)	48.4	43.1	29.1	29.7	29.3	27.6	26.5	26.3	26.0	25.6	24.1	23.3	22.4	20.9
(사료용 제외시)	(71.6)	(70.3)	(55.7)	(55.6)	(53.6)	(54.1)	(53.2)	(53.5)	(54.1)	(51.9)	(50.3)	(49.3)	(49.3)	(44.4)
1인당 연간 소비량(kg)	181.7	167.0	160.5	153.2	137.5	128.0	127.9	126.4	124.6	122.5	121.6	119.4	118.1	12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11년 양곡연도부터 서류는 생체중(수분 포함) 기준, 그 이전 연도는 서류 건체중 기준

〈표 1-2-3〉 1인당 양곡연도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8	127.3	75.8	1.1	30.9	4.5	7.6	3.5	3.9
2009	125.2	74.0	1.2	31.3	4.0	7.6	3.4	3.7
2010	128.0	72.8	1.3	34.4	3.9	8.3	3.5	3.8
2011	137.6	71.2	1.3	35.0	3.7	7.8	14.3	4.3
2012	132.7	69.8	1.3	32.9	3.7	8.0	13.3	3.7
2013	132.0	67.2	1.3	31.3	3.5	7.9	16.8	4.0
2014	127.9	65.1	1.3	31.7	3.5	8.1	14.1	4.1
2015	126.4	62.9	1.3	32.2	3.6	8.2	13.7	4.5
2016	124.6	61.9	1.4	32.1	3.4	8.0	13.2	4.6
2017	122.5	61.8	1.3	32.4	3.3	6.5	12.3	4.9
2018	121.6	61.0	1.3	31.6	3.2	6.4	13.0	5.1
2019	119.4	59.2	1.4	31.6	3.1	6.3	12.9	4.9
2020	118.1	57.7	1.4	31.2	3.1	6.5	12.7	5.5
2021(잠정)	123.9	56.9	0.6	36.9	3.6	6.4	13.7	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11년 양곡연도부터 서류는 생체중(수분 포함) 기준, 그 이전 연도는 서류 건체중 기준

2. 원예·특용작물

◆ 채소류

■ 원예산업과 사무관 이승욱

2021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225.0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8,724천 톤이었다. 배추·무·당근 등 엽근채소류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추·마늘·양파 등 조미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체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표 1-2-4〉 채소류 생산 동향

(단위: ha, 천톤)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채소류 재배면적	403,386	386,391	297,961	245,251	251,558	246,725	224,959	217,261	226,804	239,806	225,872	219,457	225,044
채소류 생산량	10,586	11,282	9,583	8,381	9,243	9,904	8,549	8,040	8,662	9,186	8,681	8,486	8,7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봄 무·배추 재배면적은 13.6천ha로 전년보다 1.4% 감소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629천 톤이었다. 여름 무·배추 재배면적은 8.3천ha로 전년보다 6.0%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359천 톤으로 전년보다 7.0% 증가하였다. 가을 무·배추 재배면적은 19.3천ha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1,583천 톤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하였다. 겨울 무·배추 재배면적은 9.2천ha로 전년보다 15.2%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619천 톤으로 전년보다 12.7% 감소하였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33천ha로 전년보다 7.2%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54.4% 증가한 93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2천ha로 전년보다 13.3%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15.1% 감소한 309천 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18천ha로 전년보다 25.8%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35.0% 증가한 1,577천 톤이 생산되었다.

〈표 1-2-5〉 주요 품목별 생산 동향

구분	2020			2021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톤)	
업근 채소	배추	30,949	7,246	2,243	30,084	6,706	2,018
	무	20,519	5,744	1,179	20,272	5,783	1,172
	상추	3,814	2,537	97	3,830	2,536	97
	양배추	7,091	4,417	313	8,675	4,449	386
	당근	2,954	3,415	101	2,976	3,767	112
양념 채소	고추	31,146	193	60	33,373	278	93
	마늘	25,372	1,432	363	21,999	1,402	309
	양파	14,673	7,962	1,168	18,461	8,541	1,5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과실류

■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재원

과수 총 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은 153천ha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준이다. 과종별 재배면적은 사과 34천ha, 배 10천ha, 포도 13천ha, 감귤 22천ha, 단감 8.9천ha, 복숭아 19천ha로 복숭아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였고 기타 과종은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2021년 과실 생산량은 2,109천 톤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준이며, 감귤을 제외한 과종은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신선과실류 수출은 주로 배, 감귤, 단감이며, 2021년 수출량은 35천 톤, 수출액은 13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량은 12.3%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1.3% 증가하였다. 신선과일 수입은 주로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등이며, 2021년 수입량은 736천 톤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다.

신선과일 총 공급량은 2,845천톤, 국내소비는 2,810천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54.4kg으로 나타났다.

〈표 1-2-6〉 과실류 수급 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요	내수	2,473	2,747	3,029	2,778	3,049	3,148	2,970	2,934	2,667	2,810
	수출	11	20	36	40	39	42	45	44	40	35
공급	생산	2,300	2,429	2,593	2,216	2,364	2,358	2,160	2,206	1,976	2,109
	수입	184	338	472	602	724	832	855	772	732	736
1인당 소비량(kg)		54.8	58.8	62.6	57.6	59.8	61.2	57.5	56.7	51.5	54.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화훼류

■ 원예경영과 사무관 홍근훈

2021년 화훼류 재배농가수는 7,009호, 재배면적은 4,218ha로 2020년 대비 각각 0.8%, 1.9%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타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화훼류 생산액은 5,382억 원으로 2020년 5,269억원에 비해 2.2%(113억원) 증가하였고,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은 12,386원으로 전년보다 6.1%(710원)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연평균 3.5%로 감소하다가 처음으로 의미있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물로 정주공간을 꾸미는 플랜테리어(plant+interior)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분화류의 판매량(전년대비 5백만분, 3.7% 증가)과 판매액(전년대비 142억원, 7.3% 증가)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화훼류 수출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16,558천 달러로 주로 일본, 미국, 대만으로 수출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28.8% 증가한 105,252천 달러로 주로 중국, 네덜란드, 대만에서 수입하였다.

〈표 1-2-7〉 화훼산업 현황

구 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배농가 (호)	13,080	12,859	10,347	8,328	7,837	7,421	6,918	6,824	7,069	7,009
재배면적 (ha)	6,047	7,950	6,829	5,831	5,365	4,936	4,353	4,244	4,299	4,218
생산액 (억 원)	6,650	10,105	8,510	6,332	5,602	5,658	5,384	5,174	5,269	5,382
수출액 (천\$)	28,888	52,142	103,067	28,460	26,434	23,630	18,685	17,159	15,858	16,558
수입액 (천\$)	19,472	28,845	44,744	60,769	62,971	65,361	80,799	86,515	81,716	105,25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특용작물

■ 원예산업과 사무관 최수빈

참깨 생산량은 농가 고령화와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작물의 특성 등으로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생산량은 평년대비 22.9% 감소한 10.1천 톤이다.

* 생산량 : ('97)33천톤 → ('00)32 → ('05)23.5 → ('10)12.7 → ('11)9.5 → ('12)9.8 → ('13)12.4 → ('14)12.2 → ('15)11.7 → ('16)13.6 → ('17)14.3 → ('18)12.7 → ('19)13.0 → ('20)6.8 → ('21)10.1

참깨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로서 2021년 자급률은 10.6% 수준이며, 수입 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으로 도입되어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의 2021년 재배면적은 4,082ha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10.7천 톤이고, 자급률은 23.8% 수준이다.

* 생산량 : ('00)12.4천톤 → ('05)8.3 → ('10)13.9 → ('11)10.8 → ('12)11.0 → ('13)11.0 → ('14)12.4 → ('15)11.7 → ('16)15.5 → ('17)14.9 → ('18)11.0 → ('19)8.2 → ('20)9.5 → ('21)10.7

〈표 1-2-8〉 특용작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분		참깨								땅콩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2005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요	계	100.6	94.0	107.5	101.6	95.0	101.5	92.6	106.4	40.8	38.9	42.3	42.8	44.1	41.5	40.6	44.9
	당년소비	90.7	87.0	94.8	91.4	83.3	93.4	83.2	94.9	39.9	38.4	42.3	42.8	44.1	41.5	40.6	44.9
	수출	-	-	-	-	-	-	-	-	-	-	-	-	-	-	-	-
	차년이월	9.9	7.0	12.7	10.2	11.7	8.1	9.4	11.5	0.9	0.5	-	-	-	-	-	-
공급	계	100.6	94.0	107.5	101.6	95.0	101.4	92.6	106.4	40.8	38.9	42.3	42.8	44.1	41.5	40.6	44.9
	전년이월	13.1	5.6	15.8	12.3	10.2	11.7	8.1	9.4	1.1	-	-	-	-	-	-	-
	생산	20.9	12.8	11.7	14.3	12.7	13.0	6.8	10.1	8.3	10.2	11.7	14.9	11.0	8.2	9.5	10.7
	수입	66.6	75.6	80.0	75.0	72.1	76.8	77.7	86.9	31.4	28.7	30.6	27.9	33.1	33.3	31.1	34.2
자급률(%)		23	14.7	12.4	15.7	15.3	13.9	8.2	10.6	21	27	27.9	35.0	24.9	19.8	23.4	23.8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버섯 생산량은 2014년 이후 재배면적 감소 등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생산량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감소추세가 심화되어 2020년 대비 0.9% 감소한 143.6천 톤이다. 주요 품목은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이며, 4품목의 2021년 생산량은 133.3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2.8%를 차지한다.

* 생산량 : ('97)114천톤 → ('00)117 → ('05)162 → ('10)174 → ('11)165 → ('12)173 → ('13)161.6 → ('14)182.6 → ('15)167.4 → ('16)162.3 → ('17)149.9 → ('18)135.6 → ('19)152.9 → ('20)144.9 → ('21)143.6

〈표 1-2-9〉 버섯류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요	계	174.2	190.2	182.8	214.4	216.4	216.2	203.9	190.7	209.3	200.8	210.4
	당년소비	173.7	169.0	166.5	199.0	201.3	200.6	186.4	170.9	187.3	181.7	194.9
	수출	0.5	21.2	16.3	15.4	15.1	15.6	17.5	19.8	22.0	19.1	15.5
	차년이월	-	-	-	-	-	-	-	-	-	-	-
공급	계	174.2	190.2	182.8	214.4	216.4	216.2	203.9	190.7	209.3	200.8	210.4
	전년이월	-	-	-	-	-	-	-	-	-	-	-
	생산	162.1	173.6	161.6	182.6	167.4	162.3	149.9	135.6	152.9	144.9	143.6
	수입	12.1	13.8	21.2	31.8	49.0	53.9	54.0	55.1	56.4	55.9	66.8
자급률(%)		93	103	97.1	91.7	83.2	80.9	73.5	79.3	81.6	79.7	73.7

수출은 팽이, 새송이 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 수출액은 팽이버섯의 리스테리아균 검출 등의 영향이 지속되어 2020년 대비 8.0% 감소한 45,068천 달러이다.

* 수출액 : ('00)5,562천 달러 → ('09)33,039 → ('10)38,885 → ('11) 38,231 → ('12) 33,501 → ('13) 37,999 → ('14) 36,919 → ('15) 36,606 → ('16) 37,932 → ('17) 42,478 → ('18) 49,644 → ('19) 54,411 → ('20) 48,985 → ('21) 45,068

〈표 1-2-10〉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천불)	38,885	38,231	33,501	37,999	36,919	36,606	37,932	42,478	49,644	54,411	48,985	45,068
팽 이	26,296	22,591	16,863	19,486	18,131	16,417	16,519	18,787	21,479	22,732	18,525	14,404
새송이	8,572	11,311	12,483	14,155	14,471	15,588	17,173	19,246	23,497	26,297	25,867	26,501
느타리	312	324	746	1,224	1,304	1,795	1,454	1,155	1,176	1,383	1,369	1,457
기 타	3,705	4,005	3,409	3,134	3,013	2,806	2,786	3,290	3,492	3,999	3,224	2,70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축산물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김철기, 이상훈, 홍석구

▶ 쇠고기

2021년 쇠고기 소비량은 716.5천 톤으로 전년(668.0천톤)보다 7.3% 증가하였다. 2021년도 소비량 중 국내산은 263.7천 톤으로 전년대비 5.9%가 증가하였으며, 수입산은 452.8천 톤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하였다. 2021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13.9kg로 전년(12.9kg)보다 7.6% 증가하였다.

산지 소값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사육마리수 증가에 따른 출하불량 증가로 2013년 연평균 가격(평균 600kg기준)이 3,688천 원까지 하락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이를 유지하고 있다.('21년 암소 6,455천원, 수소 6,281천원)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암소감축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15년 291만두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 359만두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가구수는 2020년 93.2천호, 2021년 93.8천호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리수는 2020년 36.4두, 2021년 38.2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표 1-2-11〉 쇠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소 비 량	515.7	498.8	528.8	553.3	564.5	592.5	583.0	652.4	672.0	668.1	716.5
- 국 내 산	226.3	245.3	272.4	272.8	267.2	231.0	238.7	236.7	245.4	248.6	263.7
- 수 입 산	289.4	253.5	256.4	280.5	297.3	361.5	344.3	415.7	426.6	419.5	452.8
○ 1인당 소비량(kg)	10.2	9.7	10.3	10.8	10.7	11.6	11.3	12.7	13.0	12.9	1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21년 총 소비량은 2020년 1,407천 톤보다 1.6% 증가한 1,430천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20년 27.1kg에서 2021년 27.6kg로 증가하였다. 돼지 사육두수는 2020년 1,108만 두에서 2021년에는 1,122만 두로 증가하였고, 모돈수도 2020년 12월 기준 1,001천 두에서 2021년 1,023천 두로 증가하였다.

사육농장수는 2020년 12월 6,078호에서 2021년 5,942호로 2.2% 감소하였으며, 농장당 평균 사육두수도 2020년 12월 1,823두에서 2021년 1,888두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산지 돼지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소비 등 수요 증가로 2020년 353천원/110kg에서 2021년 398천원/110kg으로 상승하였다.

〈표 1-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소 비 량	946	1,025	1,038	1,104	1,200	1,209	1,263	1,398	1,390	1,407	1,430
- 국 내 산	576	750	853	830	842	891	894	935	969	1,097	1,097
- 수 입 산	370	275	185	274	358	318	369	463	421	310	333
○ 1인당 소비량(kg)	18.8	19.2	20.9	21.8	22.8	24.1	24.5	27.0	26.8	27.1	27.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닭고기

닭고기의 2021년 총 소비량은 2020년 761.1천 톤보다 0.6% 감소한 756.5천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20년 14.7kg, 2021년 14.6kg으로 전년대비 0.1kg 감소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2020년 1,326원/kg보다 11.2% 상승하여 2021년 연평균 1,475원/kg이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20년 9,483만 마리보다 1.3% 감소한 9,360만 마리였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21년 12월에 1,584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59,093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1,344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되고 있다.

〈표 1-2-13〉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소 비 량	566.2	579.4	579.9	647.0	675.8	704.8	685.5	734.6	763.6	761.1	756.5
- 국 내 산	456.5	463.7	473.4	527.9	585.3	599.4	558.3	603.8	637.1	646.6	622.2
- 수 출 량	15.3	20.9	26.1	19.3	26.4	24.7	3.5	32.6	49.5	55.8	42.0
- 수 입 량	130.9	130.4	126.7	141.4	118.6	128.3	131.9	162.8	177.8	170.3	176.3
○ 1인당 소비량(kg)	11.4	11.6	11.5	12.8	13.4	13.8	13.3	14.2	14.8	14.7	1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계란

계란의 2021년 총 소비량은 722.2천 톤으로 2020년 725.4천톤 보다 0.4% 감소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13.9kg으로 2020년과 동일한 13.9kg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2020년 1,105원보다 62.5% 증가한 1,796원 / 10개(특란기준)이었다.

전체 사육가구 수는 2021년 12월에 946호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76,757마리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570호였으며 5만수 이상 사육 가구의 사육 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85.4% 수준인 6,207만 마리로 상당히 규모화되었다.

〈표 1-2-14〉 계란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소 비 량	575.9	606.8	631.0	660.1	679.8	702.8	638.6	690.9	731.0	725.4	722.2
- 생 산 량	573.1	604.5	629.1	657.6	677.8	700.7	621.4	686.8	727.0	722.3	684.9
- 수 출 량	0.1	0.5	0.6	0.1	0.1	0.2	-	0.1	0.3	1.6	0.1
- 수 입 량	2.9	2.8	2.5	2.6	2.1	2.3	17.2	4.2	4.3	4.7	37.4
○ 1인당 소비량(kg)	11.6	12.1	12.6	13.0	13.4	13.7	12.4	13.3	14.1	13.9	1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우유

2021년 원유 총 생산량은 2,034천톤으로 2020년 2,089천 톤 대비 2.6%(55천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 포함)은 4,579천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20년 4,470천톤보다 2.4%(109천톤) 증가하였으며, 시유 소비량은 2021년 1,527천톤으로 2020년 1,523천톤보다 0.2%(4천톤) 증가하였다.

2021년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86.1kg으로 2020년 83.9kg보다 2.6% 증가하였으며, 시유 소비량은 32.0kg으로 2020년 31.8kg보다 0.6% 증가하였다. 유제품 수입량 증가 등으로 유제품 소비량은 증가하였으며, 저출산, 멸균유 수입의 증가, 대체유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산 음용유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 국산원유 2,034천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872천톤(백색시유 1,374, 가공시유 153, 기타 유제품 363)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912천톤 대비 2.1% 감소하였으며, 잉여량(분유가공에 투입된 원유량)은 2020년 177천톤에 비해 18.6% 감소한 144천톤이었다.

2021년 우유 자급률은 수입 유제품 증가로 인해 2020년에 비해 2.4%p 감소한 45.7%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사료비 상승 등 영향으로 2020년 809원/L보다 4.2% 상승한 843원/L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21년 12월 기준 401천두로 지난해(410천두) 대비 9천두 감소 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장수는 2020년 12월 기준 6,106호에서 2021년 6,105호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표 1-2-15〉 우유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소 비 량	3,596	3,452	3,679	3,757	3,936	4,023	4,199	4,264	4,347	4,470	4,579
- 국 내 산	1,889	2,111	2,093	2,214	2,168	2,070	2,058	2,041	2,049	2,089	2,034
- 수 입 산	1,707	1,341	1,586	1,543	1,768	1,953	2,141	2,223	2,298	2,381	2,545
○ 1인당 소비량(kg)	70.7	67.2	71.3	72.4	75.7	76.4	79.5	80.1	81.8	83.9	86.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 사료작물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서주형, 김보민, 이동연

2021년도 가축용 사료의 총수급량은 28,782천톤으로 전년(28,471천톤)보다 1.1%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가 23,564천톤, 조사료가 5,218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21,332천톤으로 전년 21,319천톤보다 0.1% 증가하였다.

〈표 1-2-16〉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증감률 [(B-A)/A]
합 계	25,709	26,124	25,860	26,333	27,463	26,274	27,232	28,336	28,471	28,782	1.1
농 후 사 료	21,182	21,635	21,297	21,903	23,167	21,987	22,791	23,649	23,472	23,564	0.4
- 배 합 사 료	18,640	19,086	18,868	19,295	19,593	19,204	20,139	20,862	21,319	21,332	0.1
- 농 가 자 급 사 료	2,542	2,549	2,429	2,608	3,574	2,783	2,652	2,787	2,153	2,232	3.7
조 사 료	4,527	4,489	4,563	4,430	4,296	4,287	4,441	4,687	4,999	5,218	4.4
- 사료작물 및 목초류	949	904	1,063	801	952	890	1,122	1,156	1,260	1,299	3.1
- 산야초, 볏짚 등	3,578	3,585	3,500	3,629	3,344	3,397	3,319	3,531	3,739	3,919	4.8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이며, 배합사료는 배합사료 생산에 투입된 원료사용량 기준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종별로는 양돈용 0.2%, 젓소용 1.8%, 한·육우용 5.6% 증가하였으며, 양계용은 3.9%, 기타는 5.8% 감소하였다. 돼지, 한·육우의 사육 두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배합사료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젓소의 경우 사육 두수는 감소하였으나 조사료 대신 배합사료 급여가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17〉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증감률 [(B-A)/A]
합 계	18,640	19,086	18,870	19,295	19,593	19,204	20,139	20,862	21,319	21,332	0.1
양 계 용	4,823	4,790	5,171	5,671	5,813	5,432	5,953	6,196	6,260	6,014	△3.9
양 돈 용	5,685	6,136	5,962	6,094	6,256	6,365	6,554	6,850	6,921	6,932	0.2
젓 소 용	1,337	1,332	1,340	1,330	1,252	1,192	1,196	1,188	1,208	1,230	1.8
한육우용	5,143	5,213	4,951	4,567	4,543	4,567	4,637	4,791	5,050	5,385	5.6
기 타	1,652	1,615	1,446	1,633	1,728	1,648	1,799	1,837	1,880	1,771	△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국내 초지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현재 초지면적은 32.4천ha이며 227천톤의 목초를 생산하여 전년보다 초지면적과 목초생산량은 각각 0.5%, 0.4% 감소하였다. 이는 산림으로 환원하거나,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환함에 따라 초지면적이 줄어든 것이다.

〈표 1-2-18〉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톤,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A)	2021 (B)	증감률 (B-A)/A
관리면적	40,057	39,371	38,953	37,675	37,030	35,763	35,093	34,452	33,992	33,496	32,788	32,556	32,388	△0.5
목초생산량	280	273	273	266	277	268	246	241	238	234	230	228	227	△0.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제2절 식품 수급 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연아, 연구원 윤찬미

◆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8~2020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5%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2.2%)보다 높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기타식품(9.0%), 육류 및 육류가공품(4.8%), 당류 및 과자(4.7%), 빵 및 떡류(4.6%), 차, 음료, 주류(4.1%)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해조 및 해조가공품은 유일하게 지출이 감소한 품목으로, 2008~2020년간 연평균 3.5% 감소하였다.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4.8%로, 2019년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료품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10.8%), 채소 및 채소가공품(6.0%), 과일 및 과일이공품(5.8%), 곡물 및 곡물 가공품(5.5%)의 순서로 나타나 전년도와 유사했다. 반면, 식료품비 지출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유지류(0.5%), 해조 및 해조가공품(0.6%), 조미식품(2.3%)로 전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19〉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전국가구 1인 이상)

(단위: 천 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물 및 곡물 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해조 및 해조 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 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8	1,855.5	510.3 (100.0)	34.5 (6.8)	14.4 (2.8)	42.4 (8.3)	30.8 (6.0)	22.6 (4.4)	2.4 (0.5)	31.2 (6.1)	29.1 (5.7)	6.0 (1.2)	15.8 (3.1)	10.0 (2.0)	8.4 (1.6)	14.5 (2.8)	248.1 (48.6)
2015	2,193.0	587.1 (100.0)	32.2 (5.5)	19.2 (3.3)	57.3 (9.8)	31.5 (5.4)	25.8 (4.4)	2.7 (0.5)	37.6 (6.4)	33.3 (5.7)	3.7 (0.6)	23.9 (4.1)	11.2 (1.9)	11.1 (1.9)	17.4 (3.0)	280.4 (47.8)
2016	2,165.1	582.4 (100.0)	29.7 (5.1)	18.6 (3.2)	58.0 (10.0)	30.4 (5.2)	24.6 (4.2)	2.5 (0.4)	36.9 (6.3)	34.4 (5.9)	3.5 (0.6)	22.5 (3.9)	10.3 (1.8)	12.1 (2.1)	17.2 (3.0)	281.6 (48.4)
2017	2,556.8	701.3 (100.0)	32.6 (4.6)	22.5 (3.2)	66.0 (9.4)	38.8 (5.5)	27.4 (3.9)	3.0 (0.4)	44.3 (6.3)	40.8 (5.8)	4.5 (0.6)	26.1 (3.7)	14.1 (2.0)	18.0 (2.6)	22.2 (3.2)	341.0 (48.6)
2018	2,537.6	702.8 (100.0)	36.6 (5.2)	23.3 (3.3)	66.9 (9.5)	37.6 (5.3)	26.4 (3.8)	2.9 (0.4)	45.0 (6.4)	39.5 (5.6)	4.3 (0.6)	26.1 (3.7)	15.2 (2.2)	20.0 (2.8)	22.8 (3.2)	336.1 (47.8)
2019	2,456.7	666.1 (100.0)	34.3 (5.2)	22.4 (3.4)	60.9 (9.1)	31.8 (4.8)	25.7 (3.9)	2.6 (0.4)	37.8 (5.7)	33.6 (5.0)	3.7 (0.5)	25.2 (3.8)	12.8 (1.9)	20.0 (3.0)	22.0 (3.3)	333.6 (50.1)
2020	2,400.1	690.0 (100.0)	38.0 (5.5)	24.6 (3.6)	74.8 (10.8)	37.1 (5.4)	28.0 (4.1)	3.3 (0.5)	40.0 (5.8)	41.4 (6.0)	3.9 (0.6)	27.4 (4.0)	15.6 (2.3)	23.5 (3.4)	23.5 (3.4)	309.0 (44.8)
'08-2020	2.2%	2.5%	0.8%	4.6%	4.8%	1.6%	1.8%	2.7%	2.1%	3.0%	-3.5%	4.7%	3.8%	9.0%	4.1%	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20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소득계층(3분위)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대표 품목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기타식품이었다. 외식비 역시 소득수준 차이에 따른 지출액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품목은 채소 및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으로 나타났다.

〈표 1-2-20〉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20년도 전국가구 평균)

(단위: 천 원, %)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비지출	1,058.0 (48.1)	1,637.1 (74.4)	2,201.9 (100.0)	2,893.1 (131.4)	4,209.6 (191.2)
식료품	342.2 (51.8)	508.1 (76.8)	661.3 (100.0)	848.8 (128.3)	1,089.6 (164.8)
곡물및곡물가공품	31.1 (84.4)	32.4 (88.1)	36.8 (100.0)	41.9 (114.0)	47.9 (130.2)
빵및떡류	10.5 (43.9)	16.5 (68.8)	24.0 (100.0)	31.2 (129.8)	40.7 (169.5)
육류및육류가공품	37.1 (53.3)	50.7 (72.9)	69.6 (100.0)	95.3 (136.9)	121.1 (173.9)
수산물및수산가공품	26.9 (77.0)	29.3 (83.7)	35.0 (100.0)	43.1 (123.2)	51.1 (146.2)
유제품및알	16.2 (61.8)	20.0 (76.2)	26.3 (100.0)	35.2 (133.9)	42.2 (160.7)
유지류	2.6 (87.3)	2.6 (87.2)	3.0 (100.0)	3.6 (119.8)	4.6 (153.8)
과일및과일가공품	22.9 (62.4)	28.6 (78.0)	36.7 (100.0)	49.0 (133.6)	62.6 (170.5)
채소및채소가공품	34.2 (86.6)	35.0 (88.5)	39.6 (100.0)	45.6 (115.4)	52.4 (132.5)
해조및해조가공품	2.8 (77.9)	3.1 (86.3)	3.6 (100.0)	4.5 (125.1)	5.4 (148.5)
당류및과자	11.8 (44.1)	19.2 (71.4)	26.9 (100.0)	36.7 (136.7)	42.2 (157.2)
조미식품	14.1 (94.0)	13.7 (90.8)	15.1 (100.0)	16.6 (109.9)	18.7 (123.9)
기타식품	12.0 (53.4)	17.8 (79.2)	22.4 (100.0)	28.8 (128.3)	36.6 (163.2)
차·음료·주류	12.9 (57.6)	18.5 (82.4)	22.5 (100.0)	28.6 (127.4)	34.8 (154.7)
외식비	106.8 (35.6)	220.6 (73.6)	299.8 (100.0)	388.5 (129.6)	529.1 (176.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 섭취량은 증가추세를, 단백질은 섭취량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872kcal, 단백질 70.2g, 지방 49.0g, 철 10.8mg, 비타민C 63.8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1〉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연도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μg (RE/RAE)	티아민 μg	리보플라빈 μ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98	1,931	72.8	40.8	501.3	12.3	606.8	1,338	1,086	15.4	122.7
2007	1,831	65.9	37.7	468.7	13.1	736.1	1,239	1,070	14.7	93.2
2009	1,885	67.5	39.9	491.5	13.5	768.5	1,260	1,189	15.5	100.4
2011	2,030	73.5	45.0	515.2	14.6	812.5	1,361	1,278	17.0	103.9
2013	2,056	71.1	46.8	494.1	17.2	707.3	2,012	1,363	15.8	91.4
2015	2,086	73.2	48.9	497.5	16.9	720.1	2,015	1,405	16.6	97.2
2016	2,028	72.8	47.1	519.1	11.9	388.5	1,360	1,589	13.5	61.7
2017	1,992	71.6	46.8	520.7	11.8	372.5	1,326	1,580	13.4	62.5
2018	1,968	71.1	46.9	514.1	11.6	373	1,329	1,603	13.1	60.4
2019	1,915	71.1	48.2	500.9	11.4	372.3	1,317	1,618	12.6	66.1
2020	1,872	70.2	49.0	487.7	10.8	379.4	1,234.0	1,675.7	12.4	63.8

주 1) 비타민A의 단위는 RE를 사용하였으나 영양소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 RAE사용

주 2) 비타민C의 큰 감소는 2017년 DB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영양섭취 기준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 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 대비 섭취 수준이 점차 낮아져 2019년에는 66.2%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64.5%로 증가하였다. 에너지는 91.3% 수준이며, 단백질(136.5%), 철(108.5%), 티아민(112.2%), 리보플라빈(130.2%)은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2-22〉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98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91.9	88.5	91.1	98.2	99.9	101.2	98.1	96.8	95.6	93.0	91.3
단백질	115.6	144.2	146.7	159.1	154.3	157.6	141.4	139.8	138.4	138.2	136.5
칼슘	71.4	64.0	67.1	71.9	69.3	69.7	68.7	68.9	68.0	66.2	64.5
철	90.7	121.7	125.4	142.5	170.0	168.2	118.1	117.6	115.9	113.7	108.5
비타민 A	92.9	112.3	118.1	124.6	109.6	111.6	59.5	57.5	57.3	57.2	58.2
티아민	125.3	114.8	115.9	124.7	183.7	183.2	123.9	121.1	120.8	119.5	112.2
리보플라빈	85.8	84.0	93.2	100.2	106.4	109.1	123.9	123.6	124.9	125.9	130.2
나이아신	108.6	103.1	107.8	118.5	109.9	114.9	93.5	93.2	90.5	87.5	85.7
비타민 C	233.0	99.8	107.4	110.8	97.2	103.4	67.3	68.2	65.6	71.6	68.9

주 1) 영양소 섭취기준 = 제1기(1998) :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6차 개정(한국영양학회, 1995)/ 제2기(2001) : 한국인 영양권장량 제7차 개정(한국영양학회, 2000)/ 제3, 4기(2005, 2007-2009)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제5, 6기(2010-2015) :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제7기 1차년도(2016)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 나트륨, 칼륨, 총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또는 영양권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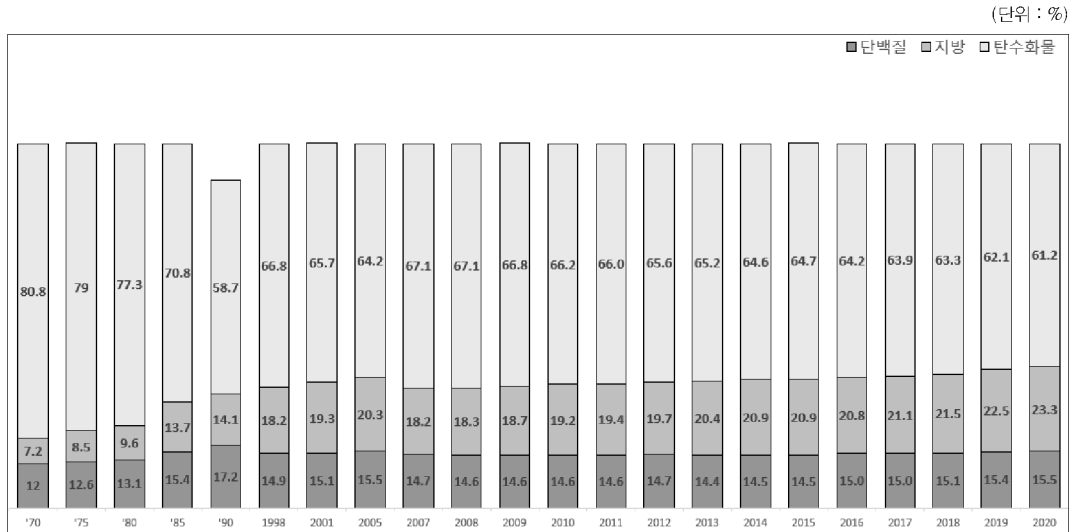
주 2) 비타민A의 단위는 RE를 사용하였으나 영양소섭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16년부터 RAE사용

주 3) 비타민C의 큰 감소는 2017년 DB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61.2%, 단백질 15.5%, 지방 23.3%로 나타났다. 탄수화물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2000년대부터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70년대(7.2%)부터 2005년(20.3%)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18.2%로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1〉 영양소별 에너지섭취분율 변화 추이



주: 1)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 섭취량×4)의 ((단백질 섭취량×4)+(지방 섭취량×9)+(탄수화물 섭취량×4)에 대한 분율, 만세이상

2) 지방 및 탄수화물급원 에너지섭취분율 : 단백질급원 에너지섭취분율과 같은 정의에 의해 산출함.

자료: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0

2. 식품 수요 현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연아, 연구원 윤찬미

◆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20년 쌀의 1인당 연간 공급량은 4.06% 감소하여 67.2kg을 기록하였다. 한편, 밀(1.83%)은 1인당 연간 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옥수수(1.19%)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소류는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은 감소하였으며(1인당 연간 공급량(2.56%), 과일류는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식용공급량도 감소하였다(9.56%). 육류는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식용공급량도 대폭(3.94%) 감소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쌀 공급량은 67.2kg(1인 1일당 184.1g)으로 전년도보다 4.06% 감소하였다. 연간 보리 공급량은 0.5kg(1인 1일당 1.4g)으로 전년도보다 45.03% 감소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밀 공급량은 31.0kg(1인 1일당 84.9g)으로 전년도보다 1.83% 감소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옥수수 공급량은 24.2kg(1인 1일당 66.2g)으로 전년도 보다 1.19%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서류 공급량은 11.4kg(1인 1일당 31.2g)으로 전년도보다 1.58% 감소하였다. 감자는 연간 국민 1인당 6.7kg(1인 1일당 18.3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13.68% 감소하였다. 반면, 고구마는 국민 1인당 연간 4.7kg(1인 1일당 12.9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크게(22.90%)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채소류 공급량은 141.2kg(1인 1일당 386.8g)으로 전년도보다 3.7kg(2.56%) 감소하였다. 2020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과일류 공급량은 36.1kg(1인 1일당 98.9g)으로 전년도보다 3.8kg(9.56%) 감소하였다.

2020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공급량은 65.1kg(1인 1일당 178.4g)으로 전년도보다 2.7kg(3.94%)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i) 쇠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12.5kg(1인 1일당 34.1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0.75% 감소하였다. (ii)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은 28.7kg(1인 1일당 78.7g)으로 전년도보다 4.72% 증가한 수준이다. (iii) 닭고기는 국민 1인당 연간 11.6kg(1인 1일당 31.8g)이 공급되어 전년도보다 26.67% 감소하였다.

〈표 1-2-23〉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19(확정)	2020(잠정)	증가율(%)
곡 류	130.0	127.1	-2.27
쌀	70.0	67.2	-4.06
보 리	0.9	0.5	-45.03
밀	31.6	31.0	-1.83
옥 수수	23.9	24.2	1.19
기 타	3.5	4.1	17.31
서 류	11.6	11.4	-1.58
감 자	7.7	6.7	-13.68
고 구 마	3.8	4.7	22.90
설 탕 류	23.4	21.9	-6.65
두 류	8.2	8.4	3.27
콩	6.3	6.5	2.82
팥	0.5	0.5	7.44
기 타	0.5	0.5	13.53
견 과 류	1.6	1.5	-3.98
종 실 류	0.8	0.8	2.64
참 깨	0.3	0.3	1.09
기 타	0.5	0.5	3.72
채 소 류	144.9	141.2	-2.56
과 실 류	39.9	36.1	-9.56
육 류	67.8	65.1	-3.94
쇠 고 기	12.6	12.5	-0.75
돼지고기	27.4	28.7	4.72
닭 고 기	15.8	11.6	-26.67
부 산 물	12.0	12.3	2.88
계 란 류	10.8	11.8	9.43
우 유 류	69.8	74.6	6.94
우 유	68.7	73.7	7.36
어 패 류	42.0	41.3	-1.79
어 류	26.1	25.2	-3.15
패 류	16.0	16.0	0.42
해 조 류	28.1	27.1	-3.54
유 지 류	27.5	26.4	-4.33
식 물 성	26.9	25.8	-4.32
동 물 성	0.6	0.6	-4.79
주 류	65.5	62.5	-4.6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수급표』, 2021.

2020년도의 국민 1인당 연간 어패류 공급량은 41.3kg(1인 1일당 113.1g)으로 전년도 보다 0.7kg(1.79%) 감소하였다. 어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5.2kg(1인 1일당 69.2g)으로 전년도 보다 3.15% 감소하였다. 패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16.0kg(1인 1일당 44.0g)으로 전년도 보다 0.42% 증가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해조류 공급량은 27.1kg(국민 1인 1일당 74.3g)으로 전년도보다 3.54% 감소하였다.

2020년도 국민 1인당 연간 유지류 공급량은 26.4kg(1인 1일당 72.2g)으로 전년도보다 1.1kg(4.33%) 감소하였다. 식물성 유지류의 공급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5.8kg으로 전체 공급 유지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4.32% 감소하였다. 동물성 유지의 국민 1인당 연간 공급량은 0.6kg으로 전년도보다 4.79% 감소하였다.

◆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2020년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과실류, 닭고기, 우유류 등 상당수 식품류의 자급률이 대체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두류, 쇠고기, 돼지고기는 2020년에 각각 전년에 비해 10.0%, 1.9%, 4.3%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데, 곡류자급률은 1990~2020년간 43.8%에서 20.2%, 채소류는 98.9%에서 86.4%, 과실류는 102.5%에서 73.2%, 육류는 92.9%에서 76.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47.9%, 어패류는 121.7%에서 48.9%, 유지류는 8.0%에서 2.4%로 하락하였다.

〈표 1-2-24〉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분	1990년	2005년	2010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공급영양자급률	칼로리	62.6	45.4	46.8	37.0	36.6	35.1	34.7	33.9
	단백질	67.8	47.0	47.6	41.9	42.4	43.2	43.4	41.9
	지방	30.3	18.1	16.7	23.0	21.8	21.4	21.1	21.1
물량기준자급률	곡류	43.8	29.4	28.1	24.4	24.0	21.9	21.2	20.2
	쌀	108.3	96.0	104.5	102.6	94.6	82.5	82.3	90.7
	두류	24.5	10.7	11.0	8.2	7.0	7.5	8.0	8.8
	채소류	98.9	94.5	90.1	86.6	86.4	87.2	87.4	86.4
	과실류	102.5	85.6	81.0	78.9	77.0	75.4	74.5	73.2
	육류	92.9	81.6	78.6	73.9	76.4	75.2	76.3	76.8
	쇠고기	53.6	48.1	43.2	38.9	41.0	36.3	36.5	37.2
	돼지고기	100.3	83.7	81.0	71.8	72.5	71.6	74.0	77.2
	닭고기	100.0	84.3	83.4	85.1	88.7	89.9	89.1	88.2
	계란류	100.0	99.3	99.7	99.7	98.4	99.4	99.5	99.4
	우유류	92.8	72.8	66.3	54.7	50.8	49.8	48.7	47.9
	어패류	121.7	60.0	68.1	50.5	46.7	51.2	48.9	48.9
	유지류	8.0	2.8	2.6	1.8	1.5	1.2	2.4	2.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수급표』, 2021.

칼로리 자급률¹⁾은 1990년 62.6%, 2000년 50.6%, 2010년 46.8% 수준으로 199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33.9% 수준이다. 단백질 자급률은 1990년 67.8%에서 2019년 43.4%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20년 21.1% 수준으로, 2000년대보다는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 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27.1kg), 채소류(141.2kg), 어패류(41.3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설탕류(21.9kg), 과일류(36.1kg), 육류(65.1kg), 우유류(74.6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127.1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같은 식생활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낮으나, 미국 및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8.4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20년에 141.2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일본,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65.1kg으로 일본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와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계란류(11.8kg), 우유류(74.6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41.3kg으로 일본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1-2-25〉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독 일	브 라 질
	2020	2018	2018	2018	2018	2018
곡 류	127.1	139.7	193.6	110.8	115.0	134.3
서 류	11.4	24.9	63.3	55.9	58.7	49.0
설탕류	21.9	26.0	8.1	64.2	44.2	42.5
두 류	8.4	11.8	14.3	14.1	8.2	27.5
채소류	141.2	92.9	363.4	112.9	89.8	51.4
과실류	36.1	34.1	99.9	90.2	78.1	99.7
육 류	65.1	50.1	62.4	123.2	78.8	99.3
계란류	11.8	19.8	19.7	16.2	13.2	10.7
어패류	41.3	45.6	38.0	22.2	12.7	9.0
우유류	74.6	47.6	23.1	223.7	171.0	141.8
유지류	26.4	16.6	10.4	23.4	28.9	23.5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수급표』, 2021.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1%씩 증가하였다.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5년에는 2,938kcal이었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2,982kcal로 집계되었다.

캐나다와 덴마크,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1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 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20년 현재 에너지원의 43.3%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19.8% 수준이다.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6〉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일 본	중 국	미 국	독 일	브 라 질
	2020	2018	2018	2018	2018	2018
에너지(kcal)	2,982	2,539	3,087	3,598	3,275	3,186
전 분 질(%)	43.3	44.5	52.2	26.5	30.7	38.3
설 탕(%)	8.0	9.6	2.5	16.4	13.1	12.8
동 물 성(%)	19.8	20.6	21.8	25.8	24.2	24.2
유 지 류(%)	22.2	15.6	8.0	22.7	23.0	17.9
기 타(%)	6.6	9.6	15.5	8.7	8.9	6.8
1인당GNI(\$)	31,881	40,373	9,697	63,704	48,843	8,747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식품수급표』, 2021.

3. 식품산업 동향

■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이수현

2020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6,079로 2009년(4,169개)보다 45.8%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239천명으로 2017년(217천명)보다 10.1%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20년 102.8조원으로 2009년 60.8조원 대비 69.2% 증가하였다.

2020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69.1억원으로 2009년 145.8억원보다 16.1%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6억원으로 2009년(1.3억원) 대비 25.9%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20년 38.3%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7〉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

구 분	2009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사업체수(A)	4,169	4,423	4,616	4,983	5,124	5,274	5,481	5,616	5,797	6,079
○ 종사자수(B)	167	179	184	195	205	212	217	227	230	239
○ 출하액(C)	60,771	75,150	77,320	79,925	83,937	86,611	89,718	92,013	96,230	102,838
※ 업체당 출하액(C/A)	14.577	16.991	16.751	16.04	16.381	16.422	16.369	16.384	16.599	16.917
※ 1인당 부가가치	130.9	145.9	149.3	148	150.6	151.5	154.8	149.67	156.10	164.83
※ 부가가치율	35.9	34.7	35.5	36.1	36.8	37.1	37.4	36.9	37.3	38.3

주 :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출하액 × 1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1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33.8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30.7%), 사업체수 2,209개(36.3%)로 전체 식품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20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69개(4.4%), 출하액 11.7조원(10.6%) 수준을 보였다.

2020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1,170개),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1,005개), 과일 및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614개),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340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18.9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5조원),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8.4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6.4%가 경기지역(1,607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충남(586개, 9.6%), 충북(531개, 8.7%) 지역에 사업체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6.4조원), 충북(14.3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충북 269.7억원, 최저: 전남 92.1억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8〉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20)

(단위: 개, 명, 10억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 식품 제조업	6,079	239,077	102,838	100.0%
○ 식료품 제조업	5,810	222,871	91,122	88.6%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1,170	45,145	18,901	18.4%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1,005	28,938	7,148	7.0%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614	18,856	3,925	3.8%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73	2,285	2,267	2.2%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20	10,725	8,354	8.1%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제조업	340	10,502	6,182	6.0%
- 기타 식품제조업	2,209	97,603	33,798	32.9%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79	8,817	10,548	10.3%
○ 음료 제조업	269	16,206	11,716	11.4%
- 알콜 음료 제조업	93	6,910	5,202	5.1%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176	9,296	6,513	6.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사자수 10인 이상 사업체)

2020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2.5%이고 2002년 이후 계속해서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40개소 → 2020년: 64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2.5%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2.8%, 출하액 비중은 31.6%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11.0%이고, 1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의 업체는 85.6%,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4%에 그쳤다.

〈표 1-2-29〉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200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업체수	4,169	4,616	4,983	5,124	5,274	5,481	5,616	5,797	6,079
○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81.0	81.4	81.9	81.2	81.1	81.7	81.9	82.2	82.5
- 50~300인	18.0	17.7	17.2	17.7	17.8	17.3	17.0	16.7	16.5
- 300인 이상	1.0	0.9	0.9	1.1	1.1	1.0	1.1	1.1	1.1
○ 출하액규모별									
- 10억원 미만	19.4	17.1	16.6	13.6	13.2	13.2	12.1	11.9	11.0
- 10~100억원	57.9	58.6	59.2	61.3	61.1	61.3	61.6	61.1	61.8
- 100~1,000억원	19.2	20.3	20.7	21.4	22.2	22.2	22.9	23.5	23.8
- 1,000억원 이상	3.5	4.0	3.5	3.7	3.5	3.3	3.4	3.5	3.4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종사자 10인이상 사업체 기준)

◆ 외식산업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지훈

2020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804천개로 2010년 586천개 보다 38.3%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는 1,920천명으로 2010년 1,603천명 보다 19.8%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139,9조원으로 2010년 67.6조원에 비해 10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20년 174.0백만원으로 2010년 120.2백만원에 비해 44.8%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20년 72.9백만원으로 2010년 42백만원에 비해 73.5% 증가하였다.

〈표 1-2-30〉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사업체수(A)	586	607	624	635	650	657	675	692	709	727	804
○ 종사자수(B)	1,609	1,683	1,751	1,823	1,894	1,945	1,988	2,037	2,139	2,192	1,920
○ 매출액(C)	67,566	73,512	77,290	79,552	83,824	108,013	118,853	128,300	138,183	144,392	139,889
※ 업체당 매출액(C/A)	115.2	121.1	123.8	125.2	128.9	164.4	176.1	185.5	194.9	198.6	173.9
※ 1인당 매출액(C/B)	42.0	43.7	44.1	43.6	44.3	55.5	59.8	63.0	64.6	65.9	72.9

*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10, '15, '20), 통계청 서비스업조사('09~'19)

2020년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345천개, 매출액은 62.4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제과점, 서양식, 일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한식당 사업체수는 2019년 대비 8.6% 증가했으나, 매출액 5.3%, 업체당 매출액은 12.9% 감소하였다.

〈표 1-2-31〉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단위 : 개, 10억원, 백만원/개소)

업종	2019			2020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 매출액 (B/A)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 매출액 (B/A)
음식점 및 주점업	727,377	144,392	198.5	804,173	139,889	174.0
□ 음식점업	518,794	120,065	231.4	574,938	117,101	203.7
○ 한식 음식점업	317,225	65,948	207.9	344,599	62,423	181.1
- 한식 일반 음식점업	190,476	35,791	187.9	213,916	35,115	164.2
- 한식 면 요리 전문점	22,669	3,703	163.4	23,908	3,579	149.7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74,536	19,471	261.2	75,622	16,943	224.1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29,544	6,983	236.4	31,153	6,787	217.9
○ 외국식 음식점업	58,386	16,549	283.4	66,624	16,183	242.9
- 중식 음식점업	25,615	6,283	245.3	27,974	6,643	237.5
- 일식 음식점업	13,982	4,433	317.1	16,524	4,265	258.1
- 서양식 음식점업	13,540	4,710	347.9	16,472	4,305	261.4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249	1,123	213.9	5,654	970	171.6
○ 기관 구내식당업	11,203	10,521	939.1	12,887	9,674	750.7
○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621	186	299.5	1,024	147	143.6
- 출장 음식 서비스업	621	186	299.5	759	139	182.9
○ 기타 간이 음식점업	131,359	26,861	204.5	149,804	28,673	191.4
- 제과점업	21,470	5,978	278.4	24,777	6,024	243.1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20,290	6,759	333.1	23,581	7,168	304.0
- 치킨 전문점	37,508	6,201	165.3	42,743	7,460	174.5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44,495	5,695	128.0	48,822	6,113	125.2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7,596	2,228	293.3	9,881	1,908	193.1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208,583	24,327	116.6	229,235	22,789	99.4
○ 주점업	114,970	11,875	103.3	120,769	10,396	86.1
- 일반유흥주점업	29,448	2,896	98.3	30,310	2,212	73.0
- 무도유흥주점업	1,944	376	193.4	1,273	143	112.7
- 생맥주 전문점	8,035	1,051	130.8	10,585	1,065	100.6
- 기타 주점업	75,543	7,552	100.0	78,601	6,976	88.7
○ 비알콜 음료점업	93,613	12,452	133.0	108,466	12,392	114.2
- 커피 전문점	76,145	11,068	145.4	89,892	11,129	123.8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7,468	1,384	79.2	18,574	1,263	68.0

*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지역별로는 경기(172천개)와 서울(139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8.6%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2.4억원), 경기(2.0억원), 인천(1.8억원), 세종(1.8억원), 광주(1.7억원) 순으로 전체 지역이 모두 1억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표 1-2-32〉 음식점업 시도별 현황(2020)

(단위 : 천개, 천명, 10억원, 백만원/개소, 백만원/명)

구 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1인당 매출액
서 울	138.8	17.3	399.6	33,060.3	238.1	82.7
부 산	55.2	6.9	130.2	8,432.0	152.6	64.8
대 구	37.9	4.7	84.8	5,304.1	140.0	62.6
인 천	39.3	4.9	94.7	7,192.3	183.1	76.0
광 주	22.0	2.7	52.6	3,637.4	165.4	69.2
대 전	23.0	2.9	56.0	3,741.3	162.3	66.8
울 산	20.1	2.5	43.2	3,013.6	150.0	69.8
세 종	4.3	0.5	11.1	788.1	181.3	70.8
경 기	171.7	21.3	436.1	34,963.2	203.7	80.2
강 원	34.8	4.3	74.3	4,697.8	135.1	63.2
충 북	29.5	3.7	61.6	4,367.8	148.3	70.9
충 남	37.0	4.6	80.8	5,743.7	155.1	71.1
전 북	28.6	3.6	63.1	4,053.4	141.8	64.2
전 남	32.2	4.0	66.7	4,168.8	129.7	62.5
경 북	50.1	6.2	97.5	6,215.8	124.0	63.8
경 남	62.1	7.7	126.0	7,799.4	125.5	61.9
제 주	17.6	2.2	41.3	2,710.6	154.4	65.6

2020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9.7%이며,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1% 수준이다.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57.0%로 2013년 71.1%에 비해 14.1%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원에서 10억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41.2%으로 2013년 28.1%에 비해 13.1%p 증가하였다.

〈표 1-2-33〉 사업체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업체수	635	650	657	675	692	709	727	804
○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88.0	87.4	86.5	86.4	86.4	85.2	84.6	89.7
- 5~10인	9.6	10.2	10.7	10.9	11.2	11.9	12.5	8.2
- 10인 이상	2.4	2.5	2.7	2.7	2.4	2.9	2.9	2.1
○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원 미만	71.1	70.4	61.0	46.8	41.5	47.1	39.7	57.0
- 100~1,000백만원	28.1	28.6	37.1	49.9	54.0	47.7	53.0	41.2
- 1,000백만원 이상	0.7	1.1	1.9	3.3	4.5	5.2	7.3	1.8

제3절 농식품 교역 동향

1. 농식품 수출입 동향

◆ 수출 동향

■ 수출진흥과 서기관 장다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적 물류대란 등 어려운 수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558.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연간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부류별 수출 동향을 보면, 신선식품은 2020년 대비 12.1% 증가한 1,600.3백만 달러, 가공식품은 13.4% 증가한 6,957.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신선식품의 경우 인삼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여 2020년 대비 16.2% 증가한 267.0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김치는 비건김치 판매 등 현지화에 힘입어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1.5억 달러 이상 수출, 12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다. 딸기, 포도는 저장·운송기술 개선, 물류 지원 등을 통해 합산 1억불 수출을 돌파하였다.

가공식품은 코로나 이후 가정식 수요 성장과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라면 소스류·쌀가공식품 등 부류별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간편식 시장 성장과 내식 증가 영향으로 라면은 역대 최대인 674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소스류는 3.5억 달러, 쌀가공식품은 1.5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였다.

〈표 1-2-34〉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B/A)
		물 량	금액(A)	물 량	금액(B)	
농림축산식품	7,025.7	3,934.7	7,564.3	4,069.1	8,558.2	13.1
(신선농식품)	1,381.2	547.7	1,428.2	538.5	1,600.3	12.1
(가공농식품)	5,644.5	3,387.1	6,136.1	3,530.6	6,957.8	13.4
- 농 산 물	6,146.3	3,097.2	6,675.2	3,248.6	7,542.8	13.0
- 축 산 물	460.7	199.1	495.7	184.5	550.9	11.1
- 임 산 물	418.7	638.5	393.4	636.0	464.4	1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2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수출국(권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김치, 소스류, 식초 등 가정식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대비 6.4% 증가한 1,422.1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1위 수출국에 올랐다. 최대 수출 증가 국가인 중국은 신선·가공식품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20년 대비 17.7% 증가한 1,339.6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미국은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류 인기를 중심으로 간편식, 건강식품 수출 호조로 전년 대비 4.8% 증가한 1,263.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면류, 음료, 인삼류 등의 수요가 높았던 싼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20년 대비 20.6% 증가한 1,874.6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인도는 채소류, 라면, 소스류 등의 가공품목의 수출 호조로 역대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였다.

〈 주요국 품목별 수출 실적 〉

- ◇ 일 본 : (김치) 80.1백만 달러/12.7% ↑, (식초) 58.9/33.8, (소스류) 32.3/29.1, (파프리카) 81.8/△5.1
- ◇ 중 국 : (인삼류) 102.6백만 달러/25.1% ↑, (라면) 149.9/0.5, (음료) 91.2/46.2
- ◇ 미 국 : (인삼류) 34.3백만 달러/22.9% ↑, (김치) 28.3/22.5, (과자류) 150.2/14.7, (소스류) 81.3/10.7
- ◇ 싼남방 : (면류) 177.0백만 달러/16.9%, (음료) 151.8/11.4, (인삼류) 38.5/28.7

〈 표 1-2-35〉 국가별 농식품 수출 실적

(단위 : 천톤, 백만달러, %)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934.7	7,564.3	4,069.1	8,558.2	3.4	13.1
일본	662.7	1,336.4	680.2	1,422.1	2.7	6.4
중국	657.1	1,138.1	608.0	1,339.6	△7.5	17.7
미국	402.5	1,206.2	385.6	1,263.5	△4.2	4.8
홍콩	210.4	372.7	220.3	399.3	4.7	7.1
대만	125.0	301.5	139.1	402.7	11.3	33.5
ASEAN	1,092.7	1,484.1	1,216.4	1,768.4	11.3	19.2
EU+영국	192.8	381.4	206.0	456.0	6.8	19.5
GCC	46.7	304.8	43.3	248.5	△7.2	△18.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aT, 2021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 농업정책과 사무관 김동일

◆ 교역규모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남북 간의 유의미한 교역은 중단된 상황이며, 2021년 말 기준 총 교역액은 107만 달러로 전년도 390만 달러에 비해 72.6% 감소했다. 교역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19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0년 북한의 코로나19 유입 우려에 따른 국경 봉쇄가 강화되며 물자 반출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2-36〉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단위 : 천 달러)

구분	연도	연도별 교역실적		
		2020	2021	증감률(%)
전 체		3,903	1,068	△72.6
농 립 수 산 물		335	0	△1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농식품 교역동향

▶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2021년 남북간 농림수산물 교역액은 없어 전년도 33.5만 달러와 비교하면 100% 감소했다.

〈표 1-2-37〉 농림수산물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구분	연도	연도별 교역 실적(금액)	
		2020	2021
농림수산물교역총액		335	-
반입액		7	-
농산물		7	-
임산물		-	-
수산물		-	-
반출액		328	-
농산물		127	-
축산물		5	-
임산물		195	-
수산물		2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3장 국제 곡물수급 및 농식품 산업 동향

제1절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 동향

1. 국제곡물 수급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한병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물류 병목 현상, 농산물 교역활동 둔화 및 규제 강화 등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세계 농업시장에 다양하고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향후 10년(2021~2030년)간의 세계 농업시장 전망 분석에서 농산물 소비 구조는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으며, 증가세 둔화는 신흥 경제국 수요감소와 바이오연료 소비 축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곡물 가격은 전망 기간동안 생산량 증가로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이나, 농작물은 기후 영향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축산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30년 8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인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부양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이 핵심이며,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인구 통계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2021/2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27억 8,153만톤) 대비 3.1% 증가한 28억 6,798만톤이었으며, 소비량은 전년(27억 9,280만톤) 대비 3.0% 증가한 28억 7,696만톤을 기록하여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기말재고량은 전년(8억 7,138만톤)보다 1.0% 감소한 8억 6,240만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쌀의 경우 2021/22년도 세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5억 1,508만톤이었으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억 1,819만톤을 기록하였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1억 8,489만톤이었고, 이를 소비량으로 산출한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6%p 하락한 35.7%를 기록했다.

2021/22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7억 7,990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7억 9,478만톤을 각각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기말재고량은 2억 7,567만톤으로 전년보다 5.1% 감소하였고, 기말재고율도 전년 대비 2.4%p 하락한 34.7%를 기록하였다.

2021/2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2억 1,976만톤, 소비량은 전년보다 4.9% 증가한 12억 40만톤을 각각 기록하였다. 또한,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6% 증가한 3억 1,214만톤이었으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0.4%p 상승한 26.0%를 기록하였다.

2021/22년도 세계 콩 생산량은 3억 5,324만톤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다. 소비량 역시 전년보다 0.2% 감소한 3억 6,296만톤을 기록하였다. 또한, 기말재고량은 8,970만톤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2.9%p 하락한 24.7%를 기록하였다.

〈표 1-3-1〉 국제 주요 곡물 수급 동향

(단위 : 백만톤)

구 분		'20/'21	'21/'22(A)	'22/'23(전망)		변동률(%)	
				'22. 8월(B)	'22. 9월(C)	전년대비(C/A)	전월대비(C/B)
전체 곡물	생산량	2,781.53	2,867.98	2,864.44	2,854.26	-0.5	-0.4
	공급량	3,664.17	3,739.35	3,727.16	3,716.65	-0.6	-0.3
	소비량	2,792.80	2,876.96	2,873.21	2,871.07	-0.2	-0.1
	교역량	601.79	614.54	618.02	613.96	-0.1	-0.7
	기말재고량	871.38	862.40	853.95	845.59	-1.9	-1.0
	기말재고율(%)	31.2%	30.0%	29.7%	29.5%	-0.5%p	-0.2%p
쌀	생산량	509.26	515.08	512.44	507.99	-1.4	-0.9
	공급량	691.51	703.08	697.25	692.88	-1.5	-0.6
	소비량	503.51	518.19	518.74	519.32	0.2	0.1
	교역량	50.92	54.75	54.67	53.61	-2.1	-1.9
	기말재고량	188.00	184.89	178.52	173.56	-6.1	-2.8
	기말재고율(%)	37.3%	35.7%	34.4%	33.4%	-2.3%p	-1.0%p
밀	생산량	774.53	779.90	779.60	783.92	0.5	0.6
	공급량	1,072.74	1,070.46	1,055.94	1,059.59	-1.0	0.3
	소비량	782.19	794.78	788.60	791.02	-0.5	0.3
	교역량	203.40	203.17	208.65	208.89	2.8	0.1
	기말재고량	290.55	275.67	267.34	268.57	-2.6	0.5
	기말재고율(%)	37.1%	34.7%	33.9%	34.0%	-0.7%p	0.1%p
옥수수	생산량	1,129.29	1,219.76	1,179.61	1,172.58	-3.9	-0.6
	공급량	1,436.75	1,512.53	1,491.45	1,484.72	-1.8	-0.5
	소비량	1,143.97	1,200.40	1,184.77	1,180.18	-1.7	-0.4
	교역량	182.60	203.26	185.62	183.58	-9.7	-1.1
	기말재고량	292.78	312.14	306.68	304.53	-2.4	-0.7
	기말재고율(%)	25.6%	26.0%	25.9%	25.8%	-0.2%p	-0.1%p
콩	생산량	368.44	353.24	392.79	389.77	10.3	-0.8
	공급량	463.17	453.29	482.52	479.47	5.8	-0.6
	소비량	363.76	362.96	378.24	377.68	4.1	-0.1
	교역량	164.86	153.36	169.08	167.88	9.5	-0.7
	기말재고량	100.04	89.70	101.41	98.92	10.3	-2.5
	기말재고율(%)	27.6%	24.7%	26.8%	26.2%	1.5%p	-0.6%p

*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22.9.)

* 공급량 = 기초재고량 + 생산량 / 기말재고율(%) = 기말재고량/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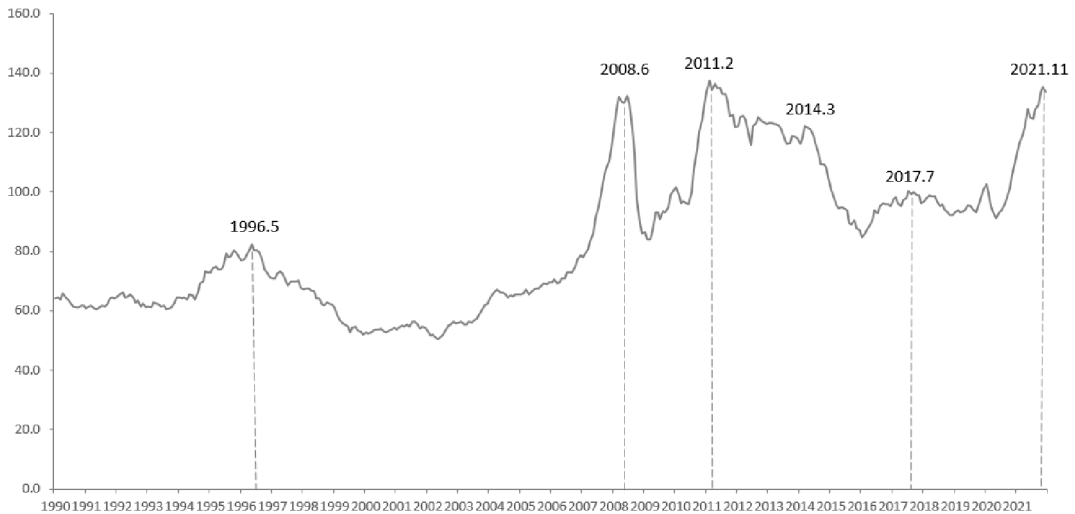
* 곡물전체 = 쌀, 밀, 옥수수, 대두의 합

2. 국제곡물 가격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한병

국제 곡물가격은 2000년대 들어와서 변동폭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6~08년, 2010~11년에는 급등세를 나타내었다. 곡물가격 급등 주기도 과거에는 7~8년 또는 10년 정도의 주기로 변동을 보였으나 2000년 후반 이후에는 변동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폭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3-1〉 식량가격지수 변동 주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매월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는 2008년 6월 애그플레이션 당시 132.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 2월에 137.6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였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곡물가가 상승하면서 밀, 콩, 옥수수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식량가격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가뭄에 따른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2021년 큰 폭으로 상승, 2021년 11월 식량 가격지수는 135.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식량가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곡물가격지수는 2011년 142.2포인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서서히 하락하여 2016년 88.3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에는 전년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한 91.0포인트,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9.8포인트 증가한 100.8포인트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한 96.6포인트로 하락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103.1포인트,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8.1포인트 증가한 131.2포인트를 기록하며 급등하였다.

◆ 쌀 가격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하향안정 추세였으나 2014년 캘리포니아 지역 가뭄으로 인해 1,058달러/톤 수준까지 급등하였다. 이후 575달러/톤까지 서서히 하락하였다가 2017년 캘리포니아 지역 홍수에 따른 생산량 및 기말 재고량 감소로 2018년 7월 기준 948달러/톤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2020년까지 800~900달러/톤 수준에서 등락을 보였다. 2021년에는 가뭄으로 인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1,125달러/톤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태국산 장립종 쌀의 평균 가격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하향 안정 추세였으나, 2020년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82달러/톤 상승한 488달러/톤을 기록하였다. 2021년 3월부터 상승세가 진정되며 2021년 11월 394달러/톤까지 하락하였다.

◆ 콩 가격 동향

콩 연평균 가격은 2010년 이래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며, 2012년의 경우 미국 곡창지대 가뭄으로 인해 평균 가격은 537달러/톤으로 전년 대비 10.7%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콩 가격은 다시 하락하였으며, 2019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중국의 사료용 대두 수요 급증과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로 2021년 평균 가격은 502달러/톤까지 상승하였다.

◆ 밀 가격 동향(경질밀(hard wheat) 기준)

밀 연평균 가격은 2011년 이래 하락하여 2016년에는 최근 10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23달러/톤 상승한 186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유럽 및 흑해 지역 주요 재배지의 기상악화가 주요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9년 밀 평균가격은 양호한 작황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0년 국제 수요 증가, 미국-러시아 생산량 감소 우려로 2021년 평균 가격은 251달러/톤까지 상승하였다.

◆ 옥수수 가격 동향

2021년 옥수수 평균가격은 227달러/톤으로 전년대비 84달러/톤(58.7%) 상승하였다. 옥수수 연평균 가격은 2012년 이래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2016년 밀과 함께 최근 10년 이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한 뒤 2020년까지 하향안정 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브라질의 2기작 옥수수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옥수수 수입 수요 지속으로 227달러/톤으로 상승하였다.

〈표 1-3-2〉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단위 : US\$/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쌀 (중립)	'12	772	772	744	728	736	739	744	755	750	741	739	728	746
	'13	705	705	705	705	691	661	661	661	661	656	639	632	674
	'14	686	843	987	1058	1014	992	966	940	935	948	893	893	930
	'15	865	843	831	827	849	849	849	849	849	794	788	750	829
	'16	750	750	739	719	685	650	650	622	618	621	618	597	668
	'17	575	575	575	591	603	613	725	725	748	818	848	848	687
	'18	868	885	903	932	948	948	948	936	913	855	810	800	896
	'19	900	900	900	882	848	825	825	825	825	814	810	818	848
	'20	825	836	848	899	938	938	921	905	905	846	835	835	878
	'21	835	848	912	945	983	1,052	1,100	1,100	1,125	1,125	1,125	1,125	1,023
쌀 (장립)	'12	557	552	563	554	614	612	587	579	579	571	573	569	576
	'13	575	575	573	571	558	536	519	493	461	445	433	428	514
	'14	418	423	416	401	399	405	421	447	449	446	434	424	424
	'15	423	421	413	408	393	383	396	382	366	373	371	365	391
	'16	371	381	379	385	410	418	431	409	388	373	367	380	391
	'17	382	376	377	384	414	455	424	406	413	403	404	410	404
	'18	433	422	420	442	448	426	393	398	395	401	392	393	414
	'19	403	394	392	405	400	405	405	422	418	407	405	412	406
	'20	439	437	483	564	512	513	467	492	491	461	479	512	488
	'21	530	552	516	486	486	460	421	397	396	398	394	396	453
대두	'12	443	462	497	529	521	522	602	618	616	566	532	535	537
	'13	521	536	531	518	529	560	527	478	494	473	475	489	511
	'14	472	497	522	547	544	528	450	405	357	355	379	379	453
	'15	368	365	360	357	351	355	371	341	322	327	318	323	347
	'16	321	320	328	354	390	421	389	368	353	358	370	375	362
	'17	381	381	368	348	352	340	366	346	355	358	363	357	360
	'18	358	371	380	378	376	340	313	317	308	316	324	330	343
	'19	336	335	331	324	307	327	326	315	326	340	335	335	328
	'20	339	325	320	310	310	319	329	331	366	388	421	444	350
	'21	504	508	519	538	572	537	520	470	471	452	457	474	502
밀	'12	253	255	254	238	241	248	320	325	336	330	331	318	287
	'13	302	285	275	273	278	265	257	258	258	278	260	246	270
	'14	230	246	276	276	290	264	236	230	217	217	219	238	245
	'15	213	201	201	194	191	195	200	176	179	181	172	175	190
	'16	172	166	174	171	166	165	152	149	153	152	151	151	160
	'17	161	166	164	154	162	169	189	157	164	158	155	155	163
	'18	161	174	185	183	198	186	186	200	191	204	178	186	186
	'19	185	175	161	154	155	170	162	146	148	153	157	166	161
	'20	178	171	169	176	170	163	163	160	177	200	204	209	178
	'21	229	220	220	229	243	237	231	261	260	277	303	301	251
옥수수	'12	248	252	255	250	237	237	299	316	301	295	291	284	272
	'13	281	278	282	255	256	261	208	190	181	173	167	169	225
	'14	168	176	191	198	193	176	149	141	133	138	147	158	164
	'15	153	151	152	148	142	143	161	145	149	151	144	146	149
	'16	143	143	143	147	154	161	136	127	131	137	136	139	141
	'17	142	145	144	143	146	147	150	139	139	138	135	138	142
	'18	139	144	151	152	158	144	139	141	141	145	144	150	146
	'19	149	147	146	141	151	171	169	148	145	153	147	151	152
	'20	152	149	141	126	126	129	130	128	144	157	164	172	143
	'21	203	216	215	243	266	265	219	217	206	211	225	233	227

* 자료 : USDA Rice Outlook('22.9), USDA ERS('22.9)

주) 쌀(중립종) : 미국산(California medium grain milled No.1) FOB(25kg 포장 기준), 쌀(장립종) : 태국산(100% B) FOB, (USDA 예측가) / 대두·밀(HRW)·옥수수 : 선물거래가

제2절 주요 국가 농업·농촌 동향 및 양자간 통상 협력

1. 주요 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차은지

▶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세계 유수의 농업국으로 옥수수, 대두, 우유(소)의 생산량이 세계 1위이며 사탕수수, 맥주(보리)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닭고기,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생산도 왕성하다. 2019년 기준 미국 국내총생산액 21조 4,300억 달러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0.6%로 1,361억 달러이다.(USDA, 2019) 미국의 전체 토지면적(983,352천 ha, 2019)의 16.9%인 166,032 천 ha가 농경지²⁾이며, 이 중 157,737천 ha가 경작 적합지로, 2,700천 ha는 영구경작지로, 5,595천 ha는 초지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 기준 농촌인구는 57,592천명으로 전체 인구 내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농업분야 고용인구는 4,368천명으로 전체 고용인구 내 1.4%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전체 농가 평균 소득(Total gross farm income)은 약 438천 달러이며(Statista, Total U.S. gross farm income 2000-2020), 이 중 농업소득은 14%(61.5천 달러 내외)를 차지하고 농업외소득(off-farm income)이 77%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다. 1만 달러 이하 매출 소규모 농장의 농업순소득은 미미한 반면, 25만 달러 이상 매출 대규모 농장의 농업소득은 20만 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농외소득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요 농산물로는 옥수수, 대두, 우유(소), 밀, 사탕무 등이 있다.

2) 농경지는 경작적합지, 영구경작지, 초지면적의 합으로 계산 (World Bank)

〈표 1-3-3〉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 옥수수	273,192	351,272	361,091	345,486	412,262	371,096	364,262	345,962	360,252
대두	82,791	91,389	106,878	106,954	116,932	120,065	120,514	96,667	112,549
우유(소)	91,010	91,277	93,465	94,619	96,366	97,762	98,687	99,083	101,251
밀	61,677	58,105	55,147	55,840	62,832	47,380	51,306	52,581	49,691
사탕무	31,955	29,746	28,381	32,088	33,493	32,039	30,193	25,991	30,498
사탕수수	29,236	27,906	27,600	29,141	29,137	30,153	31,336	28,973	32,749
보리맥주	23,007	22,527	22,600	22,400	22,349	21,834	21,449	21,088	-
감자	21,091	19,715	20,057	20,013	20,426	20,453	20,422	19,251	18,790
닭고기	17,035	17,397	17,729	18,403	18,708	19,141	19,568	20,173	20,490

자료 : FAOSTAT

〈표 1-3-4〉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상위 5개 국가('20)

수출	수출액(억 달러)	점유율(%)	수입	수입액(억 달러)	점유율(%)
□ 중국	259	17.5	□ 멕시코	321	22.0
캐나다	239	16.1	캐나다	252	17.2
멕시코	182	12.3	프랑스	59	4.1
일본	117	7.9	이탈리아	59	4.0
한국	76	5.1	중국	38	2.6
□ 총액	1,478	100.0	□ 총액	1,460	100.0

자료 : FAOSTAT

〈표 1-3-5〉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입 상위 5개 품목('20)

수출	수출액(억 달러)	점유율(%)	수입	수입액(억 달러)	점유율(%)
□ 대두	259	17.5	□ 식가공품	95	6.5
옥수수	96	6.5	증류주	89	6.1
식가공품	88	6.0	보리맥주	60	4.1
밀	63	4.3	와인	59	4.0
생사	60	4.0	생약재료	57	3.9
□ 총액	1,478	100.0	□ 총액	1,460	100.0

자료 : FAOSTAT

〈표 1-3-6〉 對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21)

(단위 : 천불)

순위	수 출		수 입	
1	혼합조제식료품	128,058	쇠고기	2,171,928
2	결련	122,786	혼합조제식료품	1,221,257
3	라면	81,226	옥수수	841,853
4	기타석제품	79,781	밀	559,263
5	기타음료	71,135	돼지고기	518,690
6	기타베이커리제품	50,037	대두	319,276
7	기타소오스제품	44,872	양조박	313,208
8	곡류조제품	43,709	치즈	290,043
9	배	30,886	사료용근채류	257,920
10	기타파스타	29,877	대두유	246,157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향후 5년(2019년~2023년)간 미국의 농업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농업법(Farm Bill)은 2018년 1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서명됨으로써 발효되었다.

2018년 미 농업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예상되는 농업분야 법정 의무 재정지출 규모는 약 4,283억불(연평균 857억불)로 예측되며, 이는 기존 2014년 농업법이 지속 될 경우에 비해 향후 5년간 약 1,820백만불이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농업분야 재정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주요 정책 분야별 비중은 대체적으로 기존 2014년 농업법과 유사한데, 2018년 농업법이 시행되는 향후 5년간 전체 재정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영양지원(76.1%), 작물보험(8.9%), 품목별농가지원(7.3%), 보전프로그램(6.8%)의 순으로 예산지출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2014년 농업법에 비해 2018년 농업법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보전(555백만불), 연구 및 지도(365백만불), 원예농업(250백만불), 무역(235백만불), 에너지(109백만불), 품목별 농가지원정책(101백만불), 영양(98백만불) 등의 순이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해 발생 이후 대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제정을 추진하였고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i) 안전한 생산·수확 기준 제시, 식품업체의 예방적 관리의무 부여 등을 통한 예방적 통제 강화, ii) FDA의 검사권한 강화와 생산·가공업자 기준 준수 강조, iii) 공급자증명제도 도입, 제3자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수입식품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후속 조치로서 신선 농산물 생산·수확·포장 및 보관 기준, 식품과 사료의 우수제조 공정 및 위해분석 기반 예방적 관리, 해외공급업자 검증프로그램 등 관련 하위규정들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 규정이 마련되면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셋째, 미국 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위해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양자간·다자간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경

▶ 농업경제동향

중국 '2021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21년)은 114조 3,67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으며 산업별 비중은 1차산업 7.3%, 2차산업 39.4%, 3차산업 53.3%이다. 1인당 GDP는 80,976위안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46,380위안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다.

중국 총인구('20년)는 14억 1,178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5억 979만명으로 인구의 3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1억 6,436만명 감소하였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주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도시 유입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21년)은 35,128위안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으며 농촌 주민 가처분소득도 18,931위안으로 10.5% 증가하였다. 한편 도시-농촌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비율이 2.5:1(47,412위안 : 18,931위안)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 감소하였다. 한편, 농민공의 1인당 월 평균소득은 4,432위안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 빈곤을 탈출한 현의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14,051위안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세계 농림축산물 수출액('20년)은 637억 8,2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대세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498억 3,7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9% 증가하여, 860억 5,572만 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3-7〉 중국의 주요 농업지표('19~'20년)

구 분	단 위	2019	2020	구 분	단 위	2019	2020
○ 농촌인구 - 총인구 대비	천명 %	551,620 39.4	509,790 36.1	○ 농촌가구 1인당 가처분 수입	위안	16,021	17,131
○ 농촌취업인구 - 총 취업인구 대비	천명 %	332,240 42.9	287,930 36.7	○ 1차산업 취업자 - 총 취업자 대비	천명 %	186,520 23.6	177,151 22.6
○ 농림축어업GDP - 국가 총GDP 대비	억 위안 %	73,577 7.5	81,104 8.0	○ 농림축수산물 수출	억 달러	791	760
○ 경지면적	천ha	134,881	127,862	○ 농림축수산물 수입	억 달러	1,510	1,708

※ 자료 : 중국통계연감(2020), 중국농산물무역발전보고(中國農產品貿易發展報告)(2020)

▶ 농업정책동향

중국 정부(국무원과 공산당)는 2004년부터 매년 주요 국정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양 1호 문건'의 주제로 삼농(三農 :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채택해 왔다. 2022년 3월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식량생산 및 공급 안정화, 농촌진흥정책 전면 시행, 빈곤퇴치 확대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량안보) 주요 농산물의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 강화 :

- ▲ 식량작물 보조금 지급 ▲ 벼밀 최저수매가 적정 인상 ▲ 대두·유지작물 생산 확대 ▲ 화학비료 등 농자재 공급 안정화 ▲ 농경지 확보 및 농경지의 탈농업화 방지 ▲ 종자산업 혁신 ▲ 농기계 기술 향상 ▲ 기상재해 예방·통제 강화 ▲ 동식물 질병 예방·통제 강화 등

(2) (농촌진흥) 기반시설 강화, 공공서비스 개선 등 농촌지역 발전 가속화

- ▲ 수도·전기·도로 등 기반시설 강화 ▲ 주거환경 정비 ▲ 농촌금융서비스 강화 ▲ 농촌산업 발전 촉진 ▲ 농업인 토지이용권 보장

(3) (빈곤퇴치) 再 빈곤화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강화

- ▲ 탈빈곤 지역의 특색산업발전 지원 ▲ 탈빈곤층 직업훈련 강화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신규 고품질 농경지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19년 농가인구는 총인구의 3.2%인 398만 명이며, 농가호수는 총 1,747천호이다. 2020 경지면적은 국토 37,797천 ha의 약 11.6%인 4,397천 ha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2.54ha이다. 2019년 농림수산업 총생산액은 5.8조 엔으로 전체 GDP의 약 1%를 차지한다. 202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9,121억 엔이며, 수입액은 95,198억 엔으로 수출액의 약 10배에 해당한다. 농업소득(2018년 기준)은 판매농가의 경우 174만엔으로 농가총소득의 34%를 차지하며 주요농가의 경우 662만엔으로 83%를 차지한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18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37%이며, 생산액 기준으로 66%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7%이다.

2020년 일본 농림업 센서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농림업 경영체 수는 1,092천 경영체로 5년 전에 비해 313천 경영체(22.2%) 감소하였으며 이 중 개인 경영체는 1,037천, 단체 경영체는 38천이다. 개인 경영체 중 주로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이는 1,363천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이 69.6%를 차지한다. 2020년 농업취업자수(농업이 주 취업상태인 자)는 2015년 208만 명에서 48만 명 감소한 160만 명 수준이다.

〈표 1-3-8〉 일본의 주요 농업지표

구 분	단 위	2018/19/20	구 분	단 위	2018/19/20
○ 농가인구(2019)	만명	398	○ 판매농가 총소득(2018)	만엔	511
- 총인구 대비	%	3.2	- 농업소득		174
			○ 주요농가 총소득(2018)	만엔	801
			- 농업소득		662
○ 총 농가호수(2020)		174.7	○ 농업취업자(2020)	만명	160
- 판매농가	만호	102.8			
- 주요농가		71.9			
○ 농림수산 총생산액(2019)	억엔	58,217	○ 농림수산물 수출(2020)	억엔	9,121
- GDP 대비	%	1.04			
○ 경지면적(2020)	천ha	4,397	○ 농림수산물 수입(2020)	억엔	95,198
- 전체면적 대비	%	11.6			
- 호당 경영 경지	ha	2.54			

자료 : 일본 농림수산업(202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2020)

*참고 : 농업취업자수 = 개인 경영체(주된 일이 자영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 + 농업법인 등의 고용자, 임원, 구성원(연 15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판매농가(경영경지 30a 이상 또는 판매금액 50만엔 이상), 주요 농가(경영경지 30a 미만 또는 판매금액 50만엔 미만)

▶ 농업정책동향

일본은 농업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농림업 성장 정체,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내외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1,727 천에서 2020년 1,029천으로 최근 10년간 농업경영체는 37% 감소하고 65세이상 비율이 2010년 61.1%에서 2020년 69.6%로 증가하였다. 전체 경제활동에서 농림업 비중은 1% 수준으로 농업경영체의 소득은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 일부 식품제조업, 외식업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국회에 식료·농업·농촌 백서를 보고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공표된 2019년 백서에서는 새로운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 여성농업인의 활약, 지속가능한 목표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 일미 무역협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9년에 제정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세 변화 등을 토대로 5년마다 식료·농업·농촌에 관해 정부의 중장기 방침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2020년 3월에 발표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은 이전 기본계획과 유사하나, 공격적인 수출목표를 제시하고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①생산기반의 강화 ②수출목표 제시 ③관계부처와 연계한 농촌 시책 추진 ④식(食)·농(農)에 관한 국민운동 전개 ⑤식료·사료 자급률 외 식료국산을 신설 및 목표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수출의 경우 2018년 9,200억엔 대비 '30년 5조엔을 목표로 설정하고 식료 국산율은 칼로리 기준 '18년 46%에서 '30년 53% 목표, 생산액 기준 '18년 69%에서 '30년 79% 목표 설정하였다.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은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을 수레의 양 바퀴처럼 추진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 향상과 식량안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2030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45%로 설정하였다. 정부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2030년 농지는 392만 헥타르, 농업인구는 140만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 발표한 5차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도 이전 계획과 유사하게 식료 안정 보장을 위한 식료 자급률, 사료 자급률, 식료 국산율 등을 설정하고 ① 농식품 수출 확대 실행 전략, ② 녹색식료시스템 전략, ③ 스마트농업종합추진 대책, ④ 경영소득안정대책, ⑤ 일본형 직접지출제도 개선책 등 정책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농업경제 3)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20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1인당 GDP 46,888유로, 인구 447,706천명, 면적 4,233천km²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8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73,341천ha(2016), 농업 분야 취업자 수는 8,946천명(2016)이며, 농업 총 생산액은 365,488백만 유로(2018)이다.

2020년 농산물 생산액은 1,719억 유로, 부가가치는 1,770억 유로로 추산되었다. 우유가 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채소 및 원예제품이 25.6%, 곡물류 21.3%, 돼지고기 21.0%, 쇠고기 19.8%, 과일 13.4%, 가금육 13.0%, 와인 12.5% 순으로 나타났다.⁴⁾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18)을 보면 프랑스(17.7%), 스페인(13.6%), 독일(12.0%), 이탈리아(11.8%), 네덜란드(6.4%), 폴란드(6.3%), 루마니아(4.0%), 그리스(2.9%), 덴마크(2.3%), 헝가리(2.0%), 아일랜드(2.0%), 벨기에(1.9%), 포르투갈(1.8%), 오스트리아(1.6%), 스웨덴(1.3%), 체코(1.2%), 핀란드(0.9%), 불가리아(0.9%), 리투아니아(0.6%), 크로아티아(0.5%), 슬로바키아(0.5%),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2%),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0%)의 순이었다.

EU 국가별 농수산업 종사자(2016)를 보면 벨기에(0.6%), 리투아니아(1.7%), 네덜란드(1.6%), 영국(1.8%)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폴란드(18.4%), 루마니아(18.3%), 이탈리아(10.0%), 스페인(9.2%), 프랑스(7.9%), 독일(5.6%) 등은 높은 편이다.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15)은 룩셈부르크(0.8%), 스웨덴(1.4%), 몰타(1.5%), 독일(1.7%)은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9.6%), 불가리아(8.5%), 리투아니아(7.2%), 헝가리(6.9%)는 회원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EU의 농산물 무역에서 농산물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2016)은 수출이 7.5%이며, 수입은 6.6%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2015)은 미국(18,207백만 달러), 스위스(6,673백만 달러), 중국(5,558백만 달러), 러시아(5,112백만 달러), 노르웨이(3,851백만 달러) 등이며, 포도주, 조제식료품, 위스키, 유아용 조제식료품, 맥주 등이 수출품목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2015)은 브라질(10,060백만 달러), 미국(8,939백만 달러), 터키(5,132백만 달러), 아르헨티나(4,995백만 달러), 인도네시아(4,840백만 달러) 순이고, 볶은 커피, 대두 껍묵 및 고체 잔류, 코코아두, 팜유 및 조유, 담배, 옥수수 등이다.⁵⁾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적자에서 벗어나 2010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 출처 :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19

4) 출처 : EUROPEAN UNION Statistical Factsheet, http://ec.europa.eu/agriculture/statistics/factsheets/index_en.htm

5) 출처 : Global Trade Atlas에서 EU28개국 기준으로 농산물 수출 순위 데이터 추출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

국가 (27개국)	경지 면적 (천ha)	농장수 (천개)	농장당 경지 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 가치 (백만 유로)	GDP 대비 (%)	농산물 무역			가계 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 명 **)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수지 (백만 유로)	
	2016	2016	2016	2016	2016	2020(e)	2020(e)	2020(e)	2020	2020	2020	2019
EU_27				8,826	100.0	335,901	158,661	2.5	7.1	9.5	62,320	13.0
벨기에	1,354	36.8	37	55	0.6	8,625	2,275	1.3	9.9	11.1	6,442	12.7
불가리아	4,469	203	22	255	2.9	3,861	1,663	6.4	13.0	17.3	856	18.5
체코	3,455	26.5	130	103	1.2	5,318	1,845	2.5	7.9	4.8	-1,400	15.2
덴마크	2,615	35	75	49	0.6	10,918	2,961	3.5	12.4	16	5,216	11.3
독일	16,715	276	61	503	5.7	55,837	20,257	1.7	9.0	6.2	-17,040	10.8
에스토니아	995	17	59.6	20	0.2	594	199	3.1	8.9	7.0	-420.9	19.4
아일랜드	4,884	138	36	161	1.8	8,763	3,087	2.4	11.1	8.4	3,749	8.7
그리스	4,554	685	7	457	5.2	11,021	6,144	6.6	13.0	21.3	207	15.9
스페인	23,230	945	25	822	9.3	51,708	29,288	4.6	10.8	19.2	20,702	12.5
프랑스	27,814	457	61	708	8	72,931	30,182	3.2	10.2	14.8	10,904	13.1
크로아티아	1,563	134	12	160	1.8	2,481	1,255	5.0	13.5	15.1	-890	18.2
이탈리아	12,598	1,146	11	897	10.2	51,802	31,449	3.1	10.5	10.6	7,482	14.3
사이프러스	112	35	3	19	0.2	734	340	3.5	14.0	16.2	-616	11.7
라트비아	1,931	70	28	77	0.9	1,554	592	5.3	18.8	21.6	47	18.1
리투아니아	2,925	150	19	148	1.7	3,151	1,504	6.4	12.9	19.4	1,804	20.3
룩셈부르크	131	2	66	4	0.0	404	125	0.6	13.3	9.9	-1,236	8.6
헝가리	4,671	430	11	394	4.5	8,321	3,647	6.1	6.4	9.2	3,197	17.2
몰타	11	9	1	5	0.1	120	62	0.9	11.2	4.5	-410	12.3
네덜란드	1,796	56	32	147	1.7	27,433	10,574	3.4	12.5	16.0	29,547	11.4
오스트리아	2,670	133	20	3	0.03	7,254	3,241	1.9	8.7	9.1	353	9.7
폴란드	14,406	1,411	10	1,649	18.7	27,107	11,045	5.2	9.1	13.4	11,279	16.4
포르투갈	3,642	259	14	314	3.6	7,611	2,912	3.8	13.3	12.3	-2,421	16.1
루마니아	12,503	3,422	4	1,640	18.6	15,280	7,922	7.0	11	11.3	-1,882	25.2
슬로베니아	488	70	7.0	82	0.9	1,353	603	2.9	7.9	5.6	-738	14.1
슬로바키아	1,890	26	74	47	0.5	2,180	577	2.4	6.5	4.2	-1,699	17.3
핀란드	2,233	50	45	35	0.4	3,933	1,431	1.7	8.8	3.2	-3,412	11.4
스웨덴	3,013	63	48	55	0.6	5,881	1,742	1.2	9.0	4.4	-5,791	12.4

주 : 1)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

자료 : Farm structure survey 2013(eurostat), statistical factsheet(EU 및 회원국) http://ec.europa.eu/agriculture/statistics/factsheets/index_en.htm

**Total farm labour force(annual working units, AWUs)

♀EU의 농업분야 고용 전체 대비 비중: 2016년 수치

▶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년 3월 로마조약에 의거하여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 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영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 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절한 소비자 가격 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 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7월)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 제5차 개혁(2013.6월)은 기초직불제 도입, 회원국내 농가간 직불금 형평성 제고, 젊은 창업농 직불금 단가 상향, 소농에 대한 별도 직불제 도입, 직불금 30%는 환경보전의무 준수 조건으로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1-3-2〉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의 변천 동향



공동농업정책은 5~6년간 지속되며, 2007~2013년 CAP 종료에 따라 2014년 EU 중기예산 편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CAP 채택을 추진 하였다.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의 공동농업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입법제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표하였다('12.10.21.).

유럽의회·EU이사회·집행위는 '13.4월부터 40여 차례의 3개 기관 협의를 거쳐 '13.6월 '14~'20 CAP 개혁안을 타결 하였다. '14~'20 CAP 개혁안은 직불제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성·환경성 강화, 농가의 경영안정 강화, 공동농업정책의 효율성·투명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21.12월에는 '23~'27 CAP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22년 EU 회원국별 CAP 세부 전략계획을 수립·승인한 이후 '23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개혁내용으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강화, 형평성 개선 기초를 유자강화하되, 회원국별 전략계획 중심의 유연한 성과체제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주요 국가 통상 협력

◆ 미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차은지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입 상대국으로서 2021년에 쇠고기, 혼합조제식료품, 옥수수, 밀, 돼지고기, 밀, 대두, 양조박, 치즈 등 거의 모든 농식품에 걸쳐 103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의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 쥬얼, 라면, 기타 즉석제품, 기타음료,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소스제품, 곡류조제품, 배, 기타파스타이며, 총 12.6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에서 14.8%를 차지하여 일본, 중국에 이어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농업분야 교역을 보다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식품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식품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 문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WTO/SPS 관련, 협정상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SPS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SPS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미 FTA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농산물무역위원회는 매년 최소 1회 개최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들은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협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4년 7월 한·미 양국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유기제품으로 인증된 가공식품은 수입국 내 별도 인증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도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미국에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출 가능 국가 등재를 통해 삼계탕 대미 수출허용을 촉구하였고, 한라봉·천혜향 등 식물분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대미 수출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은 2014년 3월 26일 우리나라 삼계탕의 대미 수출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내용을 공포(5월 27일 시행)하였고, 동식물위생검사청(APHIS)은 2015년 1월 30일 한국산 한라봉·천혜향 수입을 허용하는 연방규정 개정내용을 발표·시행하였다.

미국은 2016년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통해 2014년 12월 워싱턴 및 오리건 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한국의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가금류 수입 금지, 2012년 8월 PNW지역(아이다호·오리건·워싱턴 주)에서 감자 제브라칩 발생 이후 해당 지역산 식용 감자 수입 금지, 농업 생명공학 승인 과정에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문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미간의 농식품 통상현안은 WTO/SPS 회의, 한미 FTA 농업/SPS위원회, 한·미간 동·식물 검역 전문가회의 등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및 수의검역관의 외교 활동과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관 등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자적으로는 2022년 5월에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했으며, 9월에는 14개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의 IPEF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IPEF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참여국들은 발표된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분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 및 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표 1-3-10〉 한·미간 농림축산식품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1/'17(%)
수 출	합계	746	802	874	1206	1263	169
	- 농산물	641	674	739	1037	1080	169
	- 축산물	37	42	58	66	70	189
	- 임산물	68	86	77	103	113	166
수 입	합계	7,829	9,373	8,953	8,860	10,317	132
	- 농산물	4,887	5,849	5,313	5,402	6,167	126
	- 축산물	2,181	2,736	2,946	2,853	3,408	156
	- 임산물	761	788	695	605	741	97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갈ien	2.9	94.9	혼합조제식품	16.9	70.0	혼합조제식품	21.1	78.3	갈ien	8.6	158.9	혼합조제식품	27.6	128.1
혼합조제식품	15.8	71.1	기타음료	93.0	66.6	기타음료	96.6	69.3	혼합조제식품	25.5	93.5	갈ien	6.4	122.8
기타음료	90.1	60.9	갈ien	2.7	60.4	갈ien	4.0	65.4	리면	21.8	82.3	리면	22.0	81.2
기타석제품	3.6	46.3	기타석제품	4.5	57.7	리면	14.9	53.5	기타음료	101.5	72.7	기타석제품	5.6	79.8
리면	11.8	41.1	리면	13.9	50.4	기타석제품	5.1	48.1	기타석제품	4.8	58.6	기타음료	92.0	71.1
배	10.6	30.4	배	12.1	35.6	배	11.2	34.2	기타베이커리제품	8.5	43.4	기타베이커리제품	8.7	50.0
비스킷	4.7	25.9	비스킷	5.6	31.0	기타소스제품	6.7	28.4	기타소스제품	9.6	39.4	기타소스제품	9.9	44.9
기타소스제품	5.3	20.3	기타소스제품	6.0	24.4	비스킷	5.3	27.2	곡류조제품	11.5	36.6	곡류조제품	15.0	43.7
기타베이커리제품	5.0	20.1	기타베이커리제품	5.2	22.5	기타베이커리제품	5.2	24.4	배	9.3	30.5	배	8.3	30.9
젤리	1.9	16.4	기타파스타	7.3	20.1	기타파스타	8.3	23.8	기타파스타	9.7	29.4	기타파스타	9.6	29.9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천톤, 백만달러)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쇠고기	189.9	1,255.9	쇠고기	224.2	1,635.5	쇠고기	247.6	1,825.8	쇠고기	254.1	1,815.0	쇠고기	259.0	2,171.9
옥수수	4,429.7	853.2	옥수수	6,744.5	1,414.6	혼합조제식료품	22.0	991.5	혼합조제식료품	21.3	1,090.4	혼합조제식료품	24.1	1,221.3
혼합조제식료품	21.6	681.3	혼합조제식료품	20.7	779.1	옥수수	2,726.6	581.5	옥수수	3,049.0	640.6	옥수수	3,257.0	841.9
돼지고기	169.5	455.0	돼지고기	224.9	601.8	돼지고기	210.4	571.5	돼지고기	176.3	492.4	밀	1,814.2	559.3
밀	1,388.6	330.1	밀	1,367.1	368.6	대두	1,075.5	453.4	밀	1,439.0	380.5	돼지고기	158.0	518.7
사료용근채류	1,061.0	311.2	대두	695.7	316.4	밀	1,238.9	338.2	대두	650.2	304.6	대두	546.0	319.3
대두	586.3	280.7	사료용근채류	818.4	263.9	사료용근채류	857.0	277.7	대두유	352.2	278.3	양조박	1,044.4	313.2
면	144.3	275.0	면	125.4	256.1	치즈	61.4	252.8	치즈	61.8	259.5	치즈	67.5	290.0
오렌지	141.0	242.0	오렌지	134.6	250.9	양조박	1,147.3	250.9	양조박	1,127.9	250.6	사료용근채류	752.3	257.9
치즈	49.0	209.1	양조박	1,096.3	245.3	대두유	307.3	228.3	사료용근채류	758.6	246.4	대두유	204.8	246.2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중국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경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으로 양국 간 농축산물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나,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감소하다가 반한 감정 완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확대 등으로 2019년 회복세로 돌아왔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對 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1,340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중국은 2021년 최대 수출 승가 국가로 가공식품(음료 등), 신선식품(인삼류 등)의 대중국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대중국 수입은 5,195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며,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 폐지 및 세율 인하, 수입입찰제도 개선 등 경제·통상 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 근거하여 양국 농업 현안 논의 등을 위해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그 간 총 18차례의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일본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경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 농축산식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2021년 기준 對 일본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442백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출액 8,558백만 달러 중 16.8%으로 전년 대비 비중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연초류 수출이 회복세와 더불어 라면, 식초 등 가공품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FAO, OECD,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 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 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여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51차 회의를 2018년 10월 일본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는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06년 5월 29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29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캐나다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차은지

캐나다산 농림축산식품은 2021년 12.4억 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펄프, 유채유, 돼지고기, 혼합조제식료품, 침엽수제재목, 밀, 톱합, 쇠고기, 침엽수원목, 개 사료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은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아이스크림, 커피조제품, 기타베이커리제품, 기타소스제품, 펌통, 기타음료, 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수출액은 127.8백만 달러로 전체 농림축산식품 수출(8,558.2백만 달러) 대비 1.5%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의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캐나다 측은 2003년 5월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한 바 있다. 캐나다 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 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었다. 2011년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를 이루었고, 같은 해 12월 국회심의 절차도 마무리되었다. WTO 분쟁절차는 양자 간 합의에 따라 2012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대해 자국산 블루베리의 수입 허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식품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메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검역인증원을 통해 아시아메미나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 가고 있다.

〈표 1-3-1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 (A)	합계	138.1	98.5	105.1	87.0	94.9	120.5	127.8
	농산물	107.8	66.1	67.3	83.0	88.8	111.8	112.0
	축산물	1.2	2.1	2.3	3.0	5.0	7.2	12.1
	임산물	1.1	0.6	1.3	0.9	1.2	1.5	3.7
수입 (B)	합계	842.1	911.2	1,105.6	1,045.0	996.1	856.4	1,243.3
	농산물	292.1	337.6	377.4	362.0	448.1	415.7	554.2
	축산물	121.6	129.1	154.9	161.0	178.1	171.0	231.9
	임산물	367.4	362.3	473.3	522.0	370.0	269.7	457.2
무역수지(A-B)		-704.1	-812.7	-1,000.5	-958.0	-901.2	-735.9	-1,115.5

자료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KATI)

〈표 1-3-14〉 對 캐나다 주요 수출입 농림축산식품('21)

(단위 : 백만달러)

순위	수출		수입	
1	라면	13	펄프	249
2	혼합조제식료품	8	유채유	203
3	아이스크림	8	돼지고기	147
4	커피조제품	7	혼합조제식료품	99
5	기타베이커리제품	6	침엽수제재목	87
6	기타소오스제품	5	밀	82
7	펩톤	5	톱밥	66
8	기타음료	5	쇠고기	63
9	비스킷	5	침엽수원목	38
10	인스탄트면	5	개 사료	27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차은지

2021년 유럽연합(EU, 27개국)과 우리나라 간 농림축수산물 총 교역액은 65.3억 달러이다.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약 4.6억 달러('21)로 아세안,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5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다. 수입액은 60.7억 달러('21)로 미국, 아세안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⁶⁾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 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은 주로 한국과 EU 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 협정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수산 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왔으나, 2011년 7월 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동식물 검역 관련 통상현안 문제는 FTA 협정하에 설치된 SPS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6) Kati(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수출입통계

EU 측의 관심사항인 EU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하여 EU 측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 확보 및 다른 국가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 사례 등을 들어 EU산 쇠고기에 대하여도 위험평가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 측은 EU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관련해 EU산 돼지고기와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 인정을 요구('21.4월)하였고, 돼지고기 14개국과 가금육 11개국을 대상으로 지역화 절차를 진행하였다('21.7월~'22.8월). 이후, 과학적인 검증 및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지역화가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다('22.9.2.). 향후 검역증명서 개정 서식 협의와 수출작업장 승인 후 EU산 돼지고기와 가금육에 대한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EU와의 검역현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및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WTO/TBT), 세계동물기구(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틀 안에서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양자 간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의 동구권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업 분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 및 식품안전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기술 및 경험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중남미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김효진

중남미 국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농업대국으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 대두박, 옥수수, 커피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옥수수, 대두유,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돼지고기, 포도, 포도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 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블루베리·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포도·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자두, 멕시코의 아보카도 및 망고, 페루의 블루베리 및 석류, 우루과이의 오렌지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 농산물의 경우 UR 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 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 간의 농업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05년 5월에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2년마다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2006년 2월에 브라질에서 개최된 1차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하여 2차 농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8월에 서울에서, 3차는 2010년 11월 브라질에서, 4차는 2012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정보 및 전문가 교환, 공동 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콜롬비아와 농업 및 농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콜롬비아 농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은경, 차은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나라와 농업 분야 교역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혁신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벤치마킹 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등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서 미작 위주의 농업 구조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와의 농식품 분야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업국가들은 매년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 수입 허용, 검역협정 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의 對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회의, 경제공동위원회,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관리 제도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 현안에 대하여는 WTO SPS 규정,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 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축산물안전관리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 협력채널로서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원회 및 무역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외무장관회담 등을 통하여 양국 농업교류 및 기술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21.10월, 화상회의)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식량안보 공동 대응 방안, 아세안+3 비상쌀 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편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I. 총론

II.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III.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제3장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I. 총론

■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홍성희

◆ 공익직불제 안착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년 기존 직불제를 개편하여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가 도입되었다. 공익직불제는 '21년 시행 2년차를 맞이하면서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21년 공익직불제를 통해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을 지급하였다. 기본직불금 지급단가 증가, 소농직불금 지급 등으로 중소농가 소득안정(0.5ha 미만 농가 대상 직불금 비중 '19년 10.6% → '20년 22.4% → '21년 24.3%)과 논·밭 균형(밭 수령액 비중 '19년 16.2% → '20년 27.7% → '21년 28.1%)에 기여하였다. 농가준수사항을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등 17개까지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였다.

◆ 농업경영 안정 및 농가 소득 제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농가소득은 4,776만원으로, 지난해(4,503만원)보다 6.1% 상승하였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를 추진하였다. 시도별 논타작물 재배 사업, 사전재해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적정·안정 생산을 도모했다. 수확기 농협·민간 RPC 등이 안정적인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3.3조원(정부1.2조원, 농협2.1)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의 적기 출하를 지도했다. 한편,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쌀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여 특별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평년 : 45,532원/20kg, '21년산 수확기 : 53,535원/20kg)되어, 농가당 논벼 총수입('20: 1,920만원 → '21: 2,047만원)과 순수익('20: 699만원 → '21: 794만원)은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위축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판로 지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및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를 추경으로 편성하여, 소농 40만여호에 1,203억원(호당 30만원), 피해품목 농가 79백여호에 79억원(호당1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파·이상저온·태풍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11만 농가에 재해복구비 2,167억원을 지원하였고, 피해 농가에 대하여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2,051농가 410억원) 및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지원(13,075농가 1,076억원 한도 배정)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증가('20년 45.2% → '21년 49.5%)하여 2021년에는 재해 피해 농가 160천 호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였다. 주요 채소에 대한 관측을 전화방식에서 실측방식으로 개편한 데 이어, 실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수급예측 모형 경진대회를 정례화하였다. 또한,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을 결성하여('20.7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였고,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이 불안할 때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받는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확대('17년 생산량의 8% → '21년 16)하였다. 발작물공동경영체를 육성('17년 35개소 → '21년 206)하고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기본계획('22~'26)을 수립('21)하였다. 온라인거래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유통체계 혁신을 꾀하였다.

◆ 농식품 수출 확대

2021년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고른 수출 증가 및 신남방·일본·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 확대에 따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5.6억 불을 기록하였다.

딸기, 포도 등 수출 전문 신선농산물을 집중 육성하였다. 생산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였다. 딸기의 경우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여왔으며,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하여 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국산 딸기, 포도의 품질을 인정받아 동남아와 중화권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전세계적인 한류 확산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가 확대되고 건강·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K-Food 소비를 확대

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출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티볼 등 해외 온라인 물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유망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식품이자 해외 수요가 높은 김치는 해외 연구결과 등을 활용해 기능성 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라면·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은 한류 연계 홍보를 강화하였다.

한편, 선박 부족, 항공·선박 운임 상승 등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물류난 해소를 위해 HMM과 협업하여 농식품 전용 적재공간을 운영하였으며, 주력 품목인 딸기는 대한항공과 협업하여 주 수출시장인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였다.

◆ 가축질병 발생·확산 최소화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처로 전염병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농가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축산물 소비를 보장하였다.

선제적 예방조치와 확산 방지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농장 자율방역 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방역 취약요인 해소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21.5월)하였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 통제를 의무화('21.10월)하고 통제구간도 확대('19: 84개소 → '21: 260)하였으며,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였다. '21년도 겨울부터는 위협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AI발생 닭·오리농장 9건 중 7건을 선제적 검사로 발견하여 신속조치('21.12월)를 취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농장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오염지역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였다.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을 설치('21.5월, 법정 의무화)하였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인근 지역을 6개 권역화하였으며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의 이동을 통제하고, 경기·강원 북부는 권역 내 도축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전방역 조치를 통해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이 확대('20: 11개 시·군 → '21: 21)되었음에도 양돈농장으로 감염병이 대규모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구제역도 서해안·접경지역 등 발생 위험지역에 백신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동절기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한 결과, '19.1월 발생 이후 '21년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 스마트팜 확산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보급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기존 시설원예·축사 현대화 및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스마트 온실을 6,540ha, 스마트 축사를

4,743호까지 확대하였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팜 확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1차지역(상주·김제)은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차지역(고흥·밀양)은 2022년 하반기에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K-스마트팜 시범온실 조성, 수출상담회·바이어매칭 등을 통해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월에 카자흐스탄 현지에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구축하였고, 베트남 시범온실도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 먹거리 지원 강화 및 농촌 삶의 질 개선

13개 시군 48천 저소득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20~'21)하여 식품소비 불평등을 개선하였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가 필요한 초등학생, 임산부 등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과 같은 먹거리 지원정책을 통해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외식소비할인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는 외식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21.5~10월)

한편 읍·면 중심에 보건·교육·여가 등 서비스 기능이 복합된 생활SOC 거점을 확충('20년 1,311 → '21년 1,672)하고, 읍·면·배후마을 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대중교통 취약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20년 482만 명 → '21년 577만 명)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더불어 농촌특성을 반영한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농촌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농촌 특화형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농업인 교육과정에 성평등 강좌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월최대지원금액을 '20년 43,650원에서 '21년 45,000원으로 인상하였다. 14개 시·도의 사회적 농장('20년 30개소 → '21년 60개소) 및 협력기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 농지관리제도 개선

전국 농지 관리체계를 필지별로 효율화하고,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 3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농지 행정의 신뢰를 제고 하였다.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20~'21)하고,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던 것을 1천㎡ 이하 농지 포함,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농지 등록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농지 취득심사·사후관리 및 농업법인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21.8.)하여 투명한 농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Ⅱ.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확충

제1장 농가 소득증대 및 경영 안정

제1절 농식품산업의 지원 기반 강화

1.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사무관 김동영

◆ 추진배경 및 개요

2007년 이후, 칠레를 필두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대외 개방이 확대되고,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경영 여건의 불안정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응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농정현안 대응, 농업정책의 효과성 검증 및 정책방향 정립, 농림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본격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09년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인 편의 제공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1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건수는 178만건으로서 전년(175만건)에 비하여 1.8%(31,187건)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농업인의 등록건수는 176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1.8%(31,625건), 농업법인의 등록건수는 1.5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3.9%(562건) 증가하였다.

〈표 2-1-1〉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단위 : 건)

구분	2020			2021			대비
	합계	농업인	법인	합계	농업인	법인	
경영체 수	1,745,472	1,730,905	14,567	1,777,659	1,762,530	15,129	1.8%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정책 등에 관한 정부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농업인의 자격을 증명하거나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고 활용범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농업경영체 일반현황, 품목 및 면적 등의 생산현황 등 집계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성별, 연령, 전겸업 등으로 세분화된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 재배품목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단계까지 구분이 되며, 지역별 정보는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2-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 조회서비스



등록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미갱신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지 조사, 주민정보 및 토지대장 등 타 공적정보와 교차 검증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해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 및 품질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유효기간(3년)이 도래한 정보를 갱신하고, 타 기관정보로 등록정보를 검증하여 불일치하거나 농업을 하지 않는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 등으로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농협 및 농진청 등의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및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발급 등 농업인의 편의 제공 서비스도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각종 농림지원사업, 세제감면 및 지자체의 농민수당 등의 혜택 부여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편법 영농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비농업인의 등록을 차단하고 제외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농지대장, 행안부의 주민정보 및 국토부의 토지정보 등 공적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등록정보의 검증은 확대 및 강화할 것이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법제화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 여부 및 실경작 증명하는 자료를 농업경영체에게 요청하며,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실태조사 도입 등 농업경영체법 개선으로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짓 및 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수준을 벌금 부과로 강화하고, 농업경영정보를 거짓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 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거짓 등록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1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 등 거짓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계획이며,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등 적법하지 않는 농업경영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 식량산업과 사무관 진필식

◆ 추진 배경 및 개요

'70년대 중·후반까지 쌀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수입에 소요되는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 쌀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력을 도입하고 수요를 통제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94년 UR협상 타결 이후 국제질서에 부합한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고품질 쌀 생산, 영농 규모화, 농가소득 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며, 산업기반의 개선에 노력이 필요한 쌀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업의 영세화·고령화에 대응하여 규모의 경제창출을 통한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09년부터 50ha이상 들녘에서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으로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아울러 밀·콩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25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식량산업의 핵심 경영주체로서 들녘경영체 700개소 육성을 목표로 '21년까지 571개소를 선정·지원하였다. '21년 현재 들녘경영체의 공동경작면적은 90,245ha, 전국 논 면적 780,440ha의 11.6%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경영체당 171ha를 공동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집단화된 농지 내 크고 작은 다수의 농가들이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식량작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공동영농시스템으로 농업 경영구조 개선, 농지 이용률 제고에 효율적인 대안인 동시에 지역공동체 유지, 논 타작물재배단지 조성 지원 등으로 쌀 과잉문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1-2〉 연도별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신규 선정·지원 및 예산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지원	12	18	69	18	13	26	66	43	53	56	27	91	79	571
예산	15	23	10	10	10	25	45	108	111	112	137	222	201	1,029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은 3가지 지원 사업으로, '09년부터 규모화에 수반되는 개별농가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조직관리, 공동영농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논에서 타작물 생산 및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년부터는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 생산·판매 규모화로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보이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생산 이후에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지원을 통해 논 타작물 재배확대, 생산물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효과 관련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들녘경영체 참여 후 직접생산비 절감율은 일반 논벼 재배농가와 비교했을 때 노동력 절감, 대량구입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 중심으로 18.8%의 직접생산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3〉 들녘경영체 직접생산비 절감을 조사결과

(단위 : 원/10a, %)

생산비 항목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 재료비	농구비 ¹⁾	노동비	위탁 영농비	기타 ²⁾	계	비용 절감효과
통계청 10a당 전국평균(A)	21,621	51,693	30,483	12,856	38,662	187,665	123,384	20,951	487,315	
들녘경영체 10a당 평균(B)	22,050	36,313	33,208	9,648	41,914	220,917	21,000	10,660	395,710	-18.8

주 : 1) 농구비 : 자동차비, 수도광열비, 영농시설비 포함, 기타 : 생산관리비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들녘경영체 실태조사, 2020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는 품종·재배방법 단일화, 적정시비로 질소질 비료 투입량 감소 등으로 균일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활용한 타작물 재배, 경축순환형 농법 등을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해 과잉 보유를 방지하여 농기계 이용 효율화 및 농가 부채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동농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계획·내부규약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시에 공동 농업경영체로 지정, 농업경영정보 등록, 사후관리 등을 법제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646호, '17.3.21.)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지원체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의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노동 등 유희 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벼 중심 생산에 집중하였지만, 향후 과잉된 쌀 생산을 억제하고 논에서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경영체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등으로 들녘 단위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들녘경영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년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소득 증대형 지역 공동농업경영체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공동영농으로 절감된 잉여자원(농지,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논타작물, 식량작물 생산 등의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이를 통해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성공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가 소득 안정

1. 공익직불제 도입·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김상현

◆ 추진배경 및 개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이후 9개의 농업직불제(쌀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경영이양, FTA피해보전, FTA폐업지원)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쌀직불제는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및 시장개방에 따른 쌀값 하락 시 쌀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도입되어 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취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목표가격 대비 95% 이상), 쌀전업농 육성 목표를 달성하는 등 규모화, 생산구조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쌀의 공급과잉, 타작목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및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쌀 농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됨에 따라 쌀 생산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유지·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생태보전, 먹거리 안전,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및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을 위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직불제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제안하여 당·정 협의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과 함께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다.

2019년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소비자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개편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에 대하여 지속 논의할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한 농업인 등과의 의견수렴도 지속하는 한편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근거 법률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2월 '19년 대비 약 1조가 증가한 규모인 2.4조의 예산이 확정되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는 크게 기본형 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 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도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에게 면적이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작을 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작물간 균형생산과 중소농 소득 안정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농업인 준수사항 확대 이행을 통해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등 공익창출차로서 농업인의 역할 확대 및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형 직불제는 과거 공익형으로 분류되었던 친환경농업직불제(이하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이하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제(이하 경관직불)가 유지되고 밭직불제(이하 밭직불) 중 논이모작직불이 논활용직불로 바뀌어서 선택직불에 포함되었으며, 선택직불에 포함된 개별 직불제의 단가 등 주요 내용은 기존과 큰 변화가 없다.

〈표 2-1-4〉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개 편 전(‘19년)		개 편 후(‘20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공익 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논활용직불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변동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
밭농업직불 : 고정, 논이모작			소농직불금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20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4월 하위법령을 완성하였다. 2020년 제도 첫 시행 결과 기본형 직불금은 신청자 중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1,121천 건, 22,769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선택형 직불금은 98천건 795억원을 지급하였다. 2021년도에는 기본형 직불금 1,122천 건, 22,268억원, 선택형 직불금 94천건 819억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제도 개편시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농지 요건으로 '17-'19년 사이 기존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한정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해당 요건으로 인해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민에 대해 구제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여, 기본형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대를 위해 해당 요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익직불제 개편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택직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포럼 등을 운영하여 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기후·환경문제 대응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선택직불제 증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22.12월), 향후 해당 내용을 발전시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 공익직불정책과 사무관 최규일

◆ 추진배경 및 개요

2020년 전체 농가인구 2,317천명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약 42.5%(985천명)로 전년 대비 5.8%p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농가 1,035천호 가운데 73.4%(760천호)는 경지 규모가 1.0ha 미만으로 영세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농지를 규모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WTO/DDA 협상이나 FTA 협정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하에서 고령농업인들이 전업 농업인 등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19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이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75세가 될 때까지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당 매도는 연 330만원, 임대는 250만원('17년까지는 매도·임대 동일하게 ha당 300만원 지급)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상한은 매도 및 임대 합산 4ha까지로 되어 있다. 사업의 효과적 홍보, 약정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위탁사업자로 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하던 것을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하였으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이렇듯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한미 FTA 비준 지연,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한 영농 편리성, 고령 농업인의 강한 농지 소유욕 등으로 사업참여자가 예상보다 적어 일부 예산이 불용되기도 하였다.

2011년에는 고령농업인의 비중이 높아 적정 양수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의 농업인까지 확대하였다.

2015년에는 농가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양수대상자(전업농업인 60세 이하 → 64세 이하, 일반 농업인 45세 이하 → 50세 이하) 및 이양대상자(65~70세 이하 → 65~74세 이하) 연령을 확대하여 향후 농업구조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에는 매도 이양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매도이양은 연간 ha당 330만원, 임대이양은 ha당 250만원으로 단가를 차등화하였다

사업 활성화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1,209회)하였으며, 홍보 포스터 1만매, 안내문 2만매, 리플릿 4만매, 현수막 설치 1,476개, 지역신문(시·군단위) 20회, 좌담회 개최 300회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108.0천명에게 직불금 7,588억원(1인당 연간 7,02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81.1천ha를 전업농 76.4천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6ha로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에게 고정적인 보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귀농인, 후계농업인 등의 젊은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향후 사업에 참여했던 고령 농업인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정책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등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다각적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3.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지우

◆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의 일부분을 보전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대책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제도의 이름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제”였으며, 2004년 제정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규정하였다. 한·칠레 FTA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키위를 대상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였다. 지급요건은 지급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량과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였다. 기준가격 및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비율은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당시 기준가격은 해당품목의 직전 5개년도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의 80%였고, 보전비율도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80%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간 요건을 충족한 품목이 없어 지급 실적은 전무했다.

이후 정부는 한·EU 및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하면서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까다로운 한 번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상품목을 FTA 체결로 관세가 감축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시행령에서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발동요건과 보전비율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한·EU FTA 여·야·정 합의문에 따라 2011년도에 보전비율이 90%로 상향되고, 발동요건이 85%로 완화되었으며, 제도의 명칭 또한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로 개정하여 제도의 취지가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2012년에는 한·미 FTA 여·야 합의문을 반영하여 발표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 대책」에 따라 발동요건이 90%로 추가적으로 완화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 요건을 정리하면 <표 2-1-7>과 같으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급액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단위면적 당 전국평균생산량×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조정계수」로 정해져 있고, 당시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의 90%이었다.

2016년도에는 한·중 FTA 여·야·정 합의결과(15.11.30.)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하였고, 시행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10년간 시행토록 연장(25년)하였다.

〈표 2-1-5〉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요건 (법 제7조제1항 각 호)

가 격 요 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총수입량요건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수 입 량 요 건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을 초과

한편, FTA 체결로 인한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2013년 1월 21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지속적인 지급기준 완화로 피해보전직불제 도입 이후, 2013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4.29.)되었으며, 이후 추진절차를 거쳐 총 187천 농가에 253억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 농업인이 신청한 7개 품목(모니터링 품목과 중복)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가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 등 4개 품목이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6.25.)되었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17천 농가에 324억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딸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밥 등 9개 품목이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고시(6.18.)되었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76천 농가에 471억원을 지급하였다.

2016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34개 품목 등 총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품목을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5.26.)·고시(5.27.)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28천 농가에 385억원을 지급하였다.

2017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41개 품목 등 총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라지를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5.26.)·고시(5.29.)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480 농가에 14.5억원을 지급하였다.

2018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66개 품목 등 총 108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가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1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품목을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1.)·고시(6.5.)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3,728 농가에 32.4억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73개 품목 등 총 1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귀리, 목이버섯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5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품목을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5.)·고시(6.12.)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176 농가에 4.8억원을 지급하였다.

2020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돼지고기, 녹두, 밤이 지급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품목을 2020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24.)·고시(6.25.)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4,163 농가에 610억원을 지급하였다.

2021년도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등 신청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귀리가 지급기준을 충족하였으며, 6월 14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품목을 2021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6.14.)·고시(6.15.)하였다. 이후 농업인등 신청, 신청내용에 대한 지자체 현지조사 및 자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총 203 농가에 6.2억원을 지급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1년은 FTA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귀리 1개 품목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농가에 차질 없이 지급하였다.

향후, FTA 이행으로 인한 환경하에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보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 지급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 농촌산업과 서기관 정재원, 사무관 정명희·김방연

◆ 추진배경 및 개요

6차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특산품 제조·가공 등의 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3차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넓지 않고, 농업소득이 불안정적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상당수가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농업소득의 정체와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제조·관광 등 가치사슬의 연계를 강화하는 6차산업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6차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경영능력, 자본 등이 부족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는 방법을 몰라서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동안, 농가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업무 중 하나로 6차 산업화를 선정하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6차 산업화를 발전시키며 농촌관광 등 농촌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그 밖에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 및 매출액, 관련 일자리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다수의 영세 경영체 역량이 미흡하고 창업자는 3~4년차 성장절벽에 직면함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서 내실화를 통한 도약을 위해 6차산업 소비기반 강화, 경영체 맞춤형 지원 등 내실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 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1년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비전 아래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 확장 및 비대면 판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①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②신경제 패러다임 대응을 위한 홍보·마케팅 다양화, ③소비 저변 확충을 위한 외연 확장의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우수경영체 육성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비·인증사업자에게 맞춤형 전문 상담 및 현장코칭 등을 진행하였고,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사업, 용자 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신규 인증 경영체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기존의 인증 경영체에게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코로나로 재편된 온라인 판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와 MOU 체결 및 라이브 방송 추진,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 농촌융복합산업 전용 브랜드관 개설, 온라인 플랫폼 참여 기반 확충을 위한 소프트웨어(QR코드, 상세페이지 등) 제작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지도 제고, 안정적인 판매망 확대를 통한 소비 저변 확충 및 외연 확장을 위해 HACCP 인증 지원, 광고 캠페인 제작 및 송출, 공공급식 참여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지원하고, 체험 분야 활성화 및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제고를 위해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단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2020년 1,909개소에서 2021년 2,034개소로 6.6%성장하였고 비대면 판로 매출액은 28% 증가(5,126백만원→6,558)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체 인증사업자 매출액은 2020년 2조7천억원 수준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초기 연도인 2015년의 739억원에 비해 3.7배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은 2배이상 증가(6,561명→13,623명)하였다.

더불어, 특화품목의 1·2·3차 산업 등이 집적된 지역을 지구로 지정하여 산업간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21년에도 4개지구(전남 여수 돌산갯, 전남 해남 고구마, 경북 경산 대추, 경남 밀양 딸기)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제조·판매·체험 등의 공동 인프라 조성,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신상품·서비스 개발, 공동 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밀양 딸기지구의 경우 지구지정 전년도인 '20년도에 비해 '21년 매출액이 22%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2014년 3개소에서 '21년 3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정량적 주요 성과항목(매출액, 방문개수, 일자리)에서도 2014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은 약 4.5배, 방문객수는 약 2배, 일자리수는 약 3.6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 계속되어 왔던 사업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인증제도 내실화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 예비인증제 활성화, 새로운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판로 다각화 및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획득했지만 서류 준비, 엄격한 심사 등으로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갱신인증 심사 절차를 완화하며, 안정적인 인증제도 운영을 위해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컨설팅, 판로 등에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판로 분야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지형이 크게 바뀐 소비 시장에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네이버 라이브 방송·대기업 폐쇄몰 입점·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운영 등 소비자 점점 플랫폼을 발굴하여 인증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등 온라인 판로를 다각화하고 경영체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온라인 시장 참여를 위해 스마트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은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기존에 추진해온 성장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비윤드팜,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하는 지역단위 판매 플랫폼 운영,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선정, 소비자 대상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며,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산업간 연계강화 및 다각화·고도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사업의 지속적 선정·지원과 아울러 농촌융복합지구 사업의 내실화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사업평가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농가 경영 안정

1. 농지은행 활성화

■ 농지과 사무관 김광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고령화, 시장개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농지법」 개정('05.7.21.)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05.12.29.)을 통해 2005년에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농지규모화(1990년)를 농지은행사업에 편입하고, 이후 농지임대수탁(2005년),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2006년), 농지매입비축(2010년), 농지연금(2011년), 맞춤형 농지지원사업(2018년, 농지규모화와 농지매입비축을 통합)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1) 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前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임차임대·교환분합사업은 경영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농업인, 이농·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영농복귀자, 농업법인 등에 매도 또는 임대하고, 농업인(농업법인)간 농지의 교환·분합을 장기 저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지규모화 사업의 농업인 매도(임대) 시 용자조건

- 농지매매 : 금리 1%, 11~30년간 분할상환
- 장기임대차 : 무이자, 5~10년 임대기간 동안 분할상환
- 교환분합 : 금리 1%, 10년 분할상환

2021년에는 총 749ha 640억원을 1,247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은 농지 매매 443ha 534억원, 임차임대 306ha 105억원, 농지교환·분합 0.2ha 0.6억원이다. 이로써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총 7조 7,148억원을 지원하여 181,739ha의 농지를 규모화시켰다.

〈표 2-1-6〉 前 농지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구 분	합 계	1990~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면 적	181,739	158,869	2,787	2,711	2,609	2,543	2,913	2,477	2,302	1,477	1,188	1,113	749
금 액	77,148	63,413	1,611	1,621	1,584	1,372	1,791	1,508	1,266	860	756	726	64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이를 통해, 쌀전업농의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1년 6.3ha 수준으로 확대되어 2.5배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전체 벼 재배면적 대비 쌀전업농의 경영면적 비중을 2004년 28%에서 2021년 51%까지 확대하였다.

* 쌀전업농 호당 평균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10) 5.2 → ('13) 5.9 → ('18) 6.4 → ('19) 6.4 → ('20) 6.3 → ('21) 6.3

또한, 쌀 생산조정을 위해 '17년부터 농지매매의 경우 논에 벼 외 타작물 재배희망자에 우선 지원하도록 하여 '21년까지 농지매매 지원 농지 3,381ha가 타작물 재배에 이용되었다.

〈표 2-1-7〉 농지매매 지원농지 타작물 재배 추진실적

(단위 : ha)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3,381	616	1,046	723	554	442
신규 농지	1,732	616	366	282	313	155
유지 농지	1,649	-	680	441	241	287

2) 공공임대용 농지매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및 FTA확산 등 농업개방 확대에 따른 농지수급 불안 증가 및 농지가격 하락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업진흥지역안 우량농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 확보, 원활한 은퇴 지원 및 농지유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매입비축한 농지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함으로써 농업경영주의 연령 하향('21년, 매도자 66세 → 임대자 37세 「29세↓」)에 따른 농업구조개선, 농촌활력화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16년부터 쌀 생산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 경우 벼 이외 타작물 재배(휴경포함)를 조건으로 임대를 실시하고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임대료의 80%, 휴경시 100%를 감면하였다('21.2.1. 이후 체결된 임대계약은 휴경시 임대료 80% 감면). 그 결과 비축농지의 타작물 재배 면적은 '16년 1,452ha에서 '17년 2,102ha, '18년 2,760ha, '19년 4,321ha, '20년 5,459ha, '21년 7,398ha 등 '21년까지 6년간 총 23,492ha의 비축농지가 타작물 재배(휴경포함)에 이용됨으로써 쌀 생산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6,944억원을 투입하여 4,436농가의 농지 1,732ha를 매입함에 따라, 2010년부터 2021년말까지 10,487ha를 매입하여 수용, 경지정리 등 42ha를 제외한 10,445ha를 비축한 후 이중 9,770ha를 임대(93.5%) 하였다.

〈표 2-1-8〉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前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 ha, 호, 억원)

매 입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면 적	10,487	495	711	715	730	541	624	580	703	917	1,165	1,574	1,732
농 가	19,839	829	1,175	1,236	1,204	888	993	900	1,110	1,617	2,148	3,303	4,436
금 액	30,559	750	1,573	1,599	1,665	1,277	1,525	1,486	1,799	2,606	3,735	5,600	6,944
임 대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면 적	15,038	21	725	844	784	592	804	1,309	1,550	1,456	1,835	2,338	2,780
농 가	16,871	25	804	995	839	691	937	1,376	1,512	1,559	2,096	2,740	3,297
금 액	-	-	-	-	-	-	-	-	-	-	-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고,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2,4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88ha의 농지를 매입, 652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586농가에 3조 5,828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1년에 경매로 처분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560억원(농가당 86백만원) 수준의 자산손실을 방지하고,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이자비용 131억원을 절감(농가당 20백만원 수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어 해당농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자산손실 방지 8,241억원(농가당 65백만원), 이자비용 절감은 3,626억원(농가당 29백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표 2-1-9〉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실적

(단위 : 호, ha, 억원)

구 분	합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가수	12,586	185	444	493	639	1,149	978	1,009	1,021	928	898	814	896	849	859	772	652
면 적	16,046	311	629	705	880	1,369	1,312	1,302	1,249	1,227	1,202	1,141	1,161	1,027	961	882	688
금 액	35,828	422	953	1,195	1,700	2,400	2,400	2,600	2,564	2,600	2,596	2,584	2,838	2,820	2,933	2,788	2,43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21년까지 총 지원 농가(12,586) 중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06년 지원 농가(185) 중 139농가(75.1%), '07년 지원 농가(444) 중 369농가(83.1%), '08년 지원 농가(493) 중 402농가(81.5%), '09년 지원 농가(639) 중 540농가(84.5%), '10년 지원 농가(1,149) 중 1,019농가(88.7%), '11년 지원 농가(978) 중 879(89.8%) 농가가 환매하였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수탁사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96년에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함에 따라,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개인간 임대차 등을 공식적인 법적 제도 내로 유인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도에는 38,119농가에 17,550ha를 임대하였으며, 2005년부터 2021년까지 308,500농가에 165,459ha를 임대하여 농지이용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표 2-1-10〉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임대 추진실적

(단위: 호, ha)

구 분	합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가수	308,500	24,566	27,237	14,948	15,923	16,638	16,487	17,899	20,272	22,019	20,432	22,980	21,346	29,634	38,119
면 적	165,459	12,922	15,956	8,118	10,837	10,059	9,706	9,928	9,721	11,357	12,093	11,953	11,327	13,932	17,5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 평가 및 향후 계획

경자유전 원칙의 실천적 구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 성과를 유지하는 한편,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농가 및 귀농인까지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위해 농지구묘화사업과 매입비축사업을 통합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개편(18)하고, '19년에는 비축농지 매입하한면적 완화(1,983㎡에서 1,000㎡) 및 매입상한단가를 상향(기존 논과 밭 구분없이 28~50천원/㎡에서 논과 밭을 구분하여 논은 28~92천원/㎡, 밭은 28~105천원/㎡)하였다. 이후 '21년에도 농업진흥지역 안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입상한단가를 설정(논 28~121천원/㎡, 밭 28~130천원/㎡)하였으며, 향후 공공 임대용 비축농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농, 2030세대 젊은 인력, 귀농인 등 예비 농업인들의 영농 진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적인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의 환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분환매제도 도입, 분할납부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환매대금 선납제 등을 제도개선하여 환매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은퇴지원 및 젊은 농업인에 대한 농지 지원 확대 등으로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비축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쌀 수급 안정기여 등 비축 농지의 정책적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최중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산업이며, 매년 많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재해예방 사업 및 예방대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 지원과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21년에는 이상저온, 집중호우, 태풍 등 16건의 자연 재난으로 농작물 132천ha, 가축 111천마리, 농경지 유실매물 191ha, 농업시설 137ha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약 2,167억원(국비 1,498, 지방비 669)의 복구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9개 시도에서 농작물 28천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5.~8일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에 농작물 28천ha, 가축 108천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8~9월에는 벼 병해충으로 전북 벼 40천ha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등의 지원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재개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재난지원금은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재난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단가가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의 신설 및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 농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다.

3.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박혜민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같은 거대재해 발생빈도 증가 및 폭염·가뭄·홍수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에는 “볼라벤·텐빈·산바”와 같은 연이은 태풍과 호우·대설 등 22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년 기상재해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상환 연기, 대파대·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와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위해 거대재해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1-11〉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품목	30 (시설 꽃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추가)	35 (시설 멜론·파프 리카, 인삼, 오디,차 추가)	40 (표고· 느타리 버섯, 시설상추 ·부추· 시금치 추가)	43 (시설배추 가지·파 추가)	46 (시설 캐네이션· 백합· 무 추가)	50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미나리 추가)	53 (시설썩갓, 무화과, 유자 추가)	57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 새송이 추가)	62 (배추, 무, 파, 당근, 단호박 추가)	67 (팔,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 추가)	67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67,653	74,983	95,102	89,038	122,054	180,899	195,804	277,112	341,225	442,179	449,341
	가입면적(ha)	86,604	108,373	160,203	134,264	185,239	297,494	321,331	378,714	457,231	551,735	595,257
	가입률(%)	15.0	13.6	19.1	16.1	21.7	27.5	30.1	33.1	38.9	45.2	49.5
지원 규모	순보험료(%)	50	50	40~50	40~50	40~60	40~60	40~60	40~60	40~60	40~60	38~6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예산액	97,221	114,007	159,396	217,233	215,862	215,978	216,176	232,836	241,740	352,749	351,871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19,611	46,337	8,600	10,769	6,386	19,749	28,435	80,201	174,500	206,239	159,807
	보험금	132,628	490,978	45,088	144,978	52,851	111,464	287,349	584,213	908,960	1,019,278	576,449
	손해율(%)	119.4	357.1	21.9	66.9	18.0	34.0	84.9	111.4	186.2	149.7	74.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급성장하여,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 배 2개 품목에서 벼, 복숭아 등 주요작물을 추가하여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재해보험사업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품목 도입 등 사업확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2021년 449천농가, 595천ha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태풍, 이상 저온 등 피해를 입은 160천 농가가 보험금 5,764억원을 수령하여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한편, 지난 20년간 재해 빈발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시장규모가 지속 확대되어온 반면 높은 손해율 지속에 따른 재해보험구조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① 할인할증률 균형을 위한 전품목 할증률 조정 및 방재시설 할인을 조정 ② 농가의 보험 선택권 확대를 통한 농가별 위험 수준 및 보험료 부담 의사에 부합하는 보장 수준 선택 유도 ③ 제도적 건전성 점검을 위한 지표 설정 및 단계별 매뉴얼 마련 등 보험사업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21년까지 92만여 농가에 4조 7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경영안정 제도로 정착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적정보험료 부과 및 국비지원비율 검토, 보상수준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4. 가축재해보험 운영 내실화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민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은 사육 중 자연재해, 질병 등 상시 위협에 노출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어, 축산농가는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농가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가축재해보험사업은 1997년 “소”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16개 축종(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으로 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자연재난,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보험가입 수요 및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2021년에는 가금(육계, 토종닭) 축종 대상 축산법상 적정사육기준 준용으로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하여 밀집사육 억제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하였다. 또한, 비용손해(손해방지 비용·대위권 보전비용·잔존물보전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 적용 배제, 소 이력제 시스템 손해보험사와 전산연계 등을 통해 농가의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 및 축산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품·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2021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3.7%로 23천농가에서 285,075천두가 보험에 가입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20년 92.8%)하였고, 손해율은 78.9%로 전년 대비 1.9% 감소('20년 80.8%)하였다. 그리고 폭염·화재 등 피해를 입은 10천농가에게는 보험금 1,462억원을 지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1-12〉 가축재해보험 축종별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	7.6	7.6	6.1	6.8	7.9	9.8	10.3	12.2	13.0	13.5
돼지	85.1	100	86.7	86.5	92.9	96.4	95.9	97.7	95.2	98.1
말	4.9	3.3	2.5	3.5	4.1	6.0	5.7	8.3	5.2	4.0
가금	73.1	78.2	91.2	93.1	94.3	94.6	94.9	95.0	94.8	95.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손해보험(주),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DB손해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평가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은 밀집사육 개선을 위한 적정사육기준을 돼지·오리 축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농가 수요를 반영한 축사 단독 가입 허용, '소' 축종 보험가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품 다양화 등 상품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5. 농업부문 세제 지원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지혜

◆ 추진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여 농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기능별 예산분류기준(16개 부문)에 따라 조세감면 실적을 분류했을 때, 2021년 농림수산 분야 조세지출 실적은 전체(570,248억)의 11.2%(63,938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업 분야에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관련 조세 특례는 소득세(이자·배당·양도소득 등), 재산세, 부가세, 거래세(취·등록세) 등 과세 전반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직접세의 경우, 작물재배소득·농가 부업소득·전답 임대 소득세 감면, 농업인 배당·이자 소득세 감면, 자경농지·대토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농협 등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각종 농업 관련 법인에 포괄적으로 조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접세의 경우, 영농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저소득 농어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해 예금·용자 인지세 역시 면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부문의 조세감면 항목(국세 44여개, 지방세 29여개) 중 조세감면 실적 추정이 가능한 주요 항목으로는 농업용 석유류 면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업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이 있다.

이들 감면 항목에 대한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3〉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면세유	7,961	6,072	6,427	6,765	6,714	6,830	7,074
•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11,760	11,172	11,225	11,164	11,497	12,922	15,015
•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1,340	1,437	1,513	1,459	1,566	1,343	1,593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13,127	12,045	12,401	14,324	12,435	16,323	20,459
• 농지 대토시 양도세 면제	315	572	557	550	561	815	1,102
•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면제	1,303	1,504	679	751	825	900	592

석유류 면세가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2021년 말 기준 면세유 공급 대상은 농업기계 42개 기종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1-14〉 농업용 면세유 현황

(단위 : 천리,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급물량 (천리)	7,961	6,072	6,427	6,765	6,714	6,830	1,408
공 급 액 (억원)	11,760	11,172	11,225	11,164	11,497	12,922	11,349
감면세액 (억원)	1,340	1,437	1,513	1,459	1,566	1,343	7,074

농업·축산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농업기계 31종, 축산업용 기자재 39종, 임업용 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50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농업용 필름 등 62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1-15〉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료	1,840	1,612	1,612	1,493	1,454	1,491	1,615
농 약	1,423	1,461	1,462	1,462	1,504	1,500	1,550
농기계	1,017	917	907	996	920	942	1,071
사 료	7,451	7,173	7,232	7,210	7,600	8,303	10,089
축산기자재 등	29	9	12	3	19	686	690
계	11,760	11,172	11,225	11,164	11,497	12,922	15,015

〈표 2-1-16〉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원)

사후환급적용자재	연간환급세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업용 필름	293	274	262	270	290	281	315
농업용 파이프	224	235	248	225	240	226	304
농업용 포장상자	383	381	423	423	430	410	486
농업용 PP포대	33	18	15	13	18	15	20
과일봉지	24	35	32	31	35	33	40
인삼재배용 지주목 차광망	29	29	25	18	28	25	24
차광망(연초건조용, 과수, 화훼재배용)	7	7	7	7	9	9	8
농업용 부직포	53	50	44	42	55	40	47
농업용 배지	54	57	51	51	78	54	61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2	3	1	1	1	1	3
축산자재	0	134	130	128	131	111	129
기타	238	214	275	250	251	138	156
계	1,340	1,437	1,513	1,459	1,566	1,343	1,593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원유·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대와 FTA 확대에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농가 경영 불안과 농업 분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영농 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농 비용 절감 및 농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세제 특례 지원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필수적이며, 정부는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세제 특례의 지속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6.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부채 규모는 영농 규모가 확대되는 등 상업농화가 진전되면서 시설투자 증가, 경영비 상승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다 2008년 이후 정체상태이며, 농가 자산의 상승에 힘입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과의 FTA 진전,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고리채 사금융을 이용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6차례의 농가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기상이변·시장개방 등에 따라 각종 재해나 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건실하게 영농을 영위하다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4년부터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프로그램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연리 1%, 5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중장기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등에 대해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20년까지 부채대책(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4·2006·2009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등) 추진으로 34,336억원의 재정이 지원(이자보전)되었고, 이는 농가당 평균 30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농가의 부채를 줄이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회생프로그램(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조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3.4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대책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 등으로 부채경감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들 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원보다는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재해보험,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7.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운영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김남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으며,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농업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한·중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 경제의 어려움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트랙터, 콤팩트 및 농업용화물자동차 등 42개 기종, 대상유종은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중유, 윤활유, LPG 등이다.

농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감면내역을 보면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각각 529원, 375원,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 추진 성과

2021년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142.2만kl로 2020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2021년 농업용 면세유 감면세액도 7,073억원으로 2020년 대비 3.6% 증가하였다.

〈표 2-1-17〉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 및 감면세액

(단위 : 만kl, 억원)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용량	137	143	140.7	141.3	142.2
감면세액	6,428	6,766	6,715	6,830	7,073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는 농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를 촉진하여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액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농업을 촉진하여 신선채소의 연중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의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국내 물가안정과 국민 가계 부담의 완충 역할을 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자는 농업인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농기계를 가진 농업인은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 시민은 농산물을 보다 싸게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취약한 농업의 경영 안정화, 환경보호 측면, 도로 비주행 등의 이유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세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효과는 면세유류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근절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킴으로써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 사용량을 전량 공급하고, 신규 개발되거나 농작업 사용이 증가하는 농기계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에 소요되는 유류는 충분히 공급하되 부정 유통은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방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농업용 면세유 공급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8. 농기계 임대 활성화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김남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밭작물 농기계의 경우 영세한 영농규모, 다양한 작물 및 재배방식 등 밭농업의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기계화율이 61.9%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농업 중심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를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2021년에는 국고 255억원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530개소를 지원하였고, 주산지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해 451개 작목반·지역농협 등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여 밭농사 기계화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확대를 통해 631개 농·축협에서 1,330천ha(수도작 1,240, 밭농업 90)의 농작업 대행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벼 직파재배 사업도 확대 하여 146개 지역농협에서 13.5천ha에 직파재배를 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 농업인에 대한 수요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과 고령·영세농의 농작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 발작물 농기계로 대체를 지원하여 임대농기계 사용을 활성화 하고 임대사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효율적 임대사업소 운영방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임대사업소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령·영세농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작업 대행을 위해 지역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직영농협을 확대할 것이며, 농작업 범위도 논농사뿐만 아니라 밭농사까지 확대하고,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9. FTA 폐업 지원

■ 농업정책과 사무관 이지우

◆ 추진배경 및 개요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재배·사육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4년 한·칠레 FTA 대책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며, 도입 당시 시행기간은 2008년까지, 지급대상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예상 품목 중 이행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포도·키위·복숭아로 사전 지정되었다.

시설포도·키위·복숭아에 대한 폐업 지원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2,377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후 검역 문제로 수입되지 않은 복숭아에 지급되는 등 사전지정제도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한·미 FTA 대책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한 사후 지정제로 개선하였으며,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에서 ① 재배·사육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하면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하거나, ②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렵거나, ③ 그 밖에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 시행기간도 한·중 FTA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후지정제로 개선된 후 최초로 2013년도에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큰 한우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총 소요금액(1,965억원)이 예산 편성액(300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예산 및 FTA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이용하여 지급하였다.

2014년도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큰 한우송아지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6월 25일 품목고시 후 8월 25일까지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각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는 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3,010농가에 196억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도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19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을 폐업 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월 18일 품목고시 후 8월 17일까지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여 총 4,610농가에 1,150억원을 지급하였다.

2016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5월 27일 품목고시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5,860농가에 1,967억원을 지급하였다.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도라지 1품목이었고, 이는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없었다.

2018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5월 26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호두, 양송이 버섯, 염소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월 5일 품목고시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두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1,680농가에 368억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귀리, 목이버섯 2품목이었고, 2품목 모두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없었다.

2020년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6월 24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중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고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돼지고기, 밤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다. 6월 25일 품목고시 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한 달간 대상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서면)조사 및 자체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총 591농가에 1,283억원을 지급하였다.

2021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 귀리 1품목이었고, 1품목 모두 투자비용이 비교적 크거나 단기에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없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0년도 폐업지원 품목 중 돼지고기의 경우, 동시 폐업에 따른 돼지고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 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였고, 이에 대한 폐업지원금을 농가에 차질없이 지급하였다.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나 FTA 폐업지원은 2021년 종료되었으나 폐업지원금 수령 농업인은 5년간 동일 품목의 재배·사육이 금지되므로, 이를 위반 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제2장 농식품 유통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 유통 효율화

1. 산지유통주체의 역량강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한태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와 디지털 기술발전,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등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하는 한편,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지속적인 경쟁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협조직, 농업법인, 개별농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생산구조는 영세하고 산지유통 조직 또한 상당수가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 소비지 유통주체와의 동등한 거래교섭력 유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산지의 경쟁력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득 창출과 직결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산구조의 영세성에서 비롯되는 거래교섭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주체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산지의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산지유통주체를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산지유통의 거점이 되는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

1992년부터 산지유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장 및 상품화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2021년까지 전국에 총 412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 계열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산지조직이 농산물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산지조직이 유통을 위한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농산물이 판매된 이후에야 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확보할 수 없어 산지조직이 우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산지조직이 유통하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인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에서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융자지원을 통하여 산지조직의 일시적 자금수요를 해소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20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조건을 차등하는 등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산지조직을 소형(일반조직), 중형(전문조직), 대형(공동마케팅조직)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2010년까지 일반조직 110개소, 전문조직 282개소, 공동마케팅조직 31개소를 육성하였다. 일반조직은 취급액 10억원 이상의 기초조직, 전문조직은 취급액 30억원 이상의 중견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은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적 경영체를 의미한다.

2011년부터는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지 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개별 경영체 위주의 정책에서 통합 경영체 위주의 육성정책으로 전환하였다. 통합 경영체는 기본적으로 통합마케팅조직과 이에 참여하는 참여조직으로 구성된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이며, 참여조직은 지역조합, 농업법인 등이다.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조직에 일정수준 이상(농협조직 5억원, 농업법인 2억원 이상)을 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평가결과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정부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에서 출하한 물량을 모아서 소비지에 마케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물확보 자금 등 정책지원은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은 참여조직의 자금소요를 파악하여 배분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공동선별을 통하여 품질을 균일화하고,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1년까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통합마케팅조직 119개소, 참여조직 422개소를 육성하였다.

통합마케팅 체계에서는 통합마케팅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화된 상품화, 전략적 마케팅 등을 통하여 좋은 거래조건에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진하는 한편, 참여조직 및 농업인이 통합마케팅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통합마케팅조직이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공동선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산지유통 인재양성을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에 산지조직 핵심인력 양성 과정(2기 100명)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의 지원과 노력을 바탕으로 산지의 규모화 및 조직체계 정비 등 산지유통은 규모화 측면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취급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조직은 2005년 6개소에서 2021년 77개소로 늘었으며, 통합마케팅조직 평균 취급액도 같은 기간 120억원에서 37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이 그 사례이다.

앞으로는 통합마케팅 신규 참여를 확대하고, 기초생산자조직과 품목 중심의 전속 출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산지유통 혁신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지유통 혁신조직은 전문 품목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완전히 계열화하고 수급관리를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통합마케팅조직으로 '21년 14개소를 시작으로 집중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생산자, 소비자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구축

■ 원예산업과 사무관 남기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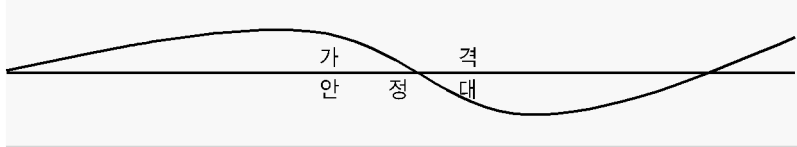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 정부 주도의 농산물 수급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생산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시 TRQ 증량, 할당관세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생산자 측에서,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시 수매 등을 통한 가격지지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비자 측에서 불만 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단방향식 수급안정 대책은 시장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 및 정책 효과가 미흡하였고, 종종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낮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였다. 이에 2013년부터는 농정신뢰 회복 및 수급안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가 하향식으로 주도하던 수급안정정책을 시장 참여자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 수급정책의 거버넌스로 수급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생산자·유통인·학계,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2013년 4월 발족하였다. 수급조절위원회의 주목적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조절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 의한 안정화가 불가능하거나 큰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같은 해 수급관리정책의 시스템화를 위해 시장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한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도 마련되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2013년 배추, 양파를 시작으로 무, 건고추, 마늘까지 주요 채소류 5개 품목 위주에서 2018년 매뉴얼 개정을 통해 겨울대파, 풋고추, 배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급조절매뉴얼은 실제 가격이 출현하는 확률분포, 농가 비용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기단계를 설정하고, 실질적 가격변동과 농가 경영여건을 반영하여 가격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 경계, 심각)를 설정하여 단계별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위기단계 및 대응 매뉴얼 〉

심 각	심각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위협: 해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등
경 계	상당한 공급부족, 소비자 후생 지장: 비축, 계약물량 공급, TRQ 증량
주 의	다소간의 공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수입 가능성 조사
중심가격	
주 의	다소간의 수급 불균형: 산지동향 점검, 수출 가능성 조사
경 계	농가소득 손실 일부 발생: 유통협약, TRQ수입 연기, 가공용 공급확대 등
심 각	공급과잉, 소득손실 심각: 유통명령, 과잉물량 가공업체 공급·저장, 소비확대

특히, 2018년 매뉴얼 개정시 사전적으로 파종이나 정식이 되기 전에 면적을 조절하여 수급 불만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면적조절 매뉴얼을 보강하였으며, 품목별로 각 수급기관별 월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평시에도 품목별 수급상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 등의 수급안정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으며, 수급매뉴얼에 따른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으로 가격의 진폭이 줄어들고, 가격 불안시 안정대로 회복되는 기간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위원회 운영 전후 5대 채소 가격변동률 : ('08~'12 평균) 16.1% → ('13~'21 평균) 13.5%

또한, 2016년부터는 무·배추 등 가격 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한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사업 물량을 16%로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장해주고 사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 되도록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前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4개 품목에 대해 중앙주산지협의회를 구성하였다.

*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 : ('18)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 ('19) 대파(시범) → ('20) 감자(시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물량 : ('18) 품목 평년 생산량의 10% → ('21) 16%

2018년부터는 농산물 수급관리에 4차산업 ICT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농산물유통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활용이 어려웠던 농산물 수급관련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22개 기관 87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에는 생산자, 소비자 등 수요자별 자율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생산·유통·소비 관련 55종 분석 정보와 45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의 운용 등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의 추진으로 가격 변동률이 완화되는 등의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와 수급조절매뉴얼 운용은 생산 이후 수급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생산 및 생산단계 이전의 수급조절에는 취약한 면이 있다. 이에 노지채소 최초로 설립된 양파, 마늘 의무자조금과 협력하여 회원들의 경작 신고를 추진하고, 적정 재배면적이 유지되도록 자조금 단체 스스로 면적 조절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사업물량을 품목 평년 생산량의 17%까지 운용할 계획이다.

수급정보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증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생산자·유통인 등 시장참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3. 소비자와 산지 간 직접 거래 활성화

■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이효열,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신부선

◆ 추진배경 및 개요

도농교류 확대, 농산물 유통경로 다원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 단축으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직거래장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조직 간의 직거래(B2B)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여 전자방식의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사이버거래소(現 농수산식품거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도매시장, 대형마트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 등에 집중되어, 높은 가격변동성 등 비효율성과 중소농 판로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 지역내 소비시장에 지역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직거래는 크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의 직거래와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하고 생산자 조직과 대량 수요처 간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광의의 직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주체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과천 경마공원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을 개장하여 2009년에는 방문객 수 29만명에 5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1년엔 42만명에 56억원의 매출을 올려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물가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농협 지역본부에 직거래장터를 설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한 명절 등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지역별로 임시장터를 열어 농산물 공급망을 늘리고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이외에도 생산자단체와 소비기업체 간의 직접 거래를 확대하여 대규모로 직거래의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소비기업체·식품·외식업체에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 산지가 협력관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내에 농식품 사이버거래소(現 농수산물식품거래소)를 설치하여 온라인상으로 판매조직과 구매조직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정산소를 갖추어 대금결제 등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는 3조 1,467억원으로 성장하여 농수산물 분야 B2B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직거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5년 6월 22일 제정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2013년 32개소에 불과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1년에는 778개소까지 증가하였고, 소비자 고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매출액 또한 2013년 317억원에서 2021년 8,970억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9만 5천여명의 중소농과 고령농 등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월급받는 농업인이 되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군(軍)·학교급식 중심으로 로컬푸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농협,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운영하였다. 로컬푸드 공급 확대 TF 운영(군, 공공기관)으로 로컬푸드 공급 비중을 점검·관리하고, 농협이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지역 농산물까지 우선 공급하도록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사용 비중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2018년 24.3%에서 2021년 38.8%, 군 급식은 27.4%에서 44.0%, 학교급식은 2019년 47.3%에서 2021년 56.6%까지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생산자 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농수산물식품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공공급식 확대 등 온라인을 활용한 B2B 직거래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먹거리교육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단순 지역농산물 판매처에서 나아가 도농상생·교류의 공간 및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확산의 중요한 공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 유통정책과 사무관 광범배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의 공영도매시장(청과부류)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을 통해 농산물의 수집, 분산 등 도매유통이 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유통단계의 축소, 출하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농안법을 개정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현재 60개의 시장도매인을 운영 중에 있다.

최근 산지유통센터의 등장과 출하자 규모화, 대형유통업체·종합유통센터의 등장, 저온저장 및 콜드시스템의 발달 등 농수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시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유휴공간과 물류시설 부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신속한 공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자 낙후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여 물류와 유통을 개선하고, 도매시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출하농산물의 안전성 문제, 물류 효율화 등)을 개선하고 공정성·투명성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에서 나아가 거래 안정성·유통 효율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1〉 연도별 공영도매시장 거래실적(청과부류)

(단위: 만톤, 조원)

구 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물량	659	623	650	722	703	684	666
금액	7.3	9.6	10.6	10.1	11.8	11.7	1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 추진내용 및 성과

▶ 시설현대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고품질·신선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물류·경매장 구조개선, 저온저장 시설, 가공·포장 등 상품화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9년 공영도매시장(32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노후화가 심하고, 유통물량 과다로 시설이 부족한 공영도매시장(서울가락시장, 대전오정시장, 충남천안시장, 경기수원시장, 대구북부시장, 경북안동시장, 충북청주시장)을 선정하여 국고보조 30%(청주 20%), 국고용자 40%,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오정도매시장은 '09년에서 '13년까지 연면적 42,933㎡ 3층의 규모로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였고, 충남천안도매시장은 '12년에서 '16년까지 연면적 30,456㎡,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사업을 실시하였다. 서울가락도매시장의 경우, '09년에서 '31년까지 연면적 513,159㎡,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도·소매권역을 분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수원도매시장은 '17년에서 '22년까지 연면적 49,828㎡,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경북안동도매시장은 '18년부터 '23년까지 연면적 28,931㎡,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대구북부시장은 '20~'23년, 충북청주시장은 '21~'25년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통, 건축,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정비위원회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하고, 사업 집행점검 등을 통해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및 유통효율화 기반 확충을 위한 기반을 충실히 구축하였다.

▶ 운영효율화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개설자(지방자치단체),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관계자 등 도매시장 유통인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및 도매시장 평가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매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매제도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 및 비상장품목 거래안전성 제고를 위해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고,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12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시장이 투명성·공정성 중심에서 효율성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정가·수의매매 확대,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통한 규제완화로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발전협의회 구성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정가·수의매매 예약 거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도매시장 물류 효율화를 위해 최소출하단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과징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고 경매사 행정처분 사유 구체화, 과밀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유통종사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과징금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 다양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거래 안정성이 낮은 가락시장의 비상장 품목에 대해 대금정산조직을 설립하여 정산조직을 통한 대금 결제 실시로 출하자를 보호하기도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규제완화를 통한 도매시장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및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대금정산조직 설립·자금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 및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촉진, 상품분리 거래제도(농산물 온라인 경매) 마련, 정가·수의매매 추진 등 유통 및 물류효율화를 위한 각종 대책 및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업관측정보 활용 강화

■ 원예산업과 사무관 남기현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관측사업은 1999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센터(현 농업관측본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동 센터를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고, 2007년 1월 3일, 동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농업관측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사업은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재배(의향), 작황, 생산, 출하, 재고, 수출입 등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측·분석하여, 품목별 수급과 가격 동향 및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생산계획 단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영농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농축산물 유통·가공업 종사자 및 소비자에게는 종합적인 수급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농산물 거래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99년 9개 품목 관측으로 시작한 농업관측사업은 이후 지속적인 관측수요 증대에 따라 관측 대상 품목이 점차 확대되어 2020년 총 35개 품목 관측을 실시하였다. 2021년에는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 파프리카를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류별로는 채소 9개, 과일 6개, 과채 8개, 축산물 6개, 국내곡물 3개, 국제곡물 4개 품목이다.

동 사업은 신뢰도 높은 분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지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체계화된 표본추출 방식을 바탕으로 품목별 표본농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조사를 통해 면적, 생육, 생산량, 출하 계획 정보 등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업관측 고도화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실측 조사체계를 도입하여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생육, 생산량 실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화조사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 체계 운영으로 관측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급변하는 해외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국제곡물 관측모형 개발 및 관측정보를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곡물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관측본부는 매년 주요 농축산물의 단기,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예측정보를 사전 제공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관측사업 운영체계를 정비 보완하여 왔다.

2021년 단기관측 월보는 총 67회 발행하였으며, 농업·농촌경제동향(계간지)를 4회 발표하여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농업관측 속보는 17회를 발행하여 주요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정포커스 및 현안분석을 발표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측조사 도입 이후 마늘, 양파, 건고추, 배추, 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생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총 31회 제공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표 2-2-2〉 2021년 주요 농축산물 부류별 관측정보 발표시기

구 분		발표시기
채소 (9개)	엽근채소(4개)	매월(1~2월 제외)
	배추·무·당근·양배추	매월(1~2월 제외)
	양념채소(4개)	매월(1~2월 제외)
	버섯(1개)	9, 11월
과일 (6개)	사과·배·포도·감귤	매월(1~4월 제외)
	복숭아	5, 6, 7, 8, 9, 12월
	단감	6, 8, 9, 10, 11, 12월
과채 (8개)	오이·애호박·토마토·꽃고추·수박·파프리카	매월(1~2월 제외)
	참외	3, 4, 5, 6, 7, 8, 12월
	딸기	3, 4, 5, 8, 9, 10, 11, 12월
축산 (6개)	한육우·돼지·육계	매월(1월 제외)
	젖소	2, 5, 8, 11월
	산란계	2, 3, 5, 7, 8, 9, 10, 11월
	오리	2, 5, 6, 8, 10, 11월
곡물 (3개)	쌀	3, 5, 9, 10, 11월
	콩	3, 5, 10, 11월
	감자	매월(1월, 12월 제외)
국제곡물 (4개)	밀·옥수수·대두·국제쌀	매월(1월, 12월 제외)

매년 초(1월말)에는 농업전망대회 개최를 통해 농업인, 관련단체, 학계, 관련 유통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 1월, 24회를 맞은 농업전망대회에는 농업인, 정책담당자, 학계,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등이 참석하였다. 농업전망대회에서는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전망, 품목별 수급동향 및 전망, 주요 정책이슈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품목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집중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2016년부터 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시작된 농업관측 고도화사업은 2021년에도 실측조사 정교화, 관측모형 개선,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및 확산체계 개선, 관측정보 수집체계 개선 등의 주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관측정보 수집 체계 개선을 위해 2020년 도입한 실측조사 사업은 2년차를 맞이하면서 운영 체계 및 조사 방식 등 전반적인 정교화를 추진하였다.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표본농가 5,027호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생육, 생산량 실측 조사를 실시하여 산지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실측조사의 일환으로 항공촬영 방식을 활용한 재배 및 출하면적 조사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 주산지 100여개 읍면을 대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전체 농경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그동안 마늘, 양파와 같이 개체가 작은 품목에 대한 촬영이 어려웠으나, 관측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촬영 및 식별 방법 검토를 통해 재배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배추는 출하율, 잔여면적 분석 등이 가능하여 수급 분석 시 활용도가 높았다.

그리고 품목별 농산물의 중장기 수급 및 가격 전망과 농업총량지표인 농업생산액, 부가가치, 경지면적(논, 밭), 전체 재배면적 및 사육마릿수, 무역수지, 농가인구의 전망치와 농가경제지표인 농업구입가격지수, 판매가격지수, 교역조건지수, 농가소득(농업소득, 비농업소득, 이전소득 등), 경영비의 전망치를 산출하는 KREI-KASMO 모형을 매년 개선 및 보완하였다. 2021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021년 농업경영체 D/B 최신화를 통한 표본설계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신규 표본농가 위촉, 적정 표본규모를 유지하도록 운영하였다. 실측조사 결과 2년차 데이터 수집에 따라 구중 추정 모형을 개선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였다.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관측정보와 농업인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관측정보를 확산시켰으며, 블로그 기자단, 카카오톡스토리 운영을 통해 관측정보에 대한 설명 및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관측정보 수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고도화를 추진하여 관측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2020년까지 이용하던 구형 출하 관측용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하여 효율적으로 고랭지배추 출하 물동량을 파악하여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마늘, 양파 생육(단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해 생육 조사구역 28개소를 대상으로 토양 수분, 기상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수집 기간을 늘려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급이 크게 변동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관측

산지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재배면적, 작황, 생산, 출하 동향의 정보를 상시 수집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랭지배추는 전작형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기존 산지기동반은 산지조사팀으로 격상시켜 전문적인 산지 조사인력을 양성하고 정확한 실측 조사를 위한 전문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생육 조사구역 700개소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 2주 단위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선제적 수급 대책 시행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매년 농업관측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관측정보를 제공받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농업관측 수요자 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평가 결과, 성과지표인 이용률은 93.6%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83.3%, 만족도 83.8%, 도움도 75.8%, 정보 이해 용이도 77.2% 등 다양한 지표들도 70%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정보 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측 정보인 농업관측정보와 통계청 농업통계(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발표시기 간극 등으로 관측 전망치와 통계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보간 격차는 불필요한 혼선과 사회적 비용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에는 농업관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마늘·양파 생육 실측조사 표본필지(26개소)를 대상으로 기상·토양 데이터 실시간 계측장비 설치하고, 품목별 관측 세부 매뉴얼 작성 및 관측 프로세스 진단평가를 통해 농업관측 품질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공공비축 제도 운영

■ 식량정책과 사무관 임연화

◆ 추진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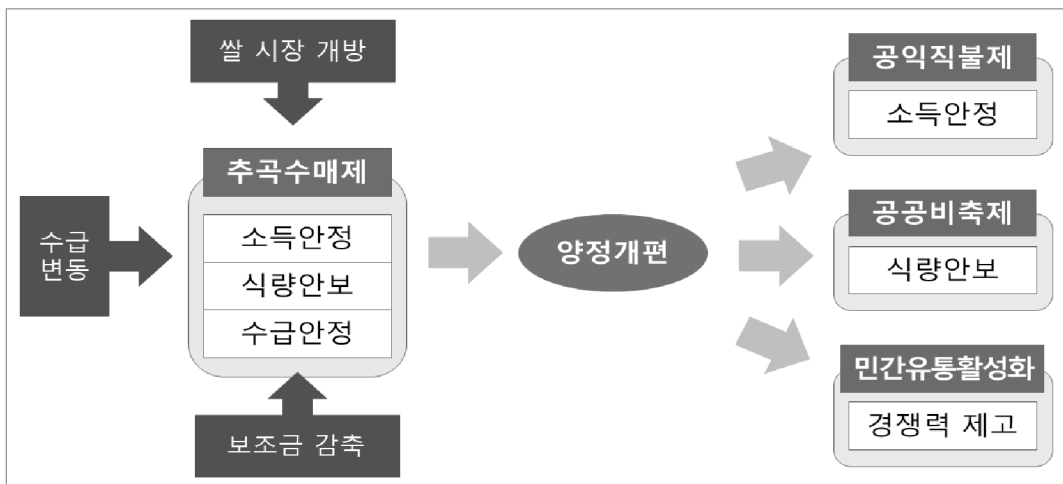
쌀이 부족한 '90년대까지는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 기능과 물량흡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값은 정부 개입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그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문제는 재정지원(직불금)으로 보전한다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표 2-2-3〉 추곡수매와 공공비축 비교

구 분	추곡수매제	공공비축제
매입 목적	①농가소득안정, ②쌀수급조절, ③안보용 비축	①안보용 비축
매입 물량	• 국회동의	• 국무회의 의결
매입 가격	• 행정가격(생산비 감안)	• 시장가격(통계청 조사가격)

〈그림 2-2-1〉 양곡관리 시스템



그에 따라, 현행 쌀 정책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를 통한 소득안정, 시가 매입·판매방식의 공공비축제 운영을 통한 식량안보 달성, 민간유통 기능 활성화와 쌀 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품질 고급화·브랜드화 및 친환경농업 육성 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 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며, 비축물량은 FAO 권고량(연간 소비량의 17%)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간 매입물량은 비축물량의 1/2수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표 2-2-4〉 양곡연도말 공공비축미곡 재고량 목표 및 매입물량

○ '05~'07년(1차) : 864천톤('05년 576천톤, '06년 504, '07년 432)
○ '08~'10년(2차) : 720천톤('08년 400천톤, '09년 370, '10년 340)
○ '11~'13년(3차) : 720천톤('11년 340천톤, '12년 370, '13년 370)
○ '14년~ : 재고는 총 쌀 소비량의 17~18% 수준('14년 370천톤, '15년 360, '16년 360, '17~'21년 340)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흉수출하물량 흡수를 고려하여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 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 고급화를 추진해 가고 있다.

또한,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여 아시아 국가간 식량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는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1년 9월에 제4차 협정문이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최종 타결되어 제11차 AMAF+3 농림장관회의(2011.10.7., 인도네시아)에서 협정문이 승인되었고, '12.6.12. 협정발효요건이 성립되어 '12.7.12.부터 발효되었으며, '13.6.25. 국회비준 동의에 따라 '14년부터 APTERR용 쌀을 매입('14~'16년 3만톤, '17년~ 1만톤)하였다.

〈표 2-2-5〉 국가별 쌀 약정 현황

구 분	한 국	중 국	일 본	아 세 안	합 계
약정물량(천톤)	150	300	250	87	787

공공비축제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적정 재고(쌀 소비량의 17~18%)를 확보할 뿐 아니라, '13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이외 밀, 콩에 대해서도 공공비축을 시행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쌀값, 농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21년 벼 재배 면적은 732천ha로 증가하여 쌀 생산량은 388만 톤이었다. 벼 재배 면적은 '0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중에 처음으로 면적이 증가했고,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곡물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잦은 기상이변으로 곡물 생산량 변동이 커지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일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인한 '20년 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정부는 '21년에 정부관리양곡 31만 톤을 공급했다. 공공비축제는 이러한 불안정한 식량 수급 여건 속에서 식량 무기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향후 공공비축제의 운영 내실화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정부양곡 관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APTERR용 약정물량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약정 물량의 일부를 매년 별도 비축할 계획이다.

2. 쌀 적정생산

■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 추진 배경 및 개요

지난 3년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 쌀 생산 감축 노력으로 벼 재배면적('18년 738천ha → '19년 729 → '20년 726)과 쌀 생산량('18년 387만톤 → '19년 374 → '20년 351)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또한 '90년 이후 매년 2% 내외로 지속 감소('18년 61.8 → '19년 59.2)하였다. '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목표는 초과 달성과 54일간의 긴 장마와 3번

의 태풍으로 쌀 생산량은 당초 목표인 3,680천톤보다 173천톤이 부족한 3,507천톤이었다. '21년은 쌀 값 상승과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종료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1년은 쌀값 상승과 전년 큰 폭의 생산량 감소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종료하였고, 이에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21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쌀 과잉 생산에 대비하였다.

농식품부는 식량산업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쌀 적정생산 상황실을 설치하여 농진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가뭄·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 시 '재해대책 상황실'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관표창 및 시상금을 수여하고, 적극적으로 적정생산운동 시책을 추진한 유공자를 선발 포상하였다.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이 중단에도 쌀 적정생산 추진을 위해 논타작물재배지원 예산 10,006백 만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시설·장비, 종자대 지원 등을 위한 간접지원 예산도 편성하여 소득차 보전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 효율적인 논 타작물 전환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목표면적을 설정하고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였다. 그 결과 '21년 국고 지원 없이 일부 지자체 예산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추진으로 10천ha를 논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지자체의 전환 성과는 공공비축미 매입,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되었다.

* '21년 지자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실적(10,018ha) : 전북 4,513, 경남 1,581, 전남 1,473, 충남 1,070, 충북 531, 경북 381, 기타 469

또한 식량산업과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쌀 중심 지원에서 타작물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고 교육·컨설팅(농가 조직화), 시설·장비(공동영농), 사업다각화(유통·가공 확대) 지원 시 타작물 재배의무 면적을 부과하였다. 또한 논타작물 배수개선 사업과 논콩단지 배수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논콩단지 생산기반 지원도 강화하였으며, 조사료 재배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기계장비 지원, '20년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침수피해 지역 중심으로 배수로 우선 정비, 논콩 재배단지 지역 중심으로 규모화와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과 과정 등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농가 홍보를 위해 리플릿 배부, 마을 홍보 방송, 사업 추진상황 및 이행점검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로 면밀하게 타작물 재배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지역특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유형별 작부체계를 개발·보급에 주력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21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된 결과 벼 재배면적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종료로 증가가 예상됐던 면적보다 적은 5천ha로 최소화하였고 이는 국고 지원 없이 일부 지자체 예산 및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어 쌀 적정생산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쌀 적정생산 대책'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 소비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콩·가루쌀 중심의 타작물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 사업이 2023년 추진된다. 앞으로 전략작물직불 운영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내실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대체작물의 수급 불안 방지를 위해 품목별 집중 여부를 고려하며, 종자 확보,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발식량작물 안정생산

■ 식량산업과 서기관 평가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발식량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경제성장으로 식용, 사료용 등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의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품목별로 보리, 밀, 옥수수, 콩의 경우 각각 33.3%, 1.1%, 4.2%, 23.7%로 미국 120.6%, 캐나다 176.6%, 호주 186.4%, 중국 95.9%, 일본 26.3% 등 선진국(2017/18~2019/20 기준, KREI)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듯 발 식량작물 생산이 저조한 원인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0.62ha로 과수 0.93ha, 노지채소 0.88ha 등 타 작물에 비해 적고(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소득 또한 밀 58천원/10a, 쌀보리 189천원/10a, 콩 512천원/10a, 봄감자 854천원/10a 등으로 쌀 732천원/10a, 마늘 1,953천원/10a, 양파 2,479천원/10a 등 타 작물 대비 높지 않기(2020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때문이다.

특히,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2010년 46.4%에서 2019년 62.0%까지 증가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 생산 및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 등에 밀리는 등 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경지 이용률은 2020년 107.0% 수준으로 활용도 제고 등의 여지가 높은 상황으로, 향후 발식량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서는 발식량작물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발식량작물의 생산·유통체계 구축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작물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 맥류건조·저장시설 및 콩 유통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비축사업 및 수매자금 지원,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 직불제 운용, 쌀 기반정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재해 보험제도 운용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식생활 서구화, 소비 품목 다양화 등으로 안정적인 소비 추세를 보이는 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국산 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 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밀 산업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20.2월)되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밀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인 '제1차(21~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1월)'을 수립하였다. 이에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추진 방향에 ①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②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③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대, ④현장문제 해결형 R&D전환, ⑤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1년에는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1년차 시행을 위해 '제1차 밀 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21.1월)·시행하였다. 먼저, 밀 생산단지를 선정(20년 39개소 → '21년 51개소),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정부보급종을 50% 할인 공급하고, 국산밀 재배매뉴얼 제작·보급하였다. 생산·유통 중 품질관리를 위해 건조·저장시설(2개소), 시설·장비(2개소) 지원을 신규 도입·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해 국산밀 계약재배지원 사업을 도입, 계약재배 물량 4천톤을 무이자 지원(38억원)하였고, 국산밀 가격안정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해 8,401톤을 정부비축하였다. 아울러, 다른 동계작물에 비해 수확이 늦어 이모작 작부체계 구성에 애로가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부체계 구축 R&D를 추진하고, 국산밀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산밀 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밭식량작물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자급률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은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나 대상도 타 지원사업에 비해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밭식량작물 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 지자체, 가공업계, 소비자, 연구기관 등 모든 기관의 힘을 합쳐 위기의 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밀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제1차 밀산업육성 시행계획 이행 등으로 국산밀 재배면적은 '20년 5,224ha에서 '21년 6,224ha로 19% 증가하였다.

앞으로 국산 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산 밀 생산단지 규모화, 품질관리체계 마련 등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수요 발굴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산지 권역별 파종·재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재배 안내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밀 생산 규모화를 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밀 품질 균일성 제고를 위해 재배·수확 시 필요한 밀 전용 시설·장비 지원 및 비축·유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가공·유통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 가공업체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밀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방목생태축산의 활성화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동언

◆ 추진 배경 및 개요

그동안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 전업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부적절한 분뇨처리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 질병 문제 등을 유발시키고, 민가와 가까운 농장은 악취에 의한 민원이 빈발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영의 불안정성도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2-6〉 축산비 중 사료비 비중(2021)

구 분	한우비육우	한우번식우	육우	젖소	비육돈
사료비 비중(%)	35.1	47.6	52.3	55.2	56.4

이러한 국내 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목생태축산(구: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정책을 2013년 도입하였으며, 방목생태축산은 국토면적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산지(2020년 국토면적의 63.3%)를 활용하여 사료의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고, 관광과 체험을 연계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조성사업(2014~2016)을 거쳐 2017년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국 33개소의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였고, 2018년에는 39개소(누계)의 농장을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패키지(초지조성,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조성, 축사시설현대화 등)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누계 40개소를 유지하다가 2021년 사업대상 토지를 산지에서 농지 및 기타토지까지 확대하기 위해 방목생태축산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7개 농장을 추가 지정하고 3개 농장을 제외하여 누계 44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유지하였다.

〈표 2-2-7〉 방목생태축산농장 현황(2021)

지역별	합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44	1	12	7	3	2	3	6	9	1
주요 축종	-	한우, 산양	젓소, 한우, 염소, 닭 등	젓소, 한우, 염소, 닭 등	젓소, 한우, 유산양	젓소, 한우	젓소, 한우, 염소	한우, 염소, 유산양 등	염소, 한우, 닭	한우

또한,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단(2017년 25명, 2018~2019년 22명, 2020~2021년 21명)을 구성, 자문단 회의, 신규농장 지정 심사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목생태축산 정책을 지원하였다.

〈표 2-2-8〉 방목생태축산 자문단 구성 현황(2021)

계	공공기관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축산농가	기타
21	6	1	6	6	1	1

방목생태축산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컨설팅과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컨설팅으로는 방목생태축산 자문단이 신규 방목생태축산 지정농장 등의 산지초지 조성, 축종별 사양관리, 6차 산업 등 기본사항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자문단 컨설팅과 컨설팅 용역업체가 방목생태축산 지정목장의 경쟁력을 진단·분석하여

농장 운영 기술 등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Biz-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목생태축산 홈페이지(<http://eco-pasture.kr>)를 새롭게 구축하여 그동안의 홍보자료를 공유하고, 농장별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농장 및 생산 제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아울러 방목생태축산 길라잡이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귀농인 등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축산 교육·홍보사업과 연계하여 방목생태축산의 인지도 확대와 지정농장 제품의 판로를 넓히는 등 폭넓은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방목생태축산 활성화 정책은 유휴 산지를 활용하여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을 경영하고 조사로 자급률을 높임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관보전은 물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에는 기존의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지정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여 방목생태축산을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매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사업명을 ‘방목생태축산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초지조성 최소면적을 3ha에서 1ha로 완화하였고, 사업 대상 토지를 유휴 산지뿐만 아니라 농지, 기타 토지로 확대하여 진입할 수 있게 하면서 대상축종의 제한을 없애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에는 초지 조성 지원에 집중하여 지원 면적과 단가의 상향을 추진하고, 초지 면적 확대를 통해 환경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을 사육 중인 영세 농가가 사업참여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는 등 사업 참여 가능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도시농업 활성화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이진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문화, 예술, 스포츠 등과 함께 취미·여가 활동으로서 농사체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농업은 이러한 대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서순화, 지역공동체 회복, 대기·수질정화 등 다양한 순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도시농업이 전 국민의 90%가 넘는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기반 조성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표 2-2-9〉 연도별 도시농업 현황

구 분	2011	2019	2020 (A)	2021 (B)	2020대비	
					증감	증감률(%)
참여자수(천명)	378	2,418	1,848	1,741	△107	△5.8
텃밭 면적(ha)	486	1,323	1,060	1,013	△47	△4.4
1인당 면적	12.8	5.4	5.7	5.8	0.1	1.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 현황조사

◆ 추진 성과

일부 도시민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시작된 도시농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한 이래, 지자체에서도 2021년 기준 131개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농업 관련 해설·지도·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고, 202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7,760명을 배출하였다. 체계적인 도시농업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농업 종합상담센터(1855-1411)를 2018년 6월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도시농업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 개발, 지속가능한 생태형 텃밭 관리기술 개발 등 생활밀착형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아울러 교육부와 협업하여 중학교 자유학년 교과과정으로 학교텃밭 활동 프로그램을 2019년 30개교에서 2021년 70개교로 확대·운영하였으며, 도시농업관리사를 학교에 파견하여 텃밭관리의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적 안정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국회텃밭 운영으로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려 전방위적인 실천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도시민들이 텃밭분양, 병충해, 농자재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얻을 수 있도록 2015년도에 구축한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지속 개편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일자리 채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378천명, 486ha에서 2019년 2,418천명, 1,323ha로 확대되는 등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야외 텃밭활동이 제한되어 2021년도는 참여자 수와 텃밭면적이 1,741천명, 1,013h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실내 농작물 재배 온라인 정보량 분석 결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1.12월), 베란다 텃밭 언급량이 2019년도 21,282건에서 2021년 53,313건으로, 식물 재배기 언급량은 2019년 4,103건에서 2021년 9,766건으로 각각 151%, 1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은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도·농상생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정부·지자체의 제도마련 및 도시농업단체가 주도한 시민운동 등의 성과물로서 학교텃밭, 주말농장 등 체험공간이 확대되었고, 농업인단체가 가지고 있던 도시농업과 일반농업의 생산 활동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단순 텃밭활동만으로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강·교육·환경·복지 등 새로운 영역과 도시농업을 결합한 신서비스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홍보 인프라 확충, 개발된 연구성과 보급 및 실천모델 확산, 도·농상생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은 향후 도시농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의 제1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성적을 점검·평가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는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도농상생사업기반 구축 및 타분야와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22년까지 도시텃밭면적 2,000ha, 도시농업 참여자 수 4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관련 R&D성적을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여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육성하고, 도시농업 일자리 채용안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여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도농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도시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농상생사업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Ⅲ.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제3장 핵심 인력 양성 및 전문경영체 육성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준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된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981년도부터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후계농업 경영인에게는 경영·기술교육 등을 통해 영농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규모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영농창업과 조기 경영안정화를 통한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 영농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군·구 및 시·도의 「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농정심의회)」 심사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쳐 선정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2021년도에는 1,000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성이 818명(81.8%), 여성이 182명(18.2%)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1명(36.1%), 30대가 255명(25.5%), 40대가 284명(38.4%)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190명, 전북 148명, 전남 144명, 경기 121명 등의 순이다.

〈표 2-3-1〉 2021년 지역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1,000명	121	52	48	107	148	144	190	110	44	36
100%	14.2	5.4	5.1	11.4	15.2	13.0	18.4	10.3	3.3	3.7

또한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비율이 0.7%(18. 농림어업조사 결과) 밖에 되지 않아 2018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를 개편하여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6,600명('18년 1,600명, '19년 1,600명, '20년 1,600명, '21년 1,800명)을 선발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div>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연령)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div> 후계농업경영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계농육성자금 지원 ◆ 후계농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창업농: 농지, 자금(후계농자금 등), 교육 패키지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정착지원금 + 농지 + 자금 + 교육 ◆ 후계농은 기존 대로 후계농 육성자금 등 지원

이들에게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창업 활성화 및 조기 경영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표 2-3-2〉 2021년 지역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1,800명	166	112	101	192	294	282	304	195	71	83
100%	9.2	6.2	5.6	10.7	16.3	15.7	16.9	10.8	4.0	4.6

▶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후 5년 이상 된 사람 중 영농경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 까지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2021년에는 경영 성과, 발전가능성, 생산기술 등을 평가하여 286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1981년부터 2021년까지 15만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확보되었으며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영농의지를 갖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농지·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농업·농촌에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영농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경영체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법인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왕희대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자 '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농업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농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해왔다.

자금 및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관련 규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경영효율화를 추구하는 한편,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특히,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이 기업적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책임범위를 무한책임에서 유한책임으로 전환하였으며, 합명·합자회사 형태뿐 아니라 유한·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농업분야의 농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2012년에는 총 출자액이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억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부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까지 확대함으로써 6차산업 활성화 주체로서 농업법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편, 농업법인이 설립·변경 등기 후 해당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설립요건이 미비하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조항을 신설(15.1.6.)하는 등 관리 측면도 강화 보완하였다. 또한,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해 사전신고제 도입, 실태조사 활용자료 확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21.8.17.)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법인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처음 2016년도 실시 후, 2019년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요건 미비, 사업범위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업법인 대상으로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주체로 육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업법인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 등 정책 기초자료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년 생산 하였던 농업법인 통계조사 업무를 2016년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관 받아 금년도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은 2000년 5,208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24,499개이며 그 중 영농조합법인은 10,136개, 농업회사법인은 14,363개로 조사되었다. 농업법인 종사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9명으로 나타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3-3〉 농업법인 연차별 운영 추이

(단위 : 개)

구 분	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업법인 수	5,208	10,867	12,981	14,552	16,482	18,757	19,413	21,659	21,780	23,315	24,499
영농조합법인	3,852	8,724	10,023	10,792	11,599	12,979	12,768	13,363	10,163	10,230	10,136
농업회사법인	1,356	2,143	2,958	3,760	4,883	5,778	6,645	8,296	11,317	13,085	14,363

자료 : 통계청('00-'14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15-'20년 기준 농업법인 조사 보고서, 단 '18년기준 조사모집단 기준 변경)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명, 상시종사자 4인 이하 법인은 전체의 70% 수준이며, 주된 사업유형으로는 농업생산을 하는 농업법인이 34.6%, 유통업 31.0%, 가공업 20.8%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당 평균 매출액은 평균 17.5억원이고,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46.1%, 가공업 27.7%, 농업생산 21.4%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편, 법인당 자산은 16.3억 원, 부채는 10.6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86.5%로 나타났다.

〈표 2-3-4〉 농업법인당 주요 경영지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유 형	2019년	2020년
전 체	결산 법인수	22,147	24,499
	자산	1,641	1,628
	부채	1,060	1,060
	매출액	1,789	1,746
	영업이익	22	32
영농조합 법 인	결산 법인수	9,714	10,136
	자산	1,128	1,181
	부채	650	713
	매출액	1,163	1,175
	영업이익	14	20
농업회사 법 인	결산 법인수	12,433	14,363
	자산	2,041	1,944
	부채	1,380	1,304
	매출액	2,278	2,150
	영업이익	28	4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보고서)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및 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해 농업법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농업·농촌 중소기업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6차산업화를 이끄는 핵심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창업·투자유치 활성화, 전문화된 경영 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경영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법한 농업법인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농업법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3. 농업 교육 추진체계 효율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김성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FTA, 고령화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선진국 수준의 농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창조적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농촌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미래 후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계 학교 학생, 후계농 등을 대상으로 농산업현장과 연계한 실용중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추진 성과

신규 미래인력 확보를 위한 농고, 농대의 전문 교육을 지원 중으로, 지원학교는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였다. 농고는 15개교를 지원하였는데,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산업과 연계하여 취·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습/현장실습, 전공별 창업동아리,

교사 직무연수,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승계농/후계농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고생이 농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을 구체화하고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하는 취·창업 캠프 운영, 선도농업인과의 소통 등 대면·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업계 대학은 15개교를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체 현장실습교육, 전공별 창업동아리,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영농승계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농대 융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계 산학협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농고·농대 재학생 대상 취업 매칭, 현장실습처 및 전문강사 발굴, 산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였다. 아울러, 실습 위주의 교육, 최신 기술 습득을 위해 농고·농대에 실습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12년 부터는 자영농고와 마이스티고 등 농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19년 부터는 농업계 대학까지 확대하여 '21년 기준으로 농고 35개교, 농대 15개교를 포함하여 누적 50개교를 지원하였다.

'21년도에는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및 귀농인 등이 영농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선진영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실습교육 교육과정 인증 심사를 통해 실습장별 표준교육과정(356개 과정)을 마련하였으며, 2040세대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을 중급에서 고급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컨설팅, 학습조직, 전문가 초청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농업마이스터대학은 현장중심의 실습형 기술·경영 장기교육과정(2년)으로 '21년도부터 제7기가 운영되었다. 제7기('21년~'22년)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전국 9개 대학, 31개 캠퍼스 100개 품목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교육생들이 고급기술, 지식 및 경영능력을 갖춘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정목표에 부합하고 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모교육을 진행하였다. 공모 교육은 여성농업인, 사회적 경제, 농업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교육과정을 지원하였다.

'21년에는 농업인들이 선진국 기술 수준의 첨단농업시설 운영능력 배양을 할 수 있도록 ICT 첨단 기술을 적용한 품목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15년 토마토를 시작으로, '16년에는 딸기, 양돈, 버섯 등 3개 품목, '17년은 장미, 파프리카, 낙농, '19년은 오이를 추가하여 총 7개 품목, '20년에는 교육 수요가 높은 토마토, 딸기, 양돈, 버섯 4개 품목, '21년에는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토마토, 딸기, 버섯 외에도 파프리카와 포도를 추가하여 선진국 수준의 농업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 인력들을 양성하였다.

'21년도 농업마이스터대학, 영농창업특성화사업, 농업계학교 교육지원 등 3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 전·후 역량진단, 교육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040세대 스텝업 기술교육, 공모과정, 현장실습교육, 첨단품목특화전문교육, 첨단기술공동실습교육 등 5개 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의 교육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고의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보유하고, 농업·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발굴하고자 '12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3년 제1회 농업마이스터 102명, '15년 제2회 45명, '17년 제3회 33명, '19년 제4회 44명의 농업마이스터가 신규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농업마이스터들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업인력에 대한 멘토, 컨설턴트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 등 사후관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계 학교지원,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교육과정 등의 농업교육은 농업·농촌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전문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등의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고·농대에 영농실습 및 기술교육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농고교사의 교육역량과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직무학점 연계과정을 지속 운영하며, 현장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 교육과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농정현안 및 농정수요에 대응하여 현장 중심의 농업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끌어갈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4. 농업경영체 컨설팅 활성화

■ 경영인력과 사무관 왕희대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확대개방으로 인한 다양한 농축산물의 유입, 친환경농산물 선호 등 소비성향의 변화, 농업의 6차 산업화 등과 같은 국내외 농업환경의 다변화로 농업경영체는 단순한 생산기술력 외 경영역량의 향상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생산 중심의 기술지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농업경영체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경영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를 활용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인증 받은 농업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기술 또는 경영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관주도의 기술지도와는 달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경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업경영컨설팅 평가점검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지정하고 컨설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 및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즉, 컨설팅 성과에 대한 저해 요소와 부실컨설팅 방지를 위해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에 대한 인증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컨설턴트 1인당 사업량의 제한, 컨설팅 수행단계(계획, 중간, 완료)별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점검하고 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심사를 통한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인증기준 준수 및 부합을 확인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경영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인증업체 Pool을 구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법인 선정 시 서면평가에서 현장평가로 대폭 강화하여 우수경영체 확보에 주력하였고, 경영체의 사전·사후혁신역량진단을 컨설팅업체를 통해 실시하여 컨설팅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자부담을 2회까지 분할납부 하도록 하여 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농업경영체의 컨설팅 전·후 혁신역량진단 및 수행계획평가를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다. 2021년에는 실시간 이행점검·만족도 조사를 도입하여 현장의견수렴 강화를 통한 사업내실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컨설팅 수행단계별 평가점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평가점검단을 통해 컨설팅 핵심성과지표(KPI) 설정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등 '21년도 지원대상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사·승인하였으며, 사업 완료 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 여부 및 사업성과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사업 성과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표 2-3-5〉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황

연도	199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량(개소)	156	994	934	649	578	267	261	204	184	152	137	104	115
사업비(백만원)	1,197	10,080	9,720	5,200	5,200	5,200	4,800	3,840	3,840	3,440	3,440	2,613	2,671
국고	357	4,888	2,916	1,560	1,560	1,560	1,440	1,152	1,152	1,032	1,032	960	9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컨설팅 인프라 구축·강화

양질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컨설팅업체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1년 총 14개 컨설팅업체를 추가하여 총 37개의 인증업체로 지정 및 운영하였다. 또한 농산업 분야의 컨설턴트 Pool을 확대하고자 컨설턴트 등록 심사를 실시하고 컨설턴트별 역량검증을 통해 수임 단가를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21년 기준 총 223명(신규118, 재심사105)의 컨설턴트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수임단가는 63만원이었다.

▶ 컨설팅 성과관리 및 확산

컨설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 및 검증의 일환으로 '21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일반컨설팅 지원경영체 81개 중 응답 회신이 완료된 경영체 56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의 추진단계별 만족도 및 컨설팅 전/후 경영성과(매출액, 소득 증가율, 부채 등)를 조사·분석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경영체 역량진단에 기반한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체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하였다. 2021년 평가점검단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컨설팅 전후 매출액이 평균 29.64% 증가하였으며, 수익(소득)은 24.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 노력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컨설팅업체 인증체계 고도화를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컨설팅업체(컨설턴트) 유입을 확대하고 컨설팅업체-경영체 매칭 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의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 등 컨설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5. 귀농·귀촌 활성화

◆ 추진배경 및 개요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농귀촌 잠재수요층이 확대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귀농귀촌 실행 전에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정보제공·임시주거·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신규 도입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올해 전국 88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서 운영하여 도시민 649가구가 참가하였으며,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

▶ 수요자 중심 귀농·귀촌 정보제공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 개편을 통해 시군별 정책·교육·일자리 등 지역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현지 주민에 의한 생생한 지역소개 콘텐츠를 담은 ‘동네작가’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에 한 해 동안 399만명이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여 방문객이 전년대비 100만명 증가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정보를 스스로 검색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지자체에서 맞춤형으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역정보 제공서비스를 지난 해 4개 시군에서 올해 89개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 농업분야 일자리 탐색·체험 과정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도시민들이 농업·농촌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농업일자리 탐색·체험 교육을 확대하였으며, 농협·농업마이스터대학, 서울농장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이 제공되었다.

특히, 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을 동시에 지원받길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2주 과정 운영규모를 확대('20: 600명 → '21: 1,200명)하였으며, 교육생의 준비단계·역량에 맞춰 참여할 수 있도록 2주차 체험 품목·농작업을 다양화하여 지원하였다.

▶ 지자체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

지자체 보조사업(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통합·개편하여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예산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지속적인 신규 참여 시·군이 증가('20년 77개 시·군 → '21, 89개)하고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도)의 관내 시군 유치지원사업 총괄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확대,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비대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대응하였으며, 귀농귀촌을 통한 지속적인 농촌인구 유입 및 농업분야 인력 수급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코로나19로 인한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는 증가하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실제 귀농귀촌 실행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구축, 지역 밀착형 체험 프로그램 확대, 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4장 농업의 성장동력 확충

제1절 농식품 혁신성장 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

1. ICT 융복합 촉진 및 확산

■ 농업정책과 사무관 권지은

◆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농업인구의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우리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농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팜은 온실·축사·노지 등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는 농장이다. 스마트팜에서는 작물별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 조절로 노동력, 양분 등을 적절히 투입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팜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스마트팜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4년부터 농업에 ICT를 융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왔다. 초기 시험모델 운영단계를 거쳐 2010년부터는 ICT 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인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추진 성과

농식품부는 2015년 1월부터 스마트팜 추진체계를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일원화하고 원예, 축산 등 관련부서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팜의 신속한 현장보급을 지원했다. 또한 2016년 3월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대책’과 2018년 4월 ‘스마트팜 확산방안’ 및 2021년 12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여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속화대책은 농업생산 전반의 스마트화를 목표로 4대 추진과제 및 17개 세부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확산방안은 3대 추진과제 및 8대 세부 실천과제, 확산 종합대책은 4대 방향 및 13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표 2-4-1〉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4대 추진과제	세부전략
농업혁신 거점으로서 스마트 팜 확대	① 스마트 팜 개념 재정립 및 외연 확대, ② 수출 거점이 되는 첨단농업단지 확충, ③ 소요 예산 확보 및 모태펀드 등 민간 자본 유치 촉진, ④ 스마트 팜 중심으로 유통·수출 지원
교육 및 농가 지원체계 강화	① 다양한 유형의 선도모델 발굴 및 전략적 홍보 ② 선도농가 생육관리 벤치마킹 서비스 제공 ③ A/S 지원 체계 다양화 ④ 농가 수준별 맞춤형 교육 체계화 ⑤ 현장 전문가 육성 등 스마트 팜 농가 밀착 지원 강화 ⑥ 농협을 통한 전문교육·홍보 강화, 중앙회 계통구매 실시
스마트 팜 산업 생태계 육성	① 한국형 모델 개발 및 기자재 표준화 ② 스마트 기기 제품 검정 및 품질보증제 도입 ③ 스마트 팜 기업의 정보·평판 공유 ④ 스마트 팜 해외 진출 기반 조성
R&D를 통한 스마트 팜 산업 성장 지원	① R&D 지원체계 정비 ② 스마트 기기 표준화 단계 고도화 ③ 스마트 팜 핵심기술 개발 연구센터(ARC) 지정

〈표 2-4-2〉 스마트 팜 확산방안

3대 추진과제	세부전략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①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 도입, ② 창업 자금과 농지 지원 및 실패에 대한 안전망 강화
스마트팜 산업인프라 구축	① 스마트팜 실증단지 구축 및 R&D 체계화 ②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화 및 기자재·통신 표준화 ③ 전문인력 양성 ④ 시장·품목 다변화
확산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계획 공모·선정 ②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 추진

〈표 2-4-3〉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

4대 정책방향	핵심 과제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①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관리 강화 ②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등 데이터 개방·공유 촉진 ③ 바우처,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데이터 활용 촉진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① 혁신밸리를 보육·실증데이터 거점으로 육성 ②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③ 노지 스마트농업 거점 구축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	①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② 「농업 +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③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④ 기술·장비, 인공지능 서비스 등 보급 ⑤ 전후방 산업 연계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① 스마트팜 수출거점 조성 등 패키지 수출 지원 ② 기술협력, ODA 등 스마트팜 국제 협력 강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전체 보급실적은 시설원예 6,540ha, 축산 4,743농가로 2020년 대비 각 1.1배, 1.4배 증가하였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개소(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4〉 스마트팜 연도별 보급실적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시설원예(ha, 누계)	405	769	1,912	4,010	4,900	5,383	5,985	6,540
축산(호, 누계)	23	181	430	801	1,425	2,390	3,463	4,743

스마트팜의 확산은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도입 성과의 영향이 크다. '21년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스마트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원예의 경우 스마트팜 도입 전 대비 평균 생산량은 33.7% 증가하였고, 자가노동시간은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을 통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균일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으로 규모 화나 지역 단위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어 농산물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및 수출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208명을 선발하여 경북, 전북, 경남, 전남에서 각 52명씩 입문교육(2개월) 과정 운영을 완료하고 교육형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 단계별(설치 전→설치→설치 후) 컨설팅을 함으로써

스마트팜이 효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도입희망 농가나 도입초기 농가들이 선도농가를 벤치마킹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도농가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도입 이후 활용단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A/S 등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지원센터(15개소)와 통합 콜센터(1522-2911)를 운영하고, 소통 채널인 불만제로 밴드(SNS)를 적극 활용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써 스마트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산업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중이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청년층의 농업분야 유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농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시설원에 중심의 스마트팜 보급·확산에서 노지, 축산 등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 스마트팜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을 위해 빅데이터센터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작목별 최적 생육 모델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 실증형 R&D 과제를 추진하는 등 스마트팜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며,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 범위 확대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농림축산식품 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박연주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농업은 FTA 확대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농식품 분야의 최근 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농림축산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글로벌화,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의 급속한 대내외 여건변화 속에서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 R&D의 중장기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한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0~2014)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제1차 종합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매년 추진실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는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개편을 위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2013~2022)’을 마련하고, 기존 산업 육성의 R&D투자 체계에서 정부 주요정책과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글로벌 경쟁력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와 ‘50대 핵심기술’로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부터는 7대 산업(생산시스템, 자원·환경·생태기반, 생산·가공, 유통·식품, 바이오, IBT 융합, 문화)육성의 R&D에서 농정목표와 R&D목표가 연계된 4대 중점분야로 추진전략을 전환하였다.

2019년도에는 농림식품 R&D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7대 농정과제’(농업의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시장개방 대응, 농생명자원 가치제고, 기후변화 대응, 현장문제 해결, 농촌 가치제고)에 대한 투자를 확대(‘18년 50.2%→’19년 52.0%)하였다. 또한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15~2019)’의 성과 및 투자동향 분석을 통해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개방형 협력연구 확대, 민간 농식품 R&D 촉진 및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등 향후 5년의 농식품분야 R&D 정책 추진방향과 중점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2021년 농식품분야 R&D에는 농촌진흥청 8,022억원(65.4%), 농식품부 2,757억원(22.4%), 산림청 1,493억원(12.2%) 등 총 12,273억원이 투자되어 국가 R&D 예산(27조 4,005억원)에 대한 농림식품 R&D(농진청·산림청 포함)의 비중은 약 4.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주요 5대 중점분야(ICT 융복합 스마트농업, 농생명바이오산업,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국민 삶의 질)에 6,957억원(55.7%)를 투자 지원하였다.

그간 농림식품 신소재개발·기후변화·고령화 이슈 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 R&D에 투자한 결과,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이 선정되었으며, 투자 지속 확대로 최고 기술 보유국과 기술격차가 축소(‘18:3.5년 → ‘20:3.1)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표 2-4-5〉 농림식품 R&D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농식품부·양청 R&D 예산(A)	9,500	9,824	9,930	10,770	12,273
국가연구개발비(B)	194,615	196,681	205,328	242,195	274,005
A/B(%)	4.9	5.0	4.8	4.4	4.5

◆ 추진 성과

▶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 고도화

농식품부는 2009년 4월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농식품 분야 R&D의 효율적인 총괄 조정·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예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있다. 2021년은 총 3번(제45차~제47차)의 본회의를 개최하였고, 2022년 농림식품 R&D 예산 투자방향(안),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 2021년 시행계획(안), 2022년 농림식품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안) 등 농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 및 이슈에 대한 농과위원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농과위 전문위(미래혁신, 농생명바이오, 스마트농업)를 활용하여 농식품 R&D 현안에 대한 기술자문과 미래농업을 위한 이슈 발굴 등 농업현장 문제 해결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농림식품산업의 과학기술적 논의의 장인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R&D 정책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미래 유망기술의 현황을 진단해 보고, 신규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회의 자리로서 4차 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및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세미나를 총 3회 개최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시도하여 농식품 R&D 현안 해결과 미래 대응 방안 마련에 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6〉 2021년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구분	주제
세미나	◆ 주제 : 데이터가 이끄는 농업의 미래(온라인) 1. 데이터농업의 현재와 우리 농업의 추진과제(충북대학교, 조완섭) 2. AI·빅데이터의 농·축산업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한국축산데이터, 경노겸) 3. 데이터농업 생태계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제(온톨로지센터, 김수경) 4. 데이터 기반 농업솔루션의 미래 전망(㈜그립랩스 신상훈)
	◆ 주제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온라인) 1.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의 과제와 기회(서울대학교, 김용환) 2.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부문 추진과제(영남대학교, 이상호) 3. 기후위기 시대의 축산업부문 추진과제(건국대학교, 이흥구) 4. 기후위기 시대의 농축산부문 탄소중립 대응 방안(서울대학교, 김창길)
	◆ 주제 :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 및 전망(온라인) 1.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 농업(연세대학교, 김지현) 2. 산업·반려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사례와 전망(서울대학교, 김영훈) 3.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사례를 통해 바라본 농식품 산업의 미래(엠디헬스케어, 김윤근)

▶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다부처 협업 R&D 확대로 개방형 혁신 실현

2021년에는 신규사업 기획 시 부처별 정책 연계 및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의 협력 아이팀과 영역을 적극 발굴하였다. 동물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노지 농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등 다부처 협업 대형사업을 기획하였고, 농수산 분야 R&D 범부처 협의체 구성(2021.2월)을 통해 부처청 협업 신규사업 4개(노지분야 스마트농업 기술 단기고도화, 반려동물 진주기산업화 기술개발, 스마트농산물 유통저장기술 개발, 친환경동력원 적용 농기계기술 개발)를 발굴하고, 개방형 연구협력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팜 R&D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2021.11.)하여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지원, 데이터분석 및 협업 환경을 제공하였다.

▶ 농업현장 다양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농업현장의 고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현장 맞춤형 R&D 추진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SNS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SNS를 통해 전문가와 농업인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방성, 신속성, 전문성 등 SNS컨설팅을 통하여 고객편의성이 증가되었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부내 정책부서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14년 6개 품목을 시작으로 '15년 23개 품목, '16년 30개 품목, '17년 33개 품목, '18년부터 40개 품목(원예 22개, 식량 6개, 축산 8개, 기타 4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신규회원이 8,134명 증가하였으며, 누적 회원 수 74,447명(전년 대비 12.2% 증가), 누적 SNS 컨설팅 수 126,234건(전년 대비 20.4% 증가)을 돌파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농·축산 분야 품목별 밴드 최상위 농가의 영농기법을 전파하기 위한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를 기획하여 원예 분야 8개, 축산 분야 1개 등 9개의 과제를 추진하였다.

또한 SNS 컨설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현장기술컨설팅과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였으며('21년 2개 분야, 총 6회), 우수 컨설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수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밴드 운영사례집(사과, 단감, 블루베리 등 5개 분야)을 발간하여 공유·전파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사회적 확산으로 현장기술컨설팅, 집합교육 등 대면 활동은 지양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식품 R&D 최첨단 기술 및 노하우 등 다양한 기술자료 제공을 위해 초보농업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E-BOOK 제작과 기존 온라인으로 수행된 컨설팅 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DB화를 실시하는 등 SNS컨설팅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표 2-4-7〉 SNS 활용 기술 컨설팅 추진 건수

게시물 분야	재배관리	병해관리	수확후 관리	사료관리	사양관리	번식육종	유용정보	기타	총계
컨설팅 건수	12,238	14,196	1,081	2,035	7,338	502	68,898	19,946	126,234

* SNS 누적 회원 수 : ('20년) 66,313명 → ('21년) 74,447명 / * SNS 누적 컨설팅 수 : ('20년) 111,099건 → ('21년) 126,234건

〈표 2-4-8〉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과제' 추진 현황

수행년도	과제명	연구기관
'17~'19	파프리카 하계작형에서 Best Farmer의 영농기법 분석 및 모델화 연구	강원대학교
	버섯(표고, 느타리)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농수산대학교
	한우 번식암소 및 송아지 최적 사양관리(Best Farming) 영농기법 모델화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18~'20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오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국화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	목포대학교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참외)	성주과채류시험장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배)	전남대학교
	일반 소득작물의 Best Farmer 영농기법 모델화 연구(장미)	서울시립대학교

▶ 농식품 R&D 사업관리 운영 효율화

농림식품 R&D 사업관리·운영 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 11월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부청간 연구과제의 유사중복 문제 해결과 협력 연구를 위해 사업 사전 준비, 기획, 추진, 제도 정비 등의 분야에서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 협력·연계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사전 사업설명회와 공동 기술수요조사를 추진하였고, 사업기획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및 과제 기획 시 중복되지 않게 역할 분담을 조정·심의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 시 과제 공고의 시점을 앞당겨 일부 사업에 통합 공고를 추진하였다.

또한 혁신법의 제정시행(2021.1월)에 따라 연구자의 편의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자 현장 수요조사 및 기술 수요조사를 다양화하고, 과제의 기획 일정 등을 앞당겨 사업설명회 등에서 설명함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 R&D 투자는 최근 3년간(2018~2021) 연평균 11.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농림식품 R&D 예산은 12,273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약 4.5% 수준을 차지하는 등 농정과제 및 현장문제 해결 등을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이 수립('19.12월)됨에 따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타 분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연구 확대, 민간 농식품 R&D 촉진에 힘쓸 예정이며, 개발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강화, 부정 및 소속기관의 R&D 협업, 정책부서 R&D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농정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연구분야(ICT 융복합 스마트 농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국민 삶의 질,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하는 코디네이터 사업을 기존 농식품 R&D 수행기업 중심에서 R&D 수행을 위한 연구진입, 과제수행, 기술사업화 단계 등으로 컨설팅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3.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

■ 농촌재생에너지팀 사무관 백재관·박승민

◆ 추진 배경 및 개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가뭄, 폭염 등 기상재해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년 이후 EU, 중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등 전 세계적 논의가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기후정상회의('21.4월) 계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대폭 상향된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했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재확인하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GMP)이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월) 후, 2030 NDC 상향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21.10월) 국제사회에 발표하였다(COP26, '21.11월). '30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하고, '50년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7.1% 감축하고, '50년까지는 37.7%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정부는 앞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수립하여('20.12월)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1911~2010년) 평균기온이 1.8℃ 상승하여 세계 평균 상승치(0.75℃)를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집중호우, 폭설 등 이상기상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가속화 및 잦은 이상기상 등으로 우리 농업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재배적지의 변화, 기상재해 및 병충해 등의 증가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 및 농가 소득 감소, 물가변동 확대, 식량안보 위협 등 농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마련해왔으며, 제3차 적응대책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를 목표로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리스크를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6대 부문(물,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84개 리스크를 기반으로 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등의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5월 농식품산업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처 중 최초로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1.12월에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2050 추진전략은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농업·농촌 에너지 효율화 및 전환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2011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업체를 목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수단 발굴, EnMS 및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식품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식품기업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에는 26개 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6.9천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는 농업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유도를 위하여 농가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1만원/tCO₂)를 지원하고 농가·기업 간 상생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이어지도록 농축산물 탄소 배출 정보를 인증·표시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다양한 홍보 및 유통 지원을 통해 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12년 60농가 → '21년 5,753)하고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통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 실태조사는 2021년까지 농업·농촌분야(농촌진흥청), 임업분야(산림청),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분야별로 위임·위탁하여 각 분야별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2022년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조사 결과를 농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탄소중립 선언(‘20.10월) 이후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하였으며(‘21.10월),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여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21.12월) 그 세부추진 계획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탄소중립농생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23.3월)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지원, 농업인에게 기후 데이터의 맞춤형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해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미세한 기상변화 대응, 농산물의 재배적지 점검, 병충해의 효과적 방제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재해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농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연구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대외협력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4. 시설원에 과학화 및 에너지 절감

■ 원예경영과 서기관 김승동

◆ 추진 배경 및 개요

2020년 이후 EU, 중국, 일본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는 등 신기후체제하에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국가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하여 발표(2021.11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탄소중립 선언 및 장기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비에너지) 발생량은 205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월예시설 가온면적의 80% 이상은 유류난방으로 시설원에 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춰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냉난방시설과 에너지 절감형 시설·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표 2-4-9〉 연도별 농림어업 에너지소비량

(단위 : 천TOE)

구 분	'05	'10	'15	'16	'17	'18	'19
총에너지소비량	171,543	195,401	215,389	221,936	230,594	233,368	231,353
농림어업	3,399(2.0)	3,201(1.6)	2,729(1.3)	2,719(1.2)	2,676(1.2)	2,712(1.2)	2,885(1.2)

* ()안은 국가총소비량 대비 비중, 2019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 TOE :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물리적 단위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경영비 중 광열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에 분야에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과 지열·지중열·공기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지원하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자동보온덮개 등의 시설·장비를 시설원에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목재펠릿난방기, 지열냉난방 시설, 2012년에는 공기열냉난방시설, 2015년에는 폐열 재이용시설과 지중열냉난방시설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농업용 에너지 사용 감축과 시설원에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표 2-4-10〉 연도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현황

(단위 : ha)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합 계	6,874.5	1810.4	1341.7	1228	967	825	895	738
- 다겹보온커튼	2,996	828	782	803	617	624	435	432
- 자동보온덮개	3,170	935	494	322	312	138	424	278
- 순환식수막시설	187	1	0.7	5	1	1	5.2	-
- 공기열냉난방시설	4.5	0.4	-	1	-	1	3.7	3
- 기타*	517	46	65	97	37	61	27	25

* 기타 : 열회수형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등

▶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 확대

농업분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시설원에 산업의 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열냉난방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너지 절감률 약 80%) 보급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폐열 재이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을 추가하는 등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에너지절감모델개발사업단을 출범하여 지역별·품목별·시설유형별 다양한 에너지절감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한국전력,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열·공기열시설 공동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농가부담을 상당부분 경감하였다.

〈표 2-4-11〉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현황

(단위 : ha)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합 계	1,052	68	57	44	42	26	20	23
- 지열냉난방시설 등	372	18	19	18	19	21	19	20
- 목재펠릿난방기	680	50	35	26	23	5	1	3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에 힘입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비중은 '10년 34.4%에서 '21년 19.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향후, 시설원예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편, 협력사업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의 에너지비용과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5.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시설 확충

■ 축산환경자원과 서기관 이상준·정창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부담을 줄이고 수질·토양 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 등에 필요한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19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시작하여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이후,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확대 및 퇴액비 유통기반 구축이 필요하였다. 이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자금을 지속확보하여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1,103억원을 지원하였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경우 크게 생산기반 시설지원(축산악취개선, 악취측정ICT 기계장비, 공동자원화시설,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사업), 생산·유통지원(퇴액비살포비, 경축순환농업활성화), 축산환경 전담기관 운영(축산환경관리원) 지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퇴·액비 유통활성화 및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2011년 이후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근절(260만톤→0)하였고,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에 공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관리를 통하여 축산악취 저감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퇴액비 중심의 처리방식에서 정화, 에너지화 등 비농업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악취로 인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축산농가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2021년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였다. 특히, 지자체-축산단체-농축협-축산농가-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내 악취문제 대응 협력 공동체인 민관합동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갈등 원인을 제거해나가면서 농가·시설별 맞춤형 지원, 농가·시설에서의 이행, 성과 확인, 우수사례 확산까지 축산악취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이를 통해 악취 집중관리지역의 암모니아 발생을 50% 저감하였으며

인근 주민 설문조사 결과 약 66%가 악취 개선을 체감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민원·갈등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깨끗한 축산농장은 2021년말 기준 5,242호(누적)를 조성하였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정책디자인단’(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국민 정책참여 제도)을 통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 캠페인을 통해 농가 스스로 축사청소·소독, 경관개선, 시설정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1년 3월 퇴비부숙도 제도 본격 시행을 위하여 퇴비전문유통조직 육성, 퇴비사 확충, 기계장비 확보 등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 전국 농업기술센터 검사결과(3~4월) 97.9% 농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제도 안착에 기여하였다.

또한, 퇴비·액비 여건 악화 및 탄소중립 정책에 맞게 공동자원화 시설의 정화처리를 허용하고, 퇴비 감축 등을 위해 고체연료, 바이오차 생산시설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사업을 개편하는 동시에 제철소,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고체연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축산분야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21.10월)과 연계한 축산환경개선대책을 수립(‘22.1월)하고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1,200만톤 CO₂eq을 감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사육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 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관리 강화,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존 과투입 관행적 사육방식을 저투입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장기 사육하는 관행적인 소 사육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 사육방식 시범사업을 추진(2022~2024년)하고 저메탄 사료 개발, 사료 내 잉여질소 상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경지 감소 등 퇴·액비 살포여건 악화로 인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점차 줄이고, 정화, 고체연료 등 비농업계 이용을 확대한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산업용 소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철소 등 민간 수요처와의 협업을 통해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축분 바이오차에 대한 시범생산 및 상토 등 이용처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자원화시설 및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아닌 지자체 등 공공이 운영하는 에너지화 시설을 확대하고, 시설에서 생산되는 발전여열을 활용한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등 에너지화시설과 지역의 상생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타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약취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양돈농장에 대해 약취저감시설 의무화, 슬러리 피트 기준 설정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연 1회 슬러리 피트 청소 등 준수사항도 강화한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악취관리를 강화한다.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3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한다. 시설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농가별 악취원인에 따라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간다.

또한, 축산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퇴액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고, 축산환경에 대한 진단·분석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조성을 위한 통계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6. 종자산업의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안치홍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인식하여 2009년 10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육종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 우수종자 생산 유통, 민간역량강화 및 사업화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글로벌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적 R&D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사업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내에 “GSP 운영지원 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 상세계획을 통하여 국내외 시장 현황조사·분석 및 품목별 세부

연구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해 2월에 5개 분야 사업단장을 선정하였으며, 7월에는 사업단 품목별 프로젝트 연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종자개발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민간업체의 종자 육종에 필요한 첨단시설·장비 및 육종포장 등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2011년 전북 김제시를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정상 추진에 따라 2016년 10월 완공되었다.

한편, '묘'도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육묘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육묘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1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13~'17)에 따른 종자산업 기반구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종자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종자산업의 정책방향으로서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자 수출 등 산업화,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등 국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추진 성과

「2021 종자산업 육성대책」 및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 등에 따라 골든시드프로젝트, 종자산업 기초인프라 확충, 해외 종자시장 개척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2009년 22백만 달러에서 2021년 61백만 달러로 종자수출액이 확대되었다. 다만, 수출종자 품목이 채소작물 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품목 다변화 등의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는 지난 9년간(2013~2021) 955개 품종을 개발하여 256백만 달러를 수출하고 1,382억원의 국내판매(수입대체) 성과를 도출하였다. 종자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신규 R&D 사업으로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2022~2024)을 추진하여 육종 기간 단축, 고기능의 복합형질 종자 개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육종연구단지는 단지내 입주할 20개 기업을 선정(2013.9월),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4.12월 착공하였고, 2016.10월 완공 이후 기업 입주를 완료하였다.

또한, 종자수출협의회(2010년 설립, 24개 회원사)를 통해 국제 종자관련 총회 참석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해외 잡지 광고 게재 등 종자업체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5개국에 품종 전시포를 설치·운영하여 국내 육성품종의 현지적응성 및 시장성을 조사하고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소개·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신품종 육성 의욕을 고취하고자 우리나라에서 1998년부터 시행된 품종보호제도는 '20년말 기준 품종보호출원 누적건수가 세계 8위(①유럽연합

②중국 ③미국 ④네덜란드 ⑤일본 ⑥우크라이나 ⑦러시아 ⑧한국 ⑨캐나다 ⑩호주) 수준일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현재 품종보호등록은 누적 9,084건으로 작물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4-12〉 작물별 품종보호등록 현황

(2021.12.31. 현재)

구분 작물	국 내						외 국				총 계					
	계	개인	증자 업체	지자 체	국가	기타	계	개인	증자 업체	국가	계	개인	증자 업체	지자 체	국가	기타
화훼류	2,939	769	151	1,132	744	143	1,629	92	1,537	0	4,568	861	1,688	1,132	744	143
채소류	1,883	161	1,343	159	203	17	57	1	56	0	1,940	162	1,399	159	203	17
식량작물	1,220	32	51	153	879	105	6	1	5	0	1,226	33	56	153	879	105
과수류	456	195	13	67	177	4	53	5	48	0	509	200	61	67	177	4
특용작물	313	14	51	50	185	13	2	0	2	0	315	14	53	50	185	13
버섯류	174	32	17	75	49	1	5	2	3	0	179	34	20	75	49	1
사료작물	61	9	3	1	47	1	1	0	1	0	62	9	4	1	47	1
산림조경수	34	27	0	1	6	0	0	0	0	0	34	27	0	1	6	0
수산식물	25	0	2	7	14	2	0	0	0	0	25	0	2	7	14	2
산림기타	220	76	30	38	66	10	6	3	3	0	226	79	33	38	66	10
계	7,325	1,315	1,661	1,683	2,370	296	1,759	104	1,655	0	9,084	1,419	3,316	1,683	2,370	296

또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8~’22)」을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하에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역량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이에 대한 13대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2020년도에는 2차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자산업육성 대책을 통해, 2021년 기준 국내의 종자업 등록업체 수는 최근 10년간 4배 이상 증가(’10년 924개→’21년 3,780)하였으며, 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과수가 23%로 가장 많고, 채소(15), 화훼(12), 버섯(8), 식량(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13〉 연도별 종자업 등록 현황

(2021. 12. 31. 현재)

연도	계	식량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빵	기타
'08	871	33	257	189	139	126	28	99
'09	819	37	250	173	121	110	30	98
'10	924	32	283	181	149	121	29	129
'11	932	39	300	185	139	112	30	127
'12	1,073	39	328	202	160	118	33	193
'13	1,279	49	393	224	195	108	46	264
'14	1,491	58	445	255	214	125	47	347
'15	1,699	69	494	277	231	130	35	463
'16	2,019	78	587	341	253	161	43	556
'17	2,217	99	615	368	251	176	36	672
'18	2,466	104	665	381	294	220	39	763
'19	2,751	139	708	405	312	244	44	899
'20	3,315	159	793	480	381	275	46	1181
'21	3,780 (100%)	174 (5)	868 (23)	572 (15)	465 (12)	313 (8)	47 (1)	1341 (36)

한편, 종자와 달리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육묘산업을 종자산업처럼 농업부문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불량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육묘업 등록제, 묘 품질표시제, 육묘 분쟁해결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자산업법(2016.12.27.)과 그 하위법령을 개정(2017.6.28.)하여 시행(2017.12.27.)하였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이후, 2021년도까지 총 5,436명이 육묘업 등록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총 2,391개 업체가 육묘업을 등록하였다. 작물별로는 채소가 51%로 가장 많고, 식량(37), 화훼(1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육묘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한 육묘업 실태조사 결과 육묘 관련 판매액 규모는 2018년 기준 연간 1,632억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2-4-14〉 연도별 육묘업 등록 현황

(2021. 12. 31. 현재)

연도	계	채소	식량작물	화훼
'18	1,506(100%)	716(48)	622(41)	168(11)
'19	1,885(100%)	983(52)	677(36)	225(12)
'20	2,207(100%)	1,128(51)	820(37)	259(12)
'21	2,391(100%)	1,212(51)	880(37)	299(12)

* 육묘업 등록 교육 이수 현황 : '17년 4회 1,519명, '18년 7회 1,773명, '19년 6회 732명, '20년 681명, '21년 731명

◆ 평가 및 향후 계획

종자산업을 기술 기반 산업으로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사업('22~'24)을 추진할 예정이며,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주축으로 한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정읍 방사선육종센터, 전주 농진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자기업의 육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18~'22)의 4대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기관별 핵심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2022년도 종자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7. 곤충산업 육성

■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 김은지

◆ 추진 배경 및 개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동물의 70% 이상(약 130만종)을 차지하는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평가되면서,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곤충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예전에는 곤충이 친환경 농업 및 시설원예의 확산으로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곤충과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 곤충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학습·에완·축제용 및 식품, 사료, 환경정화, 기능성 바이오 소재 등에 곤충산업화가 확산되는 추세로 새로운 농업 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추진 성과

곤충생산·유통·소비 단계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대량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소득농업으로 도약할 기반 마련을 위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제3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2021.3월)하였다. 중점 추진할 과제는 소비·유통체계 고도화, 新시장 개척, 생산기반조성, 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요확대·유통·생산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본격 산업화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곤충 생산·가공·유통업으로 신고된 농가 또는 법인은 총 3,012개소(생산업 2,845, 가공업 554, 유통업 1,385, 일부 중복)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곤충산업 종사자는 4,389명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표 2-4-15〉 국내 곤충산업 현황

구 분	2020(A)	2021(B)	증감(B-A)	증감률(%)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신고 수(개소)	2,873	3,012	139	4.8
- 생산업	2,683	2,845	162	6.0
- 가공업	570	554	-16	-2.8
- 유통업	1,404	1,385	-19	-1.4
곤충 사육·가공·유통업 종사자 수(명)	4,193	4,389	196	4.7
곤충 판매액(*골벌, 누에 제외)(억원)	414	446	32	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 곤충산업 新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갈색거저리 애벌레(2016.3월)와 쌍별귀뚜라미(2016.3월)에 이어,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6.12월), 장수풍뎅이 애벌레(2016.12월)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과 협업하여 일반식품 원료(동물성 원료 중 곤충 관련 총 7종)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용곤충의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32호)을 제정(2016.10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2018년 주요 규제 개선 성과로는 곤충 사육농가도 농수산업자 신용 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확대(농수산업자신용보증법 개정, 2018.12.31.)하고 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조·가공업 등록 시 곤충 가공업도 신고한 것으로 보는 등 신고 간주제 도입(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2.31.)이 있다. 2019년에는 축산법 고시개정(‘가축으로 정하는는 기타동물’)을 통해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를 포함한 곤충 14종이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포함되었고(2019.7.25.),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을 위해 「곤충의 사육기준」고시개정(2019.11.25.)을 추진하였다. 추가적으로 관련분야 곤충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산물 비료 중 동애등에분염분 기준을 완화(0.5%이하 → 2.0%)(2019.3.28.)하였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을 통해 단미사료에 “곤충유(오일)”를 추가하여 비료 및 사료분야의 규제개선을 진행하였다. 2020년에는 농업협동조합법 고시(「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개정을 통해 곤충 5종에 대해 조합원 가입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곤충농가가 지역 농·축협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곤충자원의 R&D 강화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식품·사료 외에도 기능성의약품 소재개발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곤충자원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2016~2020), 식·약용 곤충/발효미생물 복합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간기능 개선 물질의 발굴 및 식품산업화(2017~2020), 산업화 유망 곤충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2018~2020), 식용곤충을 활용한 프리미엄(휴먼그레이드) 반려동물 간식 수출사업단(2017~2021), 생물적 발효과정을 이용한 곤충 키틴발효 사료첨가제 생산기술개발 및 산업화(2019~2021), 곤충 오일의 기능성 탐색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2019~2021), 식용 곤충과 유산균을 활용한 고단백 노인식퓨레 상품화 기술 개발(2019~2020)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우수계통 선발 및 신규보존종 등록, 식용곤충 관련 임상연구 및 안전관리 기준 설정, 곤충 생산관련 표준화 기술 및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을 위한 신품종 육성 및 관련 연구, 스마트 양잠 영농자동화 기술 개발 및 누에 유전자 편집 기반 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진행하였다.

▶ 곤충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대외협력 강화

2019년부터 곤충식품페스티벌 및 심포지엄(6.5.), 제1회 곤충의 날 행사(기념식, 곤충 제품전시 및 국제심포지엄)(9.6.), 곤충체험·홍보전(10.5.), 농업박람회 연계 곤충산업 전시회(11.22~24.), 곤충관련 행사 후원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안전 사육관리 교육 및 성공사례 확산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곤충 및 곤충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곤충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곤충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을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주)충남곤충산업협회가 추가 지정되어 총 21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화 기반 조성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곤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경북(2015년)은 화분매개, 경남(2015년)은 식·약·사료, 대전(2016년)은 학습·애완, 경기(2017년)는 천적, 충북(2019)은 우량곤충용 소재 및 제품화 개발을 특화하기 위하여 총 5개소의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각 센터는 곤충농가 교육 및 품질관리, 제품화 및 산업화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 등 지역 곤충산업의 종합지원 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곤충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용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무병·우량 곤충종자를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청주)에

곤충종자보급센터를 건립(총 사업비 50억원, 2017년부터 3개년)하였다. 추가로 2019년부터 곤충산업의 규모화 및 체계화를 위한 곤충산업화사업(총 사업비 10억원, 국비30%, 지방비40%, 자부담 30%)을 통해 6개소 사업대상자 선정, 사료 및 식용곤충의 생산 및 가공시설·설비를 지원하였다.

▶ 곤충자원 조사 및 유용곤충 발굴

국내 서식 산림곤충자원의 빠르고 정확한 동정체계를 구축하여 나비목, 딱정벌레목 등 6목 1,660개체의 DNA바코드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고려줄딱정벌레류 DNA바코드 및 형태 비교분석으로 5아종을 2아종으로 정리하였다. 국가생물자원의 주권확보를 위해 연구미진 분류군의 한국 미기록 11종 및 신종 후보종을 확인하였으며, DMZ 인접지역 등의 곤충조사를 통해 500종 1만여 개체 표본 및 정보 등을 확보하였다. 곤충자원화를 위한 기초 생태정보를 규명하고 실내사육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추가적인 산업곤충 발굴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제2차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 결과 국내 곤충 판매액은 2015년 대비 250% 증가하였으며('15년 162억원 → '19년 405억원), 제3차 곤충·양잠 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을 통하여 곤충산업을 첨단 생명소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충북 괴산)사업(총사업비 7,000백만원, '20년~'22년)을 연차별 계획에 맞게 추진하여 지역단위 가공 및 사육계열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과 HACCP인증원 협력을 통해 HACCP 수준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HS코드 개정을 통해 식용 및 사료용 곤충의 수출입 구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제2절 농업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여중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농협중앙회의 신용 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 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우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중앙회, 농업경제지주, 농업금융지주)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3월에 공포되었다.

정부는 실질적인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그동안 정부의 개혁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여전히 경제사업에 소홀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경쟁력 있고 실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6.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 수를 감축(현: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월)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정부안을 확정(2009.12월)하여, 국회에 제출(2009.12.16.)하였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식품위 상정(2010.2월)을 거쳐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국회 공청회(2.11.) 및 법안상정 대체 토론(2.22.)을 개최하고, 사업분리 방식, 경제사업 활성화, 부족 자본금 지원, 조세·보험 특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총 6차례의 심사소위('10.2.24., 4.14., 4.19., 4.22., 12.6., '11.3.3.)와 2차례의 농식품위 전체회의(4.16., 6.21.)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의결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 조합에 대한 지도·지원,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병행하던 농협중앙회를 지도 및 농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앙회,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 금융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금융지주로 분리하였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이전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과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토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다.

정부는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공포 이후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 중앙회사사업구조개편지원단을 구성(2011.3.31.)하여 농업협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농협 사업구조 개편 부족자본금 지원계획서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 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으며,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까지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 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이 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농협중앙회에 일부 위탁하였다. 동 농협법시행령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6일 공포되었다.

개정 농업협동조합법(2011.3.31. 공포) 부칙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에 따라 정부는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하여 2011년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에서 요청한 6조원 중 4조원을 반영하였고, 지원 형식은 3조원은 이자보전 방식으로 1조원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2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자보전 4조원과 현물출자 1조원 지원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국회에도 보고되었다.

다만, 현물출자 1조원 중 산은지주 주식 0.5조원은 국회 IPO 부결 등으로 인해 현물출자가 진행되지 못하여 2013년 6월부터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0.5조원도 농식품부·금융위 간 협의를 완료('15.6월)하여 현물출자 계약당사자인 농협중앙회와 통합산은 간에 실무협의 중 현물출자 과정의 비용부담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17년 10월부터 이자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근본 취지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8월까지 추진

하였다. 동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는 2012년도에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12~’20)’을 수립하였고, 이후 농협경제지주는 당초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12~’20)’ 종료 및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온라인사업 확대 등)한 후속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21~’25)’을 수립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협법 제161조의7에 따라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관련 자회사 대표이사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 따라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설립되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동일자로 농협금융지주회사에 완전 이관되었고,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농협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2015년 2월 유통·판매 관련 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1차 이관되었고, 2017년 1월 1일 나머지 경제사업 모두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며, 완료되었다.

특히, 2014년도에는 경제사업의 이관과정에 있어 경제지주의 조합 자금지원, 계통거래 시 공정거래법 저축 우려 문제와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 제한 등 법적·세무적 쟁점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이관 제약해소를 위한 T/F를 농식품부와 농협 공동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경제사업 이관 시 법·세무적 제약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농협법을 2014년 12월 31일자로 추가적으로 개정하여 사업구조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도에는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된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운영방향의 정립을 위한 농협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농식품부·농협 합동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 법안 작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중앙회는 조합 지도·지원 기능에 적합토록 운영규정을 보완하였고, 경제지주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와 조합 경제사업 조성·협력, 중앙회·조합과의 연결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협중앙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제도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른 농협법은 2016년 12월 27일 공포되어, 중앙회의 나머지 경제사업이 모두 이관된 2017년 1월 1일 이후의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의 지배구조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7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지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으로써 경제지주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경제지주가 자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농협 경제지주의 책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 체제 전환은 농협이 농·축산물의 판매와 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경제지주가 일선조합에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경제사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 근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사업구조 개편 이행약정서를 체결하여 사업구조 개편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에 이어 즉시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인 바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농업계의 숙원사항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사업구조 개편 관련 홍보 계획을 수립, 언론 기고, 방송 인터뷰 및 기자단 설명회 등 체계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하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협의 경제사업 규모 확대와 책임 판매비중 증가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은 판매농협 실현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농협의 적극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협이 당초 사업구조 개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이행 과정을 점검·평가해 나갈 것이며, 사업이관 후 중앙회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농업인과 소비자간 만족하는 농협으로 거듭날 때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내실화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

◆ 추진 배경 및 개요

전통적 농업 금융인 투융자를 보완·대체할 수 있는 제3섹터형 정책금융으로 도입된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에 펀드 결성·운용의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부터 농식품투자 조합 결성을 개시하여 펀드운용을 본격화하였다. 그동안 농식품 분야의 투자는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자본에 의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농식품모태펀드를 통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된 농식품모태펀드는 민간과의 매칭펀딩으로 결성된 농식품투자펀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다양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함으로써 투융자 등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고 농식품 분야에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게 된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시장개방,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과 열악한 농식품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일반 펀드와는 차별화된 운용전략이 필요하여 투자관리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교육·지도 및 경영컨설팅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0년 9월 농식품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이 결성되었으며 2021년까지 정부에서 매년 100~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누적규모 4,328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였다. 또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7,119억원을 출자하여 총 79개(일반펀드 33, 특수목적펀드 46) 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을 결성하였다.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자조합의 총 결성규모는 13,096억원으로 이 중 5,977억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말 기준 443개 경영체에 8,96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농식품분야의 투자가 7,783억원(596건)으로 농식품분야에 전체투자액의 86.9%가 투자되었다.

또한 2021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정부재원 400억원을 투입하여 1,678억원 규모 10개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이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이후 단년도 최대 결성규모이다.

2021년도에는 그린바이오 5대 부문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펀드」와 스마트팜, 탄소중립 분야에 전략 투자하는 「스마트농업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였다. '20년에 이어 「영파머스펀드」를 105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여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규모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하는 마이크로펀드, 청년·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를 위한 농식품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창업 초기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와 전문보육을 병행하는 「창업보육펀드」를 신규로 도입하여 창업초기 기업의 시장 초기진입을 지원하였다.

〈표 2-4-16〉 농식품투자조합 결성('10년~'21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펀드명	출자금액(억원)			운용기관
		모태	민간	총액	
2010	그린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90	110	200	MG인베스트먼트(주)
	아주아그리젠토1호투자조합	100	100	200	아주아이비투자(주)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100	150	250	미시간벤처캐피탈(주)
	현대-동양 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157	163	320	현대증권(주)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
2011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	100	100	200	(주)에스비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농림축산투자조합	100	100	200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나우농식품투자펀드1호	80	120	20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솔리더스글로벌농식품바이오투자펀드1호	80	90	170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애그로프로젝트투자조합	100	100	200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012	노루-미래에셋애그로스타프로젝트투자조합	80	80	160	미래에셋벤처투자(주)
	AKGI애그로상생경제투자조합1호	80	80	160	(주)안강벤처투자
	KDBC식품산업투자조합1호	80	80	160	KDB캐피탈(주)
	나우농식품투자펀드2호	80	80	16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유큐아이피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제1호	70	30	100	유큐아이파트너스(주)
2013	이앤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70	30	100	(주)이앤인베스트먼트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75	75	150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동양농식품2호투자조합	75	75	150	유안타인베스트먼트(주)
	세종농식품바이오투자조합1호	75	75	150	(주)세종벤처파트너스
	솔리더스-고창 농식품프로젝트투자조합	70	30	100	(주)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2호	70	30	100	미시간벤처캐피탈(주)
2014	엘앤에스농식품6차산업화투자조합	70	30	100	엘앤에스벤처캐피탈(주)
	이앤에이비에프투자조합	140	150	290	(주)이앤인베스트먼트
	현대 Agro-Bio펀드 1호	50	50	100	현대기술투자(주)
	나우농식품투자펀드3호	60	60	12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SJ-농림축산식품투자조합1호	50	50	100	(주)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메가농축산성장투자조합2호	70	30	100	메가인베스트먼트(주)
	세종 농식품R&D사업화투자조합	70	30	100	(주)세종벤처파트너스
	센트럴생거진천농식품투자조합	70	30	100	(주)센트럴투자파트너스
	AJ-세종농식품수출육성펀드	90	40	130	(주)세종벤처파트너스 AJ캐피탈파트너스(주)
2015	컴퍼니케이파트너스애그로씨드투자조합	90	10	100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TWI농식품상생투자조합	100	100	200	(주)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유티씨그린바이오투자조합	120	120	240	유티씨인베스트먼트(주)
	SB프로젝트투자조합	70	30	100	(주)에스비인베스트먼트
	ECO-MGI 6차산업화전문투자조합	70	30	100	(주)에코캐피탈
	AJ농식품수출육성펀드2호	70	30	100	AJ캐피탈파트너스(주)
	DTNI-AGRITECH투자조합	70	50	120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2016	엔에이치애그리비즈밸류크리에이티브1호	100	100	200	농협은행(주) NH투자증권(주)
	A&F미래성장투자조합	180	245	425	이후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GMB-MD농식품투자펀드	180	150	330	지엠비인베스트먼트 마이다스동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농식품1호펀드	160	40	200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연 도	펀드명	출자금액(억원)			운용기관
		모태	민간	총액	
	유큐아이피농식품투자조합제2호	120	30	150	유큐아이파트너스(주)
	CKD Smart Farm 1호 농식품투자조합	120	30	150	CKD창업투자
	블루6차산업화투자조합1호	70	30	100	(주)블루그린인베스트먼트
	포스코농식품수출투자조합	70	30	100	포스코기술투자(주)
2017	나우농식품투자펀드 4호	100	100	20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KB 신농사직설 투자조합	100	100	200	KB증권(주) & KB인베스트먼트(주)
	시너지 농식품 밸류크리에이티브투자조합	50	50	100	시너지아이비투자(주)
	NHC-DTNI 농식품 ABC 투자조합1호	140	80	220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 NH농협캐피탈(주)
	마그나 ABC펀드	140	60	200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패스파인더 6차산업화 투자조합	70	30	100	(주)패스파인더에이치
	NHC-DTNI 농식품일반투자조합	90	110	200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 NH농협캐피탈(주)
	미시간글로벌식품산업투자조합	100	25	125	미시간벤처캐피탈(주)
2018	AJ-ISU경기도애그리푸드투자조합	40	60	100	AJ캐피탈파트너스(주) & (주)이수창업투자
	킹고 멀티플6 농식품 제1호 투자조합	70	30	100	(주)킹고투자파트너스
	나우농식품 세컨더리투자펀드 1호	120	80	20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빙그레 농식품 투자조합	50	12.5	62.5	(유)동문파트너즈
2019	동훈 농식품 벤처스타 1호 투자조합	50	13	63	동훈인베스트먼트
	현대Agro-Bio펀드2호	70	30	100	현대기술투자
	타임와이즈 농식품벤처 펀드	100	25	125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UN그린시너지 투자조합	115	115	230	유티씨인베스트먼트
	NH나우농식품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15	285	400	나우아이비캐피탈(주)
	마그나FRESH펀드	100	30	130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2020	농식품 스텝업 투자조합	150	70	220	(주)세종벤처파트너스
	인라이트 애그테크 플러스펀드	50	15	65	인라이트벤처스(유)
	아이에스유(ISU)-'힘내라 경북' 애그리푸드투자조합	50	60	110	(주)이수창업투자
	엔에이치나우농식품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150	450	600	나우아이비캐피탈(주)&농협은행
	롯데농식품테크펀드1호	50	102	152	롯데액셀러레이터
	나이스앤영파머스투자조합	90	10	100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
	엔에이치농식품벤처투자조합	100	30	130	엔에이치벤처투자(주)
	메가농식품벤처투자조합3호	100	25	125	메가인베스트먼트
2021	하이브리드 ESG 세컨더리펀드 제일호	120	400	520	포스코기술투자
	현대-GS리테일 Agro-Bio펀드3호	90	120	210	메타인베스트먼트
	신세계웰니스투자조합	90	92	182	현대기술투자
	마그나 GREEN 펀드	90	60	150	시그나이트파트너스
	비엔케이 농식품 투자조합 제3호	105	45	150	마그나인베스트먼트
	패스파인더 영파머스 투자조합	90	15	105	BNK벤처투자
	빙그레농식품투자조합2호	52	13	65	패스파인더에이치
	씨엔티테크 제13호 농식품 투자조합	50	21.44	71.44	동문파트너즈
	동훈 농식품벤처스타 2호 투자조합	80	20	100	씨엔티테크
합계	7,119	5,976.94	13,095.94	동훈인베스트먼트	

◆ 평가 및 향후 계획

'22년도에는 신산업분야 펀드 외에도 성장단계별 펀드를 지속 조성하여 농식품산업 전반에 걸쳐 농식품경영체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균형있는 투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1년에 이어 「영파머스펀드」를 105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여 1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규모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하는 마이크로펀드, 청년·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를 위한 농식품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기존 농식품펀드 투자업체 중 고용인원이 증가하였거나 고용인원의 증가가 기대되는 경영체에 후속 투자하는 징검다리 펀드를 다시 도입하여 성장하는 경영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펀드 조성이 완료된 후 농식품경영체에 신속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와 투자실적 연계를 강화해 투자운용사의 초기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22.8월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직접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 청년농어업인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3.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김명관·안광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 분야의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정책금융은 농업 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로 농협 등을 통해 지원하여 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중은행에서도 농업 분야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정책자금 지원현황 및 취급 금융기관 확대

농식품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리스크 부담이 커 민간자본의 진입이 어려워 대부분 정책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농업 분야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7년 농업종합자금 등을 이차보전(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정책자금을 대출하고 금리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으로 확대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2021년말 기준,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30.4조원(재정융자 12.3조원, 이차보전 18.1조원) 수준으로 전년(29.7조원) 대비 2.4%증가하였고, 이차보전액의 경우 기준금리 하락으로 2,447억원(예산현액대비 집행률 91.4%)이 집행되었다.

아울러,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지원루트를 다양화하여 농업금융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촉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을 일반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에는 촉발기금의 모든 융자사업과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융자사업 중 농기계 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을, 2008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신규후계농 및 창업농·후계농추가지원 자금을, 2010년에는 농촌주택정비사업, 재해복구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및 농업종합자금 등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4-17〉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21년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	농특회계	6,133	1,253	4,880	-	-	-
	에특회계	170	170	-	-	-	-
	재특회계	-	-	-	-	-	-
	소 계(a)	6,303	1,423	4,880	0	0	0
	농안기금	29,208	20,447	-	8,761	-	-
	농지기금	70,024	-	-	-	70,024	-
	촉발기금	9,149	8,783	-	-	-	366
	FTA기금	8,298	5,940	-	-	2,358	-
	소 계(b)	116,679	35,170	0	8,761	72,382	366
	계(A=a+b)	122,982	36,593	4,880	8,761	72,382	366
민간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177,199	173,688	2,944	-	-	567
	부채대책	3,446	3,400	46	-	-	-
	계(C)	180,645	177,088	2,990	0	0	567
합	계(A+B+C)	303,627	213,681	7,870	8,761	72,382	933

※ (자료 출처) 농협 대출: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산림조합 대출: 산림조합중앙회 / 농안기금 중 유통공사 대출액: 유통정책과(유통공사) / 농지기금: 농지과(농어촌공사) / 촉발기금 중 시중은행 대출액: 축산정책과 / FTA 기금 중 유통공사, 농어촌공사 대출액: 농업정책과 / 이차보전 시중은행 대출액: 농업금융정책과

▶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2010년 6월부터는 모태펀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2012년 국정감사시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3년부터 농안 기금·축발기금 등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되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사후 관리를 위탁하여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경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말 현재 약 156조원(누계)에 달하는 보증지원을 통해 농어가 생산증대 및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만, 주로 생산자(농가)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금융위·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14년 1월 16일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창업지원 및 기술·투자 우대를 통해 농어업 분야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법인 및 가공·유통분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농신보 운영 개선을 통해 기금 적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또한 농업 경영체 규모화·첨단화 등 농어촌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법인, 도시가공업자, 귀농·창업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21년말 기준 농신보 운용배수는 보증잔액 163,585억원, 기본재산 10,796억원으로 15.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업의 규모화, 첨단화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준의 운용배수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18년 농업정책자금 중 가장 규모가 큰 농업종합자금의 사업구조 정비, 시설·토지구입자금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수요자의 입장에서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역 농축협의 대출심사 규모 확대를 통해 자금이 적재 적시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법개정을 통해 대출기간을 기존 3년거치 7년상환

에서 5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생애 최초 스마트팜을 설치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도입하였고 시중은행에서도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것이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인력 확충 및 검사체계 정비 등을 통해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5장 농식품 안전성·품질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1.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도 실효성 강화

■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김기성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1994년도에 도입되었다. 특히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외식문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식품소비 중 외식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외식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 2008년 7월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던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2010년 2월 4일 제정·공포하고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였다. 제정된 법령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하는 한편,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통신 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을 농산물에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수입원료 사용비중이 높은 소금과 막걸리를 포함한 주류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수산물 6품목을 신규 도입하고, 찌개용·탕용 배추김치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을 원산지표시 단속기관 및 한국소비자원,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해 악의적인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시행일 2015. 6월)하였으며 2년이 경과한 '17년 하반기부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12월에는 위반자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형량하한제를 통해 재범자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2년 12월에는 김치류에 사용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및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하는 살아 있는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와 갈치, 고등어, 명태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음식점 표시대상품목 추가(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음식점에서의 표시대상 품목을 모든 조리용도로 확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판 크기확대 및 게시위치 명확화,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표시 확대(2→3순위) 등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2019년에는 '원산지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업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단속 기관간 단속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을 강화하였으며,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하고, 음식점에서 가공품의 주원료 표시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였으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0년에는 유통이력관리 품목 수입증가로 인한 관리 효율성 저하 및 품목 전문성 부족 등 사유로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제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1년에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차질 없는 업무 이관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마련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나라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폭넓고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FTA체결 등 자유무역 확대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과 대상 품목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위반자 의무 교육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원산지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원산지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속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업계·단체에 원산지 제도에 대한 제도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원산지확인 생활화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원산지표시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령 개정을 통하여 단속인력 확충 및 지자체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향후 비대면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통신판매 등 유통경로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제도 업무 이관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업계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통이력 정보 실시간 활용을 통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차단 및 식품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농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품질위생관리팀 사무관 박성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초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생산, 유통·판매되는 농산물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 조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재배환경관리, 정책지원관리로 구분하여 국내 농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1년에는 농산물 259개 품목을 대상으로 60,422건을 조사하여 계획(60,000건) 대비 101%를 달성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47,749건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잔류농약 43,988건, 중금속 1,308건, 곰팡이독소 700건, 식중독균 1,161건, 방사능핵종 390건, 항생물질 140건, 이산화황 32건,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30건 등을 조사하였고, 농지·용수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130건, 중금속 6,016건, 식중독균 334건, 다이옥신 30건을 조사하였다. 안전성 조사결과, 451건(0.7%)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발 2건, 폐기 216건, 출하연기 173건, 용도전환 4건, 기타 56건을 조치하였다.

〈표 2-5-1〉 연도별 농산물 등 안전성 검사실적

(단위: 품목, 건,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품목수	279	280	286	296	296	312	235	276	250	259
조사건수	79,753	87,052	91,211	90,097	77,515	82,328	73,371	60,988	59,323	60,422
부적합건수	1,217	1,202	1,209	1,232	1,182	1,535	928	761	621	451
부적합률	1.5	1.4	1.3	1.4	1.5	1.9	1.3	1.2	1.0	0.7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품('21년 451건)의 시장출하를 사전 차단하고, 인증농산물 관리, 수출농산물 확대 등 정책과 연계한 안전성조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특히, PLS의 정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 결과 전년대비 부적합률이 0.3% 감소('20년 1.0% → '21년 0.7%)하였다.

'22년 조사물량은 6만건으로 계획하고, 농가 교육·홍보를 통해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예방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부적합품 유통 사전차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상시 관리하고, 전년도 부적합 발생농가나 외부 조사기관에서 부적합 통보된 농가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활성화

■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안정은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토양과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미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농식품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06년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시행 이후 안전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매년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GAP 시설보완사업을 통해 GAP 지정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GAP 인증에 대한 농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4년에 GAP 인증 절차를 간소화(구비서류: 12종→3, 인증기간단축: 최대126일→42)하였으며, '15년~'21년에는 대형마트·급식업체와 협업을 통해 GAP 농산물 판촉전 및 홍보캠페인 등 추진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마트 자체 품질관리 기준(QC)에 GAP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생산·유통 부분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과 민관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AP 홍보와 교육 목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전문강사 육성, 유통·급식업체MD·학교 영양사·도매시장 관계자 교육 실시, TV·라디오·KTX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생산·유통·소비 전 분야에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표 2-5-2〉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추진실적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인증기관(개소)	48	44	44	46	52	55	62	63	60
2) GAP관리시설(개소)	756	681	717	802	799	805	817	890	956
3) 인증 농가수(호)	46,000	46,323	53,583	74,973	86,091	86,789	99,050	114,264	119,824
4) 인증 면적(㎡)	58,703	58,763	65,410	88,859	103,270	101,815	112,106	126,986	132,32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평가 및 향후계획

유통의 국제화와 무역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존 정책사업과의 연계하여 GAP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마트, 급식업체 등 소비접점에서 GAP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GAP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GAP 인증 농가의 안정적인 수요처도 발굴·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GAP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관계기관, 농협, 유통·급식업체 MD 등 대상별 맞춤형 GAP 훈련·교육을 강화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내 GAP 농산물 전용 매대 설치, 온라인 광고 등을 활용한 GAP 캠페인 및 판촉전 개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GAP 인증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질적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단체인증 농가의 '내부심사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 검역정책과 사무관 박수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8년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해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림축산환경 유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구분하여 전담하게 함으로써 연구시설 관리에서부터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승인, 수입검사 및 국내 유통단계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은 연구시설 관리 및 위해성심사를 수행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검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생산승인 및 사후관리는 용도별로 사료용·농업가공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용은 국립종자원, 축산업용·미생물용은 농촌진흥청, 동물약품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업용 LMO 관련 연구시설 설치·운영 및 연구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연구시설을 매년 정기·수시 점검하여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책임자 및 취급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업용 LMO에 대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위해성심사를 수행하며, 그 외 용도의 LMO에 대해서는 작물재배환경 위해성협의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해성심사 신청자는 대상 LMO의 명칭·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주관 심사를 하고 해양생태계, 자연환경생태계 및 인체위해성에 대해 관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생태원,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협의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21년 12월 기준 콩 29종, 옥수수 89종 등 총 5작물 169종에 대해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완료하였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에서는 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분야별·품목별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기관에서는 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내에 수입되는 농림축산업용 LMO에 대해 수입승인된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입승인 품목이 아니라도 LMO 혼입이 의심되는 품목의 수입 시에도 LMO 검사를 실시하여 승인되지 않은 LMO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 '21년에는 9,179건, 11,529천톤('20년은 8,695건, 10,789천톤)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28건, 1.3톤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20년은 6건, 8톤)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용·농업가공용 LMO의 수입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유통조사를 통해 승인용도 외 사용 및 환경방출 여부 등을 조사·관리하고 있다. 매년 사료용 LMO 수입·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실태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LMO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NGO,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함께 취급업체 주변 낙곡 및 자생채 등에 대한 민관합동 모니터링('21년 141지점 중 3지점 LMO 발견·제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자체 상시 조사·점검을 통해, 취급관

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운송사고 등에 대해서는 LMO법 위반으로 고발조치('21년 2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용 LMO의 수입승인 및 유통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종자용으로 승인받은 LMO는 없다. LMO 혼입 우려가 있는 작물에 대하여 유통종자 검정('21년 콩 20건 등 7작물 89건을 조사한 결과, LMO 면화 6건 발견 및 폐기)과 전국 재배지 조사('21년 유채 524개소, 면화 150개소 총 674개소를 점검한 결과, LMO 면화 4건 발견 및 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 대상으로 파종 전 LMO 무상검사('21년 면화 4건, 유채 1건 조사한 결과, LMO 면화 1건 검출 및 폐기)도 지원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업용 LMO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해성심사를 실시하고, 수입승인 및 수입검사를 철저히 하여 승인되지 않은 LMO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국내 반입된 LMO는 운송 및 가공·유통과정에서의 취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비의도적 환경방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종자류 파종전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축산업용 LMO 취급업체 및 관련 단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올바른 LMO 취급관리를 독려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지속하여 LMO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5.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 및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양유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이 과거 양적인 부족시대에서 질적인 성장단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가 농식품 정책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생산이 곧 소비로 직결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농식품만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경쟁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고, 소비자는 소비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산·유통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 역량이 강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농식품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및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합리적 소비문화 조성 및 농업·농촌 가치 확산을 위해 중앙·지역간 역할을 분담하여 소비자 역량강화를 도모하였다.

중앙에서는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원산지표시제도 홍보 강화', 'GAP 소비자 리더 육성', '꽃 생활화 확산' 등 13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지자체에서는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비자단체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원산지표시제도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단체와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농식품 및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담당할 소비자 교육강사(농사랑알리미)를 100명 육성하여 총 575회에 걸쳐 9,869명의 소비자 교육(로컬푸드, 원산지표시, GAP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올바른 농식품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의 영양, 효능, 선택법, 대표적 요리법을 알리는 '제철 농산물 포스터'를 월별로 제작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지자체, 쌀 중심 식습관 교육학교, 보건소 등 1,607개소에 배포하고 있고, 농식품 주요 소비정책을 안내하는 영상제작,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한 소비자 참여 독자후기, 퀴즈이벤트 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농식품 소비자 정책포럼, 발전방안 워크숍, 소비자 단체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단체와 농식품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농정 현안 공유 등 소통·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농식품 소비정보망(웹) 활성화

'농식품 소비정보망(농식품정보누리, www.foodnuri.go.kr)'을 구축·운영하여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 영양, 가격, 활용법 등의 농식품소비·식생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를 확산에 기여하였다.

농식품 소비정보망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농식품 안전성, 영양, 농식품 인증 및 원산지 정보 등 다양한 농식품 정보를 체계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엄선된 농식품·식생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 유입을 촉진시켰다. 또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경험(UI/UX)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웹·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였다.

분기별(연4회) 제작·배포하고 있는 농식품 전문매거진 '농식품 소비공감'은 농식품 소비트렌드,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농촌체험 소개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활동을 돕고 농업·농촌 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1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인쇄사보 부문)('21.12월)을 수상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 과제를 정책협력·농정홍보·생산자 상생 3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농식품 정책 전반에 대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제철 농산물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국산 농산물 정보 제공과 소비촉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소비자 수요 및 편의를 고려하여 농식품 정보누리 웹사이트를 개편함으로써 농식품 정보망 운영 및 소비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소비자단체 협력과제 및 농식품 스마트 소비 사업을 통한 소비자 교육·홍보를 활성화하고, 제철 농산물 포스터 및 농식품 소비공감 배포처 확대와 농식품 정보누리 웹사이트 활성화를 통해 농식품 소비·식생활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6. 축산물 이력제 추진

■ 축산경영과 사무관 도재규

◆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국내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수입산 돼지고기, 국내산 닭고기·오리고기·계란까지 순차적으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8년 12월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국내산 쇠고기이력제의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수입산 쇠고기이력제를 시행하였고, 2013년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면서 국내산 돼지고기이력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까지 이력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AI 및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판매단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8.12월)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9.12.31.)하여 가금이력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가축거래상인이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토록 의무화하였다.

2021년에는 계란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 정보로 변경하기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로 계란 이력번호 발급, 선별포장 결과 신고 등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표 2-5-3〉 축산물이력제 단계별 운영현황('21.12월 기준)

구 분	농 장		도축장		전산신고 등록 유통업소		
	소	돼지	소	돼지	계	포장처리	판매
2019년	94,525	6,327	62	72	3,990	1,824	2,166
2020년	93,810	6,284	64	75	3,699	1,592	2,107
2021년	94,179	6,078	63	72	3,890	1,596	2,294

자료 : 이력관리시스템

◆ 평가 및 향후 계획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수입에서부터 도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단갑 판매 등을 방지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계란이력번호를 계란껍데기 정보로 변경하고, 개정된 계란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제도, 단속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그림 2-5-1〉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제2절 가축방역 및 동식물 검역검사 강화

1. 가축질병 방역강화

■ 구제역방역과 서기관 김정주, 사무관 조동호·이주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사무관 김석재

◆ 추진 배경 및 개요

국내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 산업에 피해가 커짐에 따라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구제역 〉

구제역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11차례 발생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생하였지만 발생기간과 살처분 가축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 안성 및 충북 충주에서 O형 구제역이 3건 발생한 이후 2021년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 2-5-4〉 연도별 구제역 발생현황

구 분	발생 건수(건)	발생기간(일)	살처분 가축수(천마리)
'14~'15년	188	162	173
'16년	21	45	33
'17년	9	9	1.4
'18년	2	7	11.7
'19년	3	4	2.3
'20년~'21년	0	0	0

구제역 예방을 위해 우제류 가축에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가 백신 접종 의 중요성과 올바른 접종 방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하고 있으며, 항체양성률이 낮은 곳은 추가접종과 방역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방역상 취약한 곳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또한, 겨울철 위험시기에는 발생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높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환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상시 축산차량의 이동정보, 축산차량의 농장 출입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

우리나라는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총 9차례 발생이 있었고, 2014년 이후에는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 '21/'22년 동절기에는 2021년 11월 8일 충청북도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21년 12월 31일 까지 4개 시·도에서 19건이 발생하였다. 야생조류에서는 총 71건의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그 중 저병원성이 54건, 고병원성이 17건으로 확인되었다.

〈표 2-5-5〉 연도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구 분	발생기간(일)	발생건수(건)	살처분 가축수(만마리)
'14/'15년	'14.1.16.~'15.11.15(517일)	391	2,477
'16/'17년	'16.3.23.~'17.6.19(170일)	421	3,807
'17/'18년	'17.11.17~'18.3.17.(121일)	22	654
'19년	비발생	0	0
'20/'21년	'20.11.26.~'21.4.6.(132일)	109	2,993
'21/'22년	'21.11.8.~'21.12.31.	19	26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어 축산차량·사람 등을 통해 가금농가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① 철새로부터 가금농장으로 확산 방지, ②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 차단, ③ 가금농장 간 수평 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차단방역을 추진하였다.

첫째,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조기 확인하기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103개소→109개소)하고, 고위험 철새도래지 인근 지점(260개)에 대한 축산차량과 축산관계자 출입통제 조치를 시행하였다. '21.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소독차량,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소류지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였다.

둘째, 야생조류·사람·차량 등에서 가금농장으로 AI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축종·방역취약 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현장지도와 컨설팅, 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2003년 이후 고병원

성 AI 발생 축종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축종(오리·산란계)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을 강화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10개소)에 대해 밀집단지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맞춤형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방역·소독실태 점검 및 농가별 폐사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았던 지역인 16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김역본부 전담관을 통해 관할 지자체와 산란계 농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도 실시하였다. 육용오리에 대해서는 입식·출하기간을 단축 운영(특별방역대책기간 3일 이내 → 고병원성 AI 발생시기 1일)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에는 일시적(11월~2월)으로 육용오리 농가 등을 대상으로 오리 사육제한 사업도 실시하였다.

셋째, 농장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즉시 검사 주기를 단축(산란가금·토종닭 : 월 1회 → 2주 1회, 육용오리 : 사육기간 중 2회 → 사육기간 중 3~4회)하고, 전(全)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검사체계를 운영하였다. 특히, '21년 9월부터 2주 단위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살처분 제외 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산차량·사람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에 관한 공고(9건)를 시행하여 AI가 농장 간 수평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정부는 동절기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면서 그간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방역시설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농가 지원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전에 없던 질병으로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에 발생하다가 우리나라에서도 '19년 9월 16일에 처음으로 양돈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21년까지 총 21건이 발생하였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화천 2건, 영월 1건, 고성 1건, 인제 2건, 홍천 1건이다.

〈표 2-5-6〉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예방적 살처분 포함)

구 분	발생일	발생 건수(건)	살처분 가축수(두)
2019	9.16~10.9 (24일)	14	124,301
2020	10.8~9 (2일)	2	2,851
2021	5.4, 8.7~25, 10.5	5	7,452

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도 100%에 육박하는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중국에서 첫 ASF가 확인되자마자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하고 양돈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관리 노력을 해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18년에 제정하고, '19년에 추가 보완하였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럽 발생국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19년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을 마련하고, ASF의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류폐기물 공급을 제한(돼지사료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19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19년 5월 북한에서 최초로 ASF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북한 접경지역 시군인 강원, 경기북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주요 도로 등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과 정밀검사, 현장 방역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년 9월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ASF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21년까지 총 21건('19년 14, '20년 2, '21년 5)이 발생하였으나, 발생 즉시 가축 질병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농식품부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였다.

특히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 및 인접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내 농장은 강화된 8대 차단방역시설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을 차단하였다. 또한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및 인근 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 및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역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발생 후 단기간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ASF는 현재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뿐아니라, 유럽 등 전세계에서 지속 발생 및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야생멧돼지와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는 상황이므로 현재도 방역당국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육돼지로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표 2-5-7〉 국내 야생멧돼지 및 환경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구 분	발생 건수(건)	발생기간	비고
야생멧돼지	964	'21.1.1~'21.12.31	멧돼지 폐사체 또는 포획개체
환경	-	'21.1.1~'21.12.31	토양, 수질, 분변 등 환경

〈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

소 브루셀라병은 *Brucella abortu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2004년부터 근절을 목표로 양성축 살처분과 거래 시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도태 등의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3년부터 브루셀라병 양성율은 0.1%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축 조기 색출을 위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증명서 휴대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브루셀라병 검사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18년 6월 고시를 개정하여 브루셀라병 발생농가의 도태규정을 보완(균분리검사에서 균이 확인될 경우 동거축 도태 권고 가능)하고, 발생농가 가축 재입식 전 소독상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염소의 유사산이나 3회 이상 반복 발생 또는 사육두수의 1/3이상 감염 등 감염위험농가에 대해 환경내 균분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생을 감소를 위한 발생농장·지역 중심의 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5-8〉 연도별 소 브루셀라병 발생현황(KAHIS)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마리수)	92(686)	63(622)	64(609)	126(784)	184(1,61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소 결핵병은 *Mycobacterium bovis*가 원인체인 세균성질병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결핵병은 만성 소모성질병으로 가축에게 있어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나 쇠약, 마른 기침 등이 나타나므로 농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표 2-5-9〉 연도별 소 결핵병 발생현황(KAHIS)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건수(마리수)	443(3,497)	427(2,789)	431(3,921)	279(2,696)	256(2,08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이에 따라 우리부는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16.11월부터 한·육우에 대한 결핵검사를 강화하였다. 한·육우는 종전 연30만두 수준으로 모니터링 검사만 하였으나 1세 이상의 거래되는 한·육우에 대해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여 약 120만두 이상('20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19년 7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결핵병 검사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도 검사 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발생 감소를 위해 발생지역과 농가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 전 소독 점검과 발생농장에 대한 도태 권고 규정 개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 소 해면상뇌증(BSE) 〉

소 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BSE)는 프리온이 원인으로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다. 국내는 비발생으로 '14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험무시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7년간 28만점 이상의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15~'21년까지 약 28만 83백점을 획득), 2003년부터 농장과 도축장에 사육(계류) 중인 가축에 대해 가축방역관이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BSE 발생국산 수입소와 해당 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F1)에 대해 검사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5-10〉 OIE의 위험무시국 지위요건(예찰점수 산정기준): 7년간 15만점 이상 검사(Type B)

Age (year)	정상도축 소 (Routine slaughter)	폐사 소 (Fallen stock)	사고 소 (Casualty Slaughter)	유사증상 소 (Clinical suspect)
1≤age<2	0.01	0.2	0.4	N/A
2≤age<4	0.1	0.2	0.4	260
4≤age<7	0.2	0.9	1.6	750
7≤age<9	0.1	0.4	0.7	220
9≤age	0.0	0.1	0.2	4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해면상뇌증(BSE)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를 위해 검사와 예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19년 9월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ASF의 사육돼지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농장내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정부 주도로 방역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축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농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민간 방역기관과 정부간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선진화된 방역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2. 동물 및 축산물 검역검사 강화

■ 검역정책과 사무관 이재명, 김지호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까지 유럽, 중국, 아프리카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구제역도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몽골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경우 유럽, 아시아 등 철새의 이동경로 아래에 놓인 국가들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들 질병 발생 국가들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유입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다수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축산물의 교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터넷 발전으로 인한 해외직구 등 국내 소비자 구매 형태 변화에 따른 수입국과 수입품목의 다변화로 가축전염병의 유입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ASF, 구제역, HP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 축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수입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국경 검역조치를 통해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ASF, HP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ASF, HPAI 발생국산 돼지고기,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ASF, HPAI 모니터링 검사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ASF 발생국산 돼지혈액 분말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20.10.9일 시행하여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ASF 발생국가(독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로부터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였다. 벨기에는 ASF 발생으로 인해 2018년도에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성을 회복하여 2021년 5월에 수입이 재개되었다. HPAI가 유럽에서 지속 발생됨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지속하였다. 11월에는 벨기에, 헝가리, 영국, 덴마크에서 그리고 12월에는 스웨덴에서 HPAI가 발생되어 수입을 중단하였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핀란드는 청정성을 회복하여 9월에 수입이 재개되었다.

ASF, HPAI 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국경검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ASF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위협 노선에 대해 탐지견 투입과 검역 전용 X-ray 총10를 설치하여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였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소독, 교육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 추진실태를 연중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불법 축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불법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내에 위치한 해외축산물 유통 판매 업체를 점검하였다.

수입사료를 통한 ASF 등 가축질병의 유입방지를 위해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ASF 발생국산 조사료를 수입할 경우 해외 수출작업장 승인 및 열처리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거쳐 2021년 5월 25일에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12월 3일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었다. 향후 국회의 심의가 완료 후 수입위생조건이 확정될 경우, 수출국 내 수출작업장 점검·승인과 검역증명서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5-11〉 수출입 등·축산물 검역 추진현황

구 분			'17		'18		'19		'20		'21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물	수출	마리	14,611	166,281	16,563	164,922	17,699	162,092	14,189	90,629	20,293	116,661
		군	-	-	-	-	-	-	-	-	-	-
	수입	마리	10,409	7,517,419	10,517	1,007,079	12,067	923,768	10,448	1,243,274	10,541	1,149,276
		군	2	204	-	-	1	200	-	-	1	3,500
	계	마리	25,020	7,683,700	27,080	1,172,001	29,766	1,085,860	24,637	1,333,903	30,834	1,265,937
		군	2	204	-	-	1	200	-	-	1	3,500
축산물	수출	톤	18,145	205,566	20,428	250,739	22,346	272,096	24,395	298,042	26,648	353,928
		천개	50	80	18	25	49	2,844	144	26,815	10	928
	수입	톤	197,402	2,918,096	241,244	3,022,317	235,326	2,982,334	152,208	2,810,849	165,424	2,889,773
		천개	687	4,764	480	1,713	474	1,624	323	1,628	1,679	3,093
	계	톤	215,547	3,153,662	261,672	3,273,056	257,672	3,254,430	176,603	3,108,892	192,072	3,243,701
		천개	692	4,844	498	1,738	523	4,467	467	28,443	1,689	4,021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한편, 해외로부터 검역 전용 엑스레이 및 검역탐지견을 활용한 검색으로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에서 압수된 불법 휴대축산물은 검역관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소각·폐기 조치하고, ASF, 구제역, HPAI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등의 검역조치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색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익방송 등 언론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시 여권 내 검역 홍보스티커 부착, 기내방송 등을 실시하여 국내 입국 시 휴대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공항·항만 동물검역기관에 신고 후 소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경검역관리시스템(KAQIS)이라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축산관계자 입국 신고율을 높게 유지하는 등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다양한 국경검역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해외 구제역, HPAI, 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를 WOAH 및 각국 검역기관 홈페이지,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파악중이며,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역 시스템을 강화·운영 중이다. 선제적인 국경검역 강화 조치로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공항·항만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경검역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주요 공항·항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함께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통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등에 대한 소독 등 검역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탐지견 투입과 X-ray 검색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외국 방문 시 축산농가 출입 자제 등에 대한 국경검역 교육 및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 위생정보에 대한 수집·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 국토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경검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수입허용절차의 진행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대국 수출 단계에서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강화를 통한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도착 시 철저한 수입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물 및 축산물 검역체계 제도개선 통해 수입검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식물검역 강화

■ 검역정책과 사무관 박수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1912년 수입과수 및 벚나무에 대한 검역을 시작으로, 전쟁 등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식물검역을 실시해왔다. 1900년대부터 2021년까지 91종의 외래병해충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1988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제정 후 2021년까지 약 1조 5191억원을 투입할 만큼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외래병해충은 그 유입시 농림업에 수확량 감소, 수출중단, 방제비용 증가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생태계 파괴 및 약제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에는 FTA체결국 확대 등에 따라 농산물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인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외래병해충의 유입 경로는 수입식물뿐만 아니라 기류, 선박·컨테이너 등 운송수단, 해외여행객이 무심코 가지고 입국하는 과일 등 매우 다양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한 국내 유입 차단과 정밀한 예찰 및 신속한 방제 실시로 국내 정착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수입되는 식물류는 철저한 국경검역을 실시한 후 우리나라로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수입 식물류는 도착지 공항·항만에서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하여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병해충 발생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또는 해외병해충 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입수하여 병해충 발생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주식물(寄主植物)에 대한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금지 품목은 과학적이고 정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국 현지에서 저온처리, 증열처리 등 사전 소독실시, 우리나라 검역관의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등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하여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객 및 우편·특송 이용객을 대상으로 식물류 물품의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검역탐지견 집중 투입 등을 통하여 불법 식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표 2-5-12〉 수출입 식물검역 실적(화물+휴대+우편식물)

구분	연도 단위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합계	건수	천건	3,579	3,904	4,249	4,211	4,959	4,618	4,876
수출	건수	천건	71	75	80	89	100	130	192	213	218
수입	건수	천건(C)	3,508	3,829	4,169	4,122	4,859	4,488	4,684	1,349	1,465
	검역처분	천건(D)	110	125	132	161	169	217	228	89	78
	처분비율	(D/C,%)	3.1	3.3	3.2	3.9	3.5	4.8	4.9	6.6	5.3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표 2-5-13〉 수입식물에서 발견된 병해충 실적

단위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종수	625	645	693	712	718	748	830
	건수	7,494	7,850	12,074	13,529	12,586	13,680	15,876	17,526	14,376
병	종수	115	112	135	107	108	121	109	125	120
	건수	1,342	2,025	3,398	3,894	3,512	3,840	4,356	5,551	4,148
해충	종수	510	533	558	605	610	627	721	717	636
	건수	6,152	5,825	8,676	9,635	9,074	9,840	11,520	11,975	10,228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

한편, 국경검역 단계에서 검출하지 못한 병해충과 기류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방제하기 위해 농경지(농촌진흥청), 산림지(산림청), 국제공항·항만·격리재배검역지·수출단지(농림축산검역본부)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예찰트랩 운영 및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정착·확산을 방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17년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붉은불개미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전국 공항만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무나무묘목, 크로톤묘목 등 붉은불개미 유입 우려 품목에 대한 검역 강화, 미가공 자연석 석재 및 중고 농기계·건설기계 등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뿐만 아니라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일반컨테이너(공산품 적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천항·부산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묘목, 대나무, 크로톤묘목, 조경용 석재 등의 수입화물과 평택항·부산항·인천항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를 발견하고 긴급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유입 확산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였다.

한편,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와 신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검역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16~'21년 딸기(태국·베트남·호주·필리핀), 배(태국·브라질·아르헨티나·콜롬비아), 토마토(캐

나다·페루), 심비디움묘·호접란묘·파프리카(미국), 쌀·파프리카(중국), 버섯류(브라질·멕시코), 다육 식물·참다래(대만), 거봉포도(호주), 인공씨감자(콜롬비아) 등의 수출검역 요건을 타결하였다.

또한, 기후변화, 농산물 수입증가 등 외래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농산물 수출활성화 및 검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 첨부 제외 사전신청, 병해충 의심신고 의무자 확대 및 수출검역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요건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울러, 현장검역 및 정밀검역 방법 보완, R&D역량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식물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매년 급증하는 검역업무량에 비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식물검역 업무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인력운용 효율화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나라로의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및 유입 시 조기 발견을 통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역시스템을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학계, 수입업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식물검역 강화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농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인적·물적 역량의 효율적 활용과 제도개선을 통해 식물검역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또한, 식물검역의 과학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위험분석 기능 보강, 첨단 검역장비 확충, 선진 검역기술 개발 등 식물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축산물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사무관 김강국

◆ 추진 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축 사육 단계부터 최종 판매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평가하여 그 위해요소를 사전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더욱 확대하여 식용란을 생산하는 부화장과 산양 농장에서도 HACCP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타 축종(메추리, 산양, 사슴)에 대해서도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단계에서 축종별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의 중복 항목을 조정하여 단일 평가표로 통합하였고, 닭·오리 농장의 평가항목에만 반영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축산농장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여 HACCP 내실화에 기여하였다.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총 100천여 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유해물질 잔류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그 결과 151두에서 항생제 등 잔류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는 2020년도의 잔류물질 검출률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부적합률은 미국·EU 등 선진국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도축장 위생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별로 매주 1회씩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및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식중독균 오염의 지표가 되는 살모넬라균의 오염여부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축산농장에서 HACCP 적용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4,079개소에서 2021년 7,160개소로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되면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및 원인조사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이와 함께 농가들이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적합을 줄이기 위해 지도·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정희선

◆ 추진배경 및 개요

EU와 OIE(세계동물보건기구)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20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 명문화가 추진되었으며, 20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 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EU는 화장품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2004년 화장품 완제품, 2009년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하였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2012년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2013년에는 돼지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OIE에서는 20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처분 등 9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20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육우 및 육계의 동물복지 생산시스템(Animal Production System)에 대한 지침도 추가 제정하였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지 않아 유기·유실동물 및 동물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고, 목줄·배설물 수거 등 동물소유자 의무 위반,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숫자는 바이오산업 등 활성화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실험의 정당성·유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동물실험 반대활동 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축산업은 그간 경제성·수익성 중심의 사양관리에 치중하여 여전히 동물복지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 추진 성과

2015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도입한 동물등록제를 20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였고, 2021년 기준으로 약 278만 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잃어버린 동물을 신속하게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동물등록제도를 통해 2021년 발생한 유기·유기동물 약 118천 마리 중 소유주에게 반환된 동물은 약 14천 마리로 집계되었다.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2012년 산란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 염소, 2016년 오리도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관리의무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내용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2021년 기준으로 190개 산란계농장, 131개 육계농장, 16개 양돈농장, 26개 젖소농장, 1개 한우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육류 축산물에 동물복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육과정 뿐만 아니라 운송·도축단계에서도 동물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물복지 운송차량·도축장 지정제를 2013년 10월에 도입하여 2021년 현재까지 7개 도축장과 225대 운송차량을 지정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부는 윤리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한 동물실험의 3R원칙(동물실험 대체, 실험동물수 최소화,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는 미성년자가 동물을 이용한 해부실습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하였으며, 동물해부실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불필요하게 동물이 희생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동물보호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유실·유기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창원 등 6개소에 약 5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령 및 관련 정책 이해도 제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초등학생,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SNS, 영화, 입양캠페인, 사생대회 등 동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정책에 관한 정보의 통합 관리·공개 및 안내를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및 동물보호 상담센터(1577-0954)도 운영 중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 보호·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령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 유기금지, 안전조치의무 등 소유자 의무 이행을 위해 지도·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유자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양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 서비스업 등록제(미용업, 위탁관리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서비스업 창업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제3절 친환경농업육성

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조정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업환경 개선·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의 목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중·소규모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유통·가공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995년에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 도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부터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대규모지구조성사업과 소규모지구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 대·소규모 지구사업을 개편하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업방식도 지역 영농기반과 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사업추진을 허용하고 사업비 또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06년부터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추진과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과는 별도로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광역단지 사업의 효율적 내실화를 위해 광역단지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합하고, 우수 단지·지구에 시설·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보완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 성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중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 부문에 해당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목적은 친환경농업의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통해 농약·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축하여 농업환경을 개선·보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생산자단체(엽·근채류, 과채류 등은 2ha, 5호 이상)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매

비용과 친환경농업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40~50%, 자부담 20~30%)하고 있다.

2021년까지 639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 및 농업환경 개선·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現 친환경농업지구('04~, 639개) 중 연접면적, 입지여건, 안정적 판로와의 연계 등을 평가하여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 친환경 비료 지원

■ 농기자재정책팀 사무관 이흥숙

◆ 추진 배경 및 개요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료를 과다 사용하여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감축·폐지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2-5-14〉 세계 각국의 비료사용량

(단위 : kg/ha)

	2006	2007	2008	2009	2010
한 국	257	340	311	267	233
미 국	117	124	121	104	108
캐나다	54	41	52	48	40
브라질	121	126	165	149	112
칠 레	334	357	399	457	438
호 주	48	40	41	34	29
일 본	323	309	326	259	219
중 국	370	392	434	415	432
영 국	271	252	252	207	238
프랑스	180	178	196	143	140

* 자료출처 : FAO

◆ 추진 성과

정부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 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7년 135만 톤 473억원을 2017년 320만 톤 1,6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2018년 이후 지원물량과 예산이 감소하여 2021년에는 226만톤 1,13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5〉 유기질 비료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09까지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물량	9,950	2,500	2,468	2,622	2,732	2,570	2,775	2,886	2,876	2,756	2,573	2,597	2,260
금액	4,426	1,450	1,250	1,434	1,613	1,603	1,600	1,600	1,600	1,490	1,341	1,341	1,130

유기질비료에 대한 국고 지원조건을 변경하여 2010년까지 포대(20kg)당 단가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2011년부터 등급제를 통해 지원단가를 차등하여 지원함으로써 비료 품질이 우수한 비료의 사용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였다.

〈표 2-5-16〉 유기질비료 지원조건(국고, '21년)

구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000		
부속 유기질비료(원/20kg)	1,000	900	700

* 지방비 : 600원/20kg 의무부담(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지자체의 농지에 포함된 유기물함량, 토양산성도, 토양검정시비처방 건수,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토양과 작물에 적합한 비료가 적정량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등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비료가격이 단기간에 102%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인상차액의 일부를 일시적으로(2008~2009)으로 지원하고, 2010년부터 화학비료 가격 보조를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전환하여 2010년 465천톤 600억원, 2011년 541천톤 298억원, 2012년 496천톤 19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농경지 토양검정 결과를 반영한 적정량의 비료 사용으로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도 생산량이나 품질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를 체험한 농업인이 농지와 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선택하여 적정량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완화는 물론 토양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퇴비의 품질등급제를 지속 실시하여 품질이 높은 비료에 대해 지원단가를 높게 지원함으로써 부속 유기질비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자체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토양의 지력 증진, 농업 환경보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시비처방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하고 효과를 홍보하여 농지와 작물에 적합한 비료가 적정량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박치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를 대상으로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인증은 3회, 유기인증은 5회, 유기지속은 영구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 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이다.

◆ 추진 성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에 대해 매년 57억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37천ha에 대해 6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에 대해 287억원, 2009년에는 90천ha에 대해 345억원, 2010년에는 93천ha에 대해 376억원, 2011년에는 72천ha에 대해 302억원, 2012년에는 49천ha에 대해 294억원, 2013년에는 38천ha에 대해 243억원, 2014년에는 26천ha에 대해 165억원, 2015년에는 26천ha에 대해 170억원, 2016년에는 26천ha에 대해 169억원, 2017년에는 27천ha에 대해 167억원, 2018년에는 29천ha에 대해 210억원, 2019년은 31천ha에 220억원, 2020년은 34천ha에 대해 232억원, 2021년은 36천ha에 대해 242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7〉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실적

(단위: 억원, ha, 천 호)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지급액	302	294	243	165	170	169	167	210	220	232	242
면적	71,766	48,921	37,080	25,383	26,100	26,444	26,853	29,370	31,197	33,904	35,657
농가수	88	60	45	30	29	30	30	32	33	35	3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2001년 전체경지면적의 0.2%(4,554ha)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4.9%(75,435ha)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도 2001년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0.2%에서 2021년에는 3.3%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그 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엄격한 대상자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침의 내용 중 일부를 개선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2009년까지는 1회 실시하였던 이행점검을 2회까지 실시하도록 시군구에서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올러 그동안 임야의 경우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고 관리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엄격한 대상 관리를 위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도 중 인증만료 예정인 농업인에게 인증연장 신청 고지와 함께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 통지 시 향후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여부 통지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오해의 소지를 줄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농약 및 유기재배 직불금 지급단가를 기존 지급단가의 약 50% 정도를 인상하였고, 유기재배에 한해 지급기간을 종전 3년(3회)에서 5년(5회)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는 유기재배 5년을 초과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재배 지급단가의 50%를 유기지속직불금으로 3년(3회)을 추가하여 지급하였다.

2013년부터는 이행점검 강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기간을 3.1~3.31까지(30일)로 단축하고,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단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사업대상자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친환경 인증 현황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신청 편의를 위하여 변경 항목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였으며, 이행점검 종료 이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농가의 직불금 수령 방지 및 관련 내용 확인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 통보절차를 추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친환경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단가를 인증단계별·품목군별로 차등 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도 지급기한 없이 영구히 지급하도록 개편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이 2021년 유기재배 면적에 대한 지급면적 및 지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을 통해 친환경인증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비료 사용량이 2004년 385kg/ha에서 2021년 286kg/ha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농업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유기인증 면적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직불금의 정책효과로 풀이된다.

4.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 친환경농업과 서기관 조재성

◆ 추진 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유통 효율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성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매취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급식의 필요성,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미래 소비자 육성 등을 위한 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용 절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추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사업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2006년 8.1억원 신규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16.2억원, 2008년 14.1억원, 2009년 20.6억원, 2010년 15억원, 2011년 13.6억원, 2012년 13.7억원, 2013년 14.6억원, 2014년 13.4억원, 2015년 15.7억원, 2016년 10억원, 2017년 22.9억원, 2018년 35.3억원, 2019년 39.7억원, 2020년 53.1억원, 2021년 49.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 7월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여 각종 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시장개척,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국가인증농식품지원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친환경농장 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친환경 가치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촉진 사업을 추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수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용자)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14년 252억원, 2015년 174억원, 2016년 219억원, 2017년 294억원, 2018년 250억, 2019~2020년 각각 225억원, 2021년 240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거래매취자금(용자)을 지원(2013~2015)함으로써, 물류센터에 입주한 친환경법인의 자금운용 부담을 경감하여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친환경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지원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로 농가의 안정적 판로 제공 및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의 조직화를 통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17년부터 농협,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도별로 1개소씩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유통조직육성을 지원하였다.

'17년 충남, '18년 충북, 전북, 전남, '19년 제주, '20년 강원, 경남, '21년 경기, 경북을 2년간 2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4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농가를 확대하고 품목별로 작부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동선별·출하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무점포 시장 및 오프라인 판매장(직거래장터, 직매장)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유통·판매 기능을 확충하여 광역단위 생산·공급 물류체계 구축을 유도하였다.

▶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제2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06~'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목적으로 소비지(경기 광주)·생산지(전남 나주) 거점지역 중심으로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원물 조달 및 공급체계를 마련하였다.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는 친환경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및 마케팅 활동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판매 촉진과 광역형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수도권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229, 지방비 251)을 투자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부지 69천㎡, 건축연면적 26천㎡(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경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12년 10월에 건립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산지중심의 차별화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수도권 등 대량소비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호남권(나주시)에 총사업비 278억원(국비 139, 지방비 139)을 투입하여 부지 30천㎡, 건축면적 14천㎡ 규모로 추가 건립을 추진, 2017년 하반기에 건립하여 운영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친환경자조금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조절·가격안정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지역단위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지역 내 친환경농식품 소비 확대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및 공공급식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한편, 생협과 친환경전문점의 판매역량 강화 및 대형유통업체·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친환경농식품 판로를 확대하고 가공업체 원료구매 지원, 친환경소재 R&D 등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해외 농식품 정보 제공 및 동등성 인정협정 등 수출 기반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기업·정부가 협력하여 친환경농식품의 환경가치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강화 등 친환경농식품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계속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인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동언

◆ 추진 배경 및 개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2007년 도입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 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및 소득 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 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지원대상 축종은 2013년까지 한우(육우)·젖소(우유)·돼지·산란계(계란)·육계(토종닭)·오리·오리알에서 2014년에 메추리알·산양(식육·유)을 추가하여 총 9종이다. 2015년도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하여는 지급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지급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고, 2020년도부터 유기축산물 출하 실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며,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18〉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 지급단가(2021)

(단위 : 원/개, 마리L)

구 분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	산양유
유 기	170,000	50	16,000	10	200	400	20	4/10	4,584	34

주 : 육우는 한우의 50%금액, 토종닭은 육계의 30%금액 지급, 메추리알 산양·산양유는 무항생제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은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친환경축산물 농가수 및 출하량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2017년 8월 일부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사건을 계기로 2018년부터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신규 무항생제 인증농가를 제외하고, 기존 인증농가는 2019년까지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직불금 지급 농가수 및 지급액은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하였다. 2020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형 직불금 중 선택직불금의 일환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로서, 무항생제 인증농가가 완전히 제외되면서 유기축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 아래의 표에 2020년 수치가 이전 자료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 2-5-19〉 친환경 축산물 인증 현황

(단위 : 호, 톤)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 가 수	10,845	8,275	7,799	8,223	7,675	6,115	6,193	104	124
출 하 량	934,627	738,362	831,638	1,058,250	1,328,750	956,222	1,002,814	48,224	50,585

〈표 2-5-20〉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 지급 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 가 수	1,314	2,032	1,903	1,741	1,485	1,244	1,209	32	29
예 산 액	10,025	16,283	17,257	17,257	16,653	16,653	15,665	1,585	1,585
지 급 액	9,995	16,205	17,159	17,254	15,165	13,426	12,530	745	646

◆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금은 2009년 최초 도입 이후 2016년까지 전체 친환경축산물 농가수 및 출하량의 증가와 함께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무항생제 인증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무항생제축산물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2021년까지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친환경 축산 확대를 위해 2020년부터 유기 전환 컨설팅 및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1년에는 유기 인증 농가가 약 20%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2022년에는 유기 전환 컨설팅을 확대하여 유기 인증 후에도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축산물 판매 플랫폼을 통해 인증 축산물을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 축산 인지도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또, 유기축산물 생산·소비 과정에서 창출되는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유기축산물에 대한 직불금의 규모와 단가를 보완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6장 식품산업 선진화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을 통한 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1.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이주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세계 식품시장은 '21년 기준 8.1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IT 시장 2.0조 달러, 자동차 1.6조 달러와 비교하여 약 4~5배 큰 규모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식품시장도 '20년 기준 식품산업 총 매출액이 약 265.8조원(식품제조 125.9, 외식 139.9)으로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 유명 식품기업들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 시장 창출과 사회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두고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령 인구,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른 기능성 건강식품, 즉석식품 등 새로운 식품 시장이 창출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에 필요한 실용화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기준 국내 식품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20)은 0.41% 수준(全산업 평균 1.36, 제조업 2.61)이며, 우리나라의 식품 R&D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대비 82.4%('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내 식품기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91.6%('20) 수준으로 투자 기반이 영세한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수준이 미흡한 주요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민간 분야의 자율적 R&D 투자 확대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 식품분야 연구개발은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에 '20년까지 총 3,251억원을 투자하여 식품산업 경쟁력강화 및 K-Food 성장을 견인하였다.

'21년에는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10~)과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사업('19~)이 추진되었으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은 일몰 연장 및 재기획을 통해 '21년 예산이 확대('20. 172억원 → '21. 313억원)되었고,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사업은 '21년까지 추진된 후 종료되었다.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은 미래대응식품, 식품 품질안전, 차세대 식품가공, 5G기반 식품안전생산기술개발 등 분야에 신규 투자하여 식품 분야 기술 수준 향상 및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축하고 있다.

〈표 2-6-1〉 식품 연구개발 투자 분야

내역	주요내용
(1) 미래대응식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식품 개발 지원
(2) 식품 품질안전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공급을 위한 식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술개발 지원
(3) 차세대 식품가공	신식품 시장 확대(최소 가공, 급속 냉해동 등), 저비용·신가공 기법 수요 증대, 차세대 식품 포장기술 발전 등에 대응 가능한 첨단 식품 가공기법 개발
(4) 5G기반 식품안전 생산기술개발	인력부족, 경영비 상승 등 중소 식품업 현안 해결을 위한 5G 기반의 고효율저비용 식품 생산·제조 등 스마트 식품 공장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
(5) 맞춤형 혁신식품개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신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이나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
(6) 천연안심소재 산업화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웰빙 수요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학 첨가물 대체 천연첨가물 등을 개발

'21년에는 총 85개 과제에 313억원(기평비 포함)을 지원하였으며, '21년 이전에 선정되어 연구 중인 39개 계속 과제에 117억원과 신규 과제로 유망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46개 과제를 선정하여 187억원을 지원하였다. 신규과제 중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기관을 모집하는 '지정공모과제'는 30과제 157억원 규모, 연구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여 응모하는 '자유응모과제'는 16과제 29억원 규모이다. 사업별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은 208억원, 49개 과제(신규 46개, 계속 3개) 규모,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사업은 '21년 105억원(종료과제 36개) 규모이다.

특히, '21년에는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 대체식품, 맞춤형식품,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유망식품 지원을 강화하고, 가공·포장분야 핵심기술 확보 및 스마트 식품 제조를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지원하였다.

또한, 과제 기획, 우수 연구 수행기관 선정,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성과 중심으로 R&D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산업계 대상 기술개발 동향 정보 제공 및 R&D 세제지원 확대도 적극 추진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미래시장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제조기반 강화 등 식품산업의 인프라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 R&D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신시장 창출 및 식품기업의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다양한 R&D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2022년은 국내 식품업계 수요, 다국적 기업과 주요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고려하여 식품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최영조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 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도농 간의 소득 및 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자생적 발전에 한계가 있어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발표 등 농어업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식품산업은 IT·BT·NT 등 첨단기술과의 접목, 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201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하고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정부는 2013년까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지정하였으며 '22년 현재 448개 업체를 선정하여 정책금융, 마케팅 등 내수시장 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농공상 용합형 중소기업 유형 및 지정현황〉

지정년도	업체 유형별 지정현황				계
	전략적제휴형	농어업인경영형	공동출자형	네트워크형	
2020년	119	112	1	2	234
2021년	98	111	0	5	214
계	217	223	1	7	448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 2년

〈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유형 〉

- 공동출자형 : 농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중소기업 설립
- 전략적제휴형 :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원료조달,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 농어업인경영형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가공단계까지 경영을 확장하여 가공식품, 미용제품 등을 생산
- 네트워크형 : 원료·자원 이용, 기술 개발, 생산·제조, 마케팅·판매 각 기능의 신축적 조합이 가능한 협력·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능에 따라 협업 추진(2019년 신규 유형)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농산물 수급조절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우수한 지역기반형 식품기업을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으로 선발하여 육성함으로써 지역식품산업 발전 및 지역농산물 유통·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육성’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의 협력모델 및 구체적인 지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의 동반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기업이 상호협력하여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여 성공사례 도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이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3. 전통 발효식품산업 활성화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윤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전통식품 산업의 규모⁷⁾는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식품산업 시장 규모(96조원)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인가구 증가, 가정편의식품 보급 등으로 장류, 김치 등 전통 발효식품 소비가 다소 정체된 상태이고, 전통식품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신상품 개발이나 연구, 품질개선 등의 투자가 어려우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국내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발효식품의 중요한 요소인 유용 미생물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품질개선과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발효 원료를 기반으로 한 소스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으로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식품명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육성하여 우수한 전통식품 문화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유통소비 촉진 등으로 전통 발효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 추진 성과

전통 발효식품 육성을 위하여 유용 균주를 활용한 전통식품의 품질관리 및 신제품 생산 지원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장류·발효차·발효음료 등 분야에서 미생물의 개발 및 연구와 전통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및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장류 등 소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 익산에 소스산업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김치·떡한과 등 품평회와 세계 각국에 코리아페스티벌을 개최, 코로나19에 대응한 온라인 전시 판촉전 등을 통한 전통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지원 등으로 전통식품의 소비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수한 전통식품의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하고 시음할 수 있는 김치, 쌀엿강정, 막걸리 등 체험키트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전통식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후대에도 전통 식문화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육성 중에 있다.

7) 2019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종업원 수 10인 이상)

▶ 전통 발효식품의 소비 기반 확대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장류, 식초, 떡·한과 등 품목별 세분시장 조사, 김치실태조사 등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기초 정보와 통계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치 품평회, 요리경연대회,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개최, 식품명인체험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전통 발효식품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 중 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베트남, 영국 3개국에서 김장 축제를 개최하여 세계인이 함께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년 김치의날(11.22.)이 제정되면서 제1회 김치의날 행사를 통해 우리의 김장문화와 김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확대 등 전통식품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산 김치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브랜드 9점을 선정하여 TV홈쇼핑 입점을 통한 매출 확대와 홍보를 지원하였으며, 고구마죽·장류·육포·전통주 등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문화상품 11개 제품이 선정되어 해외홍보 등 국외 인지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을 통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홍보하고, 전통방식의 조리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알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했던 '이음'을 종로구로 이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차·한과류를 활용한 카페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전통식품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있다.

▶ 전통 발효식품의 산업기반 마련 등 경쟁력 강화

중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통해 장류, 식초 업체에 국내 토착 균주를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품질관리가 쉽고, 균일한 제품개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상품개발, 포장재 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 마케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발효차·발효음료, 장류 등 유용미생물 연구 및 기업 맞춤형 제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하여 남해안권발효미생물산업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HMR 가정편의 지향형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장류를 기반으로 한 소스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내 소스산업화센터를 통해 소스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레시피개발 및 상품 개발, 상품화 및 기반기술 개발 지원, 소스산업관련 정보제공, 산학연 네트워크 운영 등 소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대하고 있다.

▶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활성화

우수한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등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잊혀져 가는 전통식품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육성 중에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은 '94년 전통주 5명을 시작으로 2021년 가리구이, 고사리나물, 작설차 등을 제조가공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명인 3명을 신규 지정하면서 현재까지 총 79명의 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식품명인은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 활동과 전통식품 기능 시연 등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전통을 국내외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식품명인 전수활동을 장려하고 후대에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19년부터 전수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명인 전수자 70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및 간편편의식 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식품의 소비는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품질 관리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전통식품 시장 규모를 국내외에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제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전통식품 육성 및 식문화 보전하고, 김치품평회·요리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전통식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월드페스티벌을 통해 해외에 김장문화를 알리는 등 국내외에서 전통식품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 지향적인 소비패턴에 맞추어 전통식품의 품질관리, 인프라 구축, 연구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품평회, 페스티벌 등 국내외 소비자 맞춤형 판촉 및 홍보 등 추진으로 전통식품 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4. 전통주 등의 체계적 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조용형

◆ 추진 배경 및 개요

2021년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출고액 기준으로 약 9조원으로서,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 등은 전체 술 시장의 13.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품질 고급화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09.8.26.)하였으며,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10.8.5. 시행)하여 우리 술 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통주 등 산업진흥기반 조성,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품질 고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양조용 우수 발효제(효모, 누룩) 보급 실시

우리 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양조용 효모·누룩을 보급하여 품질 표준화와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간 전통주 업체에서는 대부분 수입산 제빵용 효모와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누룩을 사용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풍미를 다양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5년부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전통누룩 추출 양조용 효모(10종)와 씨누룩(17종)을 우리 술 제조업체에 무상 공급해왔다. 양조 전용 효모 및 누룩 보급사업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지고, 우리 술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지원 사업 실시

전통주 산업을 6차 산업화하여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의 우수 양조장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품질 관리, 홍보, 스토리텔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과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21년도에는 4개소(술아원, 모월, 장희, 하미양)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46개 업체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되었다.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된 업체들은 관광객 체험행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방문객의 현장 구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증가하였다. 정부는 각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양조장을 적극 발굴하여 2022년까지 50개소의 ‘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농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개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 술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그 해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류 5개 주종별로 우수 제품 3점씩(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총 15점과 최고의 제품 1점(대통령상)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최고의 상인 대통령상에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화양의 ‘풍정사계 춘’이 선정되었으며, 시상식은 11월 19일에 개최되었다.

우리술 품평회에서 수상한 제품은 온·오프라인 판촉 기획전, 유통업체 및 바이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그리고 국내·외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최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우수한 우리 술을 한 자리에 모아 소비자와 생산·유통업체가 어우러져 다양한 술을 즐기고 소통하는 대표적인 술 축제이다.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온라인(sool-fest.com)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약 35만명의 소비자가 우리술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며 우리 술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우리술 대축제는 소비자에게 우리 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려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에게는 타 업체와 교류를 통해 품질 고급화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술 산업이 지속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 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우리 술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 술 품질인증제 활성화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술 품질인증제는 2010년 8월 5일에 시행되어 한국식품연구원을 인증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2012년에는 술 품질인증대상 품목에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를 추가하였고, 2016년에 기타주류를 추가하여 현재 총 8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제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어 우리 술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전통주 갤러리를 통한 우리술 홍보

정부는 2015년 2월, 서울 인사동에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통주에 대한 전시·체험·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통주 갤러리’를 개관하였으며, 한식진흥사업과 연계 및 젊은 소비자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2021년 11월 서울 북촌의 한식문화공간 이음으로 이전하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는 전통주에 대한 무료 전시, 교육, 시음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내방객을 위하여 외국어 안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유통·외식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통주 취급 및 판매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방송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특별 세미나도 개최하여 전통주 문화 확산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통주 갤러리에서 진행되던 상설시음회 운영은 중단되었으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4월부터 시음회를 일부 재개하여 지속적인 소비자 관심을 유도하였다. 재외공관 대상 전통주 구매 매뉴얼제작·배포를 통해 전년대비 61.5% 이상 증가한 총 21건의 재외공관연계 전통주 홍보행사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전통주 홍보·자문의 구심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술 품평회 및 대축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술 품질인증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등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 술 품질을 고급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하여 우리 농식품 산업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우리 술 품질향상, 소비 촉진 및 유통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사무관 강종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수산물 분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의 농림수산물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은 '21년 기준 8.1조 달러 규모로 아시아·태평양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IT 시장 2.0조 달러, 자동차 1.6조 달러와 비교하여 약 4~5배 큰 규모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국내 식품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로 R&D 투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마케팅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1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업원 10인 미만인 업체가 약 91.3%를 차지하고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30~65% (국가과학위원회), 매출액 대비 R&D 투자규모는 0.6% 수준으로 선진국(1.6~2.6%)의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일원 약 232만㎡의 부지에 식품기업과 식품연구소 등이 집적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식품연구소, 식품 관련 대학, 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건축비만) 648억원을 투입하여 3대 핵심 기술지원센터 등 6개 H/W를 구축하였고 R&D와 인력양성 등 기업 기술지원(SW)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이루어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08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왕궁면 일원)으로 선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조 조성하고 그 사업시행은 LH 공사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7.15.)

2009년에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09.11월)와 지자체의 문화재 지표조사 및 3대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를 거치고, 2010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 산단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중앙·지자체·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2011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로의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11.2월)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직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을 신설하였다.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LH 공사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요청('11.12월)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2013년 하반기 중 토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2014년 3월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6개 기업지원시설은 2016년 10월 준공하였고, 2017년 12월 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년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보조금 지원 및 기관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시행('20.2월)하고, 지원센터의 기관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지원시설 외에 HMR기술지원센터('21.4월),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21.12월), 구축 완료하였고, 기능성식품제형센터('22.4월), 청년식품창업센터, 기능성원료은행을 구축 중에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1.12월)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감면, 그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최대400억원) 및 토지 분양 시 5년 무이자 및 선납 할인을 통한 기업부담 경감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외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투자유치관 운영 및 투자유치 전문 홍보 등을 통해 '21년까지 국내기업 113개사 및 외투기업 1개사와 분양을 체결하여 산업용지 기준 65.2%(973천㎡/1,493㎡)의 분양율을 달성하였다.

특히 '21년 글로벌식품기업존 내 유보지역을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중견기업인 천일식품 등 2개사(99천㎡, 752억원)를 유치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도기업과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인 바, 투자유치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원료·인력·관측·수출 등 비즈니스분야와 제품개발·공정개선·시제품생산 등 기술분야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첨단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지원 시설 외에 농식품 원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HMR지원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과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식품기업 대상 기술지원사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 추진

■ 식생활소비진흥과 사무관 양유진

◆ 추진 배경 및 개요

최근 서구적 식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바쁜 현대인의 생활 패턴,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수반된 불균형적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와 같은 생활습관병 발생이 늘고 있다. 풍족해진 식재료들은 과도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매년 7조원에 이르는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 식문화의 우수성 및 중요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먹거리가 다양해졌으나 먹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 농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실정이다.

- * 비만인구비율(19세 이상) : ('05) 31.3% → ('10) 30.9 → ('15) 33.2 → ('18) 34.6 → ('19) 33.8 → ('20) 38.3
- * 당뇨병(30세 이상) : ('05) 9.1% → ('10) 9.6 → ('15) 9.5 → ('18) 10.4 → ('19) 10.4 → ('20) 11.8
-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연간) : ('05) 약 3조 400억원 → ('13) 약 6조 7천 → ('18) 약 11조 5천
-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연간) : ('05) 약 6천억원 → ('15) 약 8천억원 → ('20) 약 9,720억원
- * 수입식품 대비 국산 농산물에 대한 지불 의향(성인, 수입식품 가격=100) : ('19) 111.7 → ('20) 111.4 → ('21) 113.1

* 출처 : 1)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 (비만 유병률·당뇨병 유병률)
2)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3) 환경부, 쓰레기 총량제 현황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이에 2008년 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식생활교육지원법」은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 국가 식생활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장)
- 식생활 조사·연구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10.2월)하는 한편, 제2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15.2.25.)를 거쳐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15~19) 수립(15.2월), 제3차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심의(20.1.10.)를 거쳐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였다.

특히, 관계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합동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마련(16.3월)함으로써,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보급하던 식생활지침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천가능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환경·건강·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취약계층과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람 중심 교육 실시,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지속가능한 식생활 확산으로 우리 농식품 소비 기반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자·임산부 등)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 농업·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21년 기준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은 315개소(19, 265개소), 식생활교육기관을 65개소(19, 6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대상 미각교육과 초·중학생을 위한 어린이자립형 식생활교육 지원, 식생활교육 취약계층(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 장애어린이) 대상 식생활 교육 사업, 교육대학교 등 미래 예비교사 대상 식생활교육 역량 강화 사업, 고령자 대상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식생활교육주간(9.11일 주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식생활교육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바른 식생활·식습관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에 따라 미래세대부터 고령자까지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른 식생활·식습관 실천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바람직한 농식품 선택능력을 배양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식생활로 함께 하는 농업, 건강한 국민, 포용하는 사회 실현이 가능하도록 식생활 개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7.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소비 활성화

■ 식량산업과 사무관 박성용

◆ 추진 배경 및 개요

쌀 생산량은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쌀 소비량은 가구구조 변화(단독·맞벌이 가구 증가), 먹거리 다양화 등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인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쌀가공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 쌀 수요 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쌀 소비 시장의 안정을 꾀하여, 주식인 쌀에 대한 이해와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쌀 소비 활성화 사업을 2003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초기에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 대상으로 하여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중심으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소비자단체, 관련 협회 등과 함께하는 아침밥 먹기 캠페인, 영양사 등 전문가를 통한 쌀 요리 레시피 개발·보급 등을 통해 쌀 중심의 식생활을 장려하였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간편식 시장 확대에 따라 쌀 = 밥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식자재로서 쌀에 대한 홍보와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12.5월 시행)하여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제1차 기본계획'(14~18)에 이어서 '제2차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19.6월)하여 추진 중에 있다.

'21년에는 쌀에 대한 품종정보 등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는 등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올바른 소비문화를 알리는 한편, '쌀 맛나는 학교' 운영을 통해 쌀 중심의 바른 식습관 교육을 진행하였다. 또한, '쌀이 옴(All)-다!'라는 표어를 주제로 캠페인 광고영상을 송출하여 쌀의 건강, 영양학적 가치를 전달하고 쌀과 쌀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미래세대가 재미있고 쉽게 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이·체험을 위한 '어린이 직업 체험관'을 운영하는 한편,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여 아침 먹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쌀 소비를 유도하였다.

쌀가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매년 400억원 규모의 시설·개보수·운영 자금 등을 용자 지원하고 있으며, 국산 가공용 쌀 가격을 인하하여 특별공급하는 등 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경쟁력 있는

쌀 가공식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쌀가공품 품평회(TOP10)를 ‘통해 우수 쌀 가공식품 10종을 선정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판매망을 이용한 판촉·홍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정책으로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013년 56백만불에서 2021년 164백만불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공밥, 떡류, 곡물 가공품 등 간편 식사용 가공식품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향후 미래세대, 청년세대에 맞는 쌀 중심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초등학생 대상 쌀중심 식습관 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해 아침결식률을 완화할 예정이며, 쌀 기념일 연계 홍보(데이마케팅)를 통해 쌀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박람회 참가 등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 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 수출진흥과 서기관 장다운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FTA 확대 등 개방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용 농식품은 생산 및 유통 과정에 있어서 HACCP, ISO, GAP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가 요구되므로, 농식품 수출은 국내 농식품의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즉, 수출은 고품질 안전 농식품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농식품과의 경쟁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내로 유통될 물량을 해외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출에 따라 국내 유통 물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수출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해 본 결과,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유발계수(0.848)는 조립가공제품(0.649), 건설 분야(0.804)보다 높고, 신선농산물과 음식료품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정밀기기 분야에 비해 각각 3.5배,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15 및 고용표 2019). 이처럼 농식품 수출은 국가전체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증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농가 소득증대 및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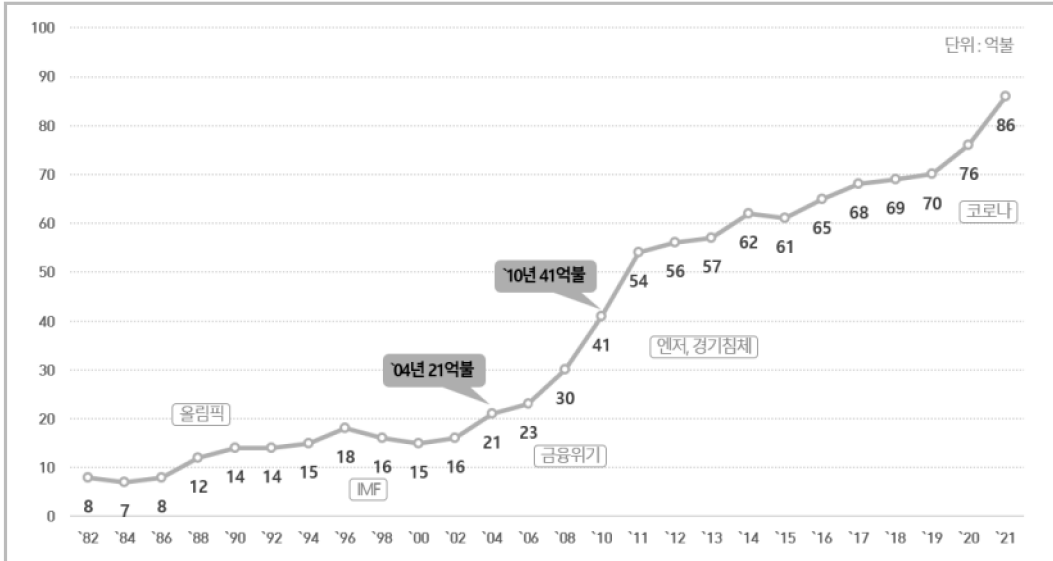
그 밖에도 식문화 전파를 통해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농어업의 자신감 회복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고른 수출 증가 및 신남방·일본·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 확대에 따라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85.6억 불을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농산물은 2020년 대비 12.1% 증가한 16.0억 불, 가공식품은 13.4% 증가한 69.6억 불을 기록하였다.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최초로 합산 수출액 1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김치(1.6억불)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2-6-1〉 연도별 농식품 수출액



* 농식품 수출액 : ('80) 11.7억 달러 → ('00) 15.1 → ('05) 22.2 → ('10) 40.8 → ('18) 69.3 → ('19) 70.3 → ('20) 75.6 → ('21) 85.6

〈표 2-6-2〉 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률 (B/A)
농식품 합계	6,182.7	6,104.0	6,465.0	6,826.5	6,925.7	7,025.7	7,564.3	8,558.2	13.1
○ 신선농식품	1,153.7	1,035.9	1,109.4	1,095.3	1,276.0	1,381.2	1,428.2	1,600.3	12.1
○ 가공식품	5,029.0	5,068.1	5,355.6	5,731.2	5,649.7	5,644.5	6,136.1	6,957.8	13.4

주요 국가별(권역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신남방(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일본(6.4%), 중국(17.7%), 미국(4.8%), EU·영국(19.5%)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골고루 증가했으며, 신남방 지역의 경우 베트남(14.8%), 인도네시아(36.0%) 등이 수출 확대를 주도하였다.

〈표 2-6-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ASEAN	EU+영국	신북방
1) '20년 수출액(백만 달러)	1,422.1	1,339.6	1,263.5	1,768.4	456.0	314.7
2) 국가별 비중(%)	16.6	15.7	14.8	20.7	5.3	3.7
3) 전년대비 증가율(%)	6.4	17.7	4.8	19.2	19.5	29.0

* 1억달러 이상 수출국(18개국) :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대만,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 캄보디아

2021년 농식품 수출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하였다. 수출업계의 어려움은 적기에 해소하고 수출 확대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출업계와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노력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주력품목으로 육성해온 딸기, 포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동남아와 중화권 국가에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딸기, 포도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딸기의 경우 그동안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여왔으며,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하여 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계속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가 확대되고 건강·간편식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K-Food 소비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수출기업의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티몰 등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개설하고 유망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식품이자 해외 수요가 높은 김치는 해외 연구결과 등을 활용해 효능 등 우수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라면·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은 한류 연계 홍보를 강화하였다.

한편, 선박 부족, 항공·선박 운임 상승 등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대응하였다. 예를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물류난 해소를 위해 HMM과 협업하여 농식품 전용 선박(선박 적재공간)을 운영하였으며, 주력품목인 딸기는 대한항공과 협업하여 주 수출시장인 싱가포르와 홍콩으로 딸기 수출 전용항공기를 운영하였다.

◆ 향후 계획

2022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시장 확대 트렌드가 계속되고, K-팝·드라마 등 한류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난과 운임 상승 등 영향이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는 수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우선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을 규모화·전문화하기 위해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을 확대하고, 조직 자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 정비,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딸기,

포도 등 주력품목은 수출유망 신품종 육성, 우수재배법 보급, 한국산 차별화 마케팅 등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고, 고급 유통매장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 등 신유통채널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 한국식품관을 11개소까지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역량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문인력을 매칭하는 등 자생력을 높인다. 코로나19 이후 화상 상담으로 전환하여 개최하였던 수출업체-바이어 수출상담회는 테마별 상담회 등으로 정례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국가별 선호 매체와 전략품목 등을 고려하여 유망매체(동영상플랫폼, SNS 등)를 활용한 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올리, 전세계적인 한류 확산 트렌드에 따라 K-팝·드라마 등 한류콘텐츠와 연계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드라마 등 한류콘텐츠를 통해 수출유망 농식품을 홍보하고, 범부처 합동 한류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식품, 간편식 등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고, 신남방·유럽 등 유망시장 개척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김치, 장류, 인삼 등은 해외 수요에 맞춰 상품을 현지화하고, 기능성 등 한국산 제품만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류 영향으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신남방, 유럽 지역의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별 여건에 따라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러-우 사태 장기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수입식품 방역조치 강화 등에 따른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수출업체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운임상승에 대응해서는 국적 운송사와의 협력을 통해 농식품 전용 선박·항공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 세계화

■ 외식산업진흥과 사무관 박준민·한재석·박태준·김지훈

◆ 추진 배경 및 개요

정부는 '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⁸⁾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중 한식 분야는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⁹⁾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식 조리법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19년 8월에는 한식 진흥·확산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식진흥법」을 제정, '20년 8월 법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한식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식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1년 3월에 외식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그 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12년부터 2차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식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09년 4월에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 세계화 5대 전략」¹⁰⁾을 마련하여 국내와 해외로 나눠 9대 중점과제¹¹⁾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 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09년 4월 7일 한식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 민간 참여적 한식 세계화

8)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 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의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9)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 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10) 5대 전략 : ①인프라 구축 ②R&D 확대 ③인력양성 ④기업투자 활성화 ⑤식문화 홍보

11)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밥·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스타 한식당 육성 ④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한식 이미지 제고 ⑧한식 문화 알리기 ⑨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 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10년 3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본격적인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식재단을 설립하는 등 한식 세계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13년까지는 지금까지의 한식세계화사업이 한식을 해외에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국내 한식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확산을 병행(two-track)하는 방향으로 한식 정책의 틀을 전면 전환하는 '한식진흥 발전방안'을 마련('14.1월)하여 지역별·분야별로 특색있는 우리 음식을 발굴·표준화하고, 한식 홍보영상·요리법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문화적·역사적 한식 원형자료 D/B화·자원화 등을 추진하는 등 한식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문화와 한식을 접목하는 '한식진흥 정책 강화방안'을 마련('15.10월), 한식문화관 조성('16.4월) 및 운영을 통해 한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식 진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식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 등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21년까지 뉴욕, 동경, 상해, 연변, 홍콩, 파리, 런던, 시드니, 오克兰드, 자카르타 등 해외 11개국 21개 도시에 해외한식당협의체를 결성하고, 한식 홍보행사,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한식급식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국제행사 시 한식 오·만찬 제공, 한식 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21년에는 높아진 한국과 한식의 위상에 따라 해외 한식당에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152종의 물품 개발하여 23개국, 55개소 현지 한식당에 보급하였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한식스타셰프 양성, 궁중음식, 향토음식 등 '단기교육과정('12~'18, 1,562명)'과 '한식 교·강사 역량강화 교육과정('18~'21, 187명)'을 운영하였다. 또한, 이전에 해외 학교에 한식 강좌를 개설하거나 호텔셰프를 초청하여 교육했던 것을 '19년부터는 국내 한식 인력을 직접 해외 교육기관과 호텔에 파견하여 국내 한식 인력의 해외 견문을 확대하고 현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온라인 매거진('한식읽기 좋은 날') 발행과 한식포털 운영을 통해 대국민 한식 접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종목으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한식 정책 추진에 따라 15개국, 17개 도시 대상 한식의 해외 인지도는 '12년 44.7%에서 '21년 55.9%로 상승하였고, 만족도는 '12년 47.5%에서 '21년 94.5%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외 한식당 수 증가¹²⁾와 함께 우리 전통장류(된장·고추장·간장) 수출¹³⁾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해외 한류실태 조사결과

12) 2009년 : 9,253개소 → 2020년 : 9,923개소(111개 도시 기준)

13) 2010년 : 2만 1,000톤 → 2020년 : 4만 3,000톤

(2021)”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콘텐츠에 “한식”이 포함(3년 연속 2위)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로 한식이 1위였으며, 한식의 브랜드 파워 지수 역시 1위로 “한류”의 확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식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세계적인 미식가들의 가이드북, “미쉐린 가이드”에서도 한식은 약진했다. '21년에 해외에서 미쉐린 별을 받은 한식당은 8개소로 '10년 전무했던 것에 비하면 한식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식의 세계적 위상 강화를 통해 국내 한식 기업의 해외 진출도 '09년 28개 업체, 116개 매장에서 '21년 65개 업체, 839개 매장으로 증가와 함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은 코로나19에 따른 현지 영업정지 및 국가봉쇄조치 등의 사유로 규모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간 외식산업은 낮은 진입장벽과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양적 성장이 지속되었으나 소상공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혁신 역량 및 창업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생존률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20년 1월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액 감소와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 외식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었다.

외식업계의 경영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년부터 '21년까지 2차례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창업준비, 경영부담 완화, 외식 소비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및 각종 정보제공 등 외식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선 외식업계 경영비용 부담 완화하고 국산 식재료 구매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융자) 금리를 0.7%p 인하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계를 돕기 위하여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지원사업(669억원)을 추진하였다. 외식업지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개 지구를 선정하고 포상과 인센티브를 지원하였다. 또한,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을 추진(34개조직, 19억원 구매)하여 외식업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외식업체 958개소에 대해 경영 개선을 위한 배달·포장 메뉴 개발 및 배달 운영 관련 컨설팅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다.

안정적인 청년 창업을 위해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매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운영(7개소)하여 51개팀 190명이 실제 외식업 경영을 경험하였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내 유희공간을 활용한 공유주방 시설 조성·운영 사업을 도입(5개소)하여 청년 외식창업의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외식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사업, 온라인을 활용한 기업간 정보공유 및 현지 바이어 투자 상담회 개최를 지원하였고,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국내외 외식 트렌드, 외식업체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등 외식 소비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제공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년부터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식사문화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21년 12월 기준 안심식당 41천개소를 지정하여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그간 한식 정책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성장하며, 한식당·한식체험시설 등 저변확대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농식품 수출확대 등 민간경제 활성화 지원에도 노력하여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21년에는 김치 수출액 159.9백만불, 전통장류 수출액 82.4백만불을 차지하며, 농수산물 수출액이 수출 사상 최초 100억불을 넘어 113.7억불을 달성하였다.

또한 '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외국인 한식 체험 확대를 위하여 밀키트 12종을 개발하고, 온라인 한식 체험 영상 콘텐츠 50편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는데, 브라질의 경우 모집인원 대비 10배가 넘는 신청 사례가 확인되는 등 좋은 호응이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2년도에는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한식의 국내외 확산,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한식 진흥의 거점 역할이 기대되는 '한식문화공간 이음'의 개관 및 활성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등 새롭게 주어진 과제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외식산업은 양적 성장이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 최저임금 상승, 식재료 가격 불안정 등에 대응하여 외식업계 경영안정과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비 절감, 청년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외식경기와 업계의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2년부터는 글로벌 외식산업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외식업계·학계 종사자·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확산 지원, 글로벌 외식기업 육성,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및 식재료비 등 비용절감 및 위기대응 가이드 발간·배포,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등 창업 지원을 통해 외식업계의 경영안정 및 생존률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IV. 누구나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

제7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활력 증진

제1절 농어촌 복지여건 개선

1.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농촌정책과 서기관 송현주

◆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WTO,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고령화, 과소화되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위원회'를 구성·운영('04.12월)하였다.

법정부 차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으로 복지·교육·생활인프라 등 농어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간 공공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여전하고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여건의 개선이 미흡하여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느낄 수 있는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였다.

〈표 2-7-1〉 도시-농어촌 서비스 차이

구 분	도 시	농어촌
약국 비율('21.9월)	85.3%(20,134개소, 동지역)	14.7%(3,463개소, 읍·면지역)
보육시설 설치 비율('21)	82.8%(27,514개소, 동지역) 97.4%(어린이집이 있는 동의 비율)	17.2%(5,732개소, 읍·면지역) 64.5%(어린이집이 있는 읍·면의 비율)
상수도 보급률('20) (지방·광역상수도 보급률)	99.7%(특광역시) 99.2%(일반시·군 동지역)	80.7%(면지역)

(자료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보건복지부 2021 보육통계, 환경부 2020 상수도통계)

〈표 2-7-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20~'24)

부문	서비스항목	세부내용
보건의료·복지	진료	차량을 이용하여 30분~1시간 이내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능하다.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교육·문화	초·중등교육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에 도달할 수 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등학교·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문화	차량을 이용하여 40분 이내에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도달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도서관	차량을 이용하여 10분 이내에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정주여건	주택	주민 누구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한다.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 비율을 23% 이상으로 한다.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하수도	군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8%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하여 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행정리 내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하 “대중교통수단”이라 한다)을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섬에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이 1일 왕복 1회 이상 운항된다.
	생활폐기물	행정리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경찰순찰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장소·시간에 대하여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을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센터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1년 1회 이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6% 이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치의 최소 기준을 설정·관리하는 제도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0~'14) 기본계획 수립('09.12월)으로 제도의 도입·운용 계획이 구체화되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0.7월)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11.1월)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2년부터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였으며, '13.9월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 부문 “경찰 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도록 하는 등의 서비스 기준 개정을 추진하였다.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15~'19) 기본계획 수립('14.12월)으로 기존의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과 매칭될 수 있도록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수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19.12월)하면서 국토부 기초생활 인프라 기준을 반영하여 접근성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목표를 달성한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적 생활SOC 확대 계획에 맞춰 3개 항목(체육시설, 도서관, 생활폐기물)을 신설하는 등 서비스기준 항목을 4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개편하였다.

◆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표2-7-2>에서 제시한 국가최소기준의 최근 수치를 공식통계, 행정조사, 부처협조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과정이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통계수치를 사용하였으나, 자료의 공개가 늦게 이루어지는 일부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자료는 기준연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부 농어촌서비스 기준 항목(노인복지, 문화, 상하수도 및 난방)의 경우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는 이전연도의 자료로 분석된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21년에는 먼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 4개 분야(①보건의료·복지, ②교육·문화, ③정주여건, ④경제활동) 19개 항목을 26개 세부기준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평가('21)하였다.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19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

교육, 노인복지 항목, 교육·문화 부분의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 정주여건 부분의 주택, 난방, 방법설비 항목 등 12개 항목이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충족하였다. 정주여건 부분의 생활폐기물,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경찰순찰, 소방출동(측정방식변경) 항목, 경제활동 부분의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 등 8개 항목이 아직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부문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복지와 교육·문화 부문은 모든 항목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정주여건 및 경제활동 부문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항목이 다수 있었다. 보건의료·복지 부문에서는 진료, 응급의료,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교육 등 4개 항목,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등 5개 항목,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주택, 난방, 방법설비 3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순찰, 소방출동 6개 항목,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 보건의료·복지 부문: 진료, 응급의료,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에서 모두 목표 달성
 - 모든 주요 과목이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30분~1시간 이내 진료 가능: 평균 22.7분 (농어촌 시군 64.0% 목표 달성)
 -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이내 응급처치 서비스 가능: 평균 14.6분 (소방서가 있는 127개 농어촌 시·군 모두 목표 달성)
 - 영유아가 보육·교육을 위해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20분 이내 이용 가능: 평균 9.0분 (농어촌 시군 93.5% 목표 달성)
 - 농어촌 지역 80% 이상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전체 농어촌 시·군 100% 서비스 제공(농어촌 139개 시·군 목표 달성)
- 교육·문화 부문: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 목표치 달성
 - 초·중학교까지 10분 이내 도착 가능: 평균 7.3분 (농어촌 시군 70.5% 목표 달성)
 - 거주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 가능한 농어촌 읍·면 지역 70% 이상: 79.1% (농어촌 시·군 74.1% 목표 달성)
 -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을 40분 이내 이용 가능: 평균 24.0분 (농어촌 시·군 96.4% 목표 달성)
 - 국공립도서관을 10분 내 이용 가능: 평균 9.9분 (농어촌 시·군 57.5% 목표 달성)
 - 생활체육시설을 30분 내 이용 가능: 평균 17.0분 (농어촌 시·군 97.8% 목표 달성)
- 정주여건 부문: 주택, 난방, 방법설비 항목 목표치 달성,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경찰출동, 소방출동 항목은 미달
 - 환경부 기준 석면소재 슬레이트 주택수는 '14년 대비 30.7% 감소(통계 생산의 한계로 농어촌 시·군 단위 목표 달성 여부 파악 불가)
 - 상수도 보급률을 85% 이상 유지: 80.6% (농어촌 시·군 44.2%가 목표 달성)

- 하수도 보급률을 76% 이상 유지: 74.6% (군 지역 47.6%가 목표 달성)
-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68% 이상: 69.4%(읍이 있는 136개 농어촌 시군 중 33.1% 목표 달성)
- 모든 농어촌 법정리에서 1일 3회 이상 버스 이용 가능: 87.3% (농어촌 법정리 87.3%가 목표 달성)
- 마을 내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가능: (영농폐기물) 농어촌 읍·면 75.2%, (생활 폐기물) 농어촌 행정리 18.8%
- 행정리 주요 지점에 방법설비 설치율 60% 이상 유지: 71.3% (행정리 단위 자료 구축이 가능한 133개 농어촌 시군 중 65.4% 목표 달성)
- 모든 탄력순찰 대상 지역에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을 제공: 90.8% (목표달성 농어촌 시군 없음)
- 화재발생 신고 후 지역별 목표시간 내 현장 도착비율 70% 이상 유지: 65%(농어촌 시·군 56.8% 목표 달성)
- 경제활동 부문: 창업·취업컨설팅 교육 항목 목표치 미달성
 - 시·군 내에서 창업·취업컨설팅 교육 제공 비율 86% 이상 유지: 65.5% (농어촌 시·군 68.8% 목표 달성)

◆ 평가 및 향후계획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4) 수립을 계기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점검평가 항목을 개편하며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생활SOC 확충 정책과도 정합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기준의 시설 공급 조건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부 항목을 추가하고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목표치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결과는 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취약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점진적인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 농촌정책과 서기관 송현주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 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농어촌이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은 도시와 비교해 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계절제 근무, 경제활동인력의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면서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이 결정('09.12월)되었고, 이후 농어촌 영향평가로 제도명을 변경하여 세부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거쳐 '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영향평가의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11.7월) 제2차 삶의 질 계획기간에 농어촌 영향평가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9개 부처와 9개 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평가의 경우 총 8개 정책('11년 2개 정책, '12년 2개 정책, '13년 4개 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통해 도농 간 비교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평가 종합 및 개선 과제를 발굴하며,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14년에는 '11~'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에 대한 추수 평가(follow-up assessment)를 실시하여 영향평가 제도의 유효성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나 정책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영향평가가 이루어져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체평가의 경우 '13년에 4개 중앙부처와 9개 도에서 일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호응과 수행의지가 적어 관련 부처나 지자체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15년도에는 사전영향평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 부처나 지자체의 정책 수립 시 농어촌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법·제도 및 추진 기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전의무화 전면 도입 이전에 전문지원기관을 주축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개선된 영향평가 제도에서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라는 이원화는 유지하되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농어촌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사전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즉, 영향평가의 정책 개선에 관한 시의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삶의 질 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현장자문단을 활용하여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15년은 2개 이슈[주거급여 개편, 지방교육재정 개혁]에 대해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를 수행하였으며, '16년은 4개 이슈[농촌 일자리 지원사업, 그 역할과 개선과제는?', '대체·전환복무제도 폐지가 농어촌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공중보건의사제도를 중심으로)' 등]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17년에는 농어촌 영향평가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농어촌 영향평가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법령상 영향평가제도의 운영지침에 대한 수립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였다. 본 지침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를 제시하였고, 영향평가의 수행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에서는 삶의 질 위원회가 영향평가 수행과정에서,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 결과 및 정책 환류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관계 부처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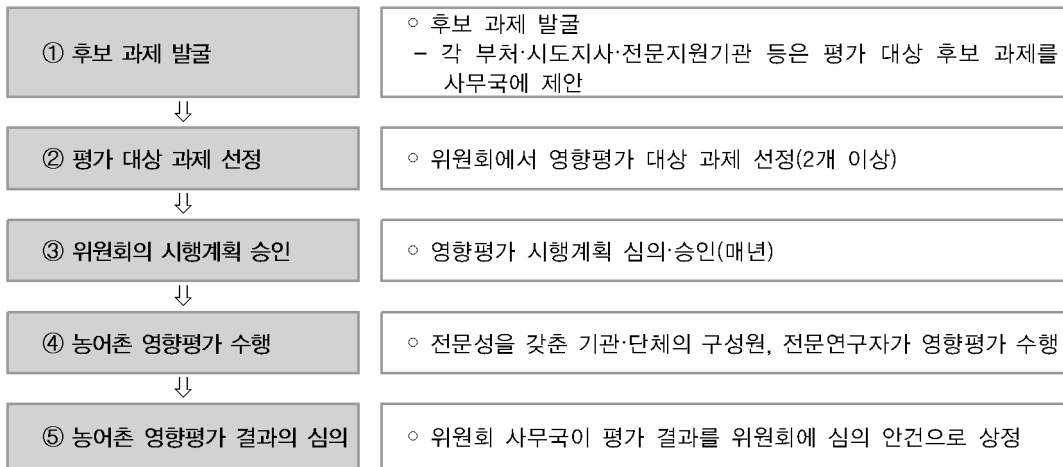
'18년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외에,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의 취지에 따라 정책 이슈를 제기하는 '농어촌 영향평가 추진을 위한 주거·교통·교육 부문 이슈와 과제'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년에는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지침(안)'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작성하였다.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에서 제시한 영향평가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는 관계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장, 전문지원기관 등에게 제안을 받아 선정하며, 삶의 질 위원회가 심의하여 승인하도록 한다. 이후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구성원, 전문연구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위원회는 농어촌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실과 현황,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조정 등의 사안을 협의하도록 지원한다. 영향평가 대상

정책 소관 부처와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농어촌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향후 소관 부처는 해당 후속조치의 이행 결과를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20년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 고시하였다('20.10월). 고시에서는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매년 2개 이상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1년에는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농촌형·도시형 교통모델 개선'의 과제 2건에 대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삶의 질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표 2-7-3〉 농어촌 영향평가 운영 지침에 따른 수행 절차



◆ 향후 농어촌 영향평가 계획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통해 정책 수립 시 농어촌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 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생략된 채, 전문지원기관 중심의 개별적인 연구 수행 형태로 추진되면서, 관계 부처가 영향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비된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영향평가 준비 단계에서 관계 부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환류도록 하여 영향평가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홍경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었으며,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과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다. 또 2004년 1월에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써 연금 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표 2-7-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실적

연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 고 지 원 율	28%	28%	28%	28%	28%	0~28%	0~28%	0~28%	0~28%	0~28%	0~28%	0~28%
월 평 균 지 원 세 대 (천세대)	435	413	402	387	368	351	335	326	318	314	325	338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1,626억 (4.3% ↑)	1,718억 (5.7% ↑)	1,704억 (0.8% ↓)	1,789억 (5.0% ↑)	1,838 (2.7% ↑)	1,730 (5.9% ↓)	1,682 (2.8% ↓)	1,686억 (0.2% ↑)	1,695억 (0.5% ↑)	1,515억 (10.6% ↓)	1,700억 (12.2% ↑)	1,727억 (1.6% ↑)

* 2020년부터 어업인 부분은 해수부로 이관하여 지원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그동안 국회 및 감사원에서 지적한 ‘고소득·고액재산가가 더 많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하였다(15.1.28.). 동 법 시행을 위해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15.3.24.)하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준을 구체화하였다.(15.7.29.) 즉,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자 중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부터 2,500점까지의 소득·재산 상위 5~1%까지는 정액지원(14,078 세대 지원축소),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인 최상위 1%(3,630세대)를 지원제외함으로써 보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연간 85.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의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등급체제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를 내실화하였다.

그동안 정책 수혜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시 농어업인 확인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4년 12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산망 연계를 완료하고, '15년 1월 경영체등록농가에 대한 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 면제를 통해 지원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11만명의 농어업인이 서류제출 면제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별도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약 13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표 2-7-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0년~'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등급 (기준소득 월액)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730천원	790천원	850천원	910천원	910천원	910천원	910천원	970천원	970천원	1,000천원
지원금액 (월/원)	9,900~ 23,400	9,900~ 27,900	9,900~ 32,850	9,900~ 35,550	11,700~ 38,250	11,700~ 40,950	12,150~ 40,950	12,600~ 40,950	12,600~ 40,950	13,500~ 43,650	13,950~ 43,650	14,400~ 45,000

* 1995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의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2020년부터 어업인 해수부로 이관하여 지원

〈표 2-7-6〉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단위 : 억 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73	731	793	888	861	984	924	1,238	1,403	1,638	1,751	1,759	1,777	1,963	1,746	1,751

◆ 평가 및 향후 계획

▶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소득감소 등으로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고, 가입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우미옥

◆ 추진 배경 및 개요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UR타결 등으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도 2학기부터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무이자로 학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인 대학생 본인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자녀, 취약계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이 국고출연금으로 위탁·운영중이며, 2016년부터는 기존 정부 출연금 재원을 활용하여 별도 국고출연금 없이 학자금 용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15,419명을 대상으로 373억원(상환금 채용자액 포함)을 지원하였다.

〈표 2-7-7〉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국고 출연금	융자 현황	
		지원자수(명)	융자금액(백만원)
1994~2015	568,138	550,431	1,246,407
2016	-	28,974	68,042
2017	-	25,797	60,477
2018	-	21,614	50,555
2019	-	15,220	35,738
2020	-	15,354	34,994
2021	-	15,419	37,251
합 계	568,138	672,809	1,533,464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은 사업시행 이래 수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선, 도입 당시에는 학기당 융자 한도액이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확대하였다. 2001년에는 학기당 150만원, 2003년에는 2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학교에서 통보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 주민의 대학생 자녀 이외에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원격대학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지원 시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고, 2011년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수혜자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4년에는 장기연체자의 회생을 지원하고, 상환율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3자의 융자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농업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였고 일반/취업후 상환 대출을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으로 전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8년 2학기부터는 ‘거치·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하여 기존에 졸업 후 2년 거치, 1년 상환하는 방식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씩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경제적 여건에 따른 상환규모 조정으로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등 학자금 대출지원 확대를 위한 신청편의성 제고 및 상환제도 개선을 도모하였다.

2019년 1학기부터는 농어촌융자 전환대출을 융자심사 완료 후 학생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전환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장애·사고 및 질병에 따른 상환 유예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 일반학자금대출 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모든 재학생 대상에게 농촌 학자금융자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 지원대상에 코로나19 실직·폐업자를 추가(6월~)하고, 연체 3개월 이상·만기 경과·부실채권 보유 채무자의 신용보호를 위하여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021년부터는 대학 및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농어촌지역 이·통장 협의회에 안내자료 배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였고, 농가인구 감소와 농어촌 지역 인구소멸지역 증가 등 수혜인원 감소에 대비하여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폐지하여 심사기간 단축(20영업일→15영업일) 및 신청기간 확대(10영업일→15영업일)하는 등 고객 편의를 크게 개선하고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실직·폐업자의 상환유예를 최장 3년까지 연장하고, 농어촌 채무자의 학자금융자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연배상금률을 0.5% 인하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대학 및 농촌 지역의 고등학교, 농어촌지역 이·통장 협의회, 농업 관련 최대 교육 포털인 농업교육포털 및 농업기술포털인 농사로 등에 안내자료 배포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 학자금융자 채무자의 학자금융자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실직 및 폐업자 상환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채무자의 신용보호를 위하여 농촌연체 3개월에서 1개월 이상·만기 경과·부실채권 보유자로 변경하여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한 상환유예 유형을 통합하여 신속한 심사를 추진하고, 지원기준과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여 상환유예 제도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출자 및 단기연체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환안내를 실시하여 장기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내실화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5. 여성·취약농가 지원 확대

■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우미옥,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홍경희

◆ 추진 배경 및 개요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보육시설 등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젊은 농업인들이 도시로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양육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사고나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2005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 97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동식놀이교실 13개소를 지원하였다.

〈표 2-7-8〉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실적

(단위: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10	21	25	27	28	29	29	37	54	97
이동식 놀이교실	2	3	-	3	2	3	3	6	7	1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80천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2006년에는 65세 미만,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7년에는 69세 이하, 2009년은 70세 이하, 2010년은 75세 이하, 2013년은 80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에는 연령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20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2011년에는 5일 이상, 2013년에는 3일이상, 입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고, 2021년에는 16천 농가에 90억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 사업을 추진하였다.

행복나눔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고령가구, 다문화 가정,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대 12일간 가사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행복나눔이의 1일 활동비 15천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20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20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20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65세 이상 부부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였으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에 대한 가사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부처간 협의를 통해 '14년부터 지원을 재개하였다. 2021년에는 10천 가구를 대상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눔이를 지원하였다.

〈표 2-7-9〉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예산현황

(단위 : 천호, 백만원)

연 도	계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지원농가수	지원금액
2010	33	6,520	13	5,460	20	1,060
2011	28	6,520	14	5,460	14	1,060
2012	25	6,300	15	5,460	10	840
2013	25	7,140	15	6,300	10	840
2014	26	7,560	16	6,720	10	840
2015	32	8,589	17	7,140	15	1,449
2016	32	8,589	17	7,140	15	1,449
2017	32	8,589	17	7,140	15	1,449
2018	29	8,589	15	7,252	14	1,337
2019	31	9,947	17	8,330	14	1,617
2020	29	9,342	16	7,840	13	1,502
2021	26	10,115	16	8,960	10	1,155

*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재조정

◆ 평가 및 향후 계획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농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 특성에 맞는 보육정책을 추진중이다. 농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개소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비 확보 등을 위해 선정기간을 앞당기는 등 농촌보육여건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행복나눔이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수준 확대

■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이교남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 중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작업 관련 사고가 빈발하여 농업인도 '20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다.

정부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2012년 3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공제사업에서 보험사업으로 변경)을 1996년부터 도입·운영(보험료의 50% 국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에는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안정망을 확충하였으며, 보험료 산출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전년대비 약 10%의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였다. 2019년에는 2020~202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11월)을 통해 예방사업 실행체계 및 환류시스템을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안전재해 예방 기반을 구축하였고 특히, 영세농(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50%→70%), 현장 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 상품 및 제도 개선

2021년에는 직장(산재·어선원 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 중인 겸업농도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 및 가입자 수('20년: 65.2%, 875천명 → '21년: 66.4%, 900천명)가 증가하였다.

▶ 사업 홍보 강화

농업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기획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을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까지 9,431억원의 장해·사망 보험금 및 치료·입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 2-7-10〉 농업인안전보험 추진실적

(단위 : 천건, 억원)

구분	합계	'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계약건수)	18,774	9,906	817	803	807	784	776	744	710	807	845	875	900
지급보험금	9,431	2,988	446	474	516	488	478	477	525	653	780	803	80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NH농협생명(주), 농업보험정책금융원

향후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매년, 농진청)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상해질병치료금·휴업급여금 한도 확대 등) 및 지속적인 제도개선(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통한 보험금 수급권 보호 및 장해·유족급여금 연금방식 지급 등)을 통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농지연금 활성화

■ 농지과 사무관 복옥규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고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노후생활은 불안정한 여건에 놓여 있다. 이에,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을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추진 성과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사망하는 등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환 또는 농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농지연금의 채무(월 지급금 등)를 회수한다.

2021년까지 총 가입건수는 19,178건이며, 총 8,496억원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가입한 농가가 받는 평균 월 연금액은 농가당 95만원이고, 평균 연령은 73세로 나타났다.

〈표 2-7-11〉 농지연금 사업 추진실적

구분	가입(건)	평균 연금액(천원)	담보농지(㎡, 백만원)	
			평균면적	평균평가액
계	19,178	950	3,753	189
종신형	9,303	897	3,867	239
종신정액형	5,856	893	3,878	221
전후후박형	1,207	1,006	3,763	230
일시인출형	2,240	848	3,895	292
기간형	9,875	1,000	3,646	141
기간정액형	9,802	1,000	3,642	141
경영이양형	73	1,011	4,137	116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농업인 노후생활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7년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 등 연금 수령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적은 연금액에 대한 불만 해소를 위하여 2018년 농지연금모형 재설계 연구용역을 실시, 2019년 담보농지 평가를 상향(80%→90%) 및 기초변수 조정(기대이율 4%→3.65%) 등을 통해 연금액이 인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농지연금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가입연령 완화(만65세→60세), 우대상품 도입(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월지급금 추가 지급), 중도(부분)상환 제도 도입 및 상품변경 허용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현장밀착형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통합형 지역개발 및 농어촌 산업육성

1. 농촌 종합개발

■ 지역개발과 서기관 정문기

◆ 추진배경 및 개요

'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사업을 추진해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 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0년부터 국토를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3차원으로 구분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광역발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을 22개 단위사업(시도 자율편성사업 18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4개)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광역화·효율화·자율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0년부터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 즉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신규마을 조성,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확대하고 역량에 맞는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년부터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만들기', '시·군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인프라'의 유형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개편, '18년에는 '시·군 역량 강화' 유형에 '현장포럼', '재능나눔' 편입 및 '농촌신활력플러스' 유형 신규 추진, '19년에는 '농촌중심지활성화'를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농촌다움복원',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신규 추진, '20년에는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형공공임대주택' 등의 사업을 지방이양하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 역량 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0년부터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협약'을 도입하였다.

〈표 2-7-12〉 일반농산어촌 123개 시·군

구분	해당 시·군
경기(10)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강원(9)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3)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1)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표 2-7-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세부유형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150억 + α
기초생활거점조성	기초생활거점조성	○ 지원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등 ○ 지원조건(5년 이내, 국고 70%, 지방비 30%) - 40억 + α
시·군 역량 강화	시·군 역량 강화	○ 지원내용 - 마을역량진단,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중간지원조직 등 ○ 지원조건(1년, 국고 70%, 지방비 30%) - 3억원 + α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촌신활력플러스	○ 지원내용 - 다양한 자원 및 민간 자생조직 활용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 지원조건(4년, 국고 70%, 지방비 30%) - 70억

〈표 2-7-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능별 세부사업내용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 기반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 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지역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부대사항	기획 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확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기초계획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0년부터 '14년까지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 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으나, '15년부터는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대체하여 포괄보조계획의 법정계획화를 유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 추진 성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정주체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및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으로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복지·소득 증진, 농어촌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생활 환경 개선, 마을개발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시·군 스스로 통합적인 중장기 농촌계획의 수립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중장기 비전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체계를 단계적·통합적으로 개편하여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 확산을 유도하였으며,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시민의 귀농·귀촌 유인에 기여하였다. '21년에는 123개 시·군 681개 사업에 6,259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하였다.

'20년에 도입한 농촌협약과 관련하여, '20년에 12개, '21년에 20개 시·군을 선정하여 이듬해에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7-15〉 20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계	535,875	625,857
세종	2,804	3,448
경기	21,513	25,334
강원	24,386	28,369
충북	45,308	57,147
충남	58,788	77,182
전북	83,222	90,731
전남	95,066	103,715
경북	109,185	124,958
경남	84,931	103,494
제주	10,672	11,47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예산실명서

◆ 평가 및 향후 계획

포괄보조예산으로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각 시·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사업 대상 선정 및 투자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마을개발사업의 통합적 지원과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지역경관 개선,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치분권 강화로 마을만들기사업 등 배후마을 정책 개발기능이 '20년부터 지방이양됨에 따라 하나의 정책 대상인 정주생활권에 대한 추진 주체가 이원화되어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 간 상충, 중복 투자 등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 농촌 주거환경 개선

■ 지역개발과 사무관 성순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불량주택의 정비와 생활 여건이 열악한 취약지역(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신축, 증축 등) 할 때 필요한 건축비를 저금리 융자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조정에 의해 197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도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된 지역이 여전히 존재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위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15년도 신규사업(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협업)으로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의 안전·위생 관련 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 정비(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등), 주민역량 강화, 휴먼케어 활동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추진 성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조성하여 연간 7천동 수준을 지원하며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 확대 지원을 위해 2018년부터 재원을 5,500억원('17년 5,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 등을 할 때 소요되는 건축비를 용자·대출 지원하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하는 세제 혜택이 있다.

〈표 2-7-16〉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

구분	내용 (상세 내용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사업 대상자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사업 대상 주택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용자·대출 지원 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 2억원 이내 / 증축·리모델링(대수선 이상) : 1억원 이내
금리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
상환 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세제 등 혜택	주택에 대한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자료: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지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관련 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 정비(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등), 주민역량 강화, 휴먼케어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표 2-7-17〉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대상	30가구 이상이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40%이상이거나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40% 이상인 마을(행정리)
지원 금액	국비 기준 지구당 15억원 내외 지원(지방비 30% 매칭)
지원 내용	(안전확보) 재해(산사태 등)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인프라) 상하수도 지원, 재래식 개량 및 공동 화장실 확충 등 (주택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빈집 정비, 노후불량주택 수리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사업 홍보 등 일자리·문화복지 분야 활동 (역량강화) 주민 공동체 활성화·참여 확대, 사업 후 자활 등 도모

자료: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지침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기초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3~4년간 추진하며 '15년 첫해에는 지자체의 공모를 통하여 55개 지구(마을)를 선정하여 국고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원을 지원하였다. '21년까지 391개소(누적)에 3,553억원을 지원하였고 '21년에는 신규 지구 8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계속지구를 포함하여 885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7-18〉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신규지구 누적
지원 개소 (신규 / 계속 지구)	55 (55/0)	99 (44/55)	134 (35/99)	79 (0/79)	107 (72/35)	177 (80/97)	247 (177/70)	391
국비 지원 금액(억원)	300	385	535	380	453	615	885	3,55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5~'21년 선정 319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빈집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27,171가구, 51,584명이 주거환경개선의 혜택을 보게 된다.

◆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새 집을 마련하고,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여 마을 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지역 주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하며 살 수 있도록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3.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손경자

◆ 추진배경 및 개요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 및 코로나19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부는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CT를 농식품 분야에 적용하는 등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기반으로 하는 드론, AI트랙터 등이 농업인을 대신하거나, 작물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등 최첨단 농업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위성 및 항공 영상을 활용한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2017~)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보조금 관리,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한 부정수급 차단 강화,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 농정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 분야 지능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 등 데이터 기반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스마트 팜 보급 확대를 통한 첨단 미래 농업 기반 구축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균일한 품질 등 시장요구에 대응이 가능하며, 유능한 청년을 농업에 유입시키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 스마트팜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시설원예(누계) : '14년 405ha → '21년 6,540/ 축산(누계) '14년 23호 → '21년 4,743

2021년에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량 33.7% 증가하였고, 자가노동시간은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또한, 스마트팜은 국정과제이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17.11월)되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팜 확산방안을 수립·발표('18.4월, 경제관계장관회의)하여 청년인력 육성, 기술혁신, 전후방산업 성장 등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에 4개소(전북, 경북, 전남, 경남)를 선정하여 '22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팜의 현장 확산을 보면, 스마트팜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도입농가에 대해 설치 단계별로 3단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전 단계에서는 농가시설에 적합한 ICT 융복합 시설을 추천하고, 도입 단계에서는 농장에 최적화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도입 후에는 장비 고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창업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실습형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센터(15개소, 지자체 농업기술원 연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밴드 등 A/S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여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팜 우수사례 발굴, 사업설명회 개최, 농업관련 박람회 참가를 통해 스마트팜 정책 및 성과홍보를 통해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요를 촉진하고 첨단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팜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스마트팜 도입 우수농가와 환경제어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집된 스마트팜 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로 민간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림 2-7-1〉 스마트 팜 2.0 서비스 개념도



* 출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팜 2.0 추진계획, 2018

▶ 팜 맵 기반 통계·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고해상도 위성·항공영상, GIS(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국 농경지의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등)를 제공하는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필지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인증, 재해보험 현황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현장을 반영한 스마트농정 추진기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2-7-2〉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스마트농정 통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2021.]

팜맵은 2013년에 각 도별 한 면에 시범구축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3년간 3개도 권역으로 전국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당해 입수 가능한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1년에 반 판씩(좌판, 우판) 2년 주기로 전국 팜맵을 현행화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팜맵 자체 변화율, 농식품부 경영체정보, 통계청 경지면적조사, 국토부 국토변화정보를 분석하여 변화율이 높은 일부 시군을 선정하여 위성영상 및 지자체 영상을 참고하여 팜맵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팜맵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현장검증, 공공측량, 감리뿐만 아니라 상시 자체검증 등 6단계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팜맵을 활용하여 직불금 등 보조금 현장점검 대상농가의 선정방식을 과학화(공간분석기반 표본 추출체계로 전환)하고, 필지별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인증), 친환경인증, 재해보험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 통계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여러 기관에 팜맵을 제공하여 경지 총조사, 농지 관련 연구 등에 활용하여 행정업무 및 각종 정책연구의 효율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2-7-3〉 GAP 인증정보 연계 화면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이어, 2021년에는 대국민 대상으로 팜맵 서비스 (agis.epis.or.kr)를 전면 개방하여 민간에서도 실 농경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 등에서 무인 농기계(드론 등)에 팜맵 정보를 접목하여 농산물 생산량 정보 수집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농촌경제 연구원 및 한국마늘양과연합회 등에서 재배면적 조사시 팜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지자체 및 민간 부문에서의 팜맵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관별 각종 행정·통계 자료와 팜맵을 연계하고 다양한 주제별 전자지도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농정업무 담당자의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을 하고, 무인 방제 등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경영체 및 보조금사업 통합관리로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농정 구현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농식품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DB(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양질의 농업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2005년 보조금 관리를 위해 최초 구축되어 2013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직불사업을 통합하고 재배품목, 농지정보, 사육규모, 보조사업 신청 현황 등 56개 항목을 관리하는 등 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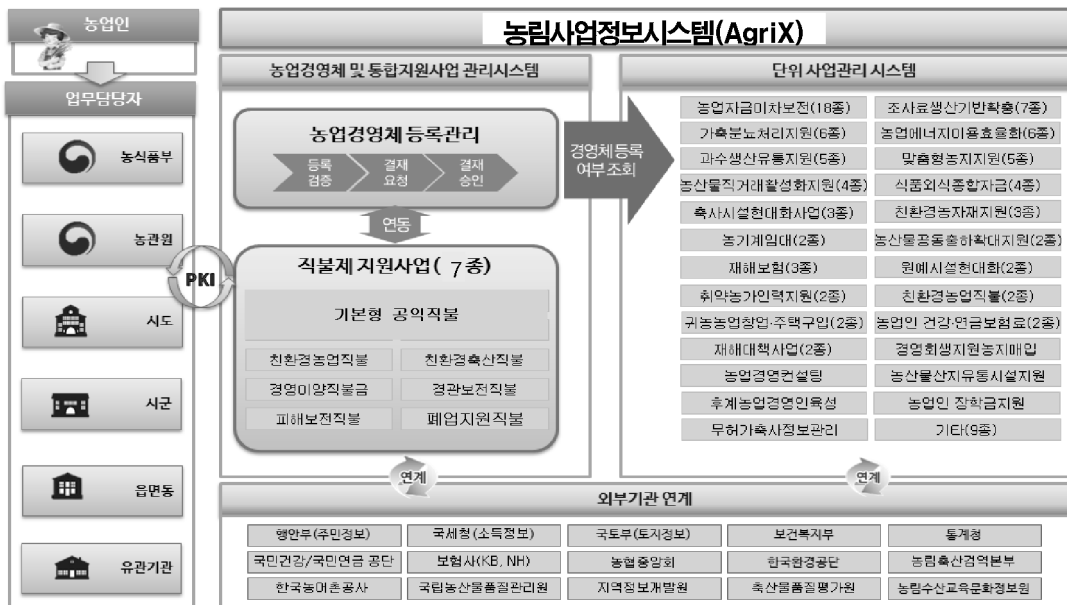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체 농림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농식품 분야 보조·융자사업을 통합·연계하고 있다. '20년에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한 기본형 공익 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단계부터 검증, 대상자 선정,

이행점검, 지원액 결정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정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신청 농업인에 대한 자격검증을 사전검증-실시간검증-사후검증 체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부정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별 보조금 수혜이력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 개별 농가의 보조금 수급 내역 등의 정보가 담긴 115개 농식품 사업도 경영체 DB와 연계하였다. 이와 더불어 농업경영체 통합DB(데이터베이스)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농업보조사업 관리 및 지역 중심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 농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통합관리를 통해 농업보조금 지급 및 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8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하여 지속 갱신하였으며, '21년에는 새롭게 바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획득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등 178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림 2-7-4〉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성도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이 필요한 보조금을 제때 안내받고, 쉽게 신청하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안내-신청-검증-처리-지급까지 전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종이 서류가 필요 없고,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부정·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 및 농산물 수급예측을 지원하는 농림행정 혁신을 위한 차세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완료하여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스마트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생육 환경과 최대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발을 확대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개선하여 새로운 분야에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4. 농촌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확대

■ 농촌산업과 사무관 장미진·신우창

◆ 추진 배경 및 개요

여가, 휴양, 삶의 질 향상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민의 체험·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 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한류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국내관광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 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관리, 도시민 유치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2015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1,1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마을리더 및 사무장 등이 마을운영에 필요한 농촌관광정책방향, 서비스마인드, 마케팅 등 기본교육과정과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과정을 편성하여 차별화된 농촌관광을 주도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넓은 도시민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SNS 채널(네이버블로그, 카카오토리, 페이스북 등)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촌관광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어 농촌체험관광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경영체의 소득안정을 위해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보급,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하였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2021년에는 986개 마을에 체험안전보험, 920개 마을에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시설점검과 방역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등급제는 농촌관광 사업자의 교육,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1~3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202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촌민박 207개소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였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경영체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였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여행트렌드 변화에 대비하여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농촌체험꾸러미 보급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경영체의 농가소득 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농촌관광 등 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지원 및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획일적 관광콘텐츠 제공에서 탈피하기 위해 농촌 현장 주도로 지역의 음식·숙박·체험을 연계한 특색 있는 체류형 농촌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체험마을 등 농촌관광 사업자와 전문가·현장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농촌관광 협의체를 통한 상향식 농촌관광 콘텐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관광 경영체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와 민간단체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체험처 품질제고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농공단지 조성사업

■ 농촌산업과 서기관 정재원

◆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지정에 대한 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제78조2항에 근거 매년 예산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7-19〉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현황

부 처 명	지 원 내 용	관 련 법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 개발 지원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특화농공단지 수산분야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입주기업체 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용노동부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및 취업알선	고용정책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문화기본법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업종 특화 정도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①전문단지(동일·유사 업종이 면적기준 50%), ②지역특화단지(농림어업 관련 및 향토산업 업종이 면적기준 80%), ③일반단지(전문, 지역특화단지 이외) 3개로 구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단지 시설 개보수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유형으로 지원하였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 사업으로 확정('19.4월)되어 '20년부터는 농공단지 신규 조성 및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농식품부 예산지원이 중단되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농공단지는 2021년 기준으로 476개소를 지정하고 448개소 조성을 완료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7,88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이며, 고용인원 154천명, 생산액 61조 5,890억원(업체평균 78.1억원), 연간 수출액 119억 72백만 달러(업체평균 152만 달러)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농공단지는 노후단지의 비중이 높고, 낙후된 교통·안전 인프라에 따른 입주기업 불편 및 인근 농촌지역과의 갈등 발생 등 타 산단(일반, 도시첨단, 국가)에 비해 입지가 열악한 상태로,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2021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①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②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③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범부처 협업 지원을 통해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노후 농공단지의 디지털화·그린화를 위해 지능형 교통·안전 인프라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농공단지 재생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와 더불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에너지 사용 효율화,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누구나 일하고 사업하고 싶은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6. 사회적 경제

■ 농촌사회복지와 사무관 문지영

◆ 추진배경 및 개요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부각되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농업·농촌분야에도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존재한다. 2021년 말 기준, 207개의 농업·농촌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 중이며, 사회적협동조합 129개, 예비사회적기업 78개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농장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희망자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농촌주민과의 교류활동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농장에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개선비 등을 개소당 연간 6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전국 60개 농장이 활동 중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사회적농업은 사회적농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귀농귀촌희망자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각종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부처 사업과 사회적농장 연계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협력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을 추진중이다. 향후에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기존 사회보장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3절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1. 대구회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수현

◆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 필지는 600~1,200평 규모로 작고, 농로가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이 어려웠다. 또한 수로는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물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회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2005~20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2014), 지역발전특별회계(2015~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9)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방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 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20년까지 3조 7,634억원(국비 2조 8,398억원, 지방비 9,236억원)을 편성하여 140.1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652억원(지방비)을 투입하여 1.5천ha를 완료하였다.

〈표 2-7-20〉 대구회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대구회 경지정리 (’94~계속)	사업량(천ha)	169.6	140.1	1.5	28.0
	추진율(%)	100	82.6	83.5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회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 자립 등을 위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수현

◆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 용수 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 영향으로 우량 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 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 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 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국 단위의 밭 기반 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5~20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2014), 지역발전특별회계(2015~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9)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2조 9,615억원(국비 2조 2,837억원, 지방비 6,778억원)을 편성하여 124.4천ha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640억원(지방비)을 투입하여 2.0천ha를 시행하였다.

〈표 2-7-21〉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밭기반 정비사업 (’94~계속)	사업량(천ha)	180	124.4	2.0	53.6
	추진율(%)	100	69.1	70.2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쌀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 자립 등을 위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수현

◆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 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 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관으로 기계화 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05~200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2010~2014), 지역발전특별회계(2015~201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019)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를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20년까지 3조 1,695억원(국비 2조 3,949억원, 지방비 7,746억원)을 편성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9.2천km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600억원(지방비)을 투입하여 0.4천km를 시행하였다.

〈표 2-7-22〉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20년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4~계속)	사업량(천km)	35	29.2	0.4	5.4
	추진율(%)	100	83.4	84.6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개선에도 이바지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 자립 등을 위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 간척지농업과 사무관 김성률,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선웅

◆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실정이며,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반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농업인에게 안전한 영농기반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안정영농기반구축을 위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까지 국고 6조 6,141억원을 투입하여 198.5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기후 변화 및 기상 이변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증가된 강우량 등이 반영된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개정 및 시행('12.4월)하여 선제적 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강우패턴 변화, 농의 재배작물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배수개선 대상면적을 확대(232천ha→303천ha, '13.2월)하였다.

〈표 2-7-23〉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302.7	194.3	64.2	4.2	65.6	104.2
사업비(억 원, 국고)	118,491	62,896	53.1	3,245	55.8	52,3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2,869지구(국가관리 241, 지방관리 2,628)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1,896지구(국가관리 219, 지방관리 1,677)를 완료하였다.

〈표 2-7-24〉 방조제 개보수 추진현황

구분	목 표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개소)	2,869	1,861	64.8	35	66.1	973
사업비(억원)	32,069	19,238	60.0	461	61.4	12,37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후 변화와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강우 패턴 분석과 농업 기반시설의 재해대비 능력을 조사하여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 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 수리시설개보수

■ 농업기반과 사무관 류광현

◆ 추진배경 및 개요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 많아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등 강우패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용수누수가 많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절실한 실정으로 노후·파손 또는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리시설의 상태 및 재해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25〉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계	75,228	17,106	9,077	18,201	2,613	28,231
30년 이상	44,167	16,479	4,193	16,376	2,462	4,657
30년 미만	31,061	627	4,884	1,825	151	23,574

자료 : 2020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2021.12월)

◆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조 2,942억원을 투입하여 수원공 3,908개소, 흠수로 9,816km를 구조물화 하였고, 2021년도에는 6,36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수지, 양·배수장 등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178개소를 준공하였고, 누수과다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흠수로 500km를 구조물화 하는 등 수로를 정비하였다.

〈표 2-7-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계획	2020년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사업비	149,323	102,942	6,365	40,016	
사업량	수원공	5,842개소	3,908개소	178개소	1,756개소
	수로정비	21,600km	9,816km	500km	11,284km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농촌용수개발사업

■ 농업기반과 서기관 김태형, 사무관 김수현

◆ 추진 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뭄에 안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요에 맞추어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 추진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발생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기반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부족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시행 중인 지구는 완공 위주로 집중하여 투자하고 신규 착수 지구수는 최소화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824천ha로 수리시설 설치를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685천ha(83.1%)이고, 수리시설 없이 자연강우에 의존하는 수리불안전답(천수답) 면적은 139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19천ha(63.0%)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7-27〉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	2003	2006	2009	2012	2015	2018	2020	2021
논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966	908	865	830	824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778	734	707	687	685
	(B/A)%	76.6	77.9	79.2	79.8	80.5	80.8	81.7	82.8	83.1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573	549	534	520	519
	(C/A)%	36.6	39.0	44.1	49.9	59.3	60.4	61.7	62.7	63.0
수리불안전답(D)	천ha	269	249	225	204	188	174	158	143	139
	(D/A)%	23.4	22.1	20.8	20.2	19.5	19.2	18.3	17.2	16.9

자료 : 2020년 농업생산기반정비 통계연보(2021.12월)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동 사업은 수혜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7조 8,678억원을 투입하여 109.5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7개 지구(18.8천ha)에 2,511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지구 4.2천ha를 준공하였다.

〈표 2-7-2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추진현황

구 분		총계획	2020년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90~’30)	사업량(천ha)	136.4	109.5	4.2	22.7
	추진율(%)	100	80.3	83.4	10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동 사업은 기존 수리시설의 용수공급능력(부족, 잉여)을 체계적으로 연계 배분·활용하여 여유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간·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 2020년까지 4,575억원을 투입하여 2.9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8개 지구(5.1천ha)에 524억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1.1천ha)를 준공하였다.

〈표 2-7-29〉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추진현황

구 분		총계획	2020년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농촌용수 이용체계재편 (’08~계속)	사업량(천ha)	9.8	2.9	1.1	5.8
	추진율(%)	100.0	29.6	40.8	100.0

▶ 소규모 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 안정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3,931억원(국비 2,205억원, 지방비 1,726억원)을 편성하여 4.7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297억원(지방비)을 투입하여 0.7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소규모 용수개발은 2019년까지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7-30〉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현황

구 분		총계획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소 규모 (’03~계속)	사업량(천ha)	11.0	4.7	0.7	5.6
	추진율(%)	100	42.7	49.1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1조 4,923억원(국비 1조 2,284억원, 지방비 2,639억원)을 편성하여 39.6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33억원(지방비)을 투입하여 1.7천ha를 준공하였다.

한편, 지표수 보강개발은 2019년까지 시·군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2-7-31〉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현황

구 분		총계획	2020년 까지	2021년 실적	2022년 이후
지표수 보강 (’95~계속)	사업량(천ha)	48.6	39.6	1.7	7.3
	추진율(%)	100	81.5	85.0	10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 다양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전체 논면적의 83%수준 설치되어 안전영농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63%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17%정도임을 감안할 때 수리안전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과거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과 생활·환경용수 등 농촌지역의 다양한 용수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농촌경관 조성 및 공익적 가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추세에 있어 가뭄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기반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과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기능조정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하여 2020년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 간척지농업과 서기관 최영기, 사무관 정경현, 송영호, 박재영

◆ 추진 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개별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 영산강 등 대규모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권역화하여 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및 간척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며, 그 개발유형에 따라 육지부와 해안·육지부로 구분한다.

〈표 2-7-32〉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개발유형

구 분	지구명	개발유형	재원
육지부 (4)	금강Ⅱ, 금강영농편의, 흥보, 영산강Ⅳ, 서산A	기존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시설재정비 등 * 배수개선, 경지정리 : 금강Ⅱ, 금강영농편의 * 용수개발, 배수개선 : 영산강Ⅳ * 시설재정비 : 서산A	농지관리기금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웅,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웅, 새만금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 추진 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25개 지구 310천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6개 지구 166천ha를 완료하였고, 금강Ⅱ지구 등 10개 지구 152천ha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까지 6조 3,235억원을 투자하여 급수면적 21,775ha, 경지정리 15,009ha, 배수개선 1,547ha, 간척농지 15,368ha를 조성함으로써 가뭄 및 수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농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간척지의 다원적 활용차원에서 2014년부터 화웅지구 4공구 768ha에 유리온실, 친환경축산단지, 말조련단지 및 종자연구단지 등 복합단지(에코팜랜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7-33〉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현황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7지구)			166,097		4,649,755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 ~ '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 ~ '77	37,657
영 산 강(Ⅰ)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 ~ '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 ~ '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 ~ '79	12,521
창 녕	경 남	창녕	2,269	'75 ~ '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 ~ '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 ~ '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 ~ '84	23,029
미호천(Ⅰ)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 ~ '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 ~ '90	94,035
금 강(Ⅰ)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 ~ '90	101,000
삼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 ~ '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 ~ '96	185,630
영 산 강(Ⅱ)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 ~ '98	354,472
미 호 천(Ⅱ)	충 북	청원, 청주	4,430	'89 ~ '12	323,947
새만금(외곽시설)	전 북	군산, 김제, 부안	방조제	'91 ~ '10	2,949,002

새만금사업은 2010년 외곽시설인 방조제 축조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변화된 개발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11.3월)하였으며, 이후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및 여건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만금 기본계획」으로 공간구상계획을 변경('21.2월)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9,100ha)의 30%에 해당하는 9,430ha를 2025년까지 농생명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선행 공종으로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여 2021년까지 59.6km를 준공하였고, 2.5km를 추진 중에 있다. 방수제 내측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2021년까지 4,062ha를 준공하였고, 5,368ha를 추진 중에 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2022년에는 금강Ⅱ지구 등 10개 지구에 국고 3,313억원(농지관리기금)을 투자하여 금강Ⅱ지구 경지재정리 243ha, 화옹지구 간척농지 2,349ha, 영산강Ⅲ-2지구 간척농지 120ha, 새만금지구 방수제 2.5km 및 농생명용지 5,368ha를 계속 추진하는 등 영농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준공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4개 공구, 4,062ha)는 농학계 대학시험포, 농업특화단지, 사료작물 재배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나머지 농생명용지(7개 공구, 5,368ha)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표 2-7-3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지구 현황

지구별	위 치		개발면적 ()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시도	시군			
계(10지구)	4개 시도	18개 시·군	152,506	'89 ~ '31	8,518,908
금 강Ⅱ	충남·전북	서천·완주·부여·군산·익산·김제	43,000	'89 ~ '23	963,249
홍 보	충 남	홍성·보령	8,100	'91 ~ '25	616,357
영산강Ⅳ	전 남	무안·신안·함평·영광	16,730	'01 ~ '27	961,374
서산A간척지 농업기반시설재정비	충 남	서산	6,446	'08 ~ '26	315,476
영산강Ⅲ-1	전 남	영암·해남·강진	13,160	'95 ~ '23	606,014
영산강Ⅲ-2	전 남	해남	7,840	'97 ~ '22	420,813
화 옹	경 기	화성	4,482	'91 ~ '25	989,884
시 화	경 기	안산·화성	3,636	'98 ~ '24	437,156
금강영농편의	충남·전북	군산·익산·김제·서천	8,212	'21 ~ '31	414,620
새만금(내부개발)	전 북	부안·김제·군산	40,900	'09 ~ '25	2,793,965

V. 농식품산업 국제협력

제8장 체계적인 대외 협상 및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제1절 체계적인 대외 협상

1. WTO/DDA 협상 대응

■ 농업통상과 사무관 이선영

◆ 추진배경 및 경과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 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UR 협상 부문 중 농업협상은 정치적·사회적 민감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분야였다. UR 농업협상은 세계 농산물 무역에 있어 공정경쟁 도입을 목표로 했던 만큼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경쟁 등 분야에 있어 무역왜곡적 요소 제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로 체계화된 농산물 세계무역 규범인 WTO 농업협정이 체결되었다.

WTO 농업협정 제20조는 UR 협상 이후로도 농산물 무역 자유화를 위한 개선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년부터 WTO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이 출범하였다. 이어서 제4차 각료회의에서 2003년 3월까지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을 위한 세부원칙(Modality)을 만들고 2003년 9월까지 각국이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한 후 2004년 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도록 결정하였다.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중간단계로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는 방안을 시도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년 8월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로 결실을 맺고 협상의 불씨를 살리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철폐 시한에 합의하였으나 기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공식을 포함한 세부원칙 초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기초로 2007년과 2008년에는 협상이 보다 밀도 있게 전개되었다. 각 분야별로 많은 제안서가 나왔으며, 세부원칙 초안도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08년 7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에서 세부원칙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등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결국 타결에 실패하였다.

2008년에는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2월에 세부원칙 수정안, 5월에 2차 수정안, 7월에 3차 수정안을 연이어 배포함에 따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수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에는 의장이 세부원칙 4차 수정안(Rev.4)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다. 당시 4차 수정안에 회원국들이 거의 합의할 분위기라는 관측까지 나왔으나 비공식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되었다.

이후 협상은 정체기로 접어들었으나, 2011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를 계기로 회원국들은 기존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에서 후퇴해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각료회의에서 조기 수확 방식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주요 협상의 제에 대해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농업 부문에서는 ①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PSH) 잠정해법, ② 허용보조(Green Box) 내 일반서비스 목록 확대, ③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리 개선, ④ 수출보조 폐지에 대한 홍콩 각료회의 결정 지지, ⑤ 면화 교역 관련 논의 강화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각료회의에서는 ① 수출경쟁 분야에서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 설정, 수출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대한 원칙, 식량원조의 현금화 제한, ②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별도 논의 지속, ③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영구해법 관련 기존 결정 확인 및 논의 가속화, ④ 면화 수출보조 폐지 및 최빈개도국 생산 면화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적용 등이 합의되었다.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11차 각료회의는 핵심 의제에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각료선언도 없이 종료되어 실패한 협상으로 기록되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국내보조 감축 및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등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제11차 WTO 각료회의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끝난 이후, 2018년 선임된 WTO 농업협상그룹 Ford 의장(가이아나 대사)은 우선 협상의 기술적·분석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회원국들의 구체 문건 제출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 9월 이후 매월 농업협상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농업협상그룹 월례 회의 외에도 7개의 실무 소그룹(국내보조,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시장접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수출경쟁, 수출제한, 면화)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술적 사안을 논의하고 이를 농업협상그룹 월례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7월에서 제12대 신임 의장에 코스타리카 대사인 Gloria Abrahan Peralta가 선출되어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전임 Ford 의장의 로드맵을 이어받아, 의장 주재 아래 7대 협상쟁점별 조정자 주도 논의(facilitators-led process)를 10월부터 재가동하여 신속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개별 회원국 및 협상그룹과의 집중적인 논의, 협상기간 제시된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기반으로 제12차 각료회의(당초 2021년 11월 개최 예정)를 대비한 농업협상 각료결정문 1차 초안을 회담하였다. 초안은 기존의 협상 7대 쟁점뿐만 아니라 투명성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되어, 향후 협상의 방향성을 정하는 작업계획 수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장은 남은 기간 중 초안을 바탕으로 한 텍스트 중심의 협상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각료결정문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초안에는 우리나라 포함 수입국 그룹이 제시한 수출제한 분야의 투명성·통보 의무 강화 내용이 반영되었다.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선진-개도국 간, 농산물 수출입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농업협상에서 소정의 성과가 도출될지를 두고 관심이 주목되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 26일 스위스 정부가 코로나19 변종(오미크론) 확산을 우려해 일부 국가의 입국 봉쇄 조치를 채택함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는 제12차 각료회의 개최를 무기한 연기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영상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함에 따라 2022년에도 회원국 간 이견 조율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WTO 농업협상에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이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WTO 개혁논의, 미·중 무역갈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협상 등으로 인해 차기 각료회의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 3월 최초 아프리카계 미국 국적의 여성 사무총장(Ngozi Okonjo-Iweala)이 선출되었고, 신임 WTO

사무총장은 일반이사회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하면서도 상당히 의욕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주요 선진국의 리더십이 부재한 가운데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달성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WTO 협상이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함으로 인해, 2022년 개최 예정인 제12차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 구도 아래 진행되는 현재의 WTO 협상이 종료되고 새로운 방식의 차기 WTO 협상이 개시될지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농업협상그룹 회의 논의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제한 등 주요 사안별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국 그룹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개도국 특혜 관련 입장 발표, 쌀 관세화 이해당사국(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태국)과의 양자협의 종료 등 농업협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종결됨에 따라 향후 농업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은 감소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통보 실적도 대폭 개선하여 투명성 분야에서의 입지도 강화됨에 따라 농업 분야 전반의 투명성 강화 논의에도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2. FTA 협상 대응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과 서기관 김성구

◆ 추진배경 및 개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로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

2020년 12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506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 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은 31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62.6%)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5년 이후에만 91.1%에 해당하는 461건이 체결·발효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세계 통상 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의미 있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많은 국가가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상황이다.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능동적인 시장개발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 추진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03년 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거대경제권,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네트워크 확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1년 12월 말일까지 우리나라는 17건 57개국과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며 5건*의 FTA가 타결되거나 서명되어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다.

* RCEP('20.11월), 한-인도네시아 CEPA('20.12월), 한-이스라엘 FTA('21.5월), 한-캄보디아 FTA('21.10월), 한-필리핀 FTA('21.10월)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및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 2021년 타결·서명된 FTA

'20.11월 RCEP*이 8년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됨으로써 아세안,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으로의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기존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의 민감품목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액이 많은 품목을 양허제외하여 추가개방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인 딸기(태국),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등의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철폐 기간을 구체화하여 수출시장을 확보하였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인도네시아 CEPA는 4차례 협상을 거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선언('19.11월)을 하였고 '20.12월 정식으로 서명되었다. 바나나(일반)·파인애플·망고 등 주요 열대과일과 화훼류, 꿀 등을 양허제외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사과·배·감의 관세는 즉시철폐, 딸기 3년 철폐, 커피음료 10년 철폐 등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품목수 기준 우리측 자유화율은 75.7%, 인도네시아측 자유화율은 87%이다.

- 한·이스라엘 FTA는 6차례 공식 협상 및 3차례 회기간 협상을 거쳐 타결선언('19.8월)을 하였고, 양국 통상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정식 서명('21.5월)하였다. 우리측은 주요 민감 농산물을 양허제외하였고, 자몽, 과당, 와인 등을 개방하여 전체 농산물 자유화율은 66.2%이고, 이스라엘은 닭고기, 김치, 버섯 등을 개방하여 전체 자유화율은 69.8% 이다.

- 한·캄보디아 FTA

한·캄보디아 FTA는 4차례 협상을 거쳐 타결선언('21.2월)을 하였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식 서명('21.10월)되었다. 바나나(일반)·파인애플·망고 등 주요 열대과일과 조주정을 양허제외하여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인 사과·배·딸기 즉시철폐, 음료 10년 철폐 등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품목수 기준 우리측 자유화율은 78.6%, 캄보디아 자유화율은 90.5%이다.

- 한·필리핀 FTA

한·필리핀 FTA는 5차례 협상을 거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선언('21.10월)을 했다. 파인애플·망고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는 시장 개방했으나 농산물 세이프가드조치를 확보해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을 최소화했다. 우리의 수출 관심 품목인 커피 조제품, 인삼조제품, 면류 등을 15년 철폐하였다. 품목수 기준 우리측 자유화율은 72.2%, 필리핀 자유화율은 82.1%이다.

▶ 진행 중인 FTA 협상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중단되어 국제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대면 방식을 통해 협상국과의 꾸준한 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1.12월말 기준 진행 중인 FTA 협상은 총 7건*이며 대표적인 주요 협상은 다음과 같다.

* (체결협상) 한-메르코수르 TA, 한-말레이시아 FTA, 한-중-일 FTA, 한-우즈베키스탄 FTA,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 (개정협상) 한-인도 FTA, 한-칠레 FTA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경제 공동체

중남미 최대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타결 시 교역 규모 확대 및 중·일 등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04년 11월 한·브라질,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추진이 합의되어 '21.12월 기준 제7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농업강국이자 주요 농산물 수출국임을 고려하여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고 있다.

- 한·우즈베키스탄 FTA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이자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한 요충지로, 2021년 1월 양국 정상외 협상 개시선언 후 두 차례의 공식협상과 한 차례의 회기간 협상을 진행하였다. 양국 간 농산물 수출 규모가 비슷하여 우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서 시장 접근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과테말라가 2021년 9월에 한-중미 FTA에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양국간 상품양허안 등에 대하여 협의 중이다. 과테말라는 한-중미 FTA('21.3월 전체 발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협상 상대국이었으나 양국 간 입장차로 그 당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04.4월 발효된 한·칠레 FTA와 '10.1월에 발효된 한·인도 CEPA는 낮은 자유화율과 활용률 제고를 위해 '16년에 개선 협상을 시작하여 '21년까지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한·말레이시아 FTA와 한·중·일 FTA는 '19년 협상 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21년에도 FTA 협상과 개선협상이 지속 개최될 예정으로, FTA 사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 및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FTA 농업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농민단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상 진행상황 및 결과를 설명하는 등 농업계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제2절 국제협력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 강화

1. 국제농업협력(ODA) 사업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문경덕

◆ 추진 배경 및 개요

경제발전에 있어 상호의존도가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와 국익증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1월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고, 국가별 협력전략(CPS)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 지원규모 확대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 등 농업·농촌 발전 경험과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농업개발 및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 관련 기술전수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해 UN에서 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 국민의 70~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이 주산업이며, 빈곤문제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가 농업과 농촌개발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은 첫째,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의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FTA/DDA 협상 측면 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농업·농촌개발 부문 국제협력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중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와 영양 개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국제농업협력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국제협력을 위하여 5억원 가량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00억원, 2012년 105억원, 2013년 128억원, 2014년 141억원, 2015년 148억원, 2016년 156억원, 2017년 173억원, 2018년 식량원조 사업 시작으로 651억원, 2019년 664억, 2020년 721억, 2021년 8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사업 개수로는 2006년 11개에서 시작하여,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2012년 18개, 2014년까지 18개로 이어지다가, 2016년에 25개, 2018년에 30개, 2020년에 33개, 2021년에 45개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확대에 따라 사업 개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수립한 '농림 분야 ODA발전방안'에 따라 단기성(1-2년이내), 소규모(약1억)인 일반협력사업을 지양하고,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인적·물적지원을 패키지화한 중장기 기획협력과 공동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 개수가 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에 '국제농업협력(ODA)사업 개선방안' 마련으로 ①사업 성공유형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ODA 전문성을 배양하고, ②수원국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과정에서 사업 기획안의 타당성 검토절차를 강화하였고, ③사업 추진상황과 종료 후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개선하였고, ④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사업의 성공,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적 환류가 가능하게끔 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글로벌 농업 ODA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의 글로벌 농업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18년에 제2회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기구 및 개도국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제농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상을 널리 알릴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21년에는 농림분야 원조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조사업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현지 ODA DESK 운영(캄보디아, 라오스)을 시작하여 현장관리 강화 및 수원국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등 개도국의 수요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농업 ODA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원국가를 살펴보면, 2009년 기점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모잠비크를 필두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가나, 카메룬, 르완다 등이 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신남방 및 신북방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몽골을 비롯한 동아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아시아 9개 국가, 아프리카 3개 국가, 남아메리카 1개국가 등 17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기획협력사업 34개, 컨설팅사업 5개,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개발계획

(UNDP) 등 국제기구와 함께 다자성양자 사업도 6개를 추진하였고,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농식품부 산하기관 및 소속기관별로 관련업무에 대한 초청연수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표 2-8-1〉 농식품부의 협력사업 지역별 현황

(단위: 사업수, 개)

연도	아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다자/기타	계
2012	9		7		2	18
2013	11		7		3	21
2014	8		4		6	18
2015	10		4		6	20
2016	11		7	1	6	25
2017	10	2	8	2	4	26
2018	13	1	10	1	5	30
2019	16	1	7	1	5	30
2020	19		7	1	6	33
2021	26	2	6	1	10	45

한편 농식품부는 유·무상 ODA 협의체인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농업, 농촌 분야 ODA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소속기관, 양청 및 산하기관(단체)이 참여하는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농업·농촌개발 분야 ODA의 중복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관 간 사업 연계 추진으로 원조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농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기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업의 해외 진출과 ODA를 연계, 민간과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등 내실화를 높여 나가고 있다. 대표 성과로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14~'18) 등이 있으며 동사업은 베트남 가축질병 검역 및 연구기반을 마련하여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축 질병통제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 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2013년 기준으로 동물질병 진단건수가 270%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 사업을 통해서도 국가별 국가농식품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21년도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공공행정 ODA 적용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인정받은바 있는 바 있다.

전 세계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 ODA를 통해서도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대상국 중 메콩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노하우 역량을 전파하였고, 우리 시설 및 데이터 수집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기업을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스마트팜 ODA는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함과 동시에 개도국의 농산업분야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과 개도국의 동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프로젝트 뿐 아니라 정책컨설팅(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사업, KAPEX)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농업·농촌발전의 정책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자발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법·제도·정책적 향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표적인 성과로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기준 수립을 위한 정책컨설팅 지원사업('20년)으로 필리핀이 돼지도체등급 국가표준이 제정('21년) 되었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개도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식품부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단기성 협력지원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중장기 기획협력사업과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관련 법·제도·조직 등을 체계화, 효율화함으로써 사업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에 수원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과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개도국의 다양한 수요 및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비해 여전히 지원규모가 작은 편으로,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25개 기획협력사업에 대한 외부 종료·사후 평가를 실시해왔다. 특히, 사업성과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4월에는 사업 성공유형을 발굴하고, 수원국 수요를 보다 반영하며, 사업 종료 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제농업협력(ODA)사업 추진 및 평가 방식을 개편하였다. 2021년에는 '카메룬 벼재배단지활용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 '캄보디아 쌀산업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 '가나 아쿠마단 농촌개발 및 채소단지 관개사업'에 대한 3건의 종료·사후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추진되었던 ODA사업 평가의 메타분석을 통해 주제별 종합검토를 통해 사업의 주제별로 그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농식품부 ODA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였다.

앞으로 컨설팅 사업의 대상국을 확대 및 다양화함으로써 국제농업협력사업의 발굴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개도국의 식량안보, 빈곤 퇴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 농업·농촌개발 등 농정정책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며,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일부 종료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활용을 지원하며,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분야 ODA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식량원조사업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강경미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 식량이 부족하여 유엔세계식량계획(WFP)로부터 1963년부터 약 20년간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1970년대 식량증산을 통한 주곡 자급 달성,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쌀 재고 증가 등 식량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1984년에 기아 종식을 달성하며 수혜국을 졸업하고, 동시에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2009년 OECD/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 정부는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전략('15.3월 수립)을 통해 대규모 분쟁과 난민 위기, 평화구축 및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6년 약 200만 톤이라는 역대 최고의 쌀 재고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쌀의 해외 원조를 추진하여 인도적 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 재고미를 해소하고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식량원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17년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을 결정한 후 우리나라 쌀을 원조하기로 하는 계획에 대한 재정적 검토를 마치고 같은 해 12월에 국회 비준을 거쳐 2018년 1월 UN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간 공여 규모를 460억원으로 결정하고, FAC에 연간최소공여 규모를 통보하였으며, 국제식량원조 전문기구인 유엔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및 중동 4개국(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을 대상으로 식량원조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사업수행 위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WFP와 식량원조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2018.2월)하였으며, WFP에 약정액을 공여하면 WFP가 공여자금으로 쌀을 매입하고, 해외운송, 보관, 분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2018년 사업은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18년 식량원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식량원조용 쌀은 2016년산 구곡으로 결정하고, 원료곡 수송(3월 초~4월 중순), 원료곡 가공 및 포장(3월 하순~5월 초순), 선적 개시(3월 하순~5월 중하순) 등의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예멘 17천톤, 에티오피아 15천톤, 케냐 13천톤, 우간다 5천톤이 5월 국내 선적항을

출항하여 6~7월 수원국에 도착하여 7월부터 현지 분배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7월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케냐에서 한국쌀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동 행사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대표단은 케냐의 난민캠프를 방문하여 캠프 내의 쌀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현지 난민들이 우리나라 쌀을 배급받아 조리한 밥을 섭취하는 실태까지 확인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식량원조사업을 지원하되, 식량위기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예멘 19천톤, 에티오피아 16천톤, 케냐 10천톤, 우간다 5천톤을 지원하였다.

2021년에는 식량위기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20.12월)하여 기존 4개 수원국에 시리아와 라오스를 추가하여 총 6개국을 선정 및 식량 원조하였고, 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에 시달리는 난민·이주민들의 기아 해소에 기여하였다.

WFP 모니터링 결과, 우리 쌀을 지원한 수혜국 난민 및 취약계층의 영양이 개선되고, 식단 다양화에 기여하여 사업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혜자들은 우리 쌀이 돌 등 이물질이 없어 조리가 편하고, 품질이 높고 맛이 좋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평가 및 향후 계획

우리 정부의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매년 약 3~400만명의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난민 및 이주민 등에게 우리 쌀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기아해소를 위해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지원한 국가는 대부분 장기간 분쟁상태에 놓인 곳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난민캠프가 주요 대상이었기에 식량위기상황에 처한 국가의 취약계층에게 현물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긴급식량공급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잉 생산으로 인해 재고관리의 부담이었던 국내산 쌀을 해외원조로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처를 발굴하여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국내산 쌀의 식량원조 지원은 과거 국민의 주식인 쌀이 없어 배고픔을 경험한 나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급속 성장한 대한민국이 수원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량위기 상황, 국제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 및 물량을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국내 쌀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 쌀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해외원조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여 식량원조사업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원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도 증가 등으로 현지 원조 활동에 필요한 물류비,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것은 계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어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전지수

◆ 추진 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매년 필요 곡물의 70% 이상(1,600만톤 수준)을 수입하는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으로, 좁은 국내 경지면적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부존자원 활용으로는 식량자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2007년~2008년 국제곡물시장 위기를 경험하며 불안정한 국제곡물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곡물도입방식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시를 대비한 해외 식량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농기업들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2009년부터 착수하였다. 이 사업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활성화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 조사지원, 인력양성, 정보제공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에 힘쓰고 있다.

◆ 추진내용 및 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병행하여 추진 및 운영되고 있다. 보조사업은 해외농업개발 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인력양성, 환경조사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3년간(2009~2021년) 314억원을 집행하였고, 융자사업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농기계 구입, 건조·저장·가공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국가에 진출한 43개 기업에 융자금 1,913억원을 지원하였다.

▶ 해외농업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해외농업개발은 2009년 추진 당시 해외농업 및 임산 자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소관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2년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제정·시행(12.1.15.)되면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해외농업개발 추진의 기본 틀인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9월에 수립하여 공고하고, 2013년에는 ‘해외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상 개발대상 자원인 임산자원을 산림자원 개념으로 확대하고 해외 농업 자원과 산림 자원의 개발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작업을 착수하였고, 2015년에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으로 개정·시행(15.7.21.)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농자재 생산,

식품 가공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해외곡물 공급기반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개편하였다.

2017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영농기업이 다수 진출한 러시아 연해주를 식량안보 및 농산업의 외연확장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연해주 농업개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한-러 연해주 농업개발 공동연구('16.6월~'17.12월)를 완료하였다. 또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17.12월)하여 향후 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2018년에는 신북방정책과 연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의 농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북방 농업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18.12.12.)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중점 지원하는 등 융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19.11월)하였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 절차 마련을 위해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실무 매뉴얼을 수립하였다.('19.12월)

2020년에는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실무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상 발견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였다.('20.12월)

2021년에는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명령에 따른 사업자 손실보상 규정 신설 및 관계기관 협조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개정안 수립 절차를 진행하였다.

▶ 보조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은 해외농업개발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컨설팅, 인력양성, 정보제공, 영농지원센터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민간 기업 진출 희망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민간환경조사 사업과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 서비스 홈페이지(www.oads.or.kr) 및 해외농업개발 워크숍·포럼 등을 운영하여 해외농업개발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농업개발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별·분야별 전문교육 및 해외인턴 채용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개발 주요 진출 거점인 러시아 연해주에 영농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현지 진출기업에 영농기술지원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과 해외농업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2-8-2〉 2021년도 보조사업 실적 및 성과

구 분	추진 실적	성 과
○ 인력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과정(국제곡물기본교육, 해외진출 특화교육) 운영(157명) - 맞춤형 심화교육(1회, 9명) - 국제곡물구매·조달교육(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 사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운영하여 필요한 분야별 교육을 내실화하여 기업의 교육수요 충족 및 실무역량 강화에 기여
○ 해외인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21년 57명 ('21년 실적 1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기업채용)
○ 조사·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조사: 1997~2016 24개국 조사 - 민간투자환경조사: '09~'21 76개 기업 지원 - 컨설팅: '21년까지 22개 기업 32회 지원 - 상시컨설팅: 4개 기업 지원 - 국내반입 활성화 위한 정책조사(1회) - 국내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5개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출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해외진출 정착에 기여 - 해외생산 농산물 국내반입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 확보 - 해외농업개발 기업 생산 곡물에 대한 안전한 식품 이미지 구축 및 소비자 신뢰 향상
○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지(해외농업저널) 제작 배포 -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해외농업포럼' 등 전문가 회의(4회) - 해외농업개발 워크숍 개최(1회) - 해외정보수집 및 협력 전문관 운영(캄보디아) -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1회, 러시아) -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사업(3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학계의 정보 교류, 최신 해외농업개발 동향 공유 및 민간 애로사항 청취로 진출기업의 해외정착, 미신고기업의 신고도려 등에 기여 - 해외농업개발 정보의 체계적 집약으로 이용자의 손쉬운 정보접근이 가능토록 플랫폼 구축 -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온라인 상담 100회, 계약 2건(159천불), MOU 1건 체결 - 해외진출 희망기업의 현지 실증시험 및 기술 개발 지원으로 재정 부담 완화 및 진출기반 확대
○ 연해주 영농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성분분석기 도입·지원(1회), 농기계 및 기계설비 점검(5회), 벼 재배 기술지원(1회) - 곡물반입 확대 기반마련 시험재배 계약 및 현장점검(23회) - 곡물생산 및 국내반입 확대 TF회의(9회), 진출기업 법인장 간담회(10회), 워크숍 개최(1회) - 진출지원 데스크 운영(사무공간 지원 상담 등) -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연해주 진출기업에 체계적 기술·행정 지원 등 현장밀착형 맞춤 지원을 통해 진출기업의 현지 정착, 생산성 향상 및 국내 반입 확대에 기여

▶ 용자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용자) 사업은 해외농업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임차비,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가공 등 부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용자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금리 연 1.5~2.0%,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부터 전체 해외농업개발 사업자의 개발면적 및 해외농업자원 확보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진출 영농기업의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확대를 위하여는 진출 기업의 규모화와 상당한 정착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영농기업들의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등 사업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최근 민간기업 2개사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곡물 유통망(수출 터미널) 사업에 진출하면서 곡물 확보량과 국내 반입량이 크게 증가되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러-우 사태로 인한 식량 보호주의 확산을 경험하면서 팜유 등 수입 의존도가 높고 식생활에 영향이 큰 품목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농업개발을 통한 해외농업자원 확보량 증대 및 비상시 해외농업자원 반입 원활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 협력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및 전문가·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농업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른 기업에 대한 손실보상, 비상시 반입명령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곡물 분야 해외농업개발과 함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우선 지원하고, 확보 필요성이 높은 팜유·카사바 등 개발을 지속하여 주요 품목별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3~'27)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4. OECD 활동

■ 농업통상과 사무관 황인선

◆ OECD 농업 및 식품 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농업정책및시장작업반(Working Party on Agricultural Policies and Markets), 농업무역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rade), 농업환경공동작업반(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등 산하 작업반 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식품경제, 농업환경, 무역 쟁점에 대한 연구·

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별 농업정책 검토를 실시하여 정책 개선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OECD와 FAO는 매년 OECD의 세계 농업전망 모형인 Aglink-Cosimo를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각종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생산·소비·무역·가격변화를 예측하는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 최근 발간 주요 연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21~30년 OECD-FAO 농업전망

OECD와 FAO는 2005년 공동 발간을 시작한 이래 매년 세계 농업전망을 발간해오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2021~30년 OECD-FAO 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1~2030)’을 내놓았다. 이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 이슈에 대한 논의를 증진하고자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의 경우 소비 구조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둔화세는 주로 중국 및 신흥경제국의 수요 감소와 바이오연료의 소비 축소 등에 기인할 전망이다. 식품 소비는 연평균 1.3% 증가하고 소득과 식습관의 변화,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 가용성은 연평균 4% 증가하여 3,025kcal/인/일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생산의 경우, 신흥경제국과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연평균 1.4%로 증가할 전망이다. R&D, 효과적인 투입재의 사용, 질병 대응력 제고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생산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육류에서는 가금류가 생산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낙농품은 축산물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농업 온실가스 직접 배출은 총 4% 증가하나, 탄소 집약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은 연간 1.3%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나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농식품 순수출 지역(북·라틴 아메리카 등)과 순수입 지역(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등)이 구분되는 경향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 평균적으로 총 칼로리의 20% 정도가 수입농산물에 의해 구성되는 등 식량안보와 영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의 경우 생산성의 향상으로 의해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 2021년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1년 6월, OECD는 ‘2021년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1)’를 발간하였다. OECD는 매년 체계적으로 회원국의 농업정책을 점검·평가하며, OECD 회원국들의 정책변화를 생산자지원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 등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다. 본 보고서는 회원국의 주요 농업정책, 특히 지원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2021년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54개국(OECD 회원국 37개, OECD 회원국이 아닌 EU 회원국 5개, 신흥경제국 12개)이 분석대상이다.

국가마다 농업 규모, 특성, 농업의 비중은 다르나, 대다수 국가는 식량안보 및 영양 수준의 제고, 투명하고 개방된 국제 무역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 기후변화 완화 및 대응, 위협에 대한 탄력성 확보 등 공통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 경제국 등 54개국의 농업 부문에 대한 총 지원(Total Support Estimate, TSE)은 2018~2020년 연평균 7,200억 달러였으며, 이 중 생산자지원추정치(PSE)가 75%인 5,400억 달러였다. 54개 국가 전체적으로 2020년 농가수취액 중 생산자지원추정치(PSE)가 차지하는 비율(%PSE)은 OECD 국가의 경우 18%, 신흥경제국은 12%로 그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54개국의 2018-2020년 인프라 구축, 혁신·R&D, 방역 등 일반서비스지원추정치(GSSE)는 14.1%인 1,020억 달러이고, 취약계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인 소비자지원추정치(CSE)는 약 11%인 780억 달러이다.

OECD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회복력 증대를 도모하며, 식품시스템이 직면한 3중 도전과제(식량안보와 영양 확보, 농업인 및 농식품 공급망 종사자의 생계 개선, 지속가능성 확보)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3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시장가격 개입 및 시장 왜곡적인 생산자 지원의 단계적인 축소이다. 생산자들이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응하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 정착육하기 위해 과도기적인 보완방안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생산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선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맞춤형 농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소득과 자산 등 보다 많은 경영체 정보와 사회·경제학적 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 개인이나 시장이 다룰 수 없는 농업의 위험관리를 보다 정책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특히 농업 혁신시스템에 대한 공공지출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혁신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향후 농업 지원정책의 핵심이다. 필요 재원은 시장 왜곡적인 재정지원을 개혁하고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이 평균 이상인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재분배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통해 농업 지원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직불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하여 새로운 직불 프로그램(공익직불)을 2020년에 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 수준이 여전히 OECD 평균(18%)을 상회하며, 시장 왜곡적인 형태의 지원 비중이 높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PSE는 1986~88년 62.3%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20년에 46.7%가 되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2.6배가 높다. 특히, 시장가격지지(MPS, 국내외 가격 차이)가 PSE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업 부가가치 대비 일반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12%로 OECD 평균(5.6%)을 상회한다.

OECD는 농업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 농업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자원 및 환경 보존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지속적인 농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원은 생산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가격을 인상시켜 환경과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농업혁신과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OECD는 또한 2020년에 시행한 직불제 개혁을 통해 품목 특정한 보조를 낮추고, 농업 생산의 다양화(다각화)를 통해 시장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농가 수준까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 수준의 세밀한 정책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친환경 농업과 생태계 보존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축분뇨 관리를 개선하여 영양 과잉은 줄이고 높은 물 스트레스 하에서 관개용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농업분야의 청년 및 숙련노동자 부족과 도농 소득격차 확대는 농업농촌 정책의 주요 장애물로 언급되었다. 노동력 부족과 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거주 인프라 확충, 고용 기회 창출, 농업에서 은퇴하려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소득원 다양화 등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농업 R&D에 대한 공공투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요구를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다 경쟁력 있고 수요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OECD는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한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농식품 산업에 대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단,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는 농업분야의 생산, 투자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농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OECD 농업위원회는 2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농식품 분야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 분야(농업정책 및 시장, 농업환경, 농업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6차 농업위원회 회의('21.4.21~22.)에서는 G20, APEC, G7의 의장국이 각 협의체의 정책 우선순위 및 의장국의 활동을 소개하였고,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의 준비 논의와 기여 방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수요, 정책, 운송·물류, 기술 등 총 네 가지 측면에서 농업 공급망과 시장의 장단기 변화를 살펴보고, 각국의 무역 및 농업 공급망의 복원도,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 현황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농업장관회의를 2022년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제177차 농업위원회 회의('21.11.18~19.)에서는 농업지원의 목적 재탐구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 내외부의 식품시스템의 복합적인 목적 달성에 관한 일련의 보고서가 소개되었고,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생산성, 성장 및 복원력 등 자국의 중점 분야와 논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농업위원회는 2022년 농업장관회의의 주제를 '변화하는 환경에서 농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구축'으로 결정하였고,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공동의장을 역임하기로 하였다. 한편 2023-2024 사업 및 예산안의 진행절차 및 농업위원회 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82차 농업정책및시장작업반 회의('21.3.18~19.)에서 '농가 성과의 동인' 의제와 관련하여, 농가의 생산성과 정책 선택 효과, 투입지수에 따른 지속가능성 효과 등 회원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보고서 공개를 유보하였다. '푸드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격차 극복'의 경우, 데이터 격차 문제의 우선순위 선정, 코로나19의 향후 전망 분석, 데이터 격차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 등의 심층연구 주제안이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제83차 농업정책및시장작업반 회의('21.5.18~20.)에서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내용 포함, 농업 지원을 식품시스템과 3중 과제에 연결, 영국 챗터 추가 등이 결정되었다. 한편, 사무국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화' 의제의 목적과 방법론을 설명하였고, 회원국은 디지털 전문성, 민관 데이터 관련 협업, 디지털 플랫폼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와 관련하여, GMO, 과일과 채소의 영양학적 중요성, 아태 지역의 세분화가 논의되었다.

7월 임시회의에서는 인적자본 강화 및 구조적 변화 촉진 정책, 식이변화가 3중 과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코로나19가 세계 및 아시아 종자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의 의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9월 임시회의에서는 푸드시스템 정보격차 관련 식량 지원, 환경적 영향, 성별 등 세 가지 틀에 따라 심층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제84차 농업정책및시장작업반 회의('21.11.24~26.)에서는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보고서와 관련하여 '22년도 보고서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관련 챕터를 추가하고, 푸드시스템 및 3중 과제의 지속적인 연계를 결정하였다. 또한 'OECD-FAO 농업전망' 보고서의 경우 '22년도 보고서에 시나리오의 불확실성 추가, 아태 지역의 세분화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85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21.5.11.)에서는 '곡물 및 유지류의 해상운송 비용' 의제의 연구계획을 공유하였고, 회원국은 해상운송의 복원성, 운임률의 변동성, 수출세 등 수출제한의 영향 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SPS 승인절차' 의제의 경우, 각국의 승인절차 현황, 승인절차의 무역에 대한 잠재적 영향 평가, 기능적이고 투명한 승인절차에 필요한 요소 등과 같은 연구계획을 공유하였다.

제86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회의('21.11.23.)에서는 '무역을 통한 극한 상황의 악화' 의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모델(현상 유지, 무역 제한, 무역 자유화) 분석을 통해 무역 자유화가 극한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요를 공유하였다. 또한, 동물성 상품 무역에서의 전자검역증명 활용의 기회와 장애요인을 논의하였고, 곡물·유지류의 해상운임과 SPS 승인절차 의제의 진전상황을 공유하였다.

제50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21.4.6.~7.)에서는 '농업 부문 기후정책의 탄소누출 영향'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무역 정책을 구분해서 제시하였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탄소누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농업용수 관리 진행 상황 측정'의 경우 당면과제, 실용적인 대안, 자연기반 솔루션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농업, 무역, 환경 정책의 조정'의 경우, 농업무역의 개방성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의 환경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농업, 무역, 환경 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51차 농업환경공동작업반 회의('21.11.8.~9.)에서는 '농업 환경성과 개선 정책' 의제와 관련하여 고성과 농업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선택실험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평가 및 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법과, 농업 환경 규제 정책 리뷰 계획을 논의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와 농업'의 경우, 농업 지원 정책이 기후변화 적응 및 농업의 환경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 토양 탄소격리 증진을 위한 농업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5.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활동

■ 농업통상과 사무관 김동훈

◆ FAO 개요

FAO는 세계 인류를 위한 식량안보(food security) 달성, 즉 인류가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영양 균형적인 식량에 언제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인류의 영양상태 개선, 농업생산성 제고, 농촌인구의 삶의 질 개선 및 세계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업개발 지원, 영양·식량·농림축수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회원국의 농업정책 기획·개발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FAO는 1945년 10월 26일 캐나다 퀘벡에서 개최된 설립 총회에서 「FAO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46년 12월 14일 FAO 제2차 총회에서 유엔과의 제휴협정이 채택되고 유엔총회가 이를 인준함으로써 유엔 최초의 상설전문기구가 되었다. FAO 본부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으며, 2021년 현재 194개 회원국, 1개 회원기구(EU), 2개 준회원국(페로 제도, 토켈라우 제도)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9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는 총회, 이사회, 세계식량안보위원회, 7개의 상임위원회(프로그램, 재정, 헌장 및 법률, 상품문제, 수산, 산림, 농업, 식량안보위원회) 및 5개의 지역총회(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카리브, 근동·북아프리카)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49개 이사국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계속 이사국으로 활동중이다.

〈그림 2-8-1〉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의사결정기구(Governing Bodies) 개요



총회(매 홀수연도)와 지역총회(매 짝수연도)는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며,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한다. 총회는 정책 결정, 예산 승인,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가입 승인, 사무총장 및 이사회 독립의장 선출, FAO 헌장 개정, 식량 및 농업에 관한 각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산하 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의 검토 등의 중요 사항을 최종 의결한다.

FAO에는 총 14,810명의 인력이 근무(21년 기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정규 직원은 총 15명(20년 기준)이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 정규분담금(정규예산, Net Appropriation)과 자발적기금(Extra-budgetary)으로 구분된다. 정규분담금은 회원국별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유엔의 국가별 분담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FAO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국별 정규분담금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납부한다. 우리나라의 2021~2022년 정규분담금 비율은 2.267%로, 194개 회원국 중 11번째에 해당된다. 자발적기금은 정규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예산 지원, 현지프로그램, 기술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FAO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운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직원 역량 제고, 본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역사무소 기능 강화, 대내외적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2008년부터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1월 개최된 제34차 총회에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즉각 행동계획(Immediate Plan of Action)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2008년 제35차 특별총회에서 세부적인 개혁조치사항을 담은 즉각행동계획(IPA) 5개년 계획(2009~2013)을 승인하였다. 2013년 제38차 총회에서 즉각행동계획(IPA) 이행 및 FAO 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추진 내용 및 성과

2021년에는 FAO 총회(제42차: 6.14~18.), 3차례의 이사회(제166차: 4.26~30., 제167차: 6.29., 제168차: 11.29.~12.4.)가 개최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업현황 및 국제사회 기여활동 등을 소개하였다.

▶ FAO 총회

제42차 FAO 총회는 2021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영상으로 개최되었으며, 194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아인구 감소,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촉구하였다. 또한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연속 12회 이사국에 선출되었다.

수석대표(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기초연설을 통해, 식량안보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는 식량 자급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기술협력,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FAO 이사회

2021년에는 총 3차례의 이사회(제166차: 4.26~30., 제167차: 6.29., 제168차: 11.29.~12.4.)가 영상으로 개최되었다.

제166차 이사회에서 이사국들은 2022~23년도 FAO 사업예산 조정안과 산하 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 중장기 로드맵인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 등을 논의하였다.

제167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산하위원회인 프로그램위원회(PC), 재정위원회(FC), 현장법률위원회(CCLM)의 의장 및 위원 선출하고 차기(11월) 이사회 잠정 의제안을 채택하였다.

제168차 이사회는 이사국들은 식량농업기구가 '22~31년 전략적 기본방향(framework)에 따라 수립 예정인 '기후변화 전략' 및 '과학혁신 전략' 등 기본지침(roadmap)에 대해 검토하고 특히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WFP) 및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가 주도하고, 국제연합 산하 기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 허브(Coordination Hub)'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3편

2021년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동향

I. 총론

II. 식량 및 곡물 자급 동향

제1장 쌀, 보리, 밀 자급 동향

제2장 콩, 옥수수, 서류 자급 동향

III. 축산물 및 사료 자급 동향

제3장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급 동향

제4장 우유 및 계란 자급 동향

제5장 사료 자급 동향

IV. 원예작물 자급 동향

제6장 채소류 및 과실류 자급 동향

I. 총론

■ 식량정책과 사무관 류도현

◆ 식량 및 곡물 자급 동향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목표는 각각 55.4%, 27.3%이나, '21년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실적(서류 생체중 기준)은 각각 44.4%, 20.9%으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당초 설정한 목표에 비해 밀·콩·옥수수 자급률 실적이 저조하였고, 특히 '21년 양곡연도의 경우 긴 장마 등으로 '20년산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산정 시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등 양곡에 한정되며, '21년 전체 양곡 생산량은 4,721천톤,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소비량은 10,643천톤, 사료용 포함 국내 소비량은 22,604천톤이다. 식량자급률 실적 44.4%는 전체 양곡 생산량 4,721천톤을 사료용을 제외한 국내 소비량 10,643천톤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곡물자급률 실적 20.9%는 전체 양곡 생산량 4,721천톤으로 사료용을 포함한 국내 소비량 22,604천톤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표 3-1-1〉 연도별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현황

(단위 : %, 천톤)

양곡연도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전체	식용	사료용 등	사료용 제외	사료용 포함
2018	50.3	24.1	5,137	16,031	5,562	10,469	10,211	21,324
2019	49.3	23.3	5,059	16,153	5,224	10,929	10,268	21,670
2020	49.3	22.4	4,915	17,207	5,401	11,806	9,974	21,921
2021	44.4	20.9	4,721	17,862	5,756	12,106	10,641	22,602

주) 식량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사료용 제외), 곡물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사료용 포함), 서류 생체중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전체 식량 및 곡물자급률 제고를 위해 자급이 가능한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량이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월 밀산업 육성법을 시행하고, '20.11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1.9월 국가 식량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및 소비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밀·콩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밀·콩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 생산단지 지원, 국산 비축 확대, 계약재배 지원 등 자급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 열량(칼로리) 자급 동향

2018년 고시한 2022년 열량자급률 목표는 50.0%이나 '20년 실적은 33.9%로 당초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열량 자급률은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로 정의된다. 식품에는 곡류, 서류, 두류, 종실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계란류, 우유류, 어패류, 해조류, 유지류 등이 포함되며 2000년 이전에 열량 자급률은 50%를 넘게 유지되어 왔으나, 농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식품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열량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년 열량자급률은 33.9%이며, 주요 식품 중 곡물류와 어패류의 자급률이 각각 49.3%, 48.9%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해당 식품의 연도별 하락 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열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곡물류 및 어패류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다.

〈표 3-1-2〉 연도별 열량 자급률 및 주요식품 자급률 현황

(단위 : %)

양곡년도	열량 자급률	주요 식품 자급률					
		곡물류	육류	채소류	과실류	어패류	해조류
2018	35.1	50.3	63.0	89.5	73.1	51.2	119.1
2019	34.7	49.3	65.5	90.3	75.5	48.9	121.0
2020	33.9	49.3	68.9	89.9	74.4	48.9	119.6
2021	미정	44.4	67.3	91.1	75.4	미정	미정

자료 : (곡물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농림축산식품부, (열량 자급률, 어패류, 해조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 축산물 자급 동향

2018년 고시한 2022년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급목표는 72.0%이나 '21년 실적은 67.3%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유 및 계란 자급목표는 각각 54.5%, 99.6%이며 '21년 실적은 45.7%, 94.8%이다. 육류의 경우 국내 생산 및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급률도 '18년 목표 수립 당시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반면 우유 자급률은 FTA 확대 등으로 인해 하락하고 있으며, 계란은 100%에 가까운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21년 고병원성 AI 등 영향으로 자급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3-1-3〉 연도별 축산물 자급률 현황

(단위 : %, 천톤)

연도	육류			우유			계란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2018	63.0	1,776	2,818	49.3	2,041	4,264	99.4	686.8	690.9
2019	64.3	1,851	2,877	48.5	2,049	4,347	99.4	727.0	731.0
2020	68.9	1,992	2,893	48.1	2,089	4,470	99.3	722.3	725.4
2021	67.3	1,983	2,945	45.7	2,034	4,579	94.8	684.9	722.2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등

육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품질 향상을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으며, 생산비 저감과 함께 안전성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우유의 경우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 현대화, 안전한 유통 기반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료 자급 동향

2018년 고시한 2022년 사료 자급률 목표는 38.4%이나 '21년 실적은 36.4%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2년 배합사료 및 조사료 자급목표는 각각 23.6%, 87.0%이며, '21년 실적은 각각 24.9%, 82.7% 수준이다. 배합사료 자급률은 '22년 목표를 상회하고 있으며, 조사료는 '22년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3-1-4〉 연도별 사료 자급률 현황

(단위 : %, 천톤)

연도	사료 전체			배합사료				조사료		
	자급률	생산량 (국내산)	소비량 (사용량)	자급률	사료원료 사용량	국내산	수입산	자급률	생산량	소비량
2018	38.2	9,286	24,326	29.2	19,885	5,816	14,069	78.1	3,470	4,441
2019	37.1	9,387	25,286	27.4	20,599	5,645	14,954	79.9	3,742	4,687
2020	36.1	9,378	26,010	25.1	21,011	5,276	15,736	82.1	4,102	4,999
2021	36.4	9,537	26,180	24.9	20,962	5,222	15,739	82.7	4,315	5,21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등

배합사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96년부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저리의 원료구매자금(용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2차례 인하하여 수입원료 도입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조사료는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98년부터 기계·장비 구입비 등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12년부터 우량농지를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하여 국산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원예작물 자금 동향

2018년 고시한 2022년 채소류, 과실류 자금목표는 각각 89.5%, 77.4%이며 '21년 실적은 각각 91.1%, 75.4%로 채소류는 목표를 상회하였고, 과실류는 목표에 약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다만, 채소 및 과실 모두 '18년 목표 수립 당시에 비해 자금률이 다소 상승하였다.

〈표 3-1-5〉 연도별 원예작물 자금률 현황

(단위 : %, 천톤, 천ha)

연도	채소류				과실류			
	자금률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자금률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량
2018	89.5	182	7,630	8,529	73.1	165	2,160	2,954
2019	90.3	170	7,138	7,905	75.5	161	2,206	2,922
2020	89.9	165	6,976	7,762	74.4	157	1,976	2,655
2021	91.1	165	7,043	7,734	75.4	153	2,109	2,79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등

채소 및 과실류 등 원예작물의 경우 곡물 등에 비해 보관기간이 짧고 전년도 가격, 작황 등에 따라 재배면적, 생산량, 가격 등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관리가 중요한 품목이다. 이에 '13년부터 배추·무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과실류는 '04년부터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 생산 및 출하기반을 구축하는 등 안정적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식량 및 곡물 자급 동향

제1장 쌀, 보리, 밀 자급 동향

제1절 쌀 자급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류도현

◆ 쌀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쌀 식량자급률 목표는 98.3%인 반면, 2021년 양곡연도의 쌀 식량자급률 실적은 84.6%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2021년 양곡연도에 소비되는 쌀은 2020년산인데, 2020년 긴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쌀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양곡연도의 쌀 생산량은 2020년산 3,507천톤이며,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은 4,145천톤으로 2021년 쌀 식량자급률은 3,507천톤을 4,145천톤으로 나눈 84.6%로 산출된다. 쌀 생산량이 전년 3,744천톤에 비해 약 237천톤(6.3%) 수준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배면적이 4천ha(0.5%) 감소하였고 생산단수가 30kg/10a(5.8%)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2-1〉 연도별 쌀 식량자급률 및 전체 쌀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년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97.3	3,972	755	527	409	4,081
2019	92.1	3,868	738	524	409	4,198
2020	92.9	3,744	730	513	409	4,029
2021	84.6	3,507	726	483	409	4,145

주) 식량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수입량은 당해연도 의무도입물량에 해당

◆ 쌀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쌀은 1980년대 녹색혁명 이후 국내 자급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품목 중 하나이다. 쌀은 현재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에 놓여 있어 평년작 수준으로만 생산되더라도 연간 약 20만톤 수준의 과잉이 나타난다. 따라서, 쌀은 자급률 제고보다는 수급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쌀의 경우 WTO 협정에 의해 매년 쌀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409천톤의 물량만큼 의무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수급안정을 가져오는 적정한 자급률 수준은 90%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급률이 90% 수준을 넘게 되면 대체로 공급 과잉이 유발되며 쌀값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2021년 양곡연도의 경우 2020년산 쌀 흉작으로 인해 오히려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고, 쌀값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5차례에 걸쳐 31만톤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방출하는 공매를 시행하였다.

제2절 보리 자급 동향

■ 식량산업과 서기관 각기형

◆ 보리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보리 식량자급률 목표는 36.6%인 반면, '21년 양곡연도의 보리 식량자급률 실적은 33.3%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21년 양곡연도에 소비되는 보리는 '21년산인데, '21년산 보리 재배면적 축소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 보리 생산량은 정곡기준 89천톤이며, '21년 양곡연도의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은 266천톤이다. 2021년 보리의 식량자급률은 33.3%로 전년(38.2%) 대비 4.9%p 감소하였다. 그 이유로는 '21년 보리 재배면적 축소로 인하여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보리 재배면적이 축소된 원인은 국내산 보리의 수요 감소로 인해 보리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대체작물인 밀 생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보리재배 농가에서 보리 대신 밀로 작목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표 3-2-2〉 연도별 보리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4.6	26.0	32.1	47.7	38.2
겉·쌀보리	99.7	98.9	102.3	138.2	93.8
맥주보리	8.6	9.8	10.1	16.8	13.4

주) 식량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표 3-2-3〉 연도별 전체 보리 수급 상황(사료 제외)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연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32.1	103	47	217	228	321
2019	47.7	137	44	313	201	287
2020	38.2	98	35	281	157	259
2021	33.3	89	29	307	150	26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보리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보리 자급률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고품질의 정부 보급종을 공급('21년 1,171톤)하고 수량과 품질 안정성이 우수한 용도별 신품종을 지속 개발('20년 14 → '21년 16)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 보리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주류협회와 농협중앙회 계약을 통해 연간 생산물량 중 50천톤을 주정 및 맥주 제조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국내 맥주보리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 및 국내 맥주 제조업체 등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맥주보리 및 맥아에 대해 TRQ(맥아 150천톤, 맥아 48천톤)를 설정하여 수입 물량을 관리하고 있다.

제3절 밀 자급 동향

■ 식량산업과 서기관 평가형

◆ 밀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밀 식량자급률 목표는 9.9%인 반면, '21년 양곡연도의 밀 식량자급률 실적은 1.1%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21년도 밀 생산량은 26천톤으로 '20년 이후 지속 상승 추세이며, 특히 '21년 밀 생산량은 '20년(17천톤) 대비 55.0% 증가하였다. '21년 밀 식량자급률은 1.1%로 전년(0.8%)대비 0.3%p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20년 대비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2-4〉 연도별 밀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년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1.2	26	7	391	2,140	2,130
2019	0.7	15	4	402	2,030	2,128
2020	0.8	17	5	325	2,182	2,098
2021	1.1	26	6	423	2,466	2,507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밀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제2의 주곡인 밀은 식생활 서구화, 소비 품목 다양화 등 안정적인 소비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률 제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 밀의 품질향상과 수요 확대 등 밀 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밀 산업 육성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20.2월)되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울러 「밀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국산 밀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자급기반 확충과 소비 확산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인 '제1차('21~'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11월)'을 수립하였다. 이에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다. 추진 방향에 "①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②국산 밀 유통·비축 체계화, ③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대, ④현장문제 해결형 R&D전환, ⑤국산 밀 산업계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1년에는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1년차 시행을 위해 ‘제1차 밀 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21.1월)·시행하였다. 먼저, 밀 생산단지를 선정(‘20년 27개소 → ‘21년 39개소)하고, 교육·컨설팅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국산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정부보급종을 50% 할인 공급하고, 국산밀 재배매뉴얼 제작·보급하였다. 생산·유통 중 품질관리를 위해 건조·저장시설(2개소), 시설·장비(2개소) 지원을 신규 도입하고, 안정적 수요 확보를 위해 국산밀 계약재배지원 사업을 도입, 계약재배 물량 4천톤을 무이자 지원(38억원)하였고, 국산밀의 가격안정 및 안정적 생산을 위해 8,401톤을 정부비축하였다. 아울러, 다른 동계작물에 비해 수확이 늦어 이모작 작부체계 구성에 애로가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부체계 구축 R&D를 추진하고, 국산밀 산업계 역량강화를 위한 ‘국산밀 산업 발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제2장 콩, 옥수수, 서류 자급 동향

제1절 콩 자급 동향

■ 식량정책과 사무관 진필식

◆ 콩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콩 식량자급률 목표는 45.2%인 반면, '21년 양곡연도의 콩 식량자급률 실적은 23.7%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21년 양곡연도의 콩 생산량은 '20년산 81천톤이며,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은 341천톤이다. '21년 콩 식량자급률은 23.7%로 생산량 감소로 전년(30.4%)대비 6.7%p 낮아졌다. 콩 생산량이 105천톤에서 81천톤으로 감소한 이유는 긴 장마로 생산단수가 크게 감소(180kg/10a→147)하였고 재배면적도 6.4%(58,537ha→55,008) 줄었기 때문이다.

〈표 3-2-5〉 연도별 콩 식량자급률 및 전체 콩 수급 상황(사료 제외)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연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25.3	86	46	188	284	338
2019	26.7	89	51	177	289	335
2020	30.4	105	59	180	294	347
2021	23.7	81	55	147	254	341

주) 식량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콩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유통·비축·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생산분야에서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논콩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기계화 촉진과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20년 44개소에서 '21년 83개소로 확충하였다.

유통 분야에서는 균일한 품질의 콩을 안정적으로 가공업체와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 콩 종합 처리장을 지원하고 있다. 비축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식량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논콩 재배 유도를 위해 비축 계획 물량을 17천톤(예산편성 기준)에서 25천톤(예산편성 기준)으로 확대하고 논콩의 경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전량 매입하는 한편, 매입가격도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4,500원/kg(대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4,700원/kg으로 200원/kg 인상하였다.

소비분야에서는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두류계약재배사업(412억원, 5년거치 무이자 융자지원)을 신규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입 비축한 콩을 활용하여 가공업체의 국산콩 사용 실적에 따라 비축콩을 공급하고, 수입콩 사용 가공업체가 국산콩으로 사용을 전환하는 경우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축콩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규 수요처도 발굴하고 있다. 또한 FTA 교육홍보 사업비를 활용하여 소비 촉진 홍보도 실시하는 등 소비 확대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제2절 옥수수 자급 동향

■ 식량산업과 서기관 평가형

◆ 옥수수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옥수수 식량자급률 목표는 8.2%인 반면, '21년 양곡연도의 옥수수 식량자급률 실적은 4.2%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21년 양곡연도의 옥수수 생산량은 '20년산 92천톤이며, 사료용 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은 2,205천톤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하는 옥수수는 대부분 찌꺼기는 간식용으로 소비되고, 가공용 옥수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1년 옥수수 식량자급률은 4.2%로 전년(3.6%)대비 0.6%p 증가하였는데, 작황 양호로 생산단수가 크게 증가(514kg/10a → 587)하여 생산량이 상승(76천톤 → 92)하였기 때문이다.

〈표 3-2-6〉 연도별 옥수수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연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3.3	73	15	482	2,228	2,226
2019	3.5	78	15	504	2,142	2,234
2020	3.6	76	15	514	2,017	2,131
2021	4.2	92	16	587	2,080	2,205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옥수수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가공용 옥수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정된 농지, 수입산 대비 생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생산이 어려우므로 안정적인 수입이 중요하다. 가공용 옥수수는 주로 전분·당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전분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제품으로 원료 가격 인상 시 전분을 원료로 하는 2차 제품인 제지 및 골판지 뿐만 아니라 이를 재료로 하는 포장지 등 가격 인상을 유발하여 최종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1년은 중국의 곡물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21.4월부터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였다.

제3절 서류 자급 동향

■ 식량산업과 서기관 전종찬

◆ 서류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 양곡연도의 서류(감자, 고구마) 식량자급률 목표는 109.0%인 반면, '21년 양곡연도의 서류 식량자급률 실적은 104.0%에 불과하여 목표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수입산 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가공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가공용 수요 증가에 따라 '21년 수입량은 전년 47천톤 대비 17.0% 증가한 55천톤을 기록하였다. 다만, '21년 양곡연도 서류 생산량은 887천톤으로 전년 829천톤 대비 7.0% 증가하였으며, 서류는 국내 식량 수요를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상황이다.

〈표 3-2-7〉 연도별 서류 식량자급률 및 수급 상황(사료 제외)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연도	식량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104.1	848	44	1,939	51	814
2019	104.3	842	43	1,949	50	892
2020	104.5	829	43	1,924	47	793
2021	104.0	887	44	2,024	55	853

주) 생산량, 수입량, 국내 소비량 등은 모두 생체중(수분 포함 중량) 기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 서류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서류 중 고구마는 발작물 중 비교적 소득(2,005천원/10a)이 높아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단위면적당 소득이 낮고 가격불안정성이 큰 감자(봄감자 725천원/10a 등)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서류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감자 수급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감자 재배안정성을 확보하고 농가 재배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고랭지감자 채소가격 안정제 시범사업을 도입('20)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감자를 공급하기 위한 수입·수매비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Ⅲ. 축산물 및 사료 자급 동향

제3장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급 동향

제1절 쇠고기 자급 동향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 쇠고기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쇠고기 자급률 목표는 42.6%이며, '21년 쇠고기 자급률 실적은 36.8%였다. 이는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였음에도 국내 쇠고기 소비 확대로 수입량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716천톤으로 2018년 대비 9.8%, 2020년 대비 7.3% 증가하였다. 2021년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은 264천톤으로 2018년 대비 11.4%, 2020년 대비 5.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입산 소고기도 2021년 453천톤이 수입되어 2018년 대비 8.9%, 2020년 대비 8.1% 증가하는 등 함께 증가하였다.

〈표 3-3-1〉 연도별 쇠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연도	쇠고기 자급률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8	36.3	237	-	416	-	0	652	-
2019	36.5	245	3.4	427	2.6	0	672	3.1
2020	37.3	249	1.6	419	△1.9	0	668	△0.6
2021	36.8	264	5.9	453	8.1	0	716	7.3

주) 자급률 = 국내 생산량 ÷ 국내 소비량, 국내소비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 (국내생산량)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입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량) 농림축산검역본부

❖ 쇠고기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1995년 WTO 출범과 2001년 쇠고기 수입 개방 이후 수입산 쇠고기와 품질을 차별화하는 등 국내산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내 쇠고기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8년 도입된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지속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내 한육우 사육 규모가 2018년 311만마리에서 2021년 359만마리까지 증가하는 등 생산 기반이 안정되었다.

국내 쇠고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입산 쇠고기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 등급제(1993년 도입) 및 이력제(2008년 도입), 음식점 원산지표시제(2009년 시행) 등 규모화와 생산성 제고,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였다. 그 결과 농가 당 한육우 사육 규모는 2018년 32.2마리에서 2021년 38.2마리로 18.6% 증가하였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 비중은 2018년 18.3%에서 2021년 23.1%로 증가하는 등 사육 농가의 규모화가 진전되었다. 아울러, 한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18년 73.0%에서 2021년 74.9%로, 전체 수소 중 거세우 출하비중은 2018년 95.8%에서 2021년 98.1%로 확대되는 등 품질 고급화도 진전되었다.

〈표 3-3-2〉 연도별 한육우 규모화 및 고급화 진전

연도	사육마릿수 (천마리, 한육우)	농가당 사육규모 (마리, 한육우)	전업농 비중 (%, 한육우)	1등급이상 출현율 (%, 한우)	거세우 출하비중 (%, 한우)
2018	3,113	32.2	18.3	73.0	95.8
2019	3,237	34.4	19.8	73.9	97.5
2020	3,395	36.4	21.5	74.1	97.6
2021	3,589	38.2	23.1	74.9	98.1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화 정책은 수입 쇠고기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고투입·고비용 생산구조를 수반하였고, 한우 도매가격 상승은 농가의 사육 의향을 자극하여 향후 공급 과잉 및 한우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우려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당면과제에 대응하여, 사육기간 단축과 지방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19년에 소고기 등급제를 개편하였으며, '21년에는 단기 사육 방식 정립을 위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장기 한우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한우 수급 단계별 수급안정 매뉴얼'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제2절 돼지고기 자급 동향

■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철기

◆ 돼지고기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는 78.6%이며, '21년 돼지고기 자급률 실적은 76.7%이다. '21년 자급률 실적은 '22년 자급목표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18년 고시 당시 '17년 돼지고기 자급률 70.8%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1,098천톤이며, 수입량을 포함한 국내 소비량은 1,431천톤으로 2021년 돼지고기 자급률은 1,098천톤을 1,431천톤으로 나눈 76.7%로 산출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대체로 상승추세이다. 다만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세계 주요 수출국인 미국·EU와의 FTA 체결로 인해 '21년 현재 돼지고기 관세가 0%로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어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과 관계없이 세계 돼지고기 가격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매우 크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3-3〉 연도별 돼지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천호, 마리)

연도	자급률	생산량	사육농장수	농장당 사육두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66.9	935	6.2	1,831	464	1,399
2019	69.7	969	6.1	1,839	421	1,390
2020	77.9	1,098	6.1	1,816	310	1,408
2021	76.7	1,098	5.9	1,888	333	1,431

주) 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국내 소비량 = 생산량 + 수입량

자료 : (사육농장수 및 농장당 사육두수) 통계청 (수입량) 식물의약품안전처, (생산량)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 돼지고기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국내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돼지고기는 육류 중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찾는 축산물이다. 하지만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며, 돼지고기 주요 수출국과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고, 돼지고기는 냉동상태로 보관할 경우 저장도 용이해 국내 생산량 증감 여부와 무관하게 세계 돼지고기 수급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8~'19년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낮았으나 세계 돼지고기

수급 역시 과잉으로 역대 처음으로 돼지고기 정육 수입량이 40만톤을 넘는 등 수입량이 많았고, '21년의 경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평년 대비 높았으나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세계 돼지고기 수급 악화로 수입량이 많지 않았다.

따라서, 돼지고기 산업의 경우 세계 돼지고기 수급 상황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국내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향후 국내의 돼지고기 소비량 지속 증가에 대비한 생산비 저감, 생산량 증가 정책 등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돼지고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저감, 생산량 증가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축사 보급 확대로 양돈에 필요한 노동력을 저감하는 한편, 사료허실을 감소시켜 생산비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돈자조금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다산성 모돈 보급, 사양관리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햄·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육가공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장기 공급하는 등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제3절 닭고기 자급 동향

■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상훈

◆ 닭고기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닭고기 자급률 목표치는 83.2%이며, '21년 닭고기 자급률 실적은 76.7%였다. 그 이유는 '20/'21년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국내 닭고기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량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1년의 닭고기 생산량은 622.2천톤이며, 국내 소비량은 756.5천톤으로 '21년 닭고기 자급률은 76.7%으로 산출되며, 수출량은 42.0천톤으로 국내 생산 닭고기는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646.6천톤에 비해 약 24.4천톤(3.8%) 수준 감소하였는데, '21년 고병원성 AI 국내 확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량이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3-4〉 연도별 닭고기 자급률 및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연도	닭고기 자급률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8	77.8	603.8	-	162.8	-	32.6	734.6	-
2019	76.7	637.1	5.5	177.8	9.2	49.5	763.6	3.9
2020	77.7	646.6	1.5	170.3	△4.2	55.8	761.1	△0.3
2021	76.7	622.2	△3.8	176.3	3.5	42	756.5	△0.6

주) 자급률 = (국내생산량 - 수출량) ÷ 국내소비량, 국내소비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 (국내생산량)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량) 농림축산검역본부

◆ 닭고기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은 연례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닭고기 수입량 증가 등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축사시설의 현대화, 축산계열화사업,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축산자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계산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 등을 통한 외국산과의 차별화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은 국내 양계산업의 기반 강화 및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일관 경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12월 기준 가금 산업 계열화율은 닭(토종닭 포함) 94.0%, 오리 92.8% 수준에 이른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 참여 주체간 갈등은 축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계열화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 관계 도모를 위해 '13.2.2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계약농가의 권익보호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계열화사업 등록제, 등급·평가제, 판매가격공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3-3-5〉 연도별 육계 사육현황 및 축산계열화율 변화

(단위 : 천마리, 호, 천마리/호, %)

연도	사육마릿수	사육농가수	농가당 사육규모	축산계열화율
2018	85,915	1,507	57,010	92.1
2019	88,738	1,508	58,845	95.1
2020	94,834	1,597	59,383	92.2
2021	93,604	1,584	59,093	94.0

자료 : (사육현황) 통계청, (축산계열화율) 농림축산식품부

아울러, '09년부터 닭고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소비홍보, 농가교육, 연구개발 사업 등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 도모, 양계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4장 우유 및 계란 자급 동향

제1절 우유 자급 동향

■ 축산경영과 사무관 홍석구

◆ 우유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우유 자급률 목표치는 54.5%이며, 2021년 우유 자급률 실적은 45.7%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라 국내 우유 소비량은 감소하는 한편, FTA 확대로 유제품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6년 주요국(EU, 미국)의 우유 및 유제품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낙농산업의 위협요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우유 생산량은 2,034천톤이며, 2018년(2,041천톤) 대비 7천톤(△0.3%) 감소하였고 수입량은 2,512천톤으로 2018년(2,198천톤) 대비 313천톤(14.3%)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은 131천톤으로 2018년(126천톤) 대비 5천톤(3.9%) 증가하였다. '21년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수입량, 재고량 합계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국내 총 소비량으로 우유 생산량을 나눈 45.7%로 산출되었다. 이는 우유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생산 감소와 잉여원유 증가로 인한 유업체의 생산량 감축(마이너스 쿼터)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표 3-3-6〉 연도별 우유 자급률 및 수급현황

(단위 : %, 천톤)

연도	자급률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 총 소비량
2018	49.3	2,041	2,198	126	4,138
2019	48.5	2,049	2,304	119	4,228
2020	48.1	2,089	2,434	125	4,345
2021	45.7	2,034	2,512	131	4,448

주) 자급률 = 국내 생산량 ÷ 국내 총 소비량, 국내 총 소비량 = 국내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 기초 재고량 - 기말 재고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우유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21년 원유수급 상황은 원유생산 안정대책 유지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외부 요인(시장 개방 확대, 소비시장 변화 등)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이에,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원유를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경직되어 있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고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원유를 활용한 고품질 유제품 R&D, 가공유제품 생산에 적합한 신제품 (Jersey)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절 계란 자급 동향

■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상훈

◆ 계란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계란 자급률 목표치는 99.6%이며, 2021년 계란 자급률 실적은 94.8%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나, 이를 제외한 '18년부터 '20년까지는 99.3~99.4%를 달성하고 있다. 계란은 깨지기 쉬운 품목 특성상 대부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자급률은 100%에 가깝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계란 생산량은 684.9천톤, 소비량은 722.2천톤으로 조사되어 '21년 계란 자급률은 94.8%로 산출되었다. 다만, 이는 '21년 국내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산란계 약 1,700만 마리가 살처분됨에 따라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3-3-7〉 연도별 계란 자급률 및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연도	계란자급률	국내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국내소비량	
			전년대비		전년대비			전년대비
2018	99.4	686.8	-	4.2	-	0.1	690.9	-
2019	99.4	727.0	5.9	4.3	2.4	0.3	731.0	5.8
2020	99.3	722.3	△0.6	4.7	9.3	1.6	725.4	△0.8
2021	94.8	684.9	△5.2	37.4	695.7	0.1	722.2	△0.4

주) 자급률 = (국내생산량 - 수출량) ÷ 국내소비량, 국내소비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자료 : (국내생산량) 통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량) 농림축산검역본부

◆ 계란 자급률 제고 정책 추진현황

우리나라 계란 산업은 연례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요구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국내 계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후화된 산란계 사육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 지원을 통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용 계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합리적

가격결정체계 구축을 위한 공판장 기능을 하는 계란유통센터의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에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수는 감소('00년 2,601호 → '21년 946호)한 반면, 사육마릿수는 증가('00년 51백만마리 → '21년 73백만마리)하는 등 사육 규모화를 이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용란선별포장장도 617개소('22.9월)가 허가되어 안전한 계란 유통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연도별 산란계 사육현황 및 생산액

(단위 : 천마리, 호, 천마리/호, 억원)

연도	사육마릿수	사육농가수	생산액	
			농가당 사육규모	생산액
2018	74,741	1,007	74,221	12,775
2019	72,701	963	75,494	14,105
2020	72,579	936	77,542	16,338
2021	72,612	946	76,757	27,754

자료 : (사육현황) 통계청, (축산계열회율) 농림축산식품부

제5장 사료 자급 동향

제1절 배합사료 자급 동향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서주형

◆ 배합사료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배합사료 자급률 목표치는 23.6%이며, '21년 배합사료 자급률 실적은 24.9% 수준으로 자급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1년 배합사료 원료사용량은 '20년 대비 49천톤 감소한 20,962천톤(양축용·그 밖의 동물/어류용·대용유)으로 이중 15,739천톤(75.1%)은 수입하고, 5,222천톤(24.9%)은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축용 배합사료 원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55.6%)하는 곡류의 자급률은 2.9%로 미미하나 동물성단백질에 해당하는 도축부산물과 석회석 등 무기물은 국내산 비중이 높아 각각 97.5%, 98.2%를 차지하였다.

〈표 3-3-9〉 2021년 양축용 배합사료 원료별 사용량 및 자급률

(단위: 톤, %)

구분	곡류	강피류	동물성단백질	식물성단백질	무기물	기타
수입산	1,045,416	63,698	493	339,596	1,705	7,762
국내산	30,686	117,980	19,585	134,485	92,972	79,484
합계	1,076,102	181,678	20,078	474,081	94,677	87,246
자급률	2.9	64.9	97.5	28.4	98.2	91.1

자료: 배합사료 원료사용실적(사료협회)

◆ 배합사료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사료는 축산물 생산비의 51.3%('21, 통계청)를 차지하고, 매일 급여하기 때문에 사료 가격과 수급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자급률 상승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수입 원료의 사용이 감소하여 사료가격 상승의 우려가 생기며, 반대로 수입 원료 의존도를 높일 경우 수입 원료 특성상 국제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 등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인해 원료가격과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이에, '96년부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저리의 원료 구매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2차례 인하(0.7%p, 2.5~3.0% → 1.8~2.3%)하여 수입원료 도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수급안정을 위해 원산지 다변화와 대체원료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체원료 사용은 할당관세 신규 품목 확대, 원산지 다변화는 원료구매자금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수입산과 국내산 사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급률과 관련한 통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2절 조사료 자급 동향

■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김보민

◆ 조사료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조사료 자급률 목표치는 87.0%이며, '21년 조사료 자급률 실적은 82.7%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을 총 소요량으로 나누어 산출되는데 '21년 조사료 생산량은 4,315천톤, 총 소요량은 5,218천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년 동·하계 사료작물 생산은 1,146천톤으로 '20년에 비해 44천톤 증가하여 자급률은 '21년 82.7%로 '20년에 비해 0.6%p 향상되었다.

〈표 3-3-10〉 2021년 조사료 자급률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톤, 천두, 천ha)

구 분	총소요량	총 공급량				수입산
		국내산	목초	벼짚	사료작물	
물량	5,218	4,315	153	3,016	1,146	903
(사육두수)	3,974	-	-	-	-	-
(재배면적)	-	140	22	-	118	-

주) 자급률 = 국내산 ÷ 총 소요량

자료 : 통계청·마사화·관세청·수입신고기관(농협·사료협회·단미협) 등

◆ 조사료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해 1998년부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가공시설·유통센터 등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대규모,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조사료 전문단지로 지정(~'22, 29천ha)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비, 퇴·액비 살포비, 기계·장비 구입비, 입모중과중비를 일반단지와는 다르게 차등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산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에는 겨울철 사료작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9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고, 2016년도에서는 이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동시에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반영한 사일리지 제조비·유통비를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무계로만 결정되어 과수분, 이물질 등 품질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품질등급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국산조사료 유통 품질은 향상되었다. 2019년에는 하계 사료작물에도 품질검사 및 등급제가 확대 적용되어 국산조사료 유통 품질의 신뢰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아울러,

2021년부터 품질등급제 평가 기준을 개편함에 따라 국산 조사료 유통 품질이 지속하여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산지가 많은 강원, 경기북부, 충북, 경북지역 등 10ha 미만인 면적이라도 전문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자(경종농가, 축산농가 및 TMR공장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및 우수 생산 경영체 선정·홍보, 재배·이용기술 함양 등 국산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IV. 원예작물 자급 동향

제6장 채소류 및 과실류 자급 동향

제1절 채소류 자급 동향

■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사무관 이승욱·최수빈, 원예경영과 사무관 박찬원

◆ 채소류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채소류 자급률 목표는 89.5%이며 '21년 채소류 자급률은 91.1%로 목표를 상회하였다. 구체적으로 '21년 채소류 재배면적은 전년도 가격 등락에 따라 배추와 무, 마늘은 감소하고 건고추, 양파는 증가하여 '20년과 비슷한 수준인 165천ha을 유지하였다. 생산단수는 작황호조 및 시설채소 스마트팜 보급·확산 영향으로 '20년 4,237kg/10a 대비 4,260kg/10a로 0.5% 증가하였다. 생산량은 생산단수 증가로 인해 '20년 6,976천톤에 비해 1% 증가한 7,043천톤이며 국내 소비량은 2020년 7,762천톤에 비해 0.4% 감소한 7,734천톤이다. 이에 따라 '21년 채소류 자급률은 '20년 89.9%에서 91.1%로 1.2%p 증가하였다.

〈표 3-4-1〉 연도별 채소류 자급률 및 전체 수급 상황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년도	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89.5	7,630	182	4,197	993	8,529
2019	90.3	7,138	170	4,195	998	7,905
2020	89.9	6,976	165	4,237	1,006	7,762
2021	91.1	7,043	165	4,260	891	7,734

주) 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원예경영과

◆ 채소류 자금목표 및 자금률 현황

노지채소(무·배추·건고추·마늘·양파 등) 생산량은 전년도 가격에 따른 재배면적 증감 및 기상, 병해 등 작황에 따른 생산단수에 의해 변동되고 있으며 생산량 감소·과잉의 경우 수급 불안 및 자금률 증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를 위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하락 시 수급조절을 이행한 물량에 대해 가격차액 보전, 산지폐기 및 출하장려 등에 대한 가격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배추·무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사업을 통해 배추 저온·저장시설을 3개소 확보하였으며 향후 개소수를 추가 확보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건고추 생산량 증가를 위해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등을 포함한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년부터 총 1,272ha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마늘과 양파는 주산지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과채류(풋고추·오이·호박·토마토·딸기·수박 등)는 생산 기반 정비·고도화를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노후 재배시설을 대상으로 측고인상, 양액재배시스템, 자동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보광시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설치 등 낙후된 기존 시설을 개선·보강하는 사업으로 '21년까지 13,542ha를 지원하였다. 또한 지난 '14년에는 환경·생장 관리·정보 분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도입, '21년까지 스마트 팜 시설보급 및 온실신축에 905.5ha를 지원하였다. 특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서는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시작부터 단계별 컨설팅을 진행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과 원활한 시설·장비 활용을 꾀하고 있다.

특히, 시설지원을 통한 생산 기반 고도화·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 부족·과잉을 완화하는 과채류 수급 사업을 '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토마토, 호박, 풋고추, 오이, 가지 등 5개 품목에 대해 '20년에는 50천톤, '21년에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52.4천 톤에 대해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수급 불안 발생 시 계약물량 출하조절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였다.

버섯류는 '13년부터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농가에 노후화된 재배시설의 현대화 및 생산설비의 기계화·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21년까지 13개 시도 6,851농가(법인)에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였다.

제2절 과실류 자급 동향

▣ 원예경영과 사무관 김재원

◆ 과실류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2018년 고시한 2022년 과실류 자급률 목표는 77.4%이나, '21년 과실류 자급률 실적은 75.4%로 다소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 및 수입과일 다양화 등 소비환경 변화에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통해 생산단수 및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과실류 생산량은 2,109천톤이며 국내 소비량은 2,796천톤으로, 2021년 과실류 자급률은 75.4%로 산출된다. 이는 2020년 자급률 74.4% 대비 1%p 상승한 결과로, 사과·배 등 주요 과수의 저온 피해가 심각했던 2020년 대비 생산량이 약 133천톤(6.8%), 생산단수가 115kg/10a(9.1%)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3-4-2〉 연도별 과실류 자급률

(단위 : %, 천톤, 천ha, kg/10a)

양곡년도	자급률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단수	수입량	국내 소비량
2018	73.1	2,160	165	1,312	845	2,954
2019	75.5	2,206	161	1,374	767	2,922
2020	74.4	1,976	157	1,260	726	2,655
2021	75.4	2,109	153	1,375	728	2,796

주) 과실자급률 = 생산량 ÷ 국내 소비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과실류 자급목표 및 자급률 현황

한·칠레 FTA('04), 한·미 FTA('12)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방 이후 과일 수입 증가로 전체 과실류 자급률은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70% 중반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수입과일 친숙도 증대, 신규협정 체결 가능성 등 국내 과수산업을 둘러싼 생산·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생산기반 유지, 수급안정 강화, 품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1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600ha에 해당하는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 생산 및 출하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에 더하여 과실

수급안정 사업을 통해 113천톤의 계약재배물량을 확보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시기·출하량을 조절하여 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신규 지구 조성을 지속하고 계약재배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 해외여행·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과일 접근성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입 과일과 경쟁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방풍망·미세살수장치·방상팬·다겹보온커튼 등의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육성 신품종 갱신을 우선 지원하는 등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2,068ha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시설 보급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 심화에도 안정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수입과일과의 경쟁을 감안 과종·품종을 다양화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선택권 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21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22년 12월 일 인쇄

2022년 12월 일 발행

발 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전 화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3

디자인 및 인쇄 :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세종인쇄정보
